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7호 2007. 9

차례

특집 한·일 역사교과서의 쟁점

이영식 | 최근 한일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7

손승철 | 한·일 역사교과서 중·근세 분야 쟁점사항의 비교 분석 67

현명철 |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107

김인덕 | 한·일 양국의 근·현대사 서술과 재일조선인사 인식 149

최영호 |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 187

논문

김지훈 |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223

이우태 | 高句麗尺 再論 - 高句麗尺과 高麗術의 관계를 중심으로 - 261

김진한 | 陽原王代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285

한명기 | 丙子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認識 315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53

특집

한·일 역사교과서의 쟁점



최근 한일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이영식 |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I. 머리말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양국의 정치적 현안이나 국민적 감정의 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처음에는 일본사 교과서의 한일관계사와 한국사에 대한 서술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일본사 교과서의 왜곡 관련 내용을 성토했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라는 역사관과 그에 따른 교과서 서술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깊어져, 과연 한국의 국사교과서는 자국중심주의 역사관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한 검토로 이행되었고, 일련의 비판과 검토의 결과, 근년에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와 교사가 함께 공통의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려는 노력으로 진전되고 있다.¹⁾

그러나 현행 한일 양국의 국사교과서에 과거와 같은 문제의 서술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며, 과거와 같은 역사인식과 서술의 문제가 적지 않은 것도

1) 2007년 6월 1~2일에 개최된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동북아의 평화와 역사 서술』에서 발표된 일련의 논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식과 교과서운동의 변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이다.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역시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으나, 고대사 연구자가 고대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던 적도 많지 않고, 더구나 한일 양국 교과서의 서술을 함께 비교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양국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고대사 또는 고대한일관계사의 쟁점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양국 중등학교의 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서술들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인식, 그리고 교육효과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양국 국사교과서의 상호 서술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고대한일관계사의 쟁점과 관련된 항목을 선정하여 해당 서술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검토 대상이 되는 고대사의 범위는 분석 대상이 교과서인 만큼 학술적 시대구분보다는 일반적인 구분에 따라, 한국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발해까지, 일본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헤이안[平安]시대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대상으로는 최신판 한일 양국의 중등학교 국사교과서를 각각 1종씩 선정하였다. 국정교과서 체제인 한국은 2007년판 『중학교 국사』와 『고등학교 국사』를 선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²⁾ 검인정교과서 제도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없는 일본사교과서가 있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일본사교과서 중에서 중등학교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40~50% 전후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중학교 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歴史』(東京書籍, 2006)와 고등학교 교과서 『詳説 日本史』(山川出版社, 2007)를 각 1종씩 선정하였다.³⁾ 아울러 각 항목의 서술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국과 일본

2) 1986년 『국사교과서 편찬 준거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정치사 시대사 중심의 통사로, 고등학교는 문화사·사회경제사 중심의 주제사적 접근으로 구조화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3) 東京書籍의 『新編 新しい社會歴史』는 2002년에 51.2(3)%, 山川出版社의 『詳説日本史』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줄곧 40~5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근년에는 같은 출판사의 『新日本史』, 『高校日本史』, 『日本の歴史』를 포함하여 77%(2001년, 60.4%)

의 연구자와 교사들이 함께 공동교재로서 저술한 『공통교재』(2007)의 서술을 참조 비교하였다.⁴⁾ 이와 같이 한일 양국 간 4개의 중등학교 국사교과서와 공통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현재의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것, 쓰여져 있지 않은 것’ 모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II. 상호서술의 특징과 문제점⁵⁾

1_ 교과서에 사용되는 명칭의 문제이다. 중국과 대륙, 한반도와 삼국, 일본 열도와 왜와 같이 지리적 개념과 정치체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없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일본 열도가 대구를 이루어야 하고, 삼국에 대해서는 왜국으로 표현되어야 함에도 양자의 조합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한반도라는 지리적 개념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개념을 대구로 기술하는 것은 중심 일본에 대한 위성의 삼국과 가야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일본 소중화주의적인 역사인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백촌강·백강·백마강 등은 근거 사료와 전달효과를 의식한 기술에서 생기는 차이로, 지명·인명표기의 문제와 함께 해당국의 사료와 발음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사교과서에 가라나 가야와 병기되는

라는 높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10% 이하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는 여타 군소 출판사의 교과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상선, 2002. 6, 『일본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발해 관련 내용 연구』, 『사회과 교육』 41-2, 117·121쪽; 김성보, 2002. 8, 『한국·일본교과서의 현대사 서술비교』,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역사문제연구소 역음,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14쪽. 이하의 서술에서 한국의 중등학교 교과서는 ‘국사교과서’, 일본의 중등학교 교과서는 ‘일본사교과서’로 칭한다.

- 4)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한일역사공통교재 한일교류의 역사』, 혜안. 이하 본문 서술에서는 『공통교재』로 칭한다.
- 5) 다음 장의 쟁점별 서술 비교에서 양국교과서의 상호 관련 기술 내용 대부분이 제시 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해당 교과서 기술의 하나하나를 밝히지 않는다.

임나는 『일본서기』나 과거 연구처럼 식민지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⁶⁾ 같은 기술과 대상을 두고 신화와 설화, 가야제국과 가야연맹, 조선제국과 삼국, 통일신라와 남북국시대와 같이 양국학계의 연구와 해석의 차이에 따른 기술의 문제도 있다. 廣隆寺와 신라의 같은 불상을 두고 미륵보살·미륵반가사유상·반가사유상과 같이 기술하는 차이도 있고, 광륜사와 법륜사, 고류지와 호류지, 고류사와 호류사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도 있다. 한자 사용의 일본사교과서와 한글 전용의 국사교과서의 차이이기도 하다. 진출(進出)이라는 용어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국사교과서에도 군사적 의미와 이주와 같은 문화적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⁷⁾ 왜와 일본은 7세기 중엽 전후로 구분해야 할 용어이나, 같은 시기라도 관련 사료가 있는 것은 왜, 없는 것은 일본 열도의 뜻을 일본으로 표기한 것도 적지 않으며, 7세기 중엽 이후의 백제 부흥 전쟁에 참전했던 수군을 왜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상호 서술의 증감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사교과서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풍부하다. 중학교 일본사는 세계사와 함께 서술되기 때문에 세계 4대문명의 하나인 중국문화의 확산과 전파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이 많아졌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가 폐지되고 세계사가 필수로 되면서, 일본사와 지리를 선택으로 하는 학교가 많아져 일본사 교육의 비중이 감소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관련 서술과 교육의 기회도 줄었다.⁸⁾

한국의 국사교과서에서도 고대 일본에 관한 기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의 교과서에는 일본 관련 서술 중 표제어가 일본과의 관계를 직접적

6) 内田博明, 2002, 「일본역사교과서의 原始韓日關係史 기술」,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77~78쪽.

7) 국사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37쪽 백제의 규슈 진출은 정복활동의 일환으로 기술되었고, 42쪽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은 이주와 같은 문화적 의미로 서술되었다. 아래 항목별 검토에서 상술한다.

8) 木村茂光·花村統由, 2000,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古代韓日關係史」,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126~127쪽.

으로 제시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따로 떼어 서술한 항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각각 4건이었다.⁹⁾ 그러나 현재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일본 관련 기술이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된 것은 전혀 없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2건에 불과하다. 독립된 항목과 내용의 서술에서 본다면 국사교과서의 일본에 대한 기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국사교과서의 일본에 대한 언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비슷하게 16회 전후를 헤아리고 있지만, 고등학교에는 「삼국문화의 일본전파」 「일본에 건너간 통일신라문화」와 같이 독립된 항목으로 구별된 서술도 있다. 이를 제외하면 중국문화의 전파범위를 말할 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서술에 이름만 겨우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일본 관련 기술이라 보기는 어렵다.

3. 교과서 본래의 속성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일 양국의 새로운 연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다르고, 각국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한일고대사의 전통적 쟁점이었던 칠지도, 광개토대왕릉비, 임나일본부의 문제 등에서조차 공통적 견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칠지도 백제헌상설의 부정, 광개토대왕릉비의 왜의 참패 인정, 임나일본부 실체의 외교사신설 등은 한일 양국학계가 견해의 접근을 보이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수용한 서술이 필요하다.

4. 일본사교과서는 선진문화를 전파했던 고구려·백제·신라·가야를 중국 문화 전파의 전달자적 위치로 서술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국사교과서는 중국에서의 수용을 무시하고 삼국과 가야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전파했던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자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한국고대사를 타율적으로 취급하려는 과거 서술의 잔재라면, 후자에는 그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 고대국가의 성립까지는 중국과 함께 한국의 영향을

9) 崔德壽, 1985. 11, 「중등학교 國史教科書에 있어서 日本關係敘述」, 『역사교육』 37·38, 99쪽.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으나, 울령국가를 완성한 나라시대 이후에는 당 문명의 영향만이 강조되고, 만주와 한반도의 발해와 신라는 그 대체적인 동향조차 서술되지 않는다. 고대 한국의 여러 나라를 제후국으로 설정하거나 신라를 적대시했던 울령국가적 역사관, 즉 『일본서기』나 『속일본기』와 같은 고대 일본 역사관의 연장과 영향이다.¹⁰⁾

5_ 국사교과서에서의 일본 관련 서술이 일본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보다 독립항목의 설정이나 분량 모두에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이 3.5% 정도인 데 반해 국사교과서의 일본 관련 서술은 0.8%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자국사에 대한 서술비중의 차이에서 비롯된 점이 적지 않는데, 일본교과서에서 고·중세의 자국사 서술은 86.7% 정도인 데 비해 한국교과서의 그것은 94.7%나 된다.¹¹⁾ 국사교과서가 선사시대의 한일관계를 서술하지 않고, 한일 간의 동맹과 전쟁이란 교섭의 양식으로 진행되었던 정치·외교적 관계에 대한 서술도 적다. 불교·유교와 같은 문화적 전파에 대부분의 서술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사교과서는 선사시대의 도작과 금속기의 전파, 渡來人이라는 인간의 이동,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왜국의 관여 등과 같은 부분을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6_ 교과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시간의 차이도 있다. 한국은 7차교육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에 주 1시간, 3학년에 주 2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데 반해¹²⁾

10) 木村茂光・花村統由, 2000, 앞의 논문, 127쪽.

11) 이노우에 다쓰로, 2005, 「동북아시아 각국 교과서에서의 지역별 기술량」, 나카무라 사토루 編著, 『동북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313쪽. 한국의 국사교과서에서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 2002, 『고등학교 국사』, 17쪽의 「단원의 길잡이」에 ‘민족사관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온 과정이고, 우리 조상들의 노력한 결과’라는 지침이라고 생각된다.

12) 金漢宗, 2000, 「한국의 역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423쪽.

일본의 중학교교과과정에서는 주 4시간이 배정되어 있다.¹³⁾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국사교육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 역시 주 5일제 수업의 정착과 ‘여유 있는 수업’을 위해 3분의 1 정도의 수업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일본사교과서의 분량도 3분의 1 정도 삭감되었다. 그리고 일본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국사 서술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한일관계사 서술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었다.¹⁴⁾

7 한일 양국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서술 비중과 중복의 문제가 있다. 1945~2003년 국사교과서의 원시·삼국·통일신라의 서술 비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대외관계의 서술은 일관되게 감소하였다.¹⁵⁾ 자국사의 자율적 발전론에 따라 내부적 변화 요인이 더욱 중시되는 내재적 발전론의 연구경향이 지배적으로 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국사교과서의 일본 관련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한 중복적 서술 또한 적지 않다. 중·고등학교 각각의 교과서 내에서도 그러하고, 초등학교부터 서술되어 온 내용이 다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반복되고 있다. 지면이 적기 때문에 일본 관련 서술을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될 수 있는 한 같은 사실에 대한 중복을 피해 조금이라도 많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일본 관련 기술도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철 수출, 고구려와 왜병의 전투, 문화의 전파 등은 한 권의 교과서 안에서 중복 서술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비교 제시되었던 일본 高松塚古墳과 고구려 水山里壁畫古墳의 여인상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그대로 사용되었다.¹⁶⁾ 백제의 대외활동과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정복활동에

13) 木村茂光·花村統由, 2000, 앞의 논문, 126쪽.

14) 정재정, 2003, 3,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한국사관련 서술의 변화 - 東京書籍 간행 新舊교과서의 對比를 중심으로」, 『史學研究』69, 218쪽.

15) 박섭, 2005, 「제3장 한국」, 나카무라 사토루 編著, 『동북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113~114쪽.

16)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268쪽.

대한 보충설명으로 제시된 지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가 서로 베낀 듯이 완전히 동일하다.¹⁷⁾

8_ 국사교과서의 서술 전체에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대립의 자국사’적인 서술경향은 선사·고대의 서술도 예외는 아니다. 한군현¹⁸⁾의 서술 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이룩해 왔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초기에 한군현은 중국 선진문화의 전파와 수용의 기회로 서술되었으나, 1967년을 경계로 민족의 희생 같은 부정적 영향이 아울러 지적되기 시작했고, 1990년에 들어서는 한군현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수탈에 대한 한민족의 저항이 강조되는 서술로 변화였다.¹⁹⁾

자국사 중심의 서술 때문에 타국과의 대립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일본사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898년에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고 했던 『학습지도요령』이 2000년에는 “일본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깊게 한다”로 바뀌었다.²⁰⁾ 이러한 일본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의 변화가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우익 성향인 후소사[扶桑社]의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가 말하는 ‘자학사관의 수정과 같은 주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²¹⁾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의 속성이 그렇겠지만,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국가주의적 서술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란 국

17) 백제의 대외활동 지도는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36쪽;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49쪽;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정복활동 지도는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47쪽;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51쪽에 각각 중복되어 있다.

18) 한의 식민 지배를 축소 서술하려는 경향의 하나로 7차 교과서에서는 한군현의 내용은 물론 명칭조차 사라졌다. 무려 400년 이상 존재하였던 낙랑군에 대해 서술이나 지도의 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역사를 은폐하려는 열등의식의 발로이다. 송호정, 2003. 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선사 및 국가 형성 관련 서술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29, 26~27쪽.

19) 박섭, 2005, 앞의 논문, 114~115쪽.

20) 정재정, 2003. 3, 앞의 논문 참조.

21) 정재정, 2003. 3, 앞의 논문, 219쪽.

호도 없었고, 일본 열도 전체의 통일국가도 없었던 4~6세기 단계에, ‘日本·日本人·日本語·日本文化’ 또는 ‘우리나라(我が國)’²²⁾와 같은 표현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 보편적 시각이 결여된 전형적인 자국사 중심의 서술일 뿐만 아니라,²³⁾ ‘日本人’과 ‘우리나라(我が國)’는 ‘民族’과 같은 성격의 근대적 용어이다. 근대적 기준에서 고대사를 평가하려는 그릇된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²⁴⁾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국가주의가 가득한 교과서의 집필로 이어지고, “교과서는 공공의 기억이 아닌 국가의 기억이며”,²⁵⁾ “만들어진 기억으로서의 오만이다”²⁶⁾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9. 국사교과서의 일본에 대한 서술은 ‘침략자 일본, 한민족 발전의 방해꾼’과 같은 강한 도식적 서술의 특징을 보인다. 「신라 성장이 늦은 까닭」이라는 항목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발전하였다는 식의 서술은 그 전까지 왜의 침략 때문에 신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설명으로도 이해된다.²⁷⁾ 이러한 경향은 2002년 『중학교 국사』에서 더욱 분명하여, “왜의 침략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²⁸⁾ 현행의 교과서 역시 이러한 역사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술의 표현을 바꾼 정도이다.

22) 文部省, 2000. 5, 『中學校學習指導要領(平成10年12月)解説-社會編』, 大阪書籍株式會社. 이 『학습지도요령』은 중학교 일본사교과서 검토의 실제적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교과서의 편제와 내용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데, ‘日本’에 대해 ‘우리나라(我が國)’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사교과서의 용어사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재정, 2003. 3, 앞의 논문, 174~183쪽 참조 재인용.

23) 김성보, 2007. 6,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 공유의 가능성 - 공동역사교재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동북아의 평화와 역사 서술』, 26~27쪽.

24) 李成市, 「古代史の問題点は何か」, 小森陽一·坂本義一·安丸良夫 편, 『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 岩波書店, 15~18쪽.

25) 백영서, 2003, 「동아시아의 역사교과서와 국민국가의 경로」, 『학림』 24, 91쪽.

26) 안병직, 2007. 6,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동북아의 평화와 역사 서술』, 77쪽.

27)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38쪽.

28)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38쪽.

10_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한결같이 상호 진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중학교 국사』의 「백제의 성장」에서 백제가 중국의 요서와 산둥지역, 그리고 일본 규슈로의 진출을 서술하고, 「백제 전성기의 세력범위(4세기)」라는 지도에 화살표로 진출방향을 표시하였으며,²⁹⁾ 『고등학교 국사』에서도 똑같은 서술과 지도 「4세기 백제의 발전」을 반복하였다.³⁰⁾

그런데 보다 중요한 문제는 백제의 성장이나 발전의 항목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진출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침략이나 진출 같은 대외활동이 성장이나 발전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형성할 우려가 다분하다.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자부심의 근거로 삼는가이다. 은폐, 과장, 허세를 자부심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³¹⁾ 타국으로의 진출과 타민족에 고통을 부여했던 역사를 '진출'과 같이 표현하면서 자국의 성장이나 발달로 파악하고 가르치는 의식은 문제가 있다. 국수적이고 군국주의적이기까지 한 국사교육의 잔재를 보이는 대목의 하나로 생각된다.

11_ 국사교과서의 서술전체에서 시대적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성과 시혜자적인 입장의 강조이다. 이러한 서술경향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대 한국문화의 일본전파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한일관계기술에서 백제 관련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문화전파가 한일관계의 서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백제가 가장 빈번한 교류를 가졌고, 그 결과 선진문화와 인재의 전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째서 백제가 선진문물과 인재를 파견하면서 왜에 접근하려 하였으며, 백제가 기대하고 얻었던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문화 전파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하나로 파악하는 시각

29)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36~37쪽.

30)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49쪽.

31) 加藤周一, 2001, 「自國への誇りととは何か」, 小森陽一・坂本義和・安丸良夫 편, 『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 岩波書店, 3~4쪽.

은 전혀 없고, 막연한 문화적 우월감과 시혜자적인 만족감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³²⁾ 이러한 국사교과서는 학생이나 성인 가릴 것 없이 국사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연하게 일본을 문화적 야만으로 간주한다든지, 일본의 침략사례와 결부시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³³⁾

국사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일본 관련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고대는 삼국과 통일신라의 문화전파, 중세는 왜구, 근세는 임진왜란과 통신사, 근대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과정과 식민정책 등이다.³⁴⁾ 이렇게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본과의 관계란 ‘문화전파자로서의 한국’과 ‘군사침략자로서의 일본’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없었던 역사도 아니고, 시대순으로 나열되는 한일관계사 상의 중요사항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로 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는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Ⅲ. 한일관계사 쟁점의 서술 비교

1. 선사시대의 한일교류

한국의 국사교과서에서 일본 관련 서술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변한의 철이 왜에 수출되던 기술이다.³⁵⁾ 이 사실의 시기적 하한은

32) 李宇泰, 2000, 「한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고대한일관계사 서술」,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107~109쪽.

33) 金恩淑, 2000. 3,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한일관계사 서술 내용 검토」, 『歷史教育』 74, 237~238쪽; 정연, 2003, 「한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 사서술」, 『靑藍史學』, 43~44쪽.

34) 崔德壽, 1985. 11, 앞의 논문, 100쪽.

35)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21쪽;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3세기 말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기원전까지 소급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사교과서에 기원전 선사시대의 일본 열도에 대한 기술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이 베풀어질 공간은 없다. 그러나 4500~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남해안 지역의 부산 영도 동삼동패총, 강서 범방패총, 김해 수가리패총, 통영 옥지도·연대도패총 등의 유적에서는 한일교류를 증명하는 흑요석과 흑요석제 화살촉이 출토되고 있다.³⁶⁾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 서술로서, 이미 5000년 전의 신석기시대에 대한해협을 건너 왕래했던 최초의 한일교류는 반드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공통교재』에서는 이를 포함한 선사시대의 교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³⁷⁾ 가장 가까운 외국이며 이웃나라로서 최초의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일본사교과서는 국사교과서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오히려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중국·만주·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일본 열도의 시대적 변화를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석기 시대에 한반도와의 연륙상태에서 동물과 인간의 이동을 설명하고,³⁸⁾ 언어적인 공통성에 대해 언급하며,³⁹⁾ 기원전 3세기경 중국에서 秦·漢의 성립과 그 파동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에 파급되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⁴⁰⁾ 일본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은 새로운 연구 성과의 반영과 물자뿐 아니라 사람의

국사], 40쪽. 1986년 『국사교과서 편찬 준거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정치사 시대사 중심의 통사로, 고등학교는 문화사·사회경제사 중심의 주제사적 접근으로 구조화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36) 이러한 흑요석제 화살촉은 성분분석을 통해 규슈 북부 사가현의 고시타케[腰岳]산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매개로 했던 한국 남해안과 일본 규슈북부의 교류가 상정되고 있다.

37)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앞의 책, 23~24쪽에서 흑요석과 함께 규슈 이외의 靑森縣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근거로 신석기시대 일본 동북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38)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新編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15쪽;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詳説日本史』, 山川出版社, 5쪽.

39)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위의 책, 6쪽.

40)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앞의 책, 11~12쪽.

교류를 중시하는 내용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¹⁾

한일 양국의 고고학계에서는 일본 최초의 토기문화인 초창기의 縄文土器와 한국의 隆起土土器나 빗살무늬토기 등과의 근친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일본사교과서도 “초창기의 토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의 하나로, 아시아대륙 등에서 이것과 비슷한 오래된 토기가 발견되고 있지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⁴²⁾ 한국의 국사교과서도 위에 지적한 흑요석과 함께 선사시대의 한일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술해 가야 할 것이다.

2_ 고조선

고조선은 국사교과서에서 강단사학과 재야사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 주제의 하나이다.⁴³⁾ 일제 식민사관에서 철저하게 부정되던 고조선의 역사는 1970년대 이후 『삼국유사』의 단군신화가 건국의 반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부터, 그 역사적 성격과 사실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국사』에서는 대단원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에서 기원전 2333년의 고조선 건국 [檀君朝鮮]을 주요 사실로 명시하였고,⁴⁴⁾ 중단원 「국가의 성립」에서는 문제의 단군영정까지 제시하면서, 고인돌과 비파형동검의 존재와 분포를 고조선의 물증으로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중단원 「국가의 형성」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다.⁴⁵⁾ 2002년판의 같은 부분을 분석한 연구는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사이에 서술의 차이가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무리하게 역사적 사실화가 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학교 교과서가 민족의 시조신화로서의 의미와 역사적 변용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실 자체로는 인정하지 않은 데 반해, 고등학교 교과서는 2333

41) 内田博明, 2002, 앞의 논문, 80쪽.

42)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苺利彦, 2007, 앞의 책, 8~9쪽.

43) 송호정, 2003, 앞의 논문, 6쪽.

44)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7쪽.

45)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32~33쪽.

년의 건국이라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통설에서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는 비파형동검을 대비시키는 무책임한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⁴⁶⁾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과 단군영정, 그리고 비파형동검과 고인들의 분포도를 제시하는 것은 『삼국유사』의 전승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할 뿐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없는 내용을 역사적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⁴⁷⁾

반면에 일본사교과서에서 고조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한민족의 국가형성이나 국가사의 출발과 관련하여, 고조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은 부지불식간에 고조선사 부정의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일본사교과서에서 고조선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서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연표는 기원전 2세기의 樂浪郡을 한국사의 첫머리에 놓았고,⁴⁸⁾ 고등학교 교과서의 연표는 기원후 3세기 중간쯤에 고구려·백제·신라를 점선으로 표기하고, 4세기가 돼서야 실선으로 표기하였다.⁴⁹⁾ 4세기부터를 삼국시대의 시작과 한국고대사의 시작으로 가르치고 있다. 고조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사의 시작을 낙랑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정권부터 설정하거나, 삼국의 건국을 야마타이국보다 늦고 야마토정권의 출발과 비슷한 시기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만 보면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교과서와 별로 다를 바 없다.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서술 가운데 일본 관련 내용에 대해 첨언할 것이 있다. 먼저 『중학교 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본’의 명칭이 보이는 것이 고조

46) 송호정, 2003, 앞의 논문, 16~20쪽.

47) 안병직, 2007. 6,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동북아의 평화와 역사서술』은 교육당국이 민족의 기원으로서 고조선 고대 국가의 존재를 건국신화가 아닌 역사의 일부로서 교육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것에 대해 ‘존재하는 기억이 아닌 만들어지는 기억의 오만’이라고 하며 자국 중심주의 교과서 서술에 대한 경계를 새롭게 하고 있다.

48)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122~123쪽, 제4장의 끝과 제5장 사이에 첨부되어있는 일본사 전 시대 연표.

49)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앞의 책, 4쪽 하단의 연표.

선사를 서술하고 있는 중단원 「국가의 성립」이다.⁵⁰⁾ 물론 고조선의 서술과는 「철기가 보급되어 나타난 사회변화는?」이라는 중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이에 따라, 철을 잘 이용한 부족은 세력을 크게 키워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또 중국이나 일본과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문화교류를 하였다”라는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치세력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고조선의 철기문화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뒤에 다시 서술하는 변한의 철생산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너무 이른 시기에 서술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이라는 서술도 시대적으로 타당치 못하며, 교류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교 국사』에 제시되어 있는 「기원전 5세기 전후의 세계」라는 지도에 ‘왜’가 표기된 것은 시대착오이다.⁵¹⁾ 아무리 일러도 왜(倭)는 기원전 4~3세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 기원전 5세기 단계의 고조선과 맞지도 않았던 왜를 병렬하여 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철을 매개로 한 한일 간의 교류가 고조선과 왜 사이의 교류로 오해될 우려도 있다. 사마천의 『史記』에 朝鮮傳은 있지만 倭人傳은 없다. 왜인전은 기원후의 『三國志』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국 교과서의 차이 때문인지 『공통교재』는 구석기에서 청동기까지 만주·한반도·일본 열도의 사정을 서술한 뒤, 기원전 194년 위만조선의 성립을 한민족사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있다.⁵²⁾ 그러나 국사교과서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학계는 비파형동검문화나 그 위에 등장하는 은·주 청동기문화의 내용과 분포를 가지고, 이 시기보다 소급되는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三國遺事』는 믿을 수 없고, 『史記』 朝鮮傳이라야 신빙할 수 있으니, 「朝鮮傳」이 전하는 위만조선부터 고조선으로 서술하는 것은 식

50)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21쪽.

51)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7쪽.

52)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0,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29~30쪽. 29쪽에 제시된 연표는 기원전 194년의 위만조선부터 시작되는 데 비해 30쪽에서는 위만의 등장 이전에도 조선왕이 있었다는 약간의 기술을 하고 있다.

민사학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공통의 교재’는 아닐 것이다.

3. 한군현

중국의 식민지배를 통해 타율성을 강조하던 일제관학의 잔재로, 1950~1960년대는 한민족의 항쟁이 다루어지면서도, 漢郡縣의 설치와 변화, 문화적 영향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⁵³⁾ 1970년대에는 민족의 항쟁만이 강조되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는 거의 다루지 않게 되었다.⁵⁴⁾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교과서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중학교 국사』에 한군현 관련 기술이 전혀 없으며, 『고등학교 국사』에 3행의 분량으로 고조선의 멸망과 군현설치, 그리고 토착민의 반발과 고구려에 의한 축출이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⁵⁵⁾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2001년까지 樂浪郡의 명칭과 내용에 대한 기술이 있었지만 2002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⁵⁶⁾ 2007년에는 낙랑을 비롯한 한군현에 대한 서술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漢郡縣의 설치에 관한 사실 자체를 전혀 기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漢은 기원전 2세기에 朝鮮半島 북부 외에 중앙아시아도 지배하에 두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의 말, 포도,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 등이 중국에 전해져”와 같이 서술되었다.⁵⁷⁾ 서 북한 지역에 대한 漢의 지배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문제가

53) 이러한 경향은 광복직후 한국의 고대사연구를 대표하고 있던 李丙叢의 연구주제가 한군현이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54) 金項久, 1982, 12, 『國史教科書의 日本關聯 內容 分析 -敍述內容의 變遷을 中心으로-, 『歷史教育』 32, 47~48쪽.

55)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34쪽,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56) 정재정, 2003, 3, 앞의 논문, 185~186쪽은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감소함에 따라 교과서 전체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서술을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던 주변민족의 국가적 통합을 漢의 성립에서 비롯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주체적 대응의 경시하는 시각의 반영임을 지적하였다.

없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朝鮮이란 이름으로 한국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의 중학생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한국이란,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라는 사실이다. 일본사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피지배국 또는 중국의 부용국이라는 선입관이 제공될 여지가 있다. 한군현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전혀 보이지 않으나, 첨부지도 「2세기경의 아시아」에는 한반도의 서 북한 지역을 후한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그 治所로 ‘樂浪’을 표기하고 있다.⁵⁸⁾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에서는 『漢書』地理志를 인용하여 “100여 국으로 나뉘어 있던 倭人社會가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했던” 대상지로서 낙랑군이 서술되었고, 낙랑군에 대해 “前漢의 武帝가 기원전 108년 朝鮮半島에 두었던 4郡의 하나이다. 현재의 평양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중국풍의 높은 문화를 자랑하였다”라는 내용의 각주를 통해 담담하게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였다.⁵⁹⁾ 중학교 교과서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서술 배치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다만 중학교 교과서에서 “기원전후에는 朝鮮半島 북부에서 그 북쪽 지역에 걸쳐서 小國을 통일한 고구려가 일어났습니다”⁶⁰⁾라고 서술하면서도, 연표에서는 한군현 소멸 뒤에 고구려의 건국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한군현에 의해 삼국의 건국이 억제되고 있었던 것 같은 역사인식을 제공하는 서술방법이다. 삼국의 건국을 늦춰 잡으려는 일본학계의 전통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 서술의 하나로 파악된다.

57)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17쪽.

58)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24쪽.

59)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荊利彦, 2007, 앞의 책, 16쪽.

60)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17쪽. 이 교과서가 구어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문도 역시 구어체 문장으로 제시한다.

4_ 도작과 금속기의 전파

국사교과서의 일본 관련 서술이 처음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그러나 일본사교과서에서 ‘문화의 전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의 서술이 할애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적은 분량이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중학교 국사』는 소단원 「청동기시대의 달라진 모습은」에서 청동기 사용의 시작과 함께 고인돌 축조를 통한 사회 권력의 출현과 도작을 통한 농업생산의 증대를 서술하고 있다.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는 사진과 농경문청동기 사진까지 제시하면서도, 청동기문화와 도작기술이 일본 열도의 왜인사회에 미쳤던 혁명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고등학교 국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야의 철 수출 관련 기술과 삼국의 경제활동에서 처음으로 일본 관련 서술이 보이기 때문에, 이전의 청동기와 도작문화의 전파가 서술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반면에 일본사교과서는 도작문화와 금속기의 전파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는 소단원 「彌生文化의 成立」,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단원 「農耕社會의 成立」과 소단원 「彌生文化의 成立」과 같이 따로 구별하여 특기하였다. 야요이문화[彌生文化] 성립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되는 稻作과 金屬器의 전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 ① 기원전 4세기경 대륙(주로 朝鮮半島)에서 도래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稻作이 九州北部에 전해져 마침내 東日本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 稻作과 함께 靑銅器와 鐵器 등의 金屬器도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武器로 사용되고 있었던 銅劍과 銅矛도, 銅鏡과 銅鐸과 같이, 주로 祭祀를 위한 寶物로 사용되었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19쪽)
- ②-㉠중국 대륙에서는 기원전 6500~5500년경에 북쪽의 황하 중류 지역에서 좁쌀과 수수 등의 농경이 시작되고, 남쪽의 長江(揚子江) 하류지역에서도 稻作이 시작되어 농경사회가 성립하였다. 더욱이 기원전 6세기경부터 철기의 사용이 시작되어 春秋·戰國時代에는

농업생산도 현저하게 발달하였고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드디어 기원전 3세기에는 秦·漢(前漢)이라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민족에 강한 영향을 미쳐 朝鮮半島를 거쳐 일본열도에도 파급되었다. 대개 2700년 전으로 추정되는 繩文時代 종말기에 朝鮮半島에 가까운 九州北部에서 水稻耕作이 개시되었다. …… 彌生文化는 수도경작을 기초로 철,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靑銅을 사용한 金屬器, 목재를 채벌하고 가공하기 위한 石斧類, 벼의 수확용구인 돌갈[石包丁] 등 朝鮮半島 계통의 磨製石器와 織造技術을 동반하는 새로운 문화이다. …… 이와 같은 수도경작과 금속기생산 등의 새로운 기술은 중국과 조선반도에서 전파된 것이다. …… 이러한 것에서부터 彌生文化는 金屬器 동반의 농경사회를 이룬다. …… 이러한 것에서부터 彌生文化는 金屬器 동반의 농경사회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朝鮮半島에서 小數의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日本列島에 와서 재래의 繩文人과 함께 탄생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詳說日本史』, 11~13쪽)

⑥ 銅鐸은 朝鮮式 小銅鐸으로 불리는 朝鮮半島의 방울(鈴)에 기원을 가지며, 銅劍·銅矛·銅戈도 원래는 朝鮮半島에서 전해진 실용의 무기였다. 그러나 모두 일본 열도에서 祭器로 점차 대형화했던 물건이다. (『詳說日本史』, 15쪽, 각주1)

도작과 금속기의 전파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대륙과 조선반도에서 주민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중학교 교과서(①)에서는 ‘주로 朝鮮半島’라고 명시하면서도 이주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⁶¹⁾ 고등학교 교과서는 농경과 도작의 중국 기원설을 소개하고, 秦·漢의 성립에서 전파의 계기를 구하면서, 朝鮮半島를 거쳐 朝鮮半島에 가까운 九州北部에서 수도경작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朝鮮半島에서 小數의 사람들이 도작과 금속기를 가지고 들어와 토착의 繩文人과 함께 새로운 彌生文化를 탄생시킨 것으로 서술하였다(②-⑥). 도작과 금속기의 직접적인 전파를 한국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달자로서의 의미를

61) 금속기는 도작만큼 분명하지 않지만 ‘도작과 함께 금속기도’라는 서술에서 한반도에서의 전래는 비교적 분명하게 서술되었다.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朝鮮半島를 거쳐’라는 표현이 그러하고, 한반도에서의 이주를 소규모로 소개하면서 토착민인 다수의 繩文人과 함께 새로운 彌生文化를 탄생시켰다는 서술이 그러하다.

그러나 만주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은 일본 열도의 왜인사회를 구성하는데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였다. 埴原和郎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기원후 8세기 일본 열도의 인구는 7만 5800명에서 540만 명으로 늘어나 0.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시기 세계인구의 자연증가율인 0.1%로 계산하면, 300만 명가량이 자연증가가 아닌 도래인이 되어야 한다. 토착의 繩文계통 1명에 대해 渡來계통은 25명의 비율이 된다. 다시 자연증가율을 2%(한반도 2.5%)로 계산하면, 도래인은 1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繩文계통 1명에 대해 渡來계통 8.6명이 된다. 아울러 彌生時代 다음에 오는 古墳文化 단계에도 토착인과 도래인의 비율이 近畿地域에서 1:9, 中國地域에서 2:8이라는 수치가 인정되고 있다.⁶²⁾ 이와 같은 도래인의 숫자는 학계뿐만 아니라 이미 상식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굳이 한반도에서의 이주민을 小數로 표현하고, 토착민인 繩文人이 다수였으며, 그들의 협력없이 彌生文化의 성립도 없었다고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대로 벼의 수확도구인 돌갈과 같은 마제석기와 직조기술이 한반도 계통임을 분명히 했던 점, 水稻耕作에 대해 네 갈래의 전과 루트를 소개하면서도, “彌生時代 水稻耕作의 기술이 朝鮮半島 南部에서 전해진 것은 그것과 함께 공존하는 각종의 유물이 공통되는 것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다”⁶³⁾라고 단언하고 있는 점 등은 한일 양국 역사·고고학계의 객관적 연구에 기초한 바람직한 서술이다.

아울러 銅鐸·銅劍·銅矛·銅戈 등의 기원에 대해 한반도의 방울과 무기라는 실용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수용한 일본 열도의 왜인사회에서 祭器로 변용 대형화되었다고 서술하였다(②-⑥). 한반도 기원의 외래적 영향

62) 金恩淑, 2000. 3, 앞의 논문, 251~252쪽.

63)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荊利彦, 2007, 앞의 책, 13쪽.

과 일본 열도의 주체적 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이다.

5_ 백제의 일본진출

한국의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백제 근초고왕 대의 역사적 사실로 일본 열도에 대한 진출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백제가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은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였다. …… 백제는 중국의 동진, 가야, 왜와 외교관계를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백제는 황해를 건너 중국의 요서·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 진출하여 활동무대를 해외로 넓혔다. (『중학교 국사』, 36~37쪽)
- ④ 백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대 크게 발전하였다. …… 정복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수군을 정비하여 중국의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고, 이어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슈 지방에까지 진출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 (『고등학교 국사』, 49쪽)

③과 ④는 서로 옮긴 것처럼 아주 유사한 서술로서, 백제에서 규슈로의 진출을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똑같은 지도 역시 함께 제시하고 있다.⁶⁴⁾ 이 교과서로 중·고등학교를 이수하는 사람이라면 백제의 일본 진출을 역사적 사실처럼 인식할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소단원 「백제의 성장과정은?」과 「백제의 성장」이라는 항목 속에 구별 서술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단원 「삼국의 발전과 통치체제」와 「삼국의 정치적 발전」이란 항목에서 서술되고 있어, 백제의 일본 진출이 곧 백제의 발전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국정교과서에 당당하게 기술되어 있는 이 내

64)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36쪽;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49쪽.

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백제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읽기자료」로서 『梁書』의 관련 기사를 제시하고 있으나,⁶⁵⁾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무런 근거 제시나 보충설명도 없다. 일본 진출의 근거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수준에 대한 고려나 지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만한 직접적 기록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문자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학계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分國論⁶⁶⁾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일본사교과서에 관련 언급이 있을 리 없다. 어느 쪽이 옳은가 하면 이 경우에는 일본사교과서이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을 전개할 어떠한 작은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학계의 선협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학생들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이며, 이웃 나라의 신용을 잃는 일이기도 하다.⁶⁷⁾ 과거 우리가 비판하고 문제로 삼았던 일본사교과서의 한반도 진출론보다 관련 자료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6. 광개토대왕릉비

고대한일관계사 논쟁의 원점에 광개토대왕릉비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일본학계의 재검토와 재일동포사학자 이진희의 변조설 주장 등의 영향으로 일본사교과서의 서술에서 관련 기술이 줄기도 하였고,⁶⁸⁾ 현재 한일 양국의 학계는 “왜가 출병하였고, 고구려와의 교전에서

65)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37쪽.

66)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사』, 사회과학출판사 참조.

67) 이렇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앞의 책, 해안, 31쪽은 거의 동일하게 근초고왕 대의 대외활동에 대해 서술하면서도 “일본 규슈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와 같이 기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68) 木村茂光·花村統由, 2000, 앞의 논문, 131쪽.

대패하였다”는 큰 줄기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학계의 성과가 반드시 한일 양국의 중등학교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동일한 문자기록에 대한 서로 다른 인용과 서술이 아직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⑤-① 광개토대왕은 강화된 국력으로 신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그의 업적은 만주 집안에 남아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다. (『중학교 국사』, 47쪽)
- ②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신라 내물왕의 구원 요청을 받아 백제, 가야, 왜의 연합세력을 낙동강 중·하류 지역까지 추격하여 섬멸하였다. (『중학교 국사』, 41쪽, 협주)
- ③ 광개토대왕은 먼저 4만의 군사로 백제를 공격하여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였다. …… 백제를 다시 공격하여 여러 성을 함락한 후, 한강을 건너 백제 수도에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가 굴복하고 …… 또 5만의 군사를 보내어, 당시 신라를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유역에서 물리쳤다. (『중학교 국사』, 47쪽, 도움글)
- ⑥-① 신라 해안에 나타나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48쪽)
- ② 광개토대왕 때에 만주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은 광개토대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다. (『고등학교 국사』, 50쪽)
- ③ (영락)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 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

다. 신라의 □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50쪽, 읽기자료)

⑦-①大和政權은 백제와 소국으로 분립되어 있던 加羅(任那)지방의 나라들과 함께 고구려·신라와 싸웠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26쪽)

①고구려 好太王(광개토대왕)의 공적을 기리는 석비에는 好太王이 여러 차례 倭軍을 깨뜨렸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19쪽, 협주①)

⑧-④4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하정책을 추진하자, 朝鮮半島 남부의 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전 변한 땅의 加耶諸國(加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倭國도 고구려와 싸우게 되었다. 고구려 好太王의 비문에는 왜가 고구려와 교전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 (『詳說日本史』, 22쪽)

①고구려의 수도였던 丸都(현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好太王(廣開土王)의 사업을 기록한 石碑로, 碑文은 당시 朝鮮半島의 정세를 아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그중에 '百殘(百濟)新羅는 舊是屬民으로 由來朝貢하였다. 그런데 倭가 辛卯年(391년) 이래 바다를 건너 百殘을 깨뜨리고 新羅를 □□하여, 그것으로써 신민으로 삼았다'가 있다. (『詳說日本史』, 22쪽, 각주2)

이상의 기술과 함께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는 유리 달린 보호각 속의 광개토대왕릉비, 고등학교 교과서는 근접 촬영의 광개토대왕릉비 사진을 각각 중 단원의 첫머리에 게시하였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는 사진은 없지만 지도 「5세기의 동아시아」에 '好太王碑'를 표시하였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지도 「4~5세기의 동아시아」에 위치를 표시하면서, 1984년 촬영 사진을 아울러 게시하였다.⁶⁹⁾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모두가 광개토대왕릉비의 의미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국사교육의 중요자료로 이용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69)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46쪽;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44쪽;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26쪽;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앞의 책, 22~23쪽.

그러나 비문의 소개에 있어서는 자국의 편의대로 선택 서술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사교과서에서는 왜의 격퇴만을 서술하고(⑤-⑥·⑦·⑧), ⑥-⑨·⑩·⑪·⑫, 일본사교과서에서는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서술이 현저하다(⑦-⑧·⑨, ⑩-⑪). 그러나 이러한 서술 경향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같은 비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국에 유리한 부분의 기사를 선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적은 지면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 부분에 비문을 초략해 제시하고 있지만, 국사교과서는 광개토왕릉비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이른바 신묘년(391) 조의 부분을 생략하였고(⑤-⑦, ⑧-⑩), 일본사교과서는 왜와 고구려가 충돌했던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永樂 9·10·14년 본문의 기술은 제쳐두고, 396년 백제공략의 전제에 불과한 신묘년 조의 기술만을 소개하고 있다(⑧-⑩).

비문 자체의 소개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⁷⁰⁾ 이와 같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일부분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다.⁷¹⁾ 자국 중심의 역사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된 국사교육의 특징이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고대한일관계사에서 광개토대왕릉비문은 많지 않은 당대의 확실한 사료인 만큼 양국 학생들은 선택 제시된 비문의 내용만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국사교과서가 논쟁의 중심이었던 신묘년 조의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내용의 서술이 요구되므로, 왜의 격파가 보다 확실히 읽혀지는 영락 9년(399)과 10년(400) 조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교과서는 전통적인 일본식 독법을 소개하면서도, 광개토대왕이 여러 차례 倭軍을 깨뜨렸던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⑦-⑩). 객관적 서술로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야 어떻든 간에 한국의 교과서는 왜를 격파한 것을 강

70) 김수태, 2003, 3, 「제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 정치 관련 서술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29, 57쪽.

71)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의 비문 초략(⑤-⑩)은 永樂 연호나 서력 중 어느 쪽의 연도 표시도 없다. 원 비문에도 永樂 연호에 의한 분명한 연대가 있고, 중학생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도 연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조하고, 일본의 교과서는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가 고구려와 대결하였던 것을 강조하는 대조적인 서술이 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공통교재』는 광개토대왕릉비의 사진을 크게 제시하면서도 비문의 선택적 소개는 피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백제·가야·왜 등을 격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백제와 연동된 왜와의 전쟁이 있었고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는 서술에 그치고 있다.⁷²⁾

『고등학교 국사』가 「광개토대왕릉비」에서 고구려와 충돌했던 왜를 신라 해안에 나타난 왜와 같이 서술한 것도 문제이다(⑥-㉠). 비문에 보이는 왜의 실체에 관한 논쟁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동해안의 왜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이는 것이고, 「광개토대왕릉비」의 왜는 가야와 함께 신라 남서쪽 내륙에서 활동했던 세력이다. 물론 국사교과서가 이 시기까지의 왜를 주로 규슈 지역의 세력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경향의 하나일 수도 있다. 앞에서 비판하였던 백제 근초고왕의 규슈 진출,⁷³⁾ 광개토대왕 정복활동의 보충지도에서 畿內를 제외하고 '규슈'만을 표기했던 것 등에 그 편린이 보인다.⁷⁴⁾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과 전쟁했던 왜를 야마토, 즉 畿內의 倭로 인식하고, 그렇게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규슈[九州]에서 나라[奈良]까지의 지도가 제시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나라지역에 '왜'가 표기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문에 보이는 세력을 규슈의 왜로 파악하고 있는 학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의 왜와 비문의 왜를 동일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단순한 오해인지, 이른바 '규슈의 왜'에 기운 서술인지가 궁금하다.

이에 비해 일본사교과서는 당연히 畿內의 야마토정권을 비문에 보이는 왜병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같은 시기의 지도를 첨부하고 있는데, 서일본과 규슈를 동일한 색으로 칠하면서 지금의 奈良를 大和로 표기하고 그 위에 '倭'를 표기하고 있다.⁷⁵⁾ 더구나 비문의 소개와 광개토대

72)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앞의 책, 37~40쪽.

73)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37쪽.

74)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47쪽, 「전성기의 고구려(5세기)」;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51쪽,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세력판도」.

왕과의 전쟁은 모두 「고분과 야마토정권」이란 절에서 다루어진 것이고, 이 야마토정권은 최초·최대의 전방후원분이 모두 있는 畿内 지역으로 설명되고 있다.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군과 전쟁했던 왜의 실체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_ 무령왕(릉)

국사교과서는 백제의 무령왕과 무령왕릉을 서술하고 있으나, 중국 남조와의 교류만이 서술되었을 뿐 왜(일본)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⁷⁶⁾ 무령왕이 일본 열도에서 태어났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棺材가 일본산이었다는 사실은 중국 남조와의 관련성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과거 일제의 남선경영론과 같은 식민사관에 대한 과잉반응이거나, 관련 문헌적·고고학적 사실을 짧은 문장을 통해 중·고등학생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었던 자신감의 결여라고 생각된다. 백제와 왜의 왕실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 무령왕의 출자와 장례에 관한 사실인 만큼, 한일 양국의 선린의식의 함양과 친선관계의 진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감하고 있는 『공통교재』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⁷⁷⁾

8_ 도래인과 문화의 전파

한일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의 전파와 이주민에 관한 기술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특색을 그

75)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26쪽, 「5세기의 동아시아」;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앞의 책, 22쪽, 「4~5세기의 동아시아」, 19~22쪽.

76)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50쪽;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262쪽.

77)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앞의 책, 40쪽.

대로 보여주는 高松塚古墳壁畫의 女人像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표지의 머리 부분, 고등학교 교과서 표지 안쪽에 각각 일본사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⁷⁸⁾ 한일 양국의 교과서에서 문화의 전파와 이주에 관련된 기술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의미에 대해서는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술과 배분 동기가 반드시 같은 것만은 아닌 듯하다.

일본사교과서의 이주민-도래인과 선진문물 및 문화 수입과 전파에 대한 기술은 이미 식민사학에서 ‘日鮮同祖論’이나 ‘南鮮經營論’ 등의 근거로도 활용되었던 것의 연장인 측면도 있고, 국사교과서에서는 선진문화 전파자로서의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술된 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문화전파의 대명사와 같은 아키히기·왕인·담징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메이지[明治] 이후 일본사교과서와 조선총독부 발행의 국사교과서에서도 보이던 것으로, 한국의 기록에는 없지만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있는 기술을 인용한 것이었다. 한국의 연구자가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기에 좋은 소재로 사료비판도 없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던 결과였다. 결국 고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선진문화의 전파는 한국학계의 정설이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사교과서에 중복 서술되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이 되었다.

- ㉑-㉓가야의 일부 세력이 일본에 진출하여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중학교 국사』, 42쪽)
- ㉔백제가 …… 불교를 장려하고, 중국과 문물을 교류하였으며, 왜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불교를 비롯한 여러 문물을 전해 주었다. (『중학교 국사』, 51쪽)
- ㉕신라의 불교는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상, 원효를 비롯한 신라의 승려들이 저술한 책들이 일본 불교계에 널리 읽혔다. 의상과 선묘를 도운 이야기가 일본에 그림으로 전하고 있으며, 원효는 일본

78) 중학교 『新編 新しい 社會 歴史』에서는 1번째, 고등학교 『詳説 日本史』에서는 11번째에 각각 제시되었다. 다만, 고등학교 『詳説 日本史』 1985년판에서는 3번째에 제시되었다.

불교계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중학교 국사』, 72쪽)

⑩-㉠당에서 발달한 한자, 유교, 불교, 율령체제 등은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에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루었다. (『고등학교 국사』, 45쪽)

㉢지도 「삼국의 경제활동」 고구려 → (해표피 모피류) → 왜, 백제 → (곡물 직물류) → 왜, 신라 → (곡물 비단) → 왜 (『고등학교 국사』, 135쪽)

㉣552 백제, 일본에 불교 전파 (『고등학교 국사』, 252쪽, 연표)

㉤4세기 후반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고등학교 국사』, 260쪽)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삼국 중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웠던 백제가 삼국 문화의 일본전수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4세기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이어 일본에 건너간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6세기에는 노리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이렇게 전래된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호류사 백제관음상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5경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박사, 채약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기술자들도 건너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졌고, 나아가 백제가람 양식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고등학교 국사』, 267쪽)

㉦고구려도 일본 고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7세기 초에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고, 호류사의 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승려 혜지는 쇼토쿠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해관은 불교전파에 큰 공을 세웠다. 일본 나라시에서 발견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벽화 고분과 흡사한 점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사』, 267쪽)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는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 일본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의 야마토조정의 성립과 7세기경에 나라지방에서 발전한 아스카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등학교 국사』,

267~268쪽)

- ⑤삼국문화에 뒤이어 통일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통일신라문화의 전파는 일본에서 파견해 온 사신을 통해서 이뤄졌다.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 문화는 일본 하쿠호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심상에 의하여 전해진 화엄사상은 일본 화엄종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8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이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긴 후부터는 외국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국사』, 268쪽)
- ⑪-②「大陸文化를 傳했던 渡來人」朝鮮의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朝鮮半島에서 日本列島로 一族이 함께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渡來人은 철제의 농구를 확산시켜, 관개용의 큰 저수지를 만드는 기술 외에 딱딱한 토기[須惠器]와 고급 견직물을 만드는 기술을 전했습니다. 또한 渡來人은 漢字를 전해 조정의 기록과 외국에 보내는 편지의 작성을 담당하는 등 재정과 정치에서도 활약하였습니다. 漢字와 함께 儒學의 서적도 전해졌습니다. 6세기 중반에 佛敎를 日本에 전한 것도 渡來人이었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32쪽)
- ⑥6세기 중반에 佛敎과 經典이 百濟에서 朝廷에 보내져 佛敎가 전해졌습니다. …… 聖德太子와 蘇我氏는 불교를 퍼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수도가 있던 飛鳥地方(奈良盆地南部)을 중심으로 불교에 기초한 문화가 번창하였습니다. 이를 飛鳥文化라 하고, 法隆寺의 건축과 그 안에 있는 석가삼존불 등의 불상이 그 대표입니다. 이들은 주로 朝鮮半島에서 온 渡來人의 자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남북조시대의 중국과 더 멀리 인도와 서아시아 등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38쪽)
- ⑫-③고구려와 싸우게 되었다. …… 또한 이 전란을 피해 많은 渡來人이 바다를 건너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전했다. (『詳說日本史』, 22~23쪽)
- ⑩「大陸文化의 受容」조선반도와 중국과의 활발한 교섭 속에서 鐵器·須惠器의 생산, 織造·금속공예·토목 등의 여러 기술이 주로 조선반도에서 온 渡來人들에 의해 전해졌다. 야마토政權은 그들은 韓鍛冶部·陶作部·錦·織部·鞍作部 등으로 불리는 기술자 집단으로 조직하여 각지에 거주시켰다. 또한 漢字의 사용도 시작되어 稻

荷山鐵劍의 銘文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한자의 음을 빌려 일본인의 이름이나 지명을 표기하게 되었다. 한자를 사용하여 아마토政權의 각종 기록과 출납·외교문서 등의 작성을 담당하였던 것도 史部로 불리는 渡來人들이었다. (『詳說日本史』, 23~24쪽)

㉔ 記紀에는 西文氏·東漢氏·秦氏 등의 先祖로 전해지는 王仁·阿知使主·弓月君 등의 渡來說話가 전해지고 있다. (『詳說日本史』, 23쪽, 각주3)

㉕ 6세기에는 백제에서 도래한 오경박사에 의해 유교가 전해진 것 외에 醫·曆·易 등의 학술도 지배자층에 수용되었고, 불교도 조선 반도에서 전해졌다. (『詳說日本史』, 24쪽)

㉖ 5세기경이 되면 朝鮮半島에서 硬質灰色의 須惠器의 제작기술이 전해져 土器와 함께 사용되게 되었다. (『詳說日本史』, 26쪽)

㉗ 飛鳥文化는 渡來人의 활약도 있어서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중국 남북조시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의 서아시아·인도·그리스에 통하는 특징도 가졌다.

㉘ 百濟僧 관록이 율법을, 高句麗僧 담징이 채색·종이·먹의 기법을 전했다 한다. (『詳說日本史』, 31쪽, 각주1)

㉙ 飛鳥文化에 이어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에 걸치는 문화를 白鳳文化라 한다. …… 신라에서 전해진 중국 당 초기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불교문화를 기조로 하고 있다. …… 또한 高松塚古墳壁畫에 고구려의 영향이 인정된다. (『詳說日本史』, 34쪽)

한일 양국 교과서의 문화전파와 이주민-도래인에 관한 기술은 상대적으로 중학교(㉑-a·b), ㉒-a·b)에서 비교적 간략하였다가, 고등학교(㉓-a·b·c·d·e·f·g·h), ㉔-a·b·c·d·e·f·g·h)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통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대단원 「Ⅵ. 민족 문화의 발달」 속에 「일본으로 건너 간 우리문화」라는 별도의 소단원을 설정해 집중 서술하였고,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도 「東아시아諸國과의 교섭」(㉒-㉓)과 「대륙문화의 수용」(㉔-b·c·d)이라는 2개의 항목을 따로 설정하여 도래인과 문화전파를 서술하였다. 다만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는 「대륙문화를 전했던 도래인」(㉒-㉓)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여 한국

의 중학교 교과서보다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교과서는 본문의 서술과 함께 문화·문물의 이동을 표시한 지도와 사진의 비교 제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는 지도 「삼국문화의 일본전파」에 고구려의 불교·회화·종이·붓, 백제의 유학·불교·회화·천문·역법, 신라의 조선술·축제술, 가야의 토기 제작기술이 하카타[九州]·오카야마[中國]·쓰루가[越]·나라[近畿]에 각각 전파되던 모습을 화살표로 표시하였고,⁷⁹⁾ 일본의 『詳説日本史』는 「佛敎傳來要圖」를 통해 서역에서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에 불교가 전파되던 시기를 화살표로 표기하였다.⁸⁰⁾ 아울러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는 일본 나라의 다카마쓰고분벽화와 북한 평안남도의 수산리고구려고분벽화,⁸¹⁾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는 신라금관과 일본고분 출토의 금관, 백제의 금동신발과 일본고분의 금동신발, 신라의 미륵보살상과 일본 고류사[廣隆寺]의 미륵보살상⁸²⁾ 등을 나란히 제시하여, 서로 닮은꼴임을 한눈에 보이도록 하였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닮은꼴의 비교사진이 제시되었다는 차이만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교과서의 서술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과 오류를 몇 가지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의 객관성과 관련되는 문제로, 문화 전달자와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사교과서가 4세기에 백제의 아직기가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왕인이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 가르쳤고(⑩-⑥), 7세기 초에 고구려의 담징이 호류사의 벽화를 그렸다(⑩-f)고 서술한 데 비해 일본사교과서는 아직기와 왕인을 거명하지 않거나(⑪-a·b, ⑫-b), 담징의 호류사[法隆寺] 금당벽화의 제작은 서술하지 않고(⑫-g), 이들과 관련된 韓계통 씨족 설화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기술하는 차이를 보인다(⑫-c).

79)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267쪽.

80)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芒利彦, 2007, 앞의 책, 24쪽.

81)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267쪽.

82)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27·39쪽.

왕인을 아마토의 문필씨족인 가와치[西文]씨의 씨족전승에서 도래의 기원과 관련되어 창작되었던 가공의 인물로 보는 연구가 일반적이며,⁸³⁾ 고구려 담징의 경우는 더 심해서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다는 정확한 기록이나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호류사 주변에서 팔리고 있었던 안내기와 같은 불확실한 구전자료에 기초해 쓰였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⁸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왕인과 고구려의 담징에 의한 문화전파의 전승은 우리 국민의 많지 않은 일본에 대한 상식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실의 하나가 되었으며, 왕인의 경우는 출신지로 전하는 곳의 성역화와 성대한 축제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적 신빙성의 문제 때문에 『중학교 국사』에서는 아직기, 왕인, 담징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없어지게 되었고, 왜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불교를 비롯한 여러 문물을 전해 주었다(㉑-㉒)는 정도의 제한적 서술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⁸⁵⁾

둘째, 국사교과서는 韓계통 이주민의 활약과 선진문화가 일본 고대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일본 열도에 수입되었던 모든 선진문화가 고구려(㉑-㉒·㉓·㉔)·백제(㉑-㉒, ㉑-㉒·㉓·㉔·㉕·㉖)·신라(㉑-㉒, ㉑-㉒·㉓·㉔·㉕·㉖), 그리고 가야(㉑-㉒)에서만 전파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국사교과서가 중국 등의 문화전파까지 서술해야 하는가의 문제, 서술 분량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백제·고구려·신라 등이 전해 주었던 불교·유교의 이데올로기와 국가경영이나 토목건축의 기술 등에서 중국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삼국문화의 원천적인 성격과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㉑-㉒와 같이 아주 짧은 문장

83)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332쪽; 金恩淑, 2000, 3, 앞의 논문, 240~241쪽.

84) 金恩淑, 2000, 3, 앞의 논문, 239~245쪽은 이러한 기술의 시작이 이병도의 『새 국사교본』(1948)에서 처음 확인된다고 하였고, 이병도의 고대사연구의 동기와 관련지어, 민족적 자부심 고양과 민족의 문화 창조 능력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5) 해당 부분의 집필자가 한국고대사 중에서도 백제사 전공자로서 왕인의 실재와 담징의 전승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일 양국 학계의 학술적 성과를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라도 서역·중국 등을 포함하는 문화·문물의 이동 속에서 만주·한반도로 부터 일본 열도로의 전파로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

반면에 일본의 교과서는 전파의 직접적 계기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朝鮮半島로 명기하면서도, 중국과 더 멀리 인도와 서아시아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⑪-⑥, ⑫-①). 중·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구체적으로는 朝鮮半島에서의 전파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해당의 항목명은 「대륙문화를 전했던 도래인」(⑪-①) 또는 「대륙문화의 수용」(⑫-⑥)과 같이 설정하였다. 선진문화 전파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大陸이며, 朝鮮半島는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여지가 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교량이나 타율적 존재로서의 한민족사를 서술하던 식민사관의 잔영이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다.

후자와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인다. 「大陸文化的 受容」(⑫-⑥)에 대한 보완지도로 첨부된 「佛敎傳來要圖」는 서아시아·인도·중국을 포함하는 불교전파의 루트를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 畿內로의 화살표와 함께 중국 남부에서 큐슈남부로 가는 또 하나의 화살표가 표시되었으며, 붉은 글씨로 6세기경 이전 시기까지 주기되었다. 6세기 전반에 백제에서 불교가 전파되었다는 본문의 서술(⑫-④)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단순한 오류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大陸에서의 전파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일본사교과서는 문화전파의 계기로 渡來人이란 이주민의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형성과 고대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던 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야마토정권의 백성-部民으로 편성되었는지 또한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다(⑪-⑥, ⑫-⑥·⑦). 반면에 국사교과서는 정치체나 왕권 간의 수수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⑨-①·②·③, ⑩-④·⑤·⑥·⑦·⑧·⑨).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정해진 용어 사용도 없었고, 몇몇 이름이 보이는 이주민에 대해서도 국가단위로 서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사교과서가 一族이 함께 이주하는 사람들(⑪-①)이란 표현과 같이 전란이나 차별을 피해 이주하는 가족규모의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국사교과서에서는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 고구려의 담징과 혜자(㉩-f), 신라의 심상(㉩-b) 등과 같이 반드시 출신국을 기술하고 있다. 국사교과서에서는 국가중심적 서술이, 일본사교과서에서는 자국중심주의적 서술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한일교과서에 보이는 공통적 문제점과 오류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국사』에서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廣隆寺]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졌다(㉩-㉪)고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고류사의 미륵보살상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신라 미륵반가사유상의 사진과 나란히 게시된 것과 같이 소재만 목제[廣隆寺]와 금동[新羅]으로 차이가 있을 뿐, 쌍둥이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신라계통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구나 고류사는 우추마사를 시조로 하는 하타씨[秦氏]의 씨족사찰로, 하타=바다이며, 우추마사의 우추는 우두(머리)로 우추=우중(優中)이다. 즉 경북 울진의 우중국(優中國)에서 바다를 건너 교토 서북부에 정착한 하타씨의 사찰이 고류사였다. 신라계통의 씨족사찰에 신라의 미륵반가사유상과 꼭 같은 불상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백제문화의 영향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 한일 양국의 교과서가 동일하게 서로 닮은 꼴의 유물·유적의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문화전파의 물증이 되기도 하지만, 수용과 변용을 통한 일본문화화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우리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일본사교과서는 중국의 자료도 아울러 첨부하고 있지만, 국사교과서는 그렇지 못하다. 고구려 수산리벽화와 다카마쓰고분벽화만의 제시는 고구려의 영향만을 강조할 뿐, 중국 등과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수용 변용시켜 갔던 일본 독자의 발전상을 인정하지 않는 서술이 될 수 있다.

셋째, 문화전파의 담당자였던 이주민들이 일본 열도에 왜 왔던가 또는 어찌서 갔던가, 그리고 고구려·백제·신라와 가야는 왜 선진문물을 전해주었던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양국 모두에서 결여되고 있다. 일본사교과서는 渡來인들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던 계기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를 통해 서술해야 하고, 국사교과서는 전해주었던 선진문물이나 인재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던가를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만주와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의 상황을 무시한 자국만의 역사를 전하게 될 것이다. 국사교과서는 「삼국의 경제활동」을 나타낸 지도에서, 고구려·백제·신라에서 왜로 전달되었던 물품을 기록하고 있다(㉑-㉒). 삼국이 이러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물품이나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던가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⁸⁶⁾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 제공만하는 경제관념 없는 민족으로 생각되거나, 막연한 시혜자로서의 우월적 선입관만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넷째, 국사교과서나 일본사교과서 모두 ‘한국에서 일본으로’라는 일방통행적 문화전파의 인식만을 제공하고 있다.⁸⁷⁾ 도래인과 문화의 전파가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통행적인 것만이 아니었음은 한일 역사·고고학계의 상식이 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던 문물에 비해 양적으로 극히 적기는 하지만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며,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이주했던 왜계통의 인물들이 백제조정에서 봉사하고 있던 것도 확인되고 있다. 선사시대 남해안에 유입된 일본 열도의 흑요석, 백제 무령왕의 목관으로 사용되었던 목재, 가야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왜계통의 문물,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에서 보이는 왜계통의 요소 등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었던 왜계통의 문화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隋書』百濟傳의 기록과 같이 백제로 이주한 왜인들이 있었고, 백제 조정에서 백제왕에게 봉사하던 倭系百濟官僚의 존재 역시 한일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교과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한반도로 이주했던 왜인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국제관계의 개선이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인적 교류만한 것이 없다. 역사적 사실로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존의 서술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일방통행적 이동이라는 인식의 수정과 함께 보다 국제적이었던 한국고대사의 단면을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86) 백제의 선진문물 제공과 각종 선진기술 보유자의 파견에는 왜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전제로 되었다는 분석이 통설화되고 있다. 이영식, 2006. 6, 「5~6세기 고구려와 왜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199~206쪽.

87) 木村茂光·花村統由, 2000, 앞의 논문, 130쪽.

다섯째, 국사교과서의 문화전파는 유교나 불교와 같은 이데올로기, 건축이나 미술과 같은 좁은 의미에 국한되고 있다. 일본사교과서와 같이, 사람의 이동과 그에 따른 조세수납, 지배체제 등을 비롯한 국가경영에 관련되는 요소, 須惠器와 鐵生産, 저수지시설과 교량 같은 국가경영이나 생산기술 등의 기여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주와 문화전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본사교과서가 4세기 말~5세기 초의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의한 백제와 가야 공략의 시기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⑫-a)도 문제이고, 국사교과서가 백제에서 전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⑩-e·f·g·h)도 문제이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섭이 가야 → 백제 → 신라의 순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지만, 가야에서의 문화전파와 주민의 이동에 대한 서술은 전무에 가까우며, 각 시기의 교섭상대와 단계적 변화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일곱째,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사교과서에서 일본 관련 서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철기의 전파였고, 불교·유교·토목·건축·통치기술의 전파가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절대적인 기여와 연결되는 것은 '시혜자로서의 한국'과 '수혜자로서의 일본'이 한일관계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 선입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입관 없는 서술이 되기 위해서도 어쩌서 한반도의 주민들은 일본 열도의 왜인들에게 선진문화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와 같은 내용의 서술이 필요하고, 일본 열도의 왜인들이 한민족의 여러 나라에 제공하였던 반대급부의 실체가 무엇이었던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왕래와 교환을 둘러싼 양 지역 정치체(小國~古代國家~專制國家) 간에 실재하고 있었던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이해관계의 실체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9_ '임나일본부'와 '남선경영론'

국사교과서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로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전혀 없지만,⁸⁸⁾ 일본사교과서에는 지금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과거의 식민 사관이나 일본학계 일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서술도 잔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의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교과서문제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일본사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남선경영과 임나일본부를 역사적 사실로 서술하는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같은 주장의 역사인식이 깔려 있는 기술들은 여전하다.

⑬-③ 아마토정권[大和政權]은 백제와 소국으로 분리해 있던 가라(임나) 지방의 나라들과 연결하여 고구려·신라와 싸웠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26쪽)

⑥大王은 왜왕으로서의 지위와 조선반도 남부를 군사적으로 지휘하는 권리를 중국의 황제에게 인정받기 위해 중국 남조에 자주 사신을 보냈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26~27쪽)

③조선반도에서는, 6세기에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아마토정권[大和政權]은 조선반도 남부에서 세력을 잃었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32쪽)

⑭-③ 「동아시아의 동향과 아마토정권의 발전」 6세기의 조선반도에서는 고구려의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남하시켜 가야의 여러 小國을 병합하여, 加耶諸國은 562년까지 차례로 백제·신라의 지배에 들어갔다. 그리고 加耶諸國과 관련이 있었던 아마토정권의 반도에서의 세력은 후퇴하였다. (『詳説日本史』, 29쪽)

⑥6세기 초에 가야 서부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 확립이 실정으로 간주되어 大伴金村이 失脚했다고 한다. (『詳説日本史』, 29쪽, 각주1)

⑬-②의 '加羅(任那)'의 표기는 같은 쪽에 제시된 지도 「5세기의 동아시아

88) 金項鈞, 1982. 12, 앞의 논문, 48쪽. 『공통교재』에도 이 주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와 다음 쪽에 제시된 그림 「日本古墳에서 출토한 덩이쇠」의 설명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任那는 『日本書紀』에 주로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고대 일본의 지배대상으로 간주하던 역사관이 내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일본서기』가 기술하였던 임나의 용례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백제와 신라도 포함하는 한강이남 전체, 둘째 가야제국, 셋째 김해·함안·고령과 같은 특정의 가야국을 각각 가리키기도 하였다. 함께 제시되어 있는 지도에는 가야제국 전체를 임나로 표기하였고, 가라 뒤에 地方이란 용어를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째의 용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배대상으로의 표현이 첫째의 용례인 만큼,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서 적극적인 『일본서기』적 역사관의 계승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이 임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첫째와 같은 설명이나 역사인식을 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상식이라는 것이 예전의 역사인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임나와 가라의 병기는 가라가 곧 임나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임나에 대한 『일본서기』와 패전 전의 역사인식, 그리고 일본사회의 상식은 고대일본의 지배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⁸⁹⁾ 加羅(任那)地方이라는 표기보다는 加羅(加耶)諸國이 보다 객관적인 것이다.

⑬-①의 서술에 오면 느낌은 조금 달라진다. 한반도의 군사적 지휘권을 인정받기 위해라는 서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군사적 지휘권을 중국에 인정받 고자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군사적 지휘권을 왜왕으로서의 지 위와 함께 인정받으려 했다는 기술을 아울러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중국왕조 에 인정받으려 했던 왜왕의 지위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왜왕이 이미 실질 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확보하고 있 는 왜왕의 지위를 중국에 인정받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던 것이 분명한 만큼, 함께 인정받으려 했던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휘권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르쳐질 가능성이 있다.

89) 木村茂光·花村統由, 2000, 앞의 논문, 132쪽.

㉓-㉔와 ㉕-㉖의 서술은 상당히 분명하다. “조선반도 남부에서 세력을 잃었습니다” 또는 “야마토정권의 반도에서의 세력은 후퇴하였다”는 표현은 누가 봐도 이전에 왜왕이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㉕-㉖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야마토정권의 후퇴가 당시 권력자 大伴金村의 실각원인이었다는 설명을 각주로 붙이고 있다. 이 설명은 『日本書紀』 欽明 1年(540) 9月조의 기술과 그에 대한 남선경영론적 확대해석을 소개한 것이었다.⁹⁰⁾

따라서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더라도, 이 부분을 읽는다면 누구나 왜왕이 한반도 남부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사실로 인식하고, 그 기원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 할 것이다. 그런 궁급증에서 앞의 서술로 돌아가면, 그렇게 인식할 만한 서술이 있다. 바로 이 군사적 지휘권을 서술하는 같은 쪽에 함께 박스로 제시되어 있는 「왜왕 무의 편지」와 「5세기의 동아시아」의 지도가 그것이다. 전자에는 倭王 武가 중국에 대해 선조 대의 군사적 활동을 주장하는 부분에 “바다를 건너 95국을 평정했습니다”라는 중국사서의 현대문역이 실렸고, 후자의 지도에서는 일본 열도에서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라(임나), 백제, 신라 등의 나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사료의 제시와 지도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왜왕의 군사적 진출과 세력의 확보를 전파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다만 『宋書』의 원문은 “북쪽으로 바다를 건너 95국을 평정했다”인데, 왜 북쪽의 방향을 소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교과서 서술에 인용했던 번역문이나 인용과정의 오류이거나, 한국의 반발을 의식한 기술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5세기 초를 전후해 백제·가야와 함께 고구려·신라와 싸웠고, 5세기 중·후엽에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지휘권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했는

90) 같은 쪽(29쪽)의 지도 「6世紀의 朝鮮半島」는 영산강유역을 연두색으로 칠해, 가야의 푸른색과 백제의 초록색과 구별하여 다른 나라로 표기하면서도, 해당 국명의 주기는 없다. 중학교 교과서(26쪽)가 같은 지역을 加羅(任那)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任那라고 적극적으로 표기하지 못했을 뿐, 이 지역을 왜왕의 세력권 또는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데, 6세기가 되어 백제와 신라가 성장함에 따라 한반도 남부에서 세력을 잃게 되었다는 서술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서술과 배치는 각각의 기술에서 지배·피지배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을지라도, 일본의 어린 중학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고대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지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지만, 지배와 같은 막연한 선입관의 형성은 이런 역사교과서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중학교 교과서와 같이, 일본고본에서 출토된 철소재인 덩이쇠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붙인 설명에 가야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은 과거의 교과서가 야마토정권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발휘에서 가져오게 되었던 것으로 서술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와 바람직한 서술도 있다.⁹¹⁾

10_ 통일신라와 일본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는 8세기의 지도로 저 멀리 프랑크왕국까지 기입하면서도, 인접한 일본은 제외되고 있다. 통일신라가 이전의 백제에 비해 일본과의 교류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정치·경제·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에서 제외시킨 것은 집필자의 선입관이며, 그 선입관은 교과서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일본과 한국의 상호 서술의 예를 적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⑬-㉓ 신라의 수출품 중에서 '신라칼'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중학교 국사』, 71쪽)
- ⑬ 신라의 불교는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의상, 원효를 비롯한 신라의 승려들이 저술한 책들이 일본 불교계에 널리 읽혔다. 의상과

91)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27쪽.

선묘를 도운 이야기가 일본에 그림으로 전하고 있으며, 원효는 일본 불교계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중학교 국사』, 72쪽)

㉠「해상왕국의 꿈을 키운 장보고」 9세기 초에 ‘바다의 왕자’로 세력을 떨쳤던 장보고는 해상세력출신이었다. …… 청해진은 당에서 흑산도와 남해안을 거쳐 일본의 기타큐슈에 이르는 국제무역항로의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그는 ……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무역을 주도하였다. …… 중국을 순례하던 중에 법화원에 신세를 진 일본의 승려 엔닌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배편을 구해 준 적이 있었다. 이때의 고마움을 전하는 엔닌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명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높아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국사』, 81쪽)

⑩-㉡「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고구려가 수·당을 막아내는 동안 신라는 백제와 대결하고 있었다. …… 백제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세력은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 이때 왜의 수군이 백제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 갔다. (『고등학교 국사』, 54쪽)

㉢「통일신라의 경제활동」 통일 후 신라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 처음에는 일본과 교류를 제한하여 무역이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8세기에 이르러 활발해졌다. (『고등학교 국사』, 138~139쪽)

㉣삼국문화에 뒤이어 통일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통일신라문화의 전파는 일본에서 파견해 온 사신을 통해서 이뤄졌다. 원효, 강수, 설총이 발전시킨 불교와 유교문화는 일본 하쿠호 문화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심상에 의하여 전해진 화엄사상은 일본 화엄종을 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8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이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긴 후부터는 외국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고등학교 국사』, 268쪽)

⑩-㉤지도 「7세기 중반의 동아시아」白村江(663). (『新編 新しい社會歴史』, 33쪽)

㉥朝鮮半島에서는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일본은 백제를 돕기 위해 대군을 보냈으나, 신라·당의 연합군에 패하였습니다(白村江 전투). 그 후 신라는 당의 군대를 축출하여 朝鮮半島를 통일하였습니다. (『新編 新しい社會歴史』, 34쪽)

- ⑬-㉑朝鮮半島를 통일한 신라와도 많은 사절이 왕래하였지만, 일본은 국력을 충실히 한 신라를 종속국으로 취급하려 했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이 발생하였다. (『詳說日本史』, 38쪽)
- ㉒당에서 안록산·사사명의 난(755~763)이 일어나 혼란이 확산되자, 藤原中麻呂는 신라공격을 계획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詳說日本史』, 38쪽, 각주3)

한일 양국의 교과서 모두 통일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백제부흥운동과 일본군의 파견에 대해 서술하였다. 국사교과서는 백강과 왜(⑬-㉑), 일본사교과서는 백촌강(⑬-㉑)과 일본(⑬-㉒)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백제의 지명은 한국 사료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일본이란 국호가 성립되어 있던 시기이므로 왜보다는 일본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국사교과서의 “백제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 갔다(⑬-㉑)”와 일본사교과서의 “百濟를 돕기 위해 大軍을 보냈으나, 신라·당의 연합군에 패하였습니다(⑬-㉒)”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이 2만 명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일본사교과서의 大軍이 옳고, 규모나 경과없이 왜의 패주만을 기술하는 국사교과서에서 축소기술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기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사교과서는 일본 내부의 사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나, 일본사교과서는 삼국 간의 역학관계와 당과 신라 중심의 동아시아의 정세가 아울러 서술되고 있다. 국사교과서의 장보고 관련 서술과 같이 일본이나 일본인 승려 엔닌에 대해 기술한 것은 일본이나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장보고의 위용과 활동범위를 드러내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시기의 서술에 있어서도 역시 국사교과서의 관심은 문화의 전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⑬-㉑·㉒, ⑬-㉓). 반면 일본사교과서는 문화의 전파보다는 신라 통일전쟁과 관련된 동아시아 규모의 전쟁에 대한 강한 관심과 소개에 서술을 할애하고 있으며(⑬-㉑·㉒, ⑬-㉓·㉔), 심지어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던 신라공격계획도 서술하였다(⑬-㉔). 『일본서기』 신공기

의 신라정토이야기, 5세기 왜왕의 고구려공격계획, 이때 7세기 중후반의 신라 공격계획 등은 근대의 정한론에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한반도 진출론의 잔재가 아닐까 한다.⁹²⁾

일본이 신라를 종속국으로 취급하려 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다(⑱-a)는 서술이 정확히 어떤 사료에 근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신라는 대일 외교형식의 개혁을 시도하여,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朝貢’의 용어를 ‘土毛’로 바꾸려 하였고,⁹³⁾ 이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종속국으로 취급하려 했다는 일본의 외교적 주장만을 서술하여 비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려 했던 서술이다. 일본사교과서가 신라의 주장을 은폐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외교 문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국사교과서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⑮-c의 ‘기타큐슈’는 북부규슈 또는 규슈북부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기타큐슈는 하카타(후쿠오카) 동쪽에 있는 市の 이름으로, 「신라방과 신라·발해의 무역교통로」에 하카타가 표기되어 있음으로 확인된다. 北部九州와 北九州를 혼동하였던 결과이다.

11_ 발해와 일본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주변적·현재적 동기에 의해 한국의 교과서에서 남북 국시대로 인식되기 시작한 발해사에 대한 서술은 고구려의 계승의식과 주민구성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관련 기술 역시 같은 목적의 서술에서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발해의 서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첨부지도에 단 한 번의 표기만 있을 뿐이다.⁹⁴⁾ 이에 비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비로소

92) 山崎雅稔, 2000, 「일본의 古代韓日關係史 연구동향」,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123쪽.

93) 山崎雅稔, 2000, 위의 논문, 119쪽.

94) 五味文彦·齊藤功·高橋進 외, 2006, 앞의 책, 38쪽, 지도 「東西의 交通(8세기경)」

발해와 관련된 서술이 조금 보이지만, 아래와 같이 극히 짧은 서술에 그치고 있다.⁹⁵⁾

⑩-①「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신라의 통일 후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고, 고구려의 옛 땅에는 발해가 건국되어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 …… 한편 발해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면서 나라를 정비하여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학교 국사』, 68쪽)

②「발해는 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나?」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은 여러 갈래로 분산되었다. ……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었다. 지배층의 핵심은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인이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발해를 고구려로, 발해왕을 고구려왕으로 칭하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중학교 국사』, 73쪽)

③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의 내용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중학교 국사』, 73쪽, 협주)

④「발해의 주민구성」 발해의 주민구성에 관해 일본의 ‘유취국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발해국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 그 백성은 말갈인이 많고 원주민이 적다. 모두 원주민은 마을의 우두머리로 삼는데, …… 이 기록에 의하면 발해의 백성은 말갈인과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민은 옛 고구려인을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상위직은 대부분 고구려인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국사』, 76쪽, 도움글)

⑩-②발해의 건국으로 이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 (『고등학교 국사』, 57쪽)

③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 (『고등학교 국사』, 57쪽)

에는 북쪽 육로와 남쪽 해로의 실크로드를 나타내어, 일본에서 唐, 이슬람과 비잔틴제국, 프랑크왕국까지를 선으로 연결하였다. 그 가운데 발해와 일본이 한 줄의 선으로 연결 표시되었을 뿐이며, 지도나 본문에 관련된 서술은 전혀 없다.

95) 이러한 이유의 하나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당의 주변에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서술로 발해 관련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상선, 2002, 6, 앞의 논문 참조.

㉔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훈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국사』, 57쪽)

㉕-㉖ 「동서의 교통(8세기경) 渤海-平安京(日本). (『新編 新しい社會歴史』, 38쪽)

㉗-㉘ 한편 북방의 중국동북부 등에 사는 말갈족과 구 고구려인을 중심으로 건국된 발해와는 긴밀한 사절의 왕래가 행해졌다. 발해는 당·신라와의 대항관계로 말미암아 727년(神龜4)에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여 國交를 구하였고, 日本도 신라와의 대항관계로 말미암아 발해와 우호적으로 통교하였다. (『詳說日本史』, 38쪽)

㉙ 발해의 궁궐지에서는 和同開珍이 발견되었고, 일본에서도 일본 해연안에서 발해계통의 유물이 출토하는 등 교류의 흔적이 알려지고 있다. (『詳說日本史』, 38쪽, 각주 4)

㉚ 중국 동북부에서는 나라시대 이래 우리나라와 친교가 있던 발해가 10세기 전반에 요(거란)에 멸망당하였다. (『詳說日本史』, 63쪽)

국사교과서의 일본 관련 기술은 일본사의 중요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서술에 필요한 자료로 선택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고대사의 서술보다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발해사의 귀속 문제와 같은 현재적인 목적에 이용되었을 뿐이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고(㉑-㉒·㉓, ㉔-㉕), 지배층인 고구려인과 피지배층인 말갈족이라는 주민 구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을 뿐이다(㉑-㉒·㉔). 일본사의 소개는 물론 발해·일본의 관계사에 관련된 서술과는 전혀 무관하다. 겨우 『고등학교 국사』에서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와 당이 결속하고, 이에 대해 발해가 돌궐·일본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발해와 일본의 관계사가 서술되었을 뿐이다(㉔-㉕).

일본사교과서의 발해에 대한 언급도 위와 같은 4개의 서술이 전부인데, 그나마 중학교 교과서의 1건은 첨부지도에 平安京과 선으로 연결된 발해의 명칭이 기입되었을 뿐이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3건 역시 같은 쪽에 보이는 일련의

기술을 나누어 제시한 것으로, 1건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적은 분량이다. 한국의 국사교과서가 발해를 한민족사에 포함시켜 남북국시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 (19-a, 20-a)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한국과 중국의 발해사 귀속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발해는 발해일뿐, 현대의 한국이나 중국의 어디도 아니라는 일본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역사 귀속의 문제는 비학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식 자체를 무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해는 727~919년까지 192년간 모두 52회(발해 37회, 일본 15회 파견)의 사절교환을 가졌던 당시 유일한 친선외교의 파트너였고, 무역을 통한 활발한 경제적 교류 이외에도 군사적 목적의 '신라공격계획'도 논의하였던 군사동맹이기도 하였다. 함께 제시된 「8세기경 동아시아와 일당교통로」의 지도를 통해 신라 북쪽에 자리한 나라였다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발해·신라·일본의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이해시킬 수는 없다. 발해와 신라의 남북국으로서의 역사적 성격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한 '신라공격계획'이 발해를 제외한 일본 단독의 군사정책으로 오해되는 문제도 있다. 서술의 분량을 늘리면서 국사교과서의 발해사에 대한 이해도 소개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첨부지도 「8세기경 동아시아와 일당교통로」는 당, 발해, 신라, 일본의 범위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고 있어,⁹⁶⁾ 이를 통해 일본사교과서가 발해의 영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경계가 모호하고 지명표기도 없는 작은 지도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발해의 영역에 대해 남쪽으로 함경도지역, 북쪽과 동쪽으로 흑룡강성 지역과 동해까지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서북쪽의 경계와 영역이다. 8세기의 발해는 732년에 당의 등주(산둥)를 공격하기도 하고, 762년에는 발해만을 아우르는 '발해국왕'에 책봉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8세기에 압록강과 대동강 사이는 당의 영역으로 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현 요령성의 대부분과 요동반도 끝에 이르는 지역을 당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학계

96) 石井進·五味文彦·笹山晴生·高荳利彦, 2007, 앞의 책, 38쪽.

는 이 대부분의 지역을 발해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사교과서에 8세기의 해외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도 「남북국시대의 무역로」에는 요하를 경계로 요동성과 요동반도가 발해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⁹⁷⁾

주민구성에 대해서 일본사교과서가 ‘말갈족과 구 고구려인’^(22-①)으로 표기한 반면에, 국사교과서는 ‘고구려인과 말갈인’^(19-⑥)의 순으로 표기하였다. 일본사교과서의 용례가 『유취국사』의 기술 순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료 그대로를 제시하는 것이 교과서 본문 서술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 고구려인과 말갈족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국사교과서와 같은 기술 순서가 배우는 학생의 필요 없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속일본기』에 게재되어 있는 발해국서의 내용을 일본사교과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국사교과서는 발해사의 귀속문제를 강하게 의식하여 상세하고 분명하게 서술하였다^(19-⑥)·③, 20-⑥). 여기서도 일본은 한국사의 필요에 따라 서술되었을 뿐이고, 발해인의 역사보다는 현대 한국인의 영토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자국사 중심의 서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교문제로의 비화를 염려한 불필요한 관여의 자제와 동아시아사의 시각을 관철하지 못하는 일본사교과서의 발해사에 대한 무관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국사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아주 빈번한 외교 및 교역 관계를 유지하였던 발해와 일본의 교류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조금의 기술도 없다는 점이다. 발해와 일본의 교섭에 관한 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료의 신빙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8~9세기 동아시아사에서 양국의 교류가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이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발해와 일본의 192년간 52회의 교섭에 대해 한일 양국의 교과서 모두 함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공통교재』와 같은 분량은 되지 못하더라도,⁹⁸⁾ 교섭의 횟수와 발해와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사 전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서술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97) 국사편찬위원회, 2007, 『고등학교 국사』, 139쪽; 임상선, 2002, 앞의 논문, 124쪽.

98) 역사교과서연구회·역사교육연구회, 2007, 앞의 책, 70~72쪽.

IV. 맺음말

국정 국사교과서는 고대사 부분을 담당했던 집필자의 역사인식과 주장 등이 강하게 드러나고, 특정 학설의 해석만이 역사적 사실처럼 선택 서술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고조선의 해석과 비파형동검문화의 연대관, 백제의 일본진출과 가야경영, 광개토태왕릉비 ‘安羅人戍兵’에 대한 해석 등이 그러하다. 이에 비해 검정 일본사교과서는 비교적 여러 학설을 아울러 소개하려는 자세가 뚜렷하고, 선사 및 고대사 부분의 서술에서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국사교과서와 일본사교과서가 상호 서술했던 주제와 내용은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소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국사에 필요한 몇 개의 사실만이 선택되었을 뿐이었다. 양국 교과서에서 선택 서술된 사실들이 한국사나 일본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 국사교과서의 일본 관련 서술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도 아니었고, 일본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이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일본학생들에게 전파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상대국의 역사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교육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었다.⁹⁹⁾ 국사교과서에는 한국사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일본 관련 서술만이 있고, 일본사교과서에서는 단지 일본역사의 우월성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 관련 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국사교과서라는 속성 때문에 서술 대상국에서의 중요성이나 비중처럼 서술의 소재가 선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선택되어진 사실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객관적인 역사·고고학적 사료에 근거하였는지가 중

99) 정연, 2003, 앞의 논문, 40~41쪽.

요하고, 구체적인 서술에 있어서는 해당 사실에 관련된 상대국의 연구 성과와 교과서 서술의 경향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랑케는 “위대한 국민은 두 가지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적인 것과 다른 하나는 세계의 운명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국가사적인 자국사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또한 사료, 즉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는 랑케의 명언과 같은 것이다.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자부심의 근거로 삼았던 가이다. 사실의 은폐와 과장, 그리고 허세가 문제이다.¹⁰⁰⁾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모두 독백만으로 닫혀 있으며, 그 이유는 양쪽 모두 내셔널리즘의 주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¹⁾ 자국사의 굴레를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어 왔다. ‘국민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국가의 기억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국사의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사’ 등의 제언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가 속박 받고 있는 국가사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들이다.¹⁰²⁾

주변국가와 국외적 상황의 변화는 국내적 역사 전개에 방향을 규제하고, 국내적 역사 전개의 결과는 대외관계의 방향과 형식을 규정한다. 국사교과서에서의 일본, 일본사교과서에서의 한국에 관한 서술은 자국사 구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의 역사는 서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규정되기도 하였다. 한일관계사의 연구나 양국 교과서의 서술에서 상대국의 연구나 서술, 그리고 동아시아사의 전개를 끊임없이 주목하고, 반영해 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국중심주의 역사서술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양국 학계의 사료 비판을 통해 신뢰를 얻은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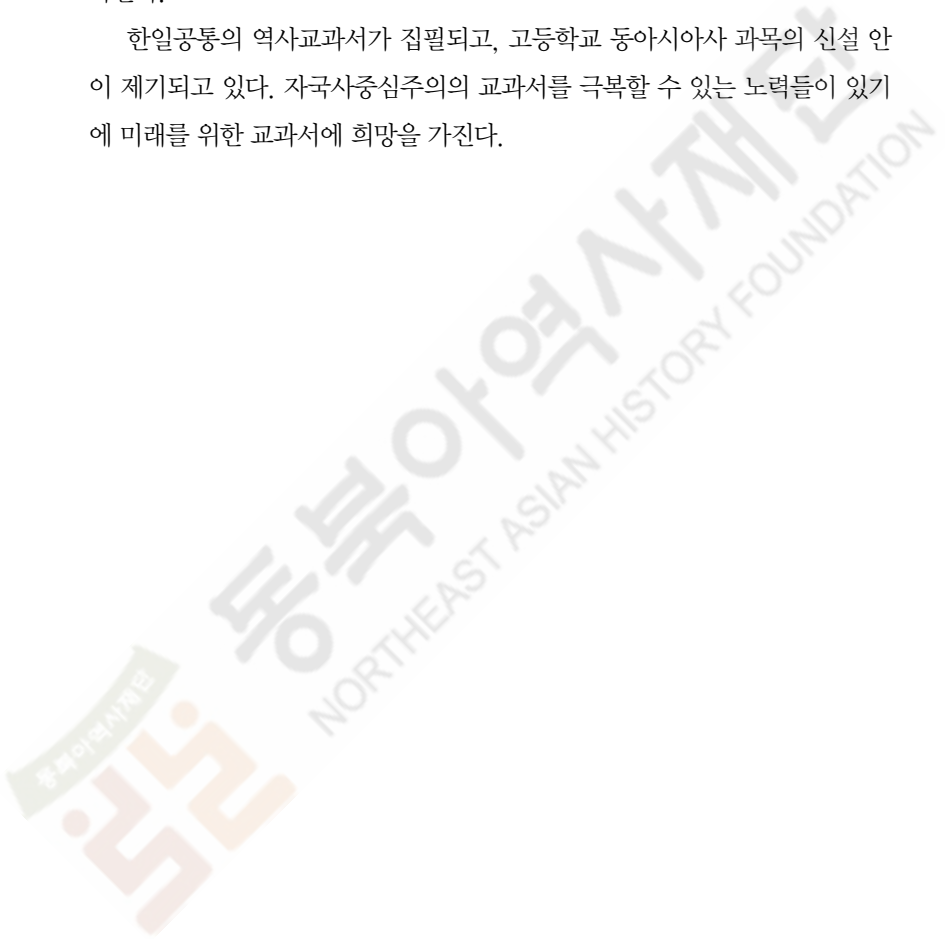
100) 加藤周一, 2001, 앞의 논문, 3~4쪽.

101) 佐藤學, 2005, 「독백의 역사에서 대화의 역사로」, 『日韓教科書の現在와 未來』, 東京大심포지엄 자료; 김성보, 2007, 6,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02) 주 1의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참조.

를 기초로 하여 교과서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학계의 연구와 교과서 서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양국의 역사전개에 공통되었던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발견하고 동아시아사 구성원으로서 교과서를 서술함으로써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한일공통의 역사교과서가 집필되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의 신설안이 제기되고 있다. 자국사중심주의의 교과서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기에 미래를 위한 교과서에 희망을 가진다.



[ABSTRACT]

The ancient history description in recent history
textbooks of Korea and Japan

Lee, Young-Sik

The controversial history textbook of Japan which triggered a political pending problems and a national grudge became more than a mere criticism of manipulation of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and evolved into reinvestigation of nationalistic description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and is now developing further to co-write common history book of Korea and Japan. But the past problems have not disappeared in the current textbook and let alone the survey conducted a weighting test for both country's textbook, there has not been any particular examination for descriptions of ancient history by ancient historians.

Based upon the issues in ancient history which has been discussed by both countries so far, this dissertation compares and investigates how those issues are described in the textbook of both countries and what problems it involves in terms of historical facts, perceptions of history, and educational effects.

First, examination of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mutual description in the history textbook of both countries was conducted. Second,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a connected description in both one by selecting a distinct item which is an issue of a study of the existing ancient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preceded. Third, the range of a period of an examination target was set considering a special quality of texts, according to a general classification rather than scientific one, from the prehistoric age to Balhae(渤海)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from the prehistoric age to Haeian period(平安時代) in the Japanese private history book. Forth, for an objective of the analysis, history textbook for junior high school of each country was selected. It was selected that were a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 『History for middle school』 and 『History for high school』 in Korea published 2007 and an authorized textbook 『Tokyo shoseki(東京書籍) 『a new edition New society History(新しい社會 歴史)』 for middle school(2006) and Yamakawa publishing company(山川出版社) 『a full explanation of History of Japan(詳説日本史)』 for high school(2007)– which has been adopted 40~50% of schools in Japan. In addition, 『common materials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007) which was co-written by both country's historians was referred for an itemized examination

To sum up about results of critical examinations that is 'Be written and Not be written' both country's history textbook and a common material is as follows.

- (1) interchange in the prehistoric age : 'ByeonHan exports irons in the latter half of the 3rd century' is the first description of Japan that can be found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Therefore there was no space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efore prehistoric age. But obsidian that demonstrates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4,500~5,000 years ago is excavated in Shell Mound of the south coast Korea. For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of Korea-

Japan, the first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occurred in the New Stone Age people through the Straits of Korea must be described.

- (2) Gojoseon : The description of history of Gojoseon is begun in the 1970s. Because Japanese historians denied a history of Gojoseon during Japan Colonial Period. While history textbook for middle school in 2007 treats it as being a myth of progenitor, the history textbook for high school recognize the establishment of a country and the myth of Dangun in 2,333 B.C. as being a truth contrasting it with BipahyeongDonggum culture that can not be traced back to the prior to 10 B.C. To present about Chumsungdan in Mt. Mani and King Dangun portrait scroll is to distort a myth and tradition as if it is true.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does not mention much about History of Gojoseon, but planting a negative historical consciousness in people's mind implicitly. The textbook for middle school starts Korean history with Nkrang colony at the 2nd century B.C. while the history textbook for high school contains chronological table of Korean history that shows Gogourue, Backjae and Silla. Ignorance of existence of Gojoseon, assertion of Korean history as though started from under the control of Chinese Nakrang colony(樂浪郡) and setting the found of three countries after Japanese YAMATAI(邪馬臺國) and similar to YAMATO period (大和政權) is not inconsistent with Japanese history book.

- (3) Han gun Hyun (漢郡縣) : It is a representation that Japan emphasizes heteronomy of a history of Korea by using colonization of China. It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50th and 60th. But only resistance of HanMinJok to GunHyeon was depicted in 70th and disappeared from

80th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Nothing can be found in the current textbook for middle school, and only 3lines of description from foundation to expulsion is written in textbook for High school. There is one sentence about Han's domination of North of Joseon peninsula and middle Asia in Japanese history textbook. Control of Han country is a historical event but Japanese students who firstly come in contact with Joseon can have a preconceived opinion that Korea was a colony of China.

- (4) Spread of rice culture and metals : as oppose to Japanese history textbook that spends second greatest pages next to cultural diffusion to emphasize it, Korean history textbook does not even mention a progressive impact of rice culture and the bronze ware.
- (5) Advance of BackJae into Japan : With a supporting map, Korean history textbook describes the fact that the king Geunchogo in BackJae advanced into Japan as if it was a real incident. A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 describes it confidently, but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e details. Thus, presentation of the relevant data was made in regard to an advance into China, but not for the advance into Japan. Teaching our students with a transcendental assertion of North Korea that has been embraced without questions amounts to manipulation of our own history and falling into discredit with neighbouring countries.
- (6) A monament of the great king Gwanggaeto :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 monament of the great king Gwanggaeto is the origin of argument in ancient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cademic world of Korea and Japan agree on the fact that ‘Japan dispatched troops to Gogoorue and resulted in a crushing defeat’. But it doesn’t seem to be reflected in textbook for middle school. There are still remarkable differences of analysis and quotations in the same document. Both country use contents of epitaphs as important data of their history education. But, only for those shedding a light on the lucrative point of their own countries are chosen, introduced and described. The Korean history textbook focuses only on a repulse of Japanese soldiers and that of Japan emphasizes the influences of Japan in the south part of Korea peninsula. In addition, while the Korean history textbook describes Japanese soldiers appears in an epitaph as pirates of Kyusu(九州),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depicts them as royal peoples of Yamato(大和).

(7) Moonyeong royal mausoleum : It is written only about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king Moonyeong and Mooyeong royal mausoleum of BackJae and Namjo of China. But there is nothing about relationship with Japan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about. The king Moonyeong was bone in Japan and a wooden coffin which was found in Mooyeong royal mausoleum was made in Japan. That shows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BackJae and Japan, and that must be written as a material which can contribute to good-neighborhood and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8) Torajinn(渡來人) and a diffusion of culture : it is the subject for which the largest quantity was spent to describe an ancient history in the textbook of Korea and Japan. It is described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that Ajickki and Wangin of Backjae were existed people,

Damjing of Gogoorue painted a building that contains a statue of Buddha, culture of Backjae had a influence on a statue of Miruk(彌勒像) of Koryufi(廣隆寺) in Japan. Despite such faults, those have become the most popular history that Korean knows about Japan.

It is described that advanced culture which we passed onto Japan was a exclusive possession of Gogoorue, Backjae, Silla, Gaya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but Japan emphasizes a mere role of messenger. Japanese history textbook has shed a light on a description of immigrant called Toraijinn(渡來人) caused from culture diffusion while Koran history textbook has focused more on the country of dispatch. If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is a native-land oriented descriptio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is a nation centered description. There are no explanations in both history books about why immigrants who were in charge of culture diffusion had come or why they had gone to Japan and why Gogoorue, Backjae, Silla had to pass an advanced civilization to them.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must describe the momentum for Toraijinn(渡來人) to cross the sea through the changes in conditions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history textbook should give an account of benefit received in return for passing the advanced civilization or the talent to Japan.

Japanese, Korean textbook both describe one-way culture diffusion 'from Korea to Japan'. It is common sense in the history and study of antiquities academic world that the settlers and culture diffusion were not just one-way things. Obsidian of the prehistoric age, a wooden coffin of the king Moonyeong in Backjae, systematical civilization of Japan in Kaya, JeonBangHooWonTomb of the basin of the YeongSan River, existence of WaeGyeBackJaeGanRyo(倭系百濟官僚) that moved into BackJack from Japan and served King of BackJae and so on are

movements of population and culture from Japan to Korea. It must be used for material that enhances diplomatic relations or builds reliance through mutual-correspondences.

Not only it is the problem that Japanese history textbook merely introduces the occupation of BaekJae and Gaya by the king Gwanggaeto from the end of the 4th century to the 5th century, but also is the problem that Korean history textbook introduces culture diffusion was begun by BaekJae. Although it is common sense that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developed in order of Gaya → BaekJae → Silla, the description about the movement of population and culture diffusion is nearly nil and no explanations about changes of the negotiating parties in each time.

- (9) Mimana Nihonn Fu(任那日本府) and NamSeon theory of management(南鮮經營論) : The Korean history book totally ignores, but the descriptions that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colonial historical view still remain in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It is described as if the king Moo of Japan had his a military command in the south of Korean peninsula in the 5th century and expressions such as ‘we lost ground from South of Joseon peninsula’ or ‘The power of Yamamoto government retreated from the peninsula’ are being used. On the other hand, the assertion that ingot which excavated in an ancient tomb in Japan was imported from Gaya with presenting the picture of the ingot has remarkable differences from what had been described in the past that Japanese king snatched it from Gaya.

- (10) Unified Silla and Japan : both textbooks commonly describe BaekJae revival campaign and Baekma river battle which took place towards

the end of the unification war even though there are hardly any comments of diplomacy between Unified Silla and Japa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describes only a rout without any passage of a war or a scale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but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describes dynamical relation of Samgook and Dang and Silla centered condition of East Asia.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there are remnants of reduction in Japan's entry into war, and in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there are remnants of ineradicable heteronomy argument and a theory of invasion of Korean peninsula.

- (11) Balhae and Japan: With the greatest portio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describes a inheritance consciousness of Gogoorue and composition of inhabitant in response to DongBookGoongJeong, and relationship of Balhae and Japan is described for the same purpose.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on the other hand, gives a short description about it, once in the attached map, and nil in the history textbook for middle school. Balhae and Japan had been a partner of goodwill-diplomacy with total 52nd mission exchanges for 192 years from 727 to 919. There must be a description on those exchanges and historical significances in East Asian history that the negotiation between Balhae and Japan has.

keywords

ancient history description, history textbook of Korea and Japan, prehistoric age, Balhae(渤海), Haeian period(平安時代), middle school, high school, relationship, first interchange, Gojoseon(古朝鮮), Han gun Hyun(漢郡縣), Rice culture and metals, Backjae(百濟), Amonument of the great King

Gwangaeto, Yamato(大和), King Moonyeong(武寧), Toraijin(渡來人), a diffusion of culture, Mimana Nihon Fu, Unified Silla



한·일 역사교과서 중·근세 분야 쟁점사항의 비교 분석

손 승 철 |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2002년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한·일 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면서, 일본 역사교과서 특히 후소샤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이 해당 교과서 자체에 대한 분석에 그쳤을 뿐 한·일 간의 교과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분석하거나, 고등학교 교과서와 또는 개설서·역사사전 등 역사서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중·근세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했다.

중·근세란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개항전)까지이며, 일본의 경우는 平安時代 中期 이후부터 徳川幕府 末期까지로 대략 10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비교 대상교과서는 한국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의 『중학교 국사』(2002년 3월 1일 초판, 2006 3월 1일 발행)와 『고등학교 국사』

(2002년 3월 1일 초판, 2006년 3월 1일 발행)를 견본으로 했다. 일본의 경우 중학교는 도쿄서적[東京書籍](2006년 2월 발행)과 후소샤[扶桑社](2006년 3월 발행)판을 고등학교는 야마가와[山川]출판사(2007년 3월 발행)판을 대상으로 했다.¹⁾

양국 교과서의 중·근세 한·일관계사분야에서 다른 주제는 한국의 경우는麗·몽군의 일본침략, 왜구, 조선초기의 통교관계 및 쓰시마정벌, 삼포왜란, 임진왜란, 통신사, 왜관 등이며, 일본의 경우는 元寇, 倭寇, 朝鮮과의 通交,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通信使, 왜관 등 양국이 거의 비슷한 주제를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어느 주제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의 왜곡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검토하고, 아울러 일본교과서와 한국교과서의 기술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교과서 기술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총 8종으로, 2006년 채택률은 다음 표와 같다.

순위	출판사	교과서명, 저자	2006년	2002년	현행 순위 채택률
①	東京書籍	新しい社會 歴史 田邊裕 외 37명	51.2%	51.2%	←① 40.4%
②	大阪書籍	中學社會 熱田公 외 12명	15.4%	14.0%	←② 18.8%
③	教育出版	中學社會 歴史 笹山晴生 외 41명	11.8%	13.0%	←③ 18.0%
④	帝國書院	中學生の歴史 黒田日出男 외 7명	14.2%	10.9%	←④ 1.9%
⑤	日本書籍	中學社會「歴史的分野」 兒玉幸多 외 15명	3.1%	5.9%	←⑤ 13.7%
⑥	清水書院	新 中學校 歴史 大口勇次郎 외 12명	2.4%	2.5%	←⑥ 3.9%
⑦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歴史 大濱徹也 외 11명	1.4%	2.3%	←⑦ 3.3%
⑧	扶桑社	新しい 歴史教科書 西尾幹二 외 13명	0.4%	0.04%	←⑧ -

II. 주제별 기술경향

1.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 [元寇]

1) 한국교과서

한국교과서의 경우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은 중학교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도 별도의 언급은 없고, 다만 원의 내정간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원의 내정간섭

…… 원은 일본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간섭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라고 기술하였다.²⁾ 따라서 이 기술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2) 일본교과서

한국교과서에 비해 도료서적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두 번의 來襲

쿠빌라이는 일본을 복종시키기 위해 재차 사자를 보내 왔지만, 집권했던 北條時宗이 이것을 물리쳤기 때문에 고려의 군세를 합하여 공격해 왔다. 1274년(文永 11)에는 쓰시마·이키를 거쳐 북구주의 하카다만에 상륙하여, 집단전법과 우수한 화기에 의해 일본군을 교란시키고 철수

2) 국사편찬위원회, 2002, 『고등학교 국사』, 74쪽.

했다(文永의 役).

1281년(弘安 4)에는 다시 공격을 해왔는데, 御家人의 활약과 해안에 쌓은 석벽 등의 방비에 의해 원의 대군은 상륙하지 못한 채 폭풍우에 대손실을 입고 퇴각했다(弘安의 役).

이 두 번의 습래(元寇) 후에도 원은 일본에 원정을 행하려 했지만 계획만으로 그쳤다.

라고 하여, 元寇의 침입과정과 그에 대한 응전상황을 소상히 기술했다.³⁾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고려나 일본의 피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편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元寇

쿠빌라이는 동아시아로 지배를 확대해 가는 중에, 드디어 동방에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정복하려고 획책하였다. 쿠빌라이는 우선 일본에 수차례 사자를 보내 복속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정과 가마쿠라 막부는 일치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 막부는 北條時宗을 중심으로 원의 襲來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元軍은 드디어 1274년(文永 11)과 7년 후인 1281년(弘安 4) 2회에 걸쳐, 대 선단으로 일본을 습격해 왔다. 일본 측은 약탈과 폭행의 피해를 입었고, 신기한 병기에도 괴롭힘을 당했다. 가마쿠라 무사들은 이것을 국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싸웠다. 또 2회 모두 원군은 후에 「가미카제(神風)」로 불리는 폭풍우에 시달리며 패퇴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독립을 보전할 수 있었다. 이 2회에 걸친 원군의 침공을 겐코우[元寇]라고 한다.

라고 하여, 몽골군의 일본침입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⁴⁾ 고려군이 합세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일본은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고, 몽골의 약탈과 폭행에 피해를 입었지만, 막부의 무사들과 神風の 덕으로 잘 물리쳤다고 했다.

3) 2006, 『역사』, 도쿄서적, 58~59쪽.

4) 2006, 『새로운 역사교과서』, 후소샤, 70쪽.

한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⁵⁾

蒙古襲來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칸은 중국을 지배하기 위하여 도읍을 대도회 북경으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정하고, 고려를 전면적으로 복속시킨 후, 일본에 대해 여러차례 조공을 강요했다. 그러나 막부의 집권자인 北條時宗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원은 고려의 군세를 합쳐 약 3만의 병으로, 1274년(文永 11), 쓰시마·이키를 공격한 후, 일거에 북구주의 하카다만에 상륙했다. 미리부터 경계를 하고 있던 막부는 구주지방의 소령을 가진 御家人을 동원하여, 이들을 공격했지만 원군의 집단전과 우수한 병기에 일본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원군도 손해를 크게 입었고, 폭풍우에 의해 물러섰다(文永의 역). …… 두 차례에 걸친 습래의 실패는, 원에 정복된 고려나 남송인들의 저항에 의한 것도 있지만, 막부의 통제 아래에서, 특히 구주지방의 무사가 잘 싸운 것이 큰 이유가 되었다.

라고 하여, 앞의 중학교 교과서와 같은 논조나 몽골과 고려군의 연합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구주지방 무사들의 선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_ 倭寇

1) 한국교과서

중학교 한국교과서에서는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라는 항목에서,⁶⁾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

공민왕 때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고려에 자주 침입하였다. 홍건적은 원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일어난 한족의 농민 반란군이였다. …… 한편

5) 2007, 『상설 일본사』, 山川出版社, 100~101쪽.

6)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117쪽.

왜구는 일본의 쓰시마 섬에 근거를 둔 해적으로, 일찍부터 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왜구에게 강화도까지 약탈 당하고, 개경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조세의 해상운송이 어려워져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었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 최영·이성계 등이 나서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서 박위는 전함 100척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여 그 기세를 꺾었다.

이와 같이 흥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이성계 등 무인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라고 하여, 왜구가 조선을 습격하는 상황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최영·이성계 등이 왜구의 격퇴과정을 통하여 무인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술했다. 그리고 그림으로 홍산대첩(최영), 진포대첩(나세), 관음포대첩(정지), 황산대첩(이성계)과 박위의 쓰시마 정벌에 관해 상세히 그렸고, 전북 남원에 있는 황산대첩비와 비각의 사진을 넣었다.

『고등학교 국사』에는 「고려의 멸망」이라는 항목에서,

고려의 멸망

한편 북쪽에서 흥건적이 침입해 와 공민왕이 북주(안동)까지 피란하기도 하였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지방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라고 기술하여, 왜구에 대한 기술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비하여 너무 소략하며, 고려 말 왜구의 침탈과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반면, 읽기자료에는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의 『고려사』 원문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각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포대첩

우왕 6년(1380) 8월 추수가 거의 끝나 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전라·경상도의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고려사』

항산대첩

운봉을 넘어 온 이성계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이지말도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나서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했다.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왜구는 70여 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

본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자료로 생각된다. 차후 본문의 내용은 물론 다른 사료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본교과서

왜구에 관해서 도쿄서적의 『역사』에서는,⁷⁾

동아시아의 변동

이 무렵 중국에서는 한민족이 명을 건국하고, 몽골민족을 북으로 내몰았다. 명은 대륙연안을 습격하는 왜의 단속을 일본에 구했다. 이 무렵 西國의 무사나 상인·어민 가운데에 집단을 만들어 무역을 강요하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왜구라고 불렀다. 義滿은 왜구를 금하고 정식의 무역선에 명으로부터 받은 勘合이라는 증명서를 써서 일명 무역(감합무역)을 시작했다.

주) 왜구 속에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었다.

라고 하여, 왜구를 서국의 무사나 상인·어민 가운데 해적행위를 하는 집단으

7) 2006, 『역사』, 도쿄서적, 64쪽.

로 기술했다. 그런데 왜구 속에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내용의 주를 달아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했다.

한편 같은 중학교 교과서이면서, 현재 한·일 간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는,⁸⁾

감함무역과 왜구

14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한민족의 반란에 의해서, 원이 북방으로 추방되고, 명이 건국되었다. 명은 일본에 왜구 단속을 청해 왔다. 왜구란 이즈음 조선반도나 중국의 연안에 출몰하였던 해적집단이다. 그들은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하여, 왜구의 구성에 일본인 외에 조선인을 포함시켜 기술했다. 도교서적 교과서의 표현을 좀더 명확히 한 것으로 일본인 이외의 사람에 조선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아미가와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상설일본사』에는,

동아시아와의 교역

남북조 동란기, 쓰시마·이키, 히젠 마쓰우라[肥前松浦]지방의 주민을 중심으로 한 해적집단이 조선반도나 중국대륙의 연안을 습격하여 왜구라고 불리며, 공포스럽게 되었다. 왜구는 조선반도 연안의 사람들을 포로로 하며, 쌀과 콩 등의 식료를 약탈했다. 왜구에게 골머리를 앓았던 고려는 일본에 사자를 보내어 왜구의 금지를 청했지만, 일본의 내란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하여, 왜구를 쓰시마·이키, 히젠 마쓰우라[肥前松浦]지방의 주민을 중심으로 한 해적집단으로 기술하면서 그들의 약탈행위를 강조했다. 그리고 15세기경의 동아시아라는 지도를 삽입하여, 전기왜구와 후기왜구의 침략지를 그려 넣었다. 왜구 구성에 관해서는 중학교 교과서와는 다르게 비교적 객관적인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8) 2006, 『새로운 역사교과서』, 후소샤, 79쪽.

3_ 조선전기 통교관계

1) 한국교과서

『중학교 국사』에서는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서 조선전기 한·일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⁹⁾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한편,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여 왜구의 노략질을 막고, 세종 때에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그 후 일본이 평화적인 무역관계를 요구해 오자, 조선은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자 제포(진해), 부산포, 염포(울산) 등 3포를 개항하였다.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구리, 황, 향료 등을 가져와 식량, 의복, 서적 등과 교역하였는데, 일본은 주로 생활 필수품과 서적 등 문화 용품이 필요하였고, 조선은 무기의 원료나 양반들의 기호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조선은 류큐, 시암(타이), 차바 등 동남 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널리 교역을 하였다.

즉 조선에서는 왜구근절을 위해 쓰시마를 정벌했고, 일본이 평화적인 통교를 요구하자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고, 삼포를 개항했다는 사실과 당시의 교역품에 관해 소개했다. 또한 유구와 동남아 여러 나라와의 교역사실도 기술하여 조선의 대외관계를 폭넓게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친선관계라는 용어보다는 교린관계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한편 『고등학교 국사』에서는,¹⁰⁾

일본 및 동남아시아와 관계

조선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교류에는 교린정책을 원

9)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130쪽.

10) 국사편찬위원회, 2002, 『고등학교 국사』, 89쪽.

칙으로 하였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고,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였다. 특히,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선박에 장착하는 등 왜구의 격퇴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침략과 약탈이 어려워진 왜구들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이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아울러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옹포(울산) 등 3포를 개방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또 조선 초에는 류큐, 시암, 자바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도 교류하였다. 이들 나라는 조공 또는 진상의 형식으로 기호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 토산품을 가져와서 옷, 옷감, 문방구 등을 회사품으로 가져갔다. 특히, 류큐와의 교역이 활발하였는데, 불경, 유교경전, 범종, 부채 등을 전해 주어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라고 하여, 조선의 교린정책을 소개했고, 조선은 교린정책하에서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교역했음을 기술했다. 이어 쓰시마정벌이나 교역품 등과 동남아, 특히 유구와의 교역을 소개했다. 그러나 유구와의 교역품 중에는 유교경전과 부채가 등장하는데, 이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¹¹⁾

2) 일본교과서

조선 전기(室町幕府시기)의 조선과의 통교에 관해서, 도쿄서적 『일본사』에서는

11) 이 부분의 기술은 한국사개설서인 한영우, 1997,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32쪽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과 문물을 교류한 나라는 여진, 일본 이외에도 유구(琉球, 오키나와), 섬라[타이], 자바[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조공 혹은 진상의 형식으로 각종 토산품 [주로 기호품]을 가져와서 의복, 포류(布類), 문방구 등을 회사품으로 가져갔다. 특히 유구와의 교역이 활발하여 대장경을 비롯한 불경, 유교경전, 범종, 부채를 건네주어 그 나라의 불교발전에 기여하였다.

동아시아의 변동

…… 조선반도에서는 고려가 멸망하고, 대신하여 조선국이 세워졌다. 조선어를 글로 표현한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고, 일본과의 무역도 열게 되었다.

라고 하여,¹²⁾ 아무런 설명 없이 조선과 무역을 개시했다고만 기술하였다.

이에 반해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는,¹³⁾

조선과 유구

조선반도에서는 14세기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국[李氏朝鮮]을 건국하였다. 조선도 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왜구의 금지와 통교를 요구해 왔다. 막부가 이에 응한 결과, 日朝무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가면 日朝 간에 마찰이 일어나, 조선과의 무역은 부진하게 되었다.

라고 기술하여, 조선의 국호를 폄하하여 李氏朝鮮이라고 했으며, 조·일통교를 조선의 요구에 막부가 응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사실과는 정반대 기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의 삼포왜란 등의 사건을 양국간의 마찰로 단순하게 기술했다.

한편 야마가와출판의 고등학교 『상설 일본사』에는,¹⁴⁾

동아시아와의 교역

조선반도에서는 1392년 왜구를 격퇴하여 명성을 높인 장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 조선도 또 통교와 왜구의 금지를 일본에 요구하고 足利義滿도 여기에 응해서 양국 사이에 국교가 열렸다. 일·조무역은 明과의 무역과 달리 막부만이 아닌 처음부터 守護·國人·商人 등도 참가하여 번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 측은 對馬의 宗氏를 통하는 통교에 관한 제도를 정하여 무역을 통제했다. 일·조무

12) 2006, 『일본사』, 도쿄서적, 65쪽.

13) 2006, 『새로운 역사교과서』, 후소샤, 87쪽.

14) 2007, 『상설 일본사』, 야마가와출판, 131쪽.

역은 應永의 왜구(주2)에 의해 일시 중단되었지만, 16세기까지 활발하게 행해졌다.(주3)

朝鮮에서의 주된 수입품은 직물류로 특히 목면은 대량으로 수입되었고, 의료 등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주4) 그러나 이 일·조무역도 1510년(永正7)에 삼포의 난(주4)이 일어난 뒤로 차츰 쇠퇴해 갔다.

주1) 宗氏의 堂主가 交代하여 왜구의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1419년(應永 26), 조선군은 왜구의 본거지로 생각되었던 對馬를 습격했다.

주2) 조선은 일·조무역을 위해 부산포(부산)·내이포(제포)·염포(울산)의 3항(삼포)을 열고, 이들 3항과 수도 한성(한양)에 일본사절의 접대와 무역을 위한 왜관을 두었다.

주3) 일본에서의 수출품은 동·유황 등의 광산물이나 공예품 외에 유구무역에서 손에 넣은 소목(염료)·향목(향료) 등이었다. 또 수입품 이외에는 대장경도 보여진다.

주4) 삼포에 사는 일본인에게는 다양한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이 차츰 축소되어 가면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이 폭동을 일으켜 진압되었다.

라고 하여, 조·일관계 및 통교내용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이나 명이 모두 일본에 통교를 요구, 막부가 이에 응하여 통교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했다. 뒤에 상술하겠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기술이다. 그리고 應永의 外寇(쓰시마 정벌)가 왜구의 격멸에 목적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이어서 조선과의 무역품을 소개하고, 삼포의 난에 의해서 조·일 간의 무역이 쇠퇴했다고 기술했다.

4_ 豊臣秀吉의 朝鮮侵略

1) 한국교과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왜란과 호란의 극복」이란 주제하에, 임진왜란을 「왜군의 침입», 「수군과 의병의 활약», 「왜란의 극복», 「왜란의 결과», 「통신사의 파견」의 5항목으로 기술했다.¹⁵⁾ 그 순서에 따라 기술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우선 「왜군의 침입」에 관해서는,

왜군의 침입

조선이 양반 사회의 분열과 군역 제도의 문란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어 가던 16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하고 있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여진족이 다시 일어나 힘을 키워 갔으며,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여 년에 걸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여 통일 국가를 이룩하였다. 도요토미는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풀리게 하고 자신의 대륙 진출 야욕을 펴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으로 군대를 무장시키고, 침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는 명을 정복하러 가는 데 길을 빌리자는 구실을 내세워 20여 만 명의 군사를 출병시켰다.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정발과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조선 정부는 충주에 방어선을 치고 그들의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왜군이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 왜군은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라고 하여, 임진왜란의 원인을 도요토미가 불평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대륙정복 야욕을 펴기 위해 침략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20만 명의

15)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147~150쪽.

군사를 출병시켰다는 표현은 종래 일본교과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출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동원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수군과 의병의 활약」과 「왜란의 극복」에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한 응전으로 조선이 수군과 의병의 활약을 기술했고, 조·명연합군과 수군의 활약에 의해 왜란이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했다. 먼저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서는,

수군과 의병의 활약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거북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바다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은 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 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향토를 방어하고 조국을 구하려고 하였다.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병은 그에 알맞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의병은 경상도에서 광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현,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웠다.

라고 하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상을 기술했다. 이어 「왜란의 극복」에서는,

왜란의 극복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때 김시민은 진주에서, 권율은 해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 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랑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 났다.

라고 하여, 조·명연합군의 반격, 김시민·권율의 승리, 강화회담의 실패, 정유재란, 이순신의 활약, 도요토미의 사망, 일본군의 철수 등으로 임란이 극복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이어서 일본군의 침입에 의한 임진왜란 7년 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기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왜란의 결과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침략 의도는 좌절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받지도 못했고, 영토를 얻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조선이었다.

전 국토가 황폐하여 경작지가 전쟁 전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줄고,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으며, 일부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유럽 등지에 노예로 팔려 가기도 하였다. 또 전쟁 중에 노비 문서가 불태워지고 양반의 위신이 떨어져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문화재의 손실도 매우 커서 불국사·사고 등이 불에 타 버렸고, 활자·서적·도자기·그림 등 많은 문화재를 일본에 약탈당하였다.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명도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결국 만주의 여진족에게 지배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와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해져, 일본은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라고 하여, 임진왜란에 의한 조선의 인적·물적 손실과 문화재의 소실 등 전쟁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를 기술했고, 이로 인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세력변동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반면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재와 선진문

물을 받아들여 일본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기술했다. 조선으로부터 유학, 활자기술이나 도자기술 등 문화적인 전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일본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기술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

한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양난의 극복」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왜군의 침략」의 항목에서,

왜군의 침략

15세기에 비교적 안정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는 16세기에 이르러 대립이 격화되었다. 일본인의 무역 요구가 더욱 늘어난 데 대해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중종 때의 삼포왜란(1510)이나 명종 때의 을묘왜변(1555) 같은 소란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정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일본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뒤 철저한 준비 끝에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해 왔다(1592). 이를 임진왜란이라 한다. 전쟁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전쟁 초기에 왜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없게 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여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라고 하여, 임진왜란의 원인에 관해, 중학교 교과서와는 다르게 16세기의 삼포왜란이나 을묘사변 등 한·일관계의 갈등만을 기술했으며, 일본 측의 목적이나 이유에 관한 언급 없이 철저한 준비 끝에 침략했다고만 기술했다. 매우 모호한 기술이다.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음 전쟁의 경과에 관해서는, 「수군과 의병의 승리」 항목에서,

수군과 의병의 승리

왜군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이 이끈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곡창 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한편 육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향토 지리에 밝은 잇점을 활

용하면서 그에 알맞은 전술을 구사하여 적은 병력으로도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 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라고 하여, 수군과 의병의 전투상황을 기술했다. 전투상황에 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기술했고, 「임진왜란 해전도」와 「관군과 의병의 활동」이라는 그림으로 전투상황을 표현했다. 그림을 통해 전투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전쟁의 영향에 관해서는 「전란의 극복과 영향」에서,

전란의 극복과 영향

수군과 의병의 승전으로 조선은 전쟁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며, 관군과 백성이 합심하여 해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후 명과 경상도 해안으로 밀려난 왜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조선도 전열을 정비하여 왜군의 완전 축출을 준비하였다.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대의 편제와 훈련 방법을 바꾸었고, 속오법을 실시하여 지방군 편제도 개편하였으며, 화포를 개량하고 조총도 제작하여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3년여에 걸친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 회담이 결렬되자, 왜군이 다시 침입해 왔다(1597).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그러나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직산에서 격퇴하고 이순신이 적선을 명량에서 대파하자,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다시 후퇴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임진왜란은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적으로는 왜군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토지 대장과 호적의 대부분이 없어져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 식량도 부족해졌다. 또, 왜군의 약탈과 방화로 불국사, 서적, 실록 등 수많은 문화재가 손실되었고, 수만 명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그림·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 일본의 성리학과 도

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조선과 명이 일본과 싸우는 동안 북방의 여진족이 급속히 성장하여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라고 하여, 조·명연합군의 참전, 휴전회담의 결렬, 정유재란, 왜군에 의한 전쟁피해, 문화재의 손실 등을 기술했고, 일본에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술했다.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포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한편 피랍된 성리학자와 조선도공에 의한 일본성리학과 도자기 문화의 발달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2) 일본교과서

조선침략에 관해서 도쿄서적 『역사』에는,

조선침략

히데요시는 국내 통일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선, 인도, 루손(필리핀), 고산국(대만) 등에 편지를 보내 복속을 요구했다. 1592년(文祿元)에는 명(중구)의 정복을 목표로 조선에 대군을 파견했다. 일본군은 수도 한성(서울)을 점령하고 조선북부로 나아갔지만, 구원하러 온 명군에 밀리고 말았다. 또 각지에서 조선 민중에 의한 의병이 저항운동을 일으켰고, 조선남부에서는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수군을 격파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보급로를 막았다.

이 때문에 히데요시는 조선남부에 군대를 주둔시킨 채 명과의 강화교섭을 시작했는데, 황제의 국서에 불만을 품고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 일본군이 패배하고 히데요시가 병사하면서 전군에 철수를 명령했다. 7년간에 걸친 싸움에서 조선에서는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고, 일본에 연행되었다. 일본의 무사나 농민도 많은 무거운 부담으로 고통당했고, 다이묘 간에 불화도 표면화되어 도요토미씨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여, 항목의 제목으로 조선침략의 용어를 썼으며, 히데요시의 정복욕을 전쟁의 원인으로 기술했다. 이후 전쟁의 진행과정을 기술했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 조선인의 살해와 피랍, 일본의 무사나 농민에게도 부담이 가중되어 도요 토미 정권의 몰락 원인이 되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반해 후소사관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조선 출병

약 100년 만에 전국통일을 달성한 히데요시의 의기는 충천했다. 히데요시는 중국의 명을 정복하여 천황과 함께 대륙으로 옮겨가 살면서, 동아시아로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1592년(문록원) 15만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 加藤清正과 小西行長 등의 무장에게 지휘된 일본군은 순식간에 수도인 한성(현재의 서울)을 무너뜨리고, 조선북부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조선 측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민중의 저항, 명의 조선에의 원군 등으로 불리하게 되어 명과의 和平교섭을 위해 撤兵하였다(文祿의 役). 그러나 명나라와의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자 1597년(慶長 2), 히데요시는 다시 약 14만의 대군을 파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남부에서부터 더 나아갈 수가 없었고, 이듬해 히데요시의 죽음과 더불어 군을 철수시켰다(慶長の 役).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출병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 이 출병으로 막대한 비용과 병력을 소비한 도요 토미家の 지배도 흔들렸다.

라고 하여, 조선침략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출병」이란 제목하에 기술했다. 히데요시의 원대한 정복야욕을 기술했고, 이어 전쟁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소개했으나, 전쟁의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기술했다.

한편 아마가와출판의 『상설 일본사』는,¹⁶⁾

秀吉의 대외정책과 조선침략

1587년(天正15) 秀吉은 대마 宗氏를 통해서, 조선에 대한 입공과 명으로 출병하기 위한 선도를 구했다. 조선이 이것을 거부하자 秀吉은 肥前의 名護屋에 본진을 구축하여 1592년(文祿元) 15만 남짓의 대군을 조

16) 2007, 『상설 일본사』, 아마가와출판, 155쪽.

선으로 파병했다(文祿의 役).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철포의 위력 등을 앞세워 얼마 되지 않아 漢城(現, 서울)·平壤(現, 평양)을 점령했지만, 李舜臣이 이끈 조선수군의 활약과 조선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 점차 전국은 불리해졌다. 그 때문에 현재의 일본군은 휴전하고, 秀吉에게 명과의 강화를 구했지만, 秀吉이 강경한 위세를 계속 취했기 때문에 교섭은 결렬되었다.

1597년(慶長2), 秀吉은 다시 조선에 14만여 군사를 보냈지만(慶長の 役) 일본군은 처음부터 苦戰을 면치 못하고 익년 秀吉이 병사하자 철병했다. 전후 7년에 걸친 일본군의 조선침략은 조선사람들을 전화에 끌어들이어 많은 피해를 입혔다. 또 국내적으로는 막대한 전비와 병력을 무단히 써 없애는 결과를 낳아, 豊臣정권을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여, 「조선침략」이라는 소제목하에 임진왜란을 기술했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히데요시의 조선입공요청과 그에 대한 조선의 거부를 들고 있다. 이어 전쟁의 진행사항을 기술했고, 일본군의 조선침략이 조선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음을 기술했다.

5_ 通信使

1) 한국교과서

통신사에 관하여 『중학교 국사』에는,¹⁷⁾

통신사의 파견

왜란 후, 일본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통교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은 승려 유정을 일본에 파견하여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온 뒤, 다시 국교를 맺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동래의 왜관에서만 일을 보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에 비해, 통신사는 일본의 에도(도쿄)까지 가서 막부의 장군을 만나는 등

17)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150쪽.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가 극진한 대우를 받았으며, 일본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들이 다녀간 후에는 일본 내에 조선의 문화와 풍속이 퍼질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통신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2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통신사의 파견은 19세기 초에 막을 내렸다.

라고 되어 있다. 통신사의 파견이 일본의 요청에 의해 승려 유정을 파견하여, 포로송환이 된 후에 국교를 맺으면서 이루어졌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승려 유정이 송환해 온 조선인은 전쟁에 참가한 포로가 아니라, 죄 없이 끌려간 피랍된 조선인 즉 피로인이었다. 잘못 표기된 용어이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이 일본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거나 일본 내에 조선문화와 풍속이 퍼질 정도였다는 기술은 좀더 고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통신사에 관해, 「대외관계의 변화」라는 별도의 주제하에 조선후기의 「일본과 관계」라는 항목에서¹⁸⁾

일본과의 관계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곧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서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한편 일본은 조선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적을

18) 국사편찬위원회, 2002, 『고등학교 국사』, 103~104쪽.

때에는 300여 명, 많을 때에는 400~500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는 국민으로 예우하였다. 일본은 이들을 통하여 조선의 선진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라고 하여, 임란 후 쓰시마 섬 도주의 강화요청, 유정(사명대사)의 강화노력, 기유약조에 의한 통교의 재개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인 포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어 12회에 걸친 통신사 파견과 이들을 통해 일본인이 조선의 선진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자 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12회의 통신사가 아니라 초기 3회는 회답겸쇄환사의 명칭이었다.

한편 통신사의 기술에 이어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어민이 자주 이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속중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후에도 일본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이며, 이 시기에 일본어민이 자주 침범하여 갈등을 빚었는데 안용복에 의해 조선의 영토임이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가 적극적인 경영에 나섰다라고 기술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울릉도와 독도 기술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으로 최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의식한 기술로 사료된다.

2) 일본교과서

통신사에 관해, 도쿄서적 『역사』에는 「쇄국하의 대외관계」라는 주제 아래 「조선과 유구」 항목에서¹⁹⁾

조선과 유구

이에야스[家康]의 시대에 조선과 강화를 맺고, 쇼군이 바뀔 때마다 400~500인의 사절(통신사)이 오는 관례가 생겼다. 쓰시마번은 국교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무역을 허가받아 조선의 부산에 세워진 왜관에 서 은과 동 등을 수출하고, 목면·조선인삼·비단 등을 수입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통신사의 왕래 사실과 왜관을 통한 조·일무역에 기술했다. 또한 후소사관 교과서에는 「쇄국하의 대외관계」의 「조선·유구·蝦夷地」에서,

조선·유구·蝦夷地

막부는 이에야스 때, 쓰시마의 宗氏를 통하여 히데요시의 출병으로 단절된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양국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쇼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통신사라고 불리는 사절이 에도를 방문하여 각지에서 환영을 받았다. 조선의 부산에는 宗氏의 왜관이 설치되어 약 500인의 일본인이 살면서 무역이나 정보를 수집했다.

라고 하여, 조선통신사와 왜관에 관해 간략히 기술했다. 그러나 『宗氏의 왜관』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왜관이 마치 宗氏나 일본이 설치한 사적인 시설로 오해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야마가와 『상설 일본사』에는 『조선과 유구·蝦夷地』에서,²⁰⁾

조선과 유구·蝦夷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조선과의 강화를 실현하고, 1609년

19) 2006, 『역사』, 도쿄서적, 97쪽.

20) 2007, 『상설 일본사』, 야마가와출판, 175쪽.

(경장 14), 쓰시마번주 宗氏는 조선과의 사이에 기유약조를 맺었다. 이 조약은 근세일본과 조선간에 기본이 되었고, 부산에 왜관이 설치되어, 宗氏는 조선외교의 특권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주1). 조선으로부터는 전후 12회의 사절이 來日하였고, 4회부터는 통신사로 불렸다. 來日의 명목은 새로운 쇼군의 경하가 태반을 넘었다(주2).

주1) 宗氏의 특권이란 대조선 무역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 무역이윤을 종씨는 나누어 주며 주종관계를 맺었다. 쓰시마는 경작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이윤이 知行을 대신했다.

주2) 1회의 조선사절의 인원은 약 300~500인으로, 초기 3회는 문록·경장의 역 때 조선인 포로의 반환을 목적으로 한 사절로서, 1회에 1240인, 2회에 321인, 3회에 146인의 포로가 반환되었다. 통신사란 '믿음[信]을 통하는 수호를 목적으로 한 사절'이란 의미이다.

라고 하여, 조선과 강화가 되고, 기유약조에 의해 왜관이 설치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특히 조·일관계에서 宗氏의 무역이윤에 대한 특권에 대해 주를 달아서 설명했고, 통신사가 믿음을 통하는 사절이라고 기술했다.

Ⅲ. 공통점과 차이점

이상에서 한·일 양국개설서의 기술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통해 양국 교과서상에 나타난 쟁점주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자.

첫째,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에 관해서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별도의 기술은 없고 원의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성이 일본원정을 위한 기구였다는 사실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는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는 元寇의 침입과 그에 대한 응전상황을 기술했다. 그러나 1274년 제1차 침입(文永의 役) 때에 원군이 고려의 군세와 합세하여 공격해 왔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후소사판에는 고려군이 합세했다는 기술은 없고 몽골의 약탈과 폭행에 피해는 입었지만, 막부무사들과 神風の 덕으로 잘 물리쳤다고 기술했다.

한편 아마가와관 고교교과서에는 기본적으로는 도쿄서적관과 같은 논조이지만, 몽골과 고려군의 연합군 3만 명이 쓰시마 이키를 공격한 후 하카다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소상히 기술했다.

양국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할 때, 한국의 경우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어야 하며, 일본의 경우, 원정군의 구성과 실패원인에 관해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왜구에 관하여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왜구가 조선을 습격하는 과정과 최영·이성계 등이 진압하는 내용이 소개되었고, 전황을 지도로 상세히 표시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었고 최영과 이성계가 이를 막았다는 단지 두 줄의 소략한 내용뿐이며, 본문의 기술과 어울리지 않게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의 『고려사』 사료가 실려 있다. 왜구 약탈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중학교 교과서에는 왜구가 西國의 무사나 상인·어민으로 구성

된 해적집단이라고 기술하면서도, 주를 달아 왜구 속에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에서의 최근 연구 상황을 추가했다.²¹⁾

양국교과서에서 왜구가 고려의 각 지역을 습격하여 약탈을 자행하고, 고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무력응징의 대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왜구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술을 하고 있다. 한국교과서는 왜구를 당연히 일본인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일본교과서는 쓰시마·이키·구주지방의 주민이 해적집단화한 것으로 기술하면서, 그들 중에는 일본인 이외의 사람, 또는 조선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셋째, 조선전기[室町時代] 통교 부분에 관해서는, 양국 교과서에서 모두 기술했다. 한국교과서에는 포소의 개항, 쓰시마정벌, 삼포개항, 그리고 류큐 등 동남아 여러 나라와의 교역도 소개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교린정책을 소개했고, 교린정책하에서 삼포를 개항하여 일본 및 동남아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기술했다. 그러나 류큐와의 교역에서 유교경전, 부채 등을 전해주어 류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기술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도쿄서적판에는 단순히 조선의 개국 후 일본과의 무역을 열게 되었다고만 기술하였다. 후소사관에는 조선이 건국 후 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통교를 요청했고, 막부가 이에 응하여 무역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나아가 야마가와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같은 맥락에서 조선이 요청하고 막부가 응한 것으로 기술했다.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기술이다.

넷째, 임진왜란(秀吉의 조선침략)에 관해서도, 양국교과서의 기술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즉 전쟁발발의 원인과 과정, 전쟁의 경과(일본군의 진격과 한양, 평양함락), 명의 참전, 의병궤기, 강화회담, 정유재란발발, 이순신의 응전, 豊臣秀吉의 죽음, 전쟁의 종결, 전쟁의 영향(조선의 피해) 등에 대해 사실

21) 일본에서의 최근의 연구상황이란, 왜구를 민족이나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한 세력으로 보고, 1350년 이후 조선반도에서 활동한 전기왜구는 쓰시마, 이키, 북구주를 거점으로 한 일본인이나 조선인의 집단 또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혼혈집단, 제주도 민을 포함시키는 설 등이다(손승철, 2006a, 「고려·조선전기 한일관계사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일관계사연구』 제25집).

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한국교과서에서는 전쟁원인과 관련해 히데요시가 불평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 했다는가, 대륙진출의 야욕을 펼치려 했다는가, 16세기의 조·일관계의 갈등 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전국민이 단합하여 침략에 대항해 간다는 점, 전쟁의 피해로 인해 조선인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많은 조선인이 붙잡혀 갔던 반면 일본은 성리학자와 우수한 도공과 인쇄기술자를 잡아가 성리학과 도자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서술했다.

하지만 전쟁에 의해 끌려간 민간인을 ‘포로’로 표기한다든지, 히데요시군의 ‘출병’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섯째, 통신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양국교과서에 모두 기술되어 있다. 한국교과서에는 임란 후 단절되었던 조·일관계가 승려 유정에 의해 재개되었고, 통신사가 에도를 방문하여 소군을 만나는 등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음을 기술했다. 그러나 통신사가 일본의 문화발전에 공헌했다는가, 통신사가 다녀간 후에 일본 내에 조선문화와 풍속이 퍼질 정도였다는 기술은 검증되어야 할 표현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유정에 의한 국교재개 과정과 통신사가 12회 파견되는 과정을 좀더 소상히 기술했다. 그러나 국교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유정이 조선인 포로를 데려왔고, 통신사가 조선의 선진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기술은 수정되어야 한다.

왜관에 관해서는 중학교 교과서에만 “조선은 일본사신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동래의 왜관에서만 일을 보고 돌아가게 하였다”라고 소략하게 기술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왜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이며, 안용복에 의해 확인되었고, 19세기 말에 조선정부가 적극적인 경영에 나섰다라고 기술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독도영유권분쟁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조선과의 강화를 맺고 소군이 바뀔 때마다 조선통신사로 불리는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후소

사판은 조선과 일본의 대등한 관계를 기술했다. 주목되는 표현이다. 그러나 왜관에 관해서는 도쿄서적에는 기술이 없고, 후소사판은 宗氏의 왜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宗氏나 일본이 세운 시설로 표현했다.

또한 아마가와관 고등학교 교과서는 조·일무역에서의 宗氏의 역할과 특권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고, 통신사가 믿음[信]을 통하는 수호를 목적으로 파견되었다는 기술을 했다. 위의 대등관계라는 표현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다.

IV. 차이점에 대한 전망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현재 한·일 양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근세분야의 쟁점 주제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왜구의 구성, 조선전기 통교, 임진왜란, 통신사와 왜관의 성격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개괄하면서 차이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전망을 정리해 보자.²²⁾

우선 왜구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에서는 일부 학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주장되고 있다. 즉 1350년 이후 조선반도에서 활동한 왜구는 쓰시마, 이키나 북구주를 거점으로 한 일본인이나 제주도인을 주력으로 한 집단으로,

22) 다음의 내용들은 손승철, 2003, 「일본 역사교과서 고려·조선시대 기술의 왜곡실태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23 ; _____, 2005a,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 _____, 2005b, 「고려·조선전기 한일관계사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일관계사연구』 25 ; _____, 2005c, 「일본 역사서 중·근세 한일관계사에 대한 왜곡실상」, 『왜구·위사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제4권, 경인문화사 ; _____, 2006b,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실상과 문제점 - 2005년 후소사판 검정통과본을 중심으로 -」, 『신아세아』 제12권 제3호 등을 재인용하면서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해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민족 잡거지역에서 활동했으며, 현재의 국적에서 보면 일본인이나 조선인 혹은 그 혼혈집단이라는 주장이다.²³⁾

왜구가 일본인만의 집단이 아니라는 근거는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의 왜구 선박과 동원된 마필이 대규모적이라는 기록과 水尺·才人 등 고려천민이 왜구로 위장했다는 기록이다. 또한 『朝鮮王朝實錄』의 李順夢記事, 제주도 해민의 왜구관련설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高麗史』에 보이는 왜구선박이 300척이나 500척이라는 기술인데, 이는 당시 對馬·壹岐·西九州 및 瀨戶內海의 해상세력의 규모로 보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이며, 대량의 馬匹은 왜구들이 일본에서 수송하였거나 또는 고려의 말을 약탈한 것이었다.

그리고 고려 우왕 대의 禾尺, 才人들의 ‘假倭’ 행위는 어디까지나 왜구의 침공에 의해 촉발된 하나의 현상이었으며, 『高麗史』에 ‘假倭’로써 기록하고 있는 사료는 고려 말 500여 회 전후의 왜구관련 기사 중 단 3건뿐이다. 또한 왜구 중 조선인을 포함시키는 유일한 문헌사료로 인용되어 온, 조선 세종 대의 이순몽의 ‘왜구구성원’에 관한 발언도 그 의도가 왜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조세감축을 위한 내용이었고, 당시의 사료가 아니라 10년 후의 구전이며, 또한 그의 인물평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한두 개의 사료만으로 화척이나 재인이 왜인과 연합하여 왜구가 되었다든가, 왜구 중 조선인이 많았다는 기술은 사료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제주도 水賊의 예를 들어 濟州島人이 왜구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고 하는 주장 역시, “제주도의 정의현 동쪽, 대정현 서쪽, 죽도에는 예부터 왜선이 은박했다”는 기록과 “15세기 후반 제주도 해민이 倭語를 사용하고, 倭服을

23) 왜구의 구성주체에 관해서는 남기학, 2003, 「중세 고려·일본관계의 쟁점: 몽골의 일본침략과 왜구」,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영, 1996, 「고려말기 왜구구성원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제5집; 김보한, 「중세 麗日관계와 왜구 발생의 원인」, 『한일관계사연구논문집』 4, 경인문화사; 이영, 2005, 「왜구의 주체」, 『한일관계사연구논문집』 4, 경인문화사 등 참조.

입고 종종 해적 행위를 하였다”는 기사에 근거하는데, 이 기사도 이미 왜구의 전성기로부터 거의 1세기 뒤인 15세기 후반의 사료로 고려 말의 왜구 활동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 한두 개의 사료만으로 왜구의 민족구성을 일본인·고려인·조선인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결국 왜구는 이른바 三島(對馬, 壹岐, 松浦)를 포함하여 구주로부터 瀬戸内海 紀伊半島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해적 및 악당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 왜구의 구성을 ‘국적이나 민족을 넘어선 차원의 인간집단’으로 파악하는 시각이야말로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가공된 역사상이다.

다음으로 조선전기 통교가 조선의 요청과 막부의 응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기술에 대해 살펴보자.

1392년 조선에서는 건국 직후 막부장군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막부에서는 足利將軍 명의를 아니라 승려인 絶海中津의 명의로 조선국왕에게 답서를 보내왔다. 그 서한의 중심내용은 막부장군이 조선 측의 왜구금압과 피로인 송환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양국의 隣好를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것, 그리고 막부장군이 조선과의 통교를 적극 원하고 있지만 장군이 직접 외국에 通問한 일이 없으므로 외교일선에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승려를 통해서 답서를 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室町幕府도 조선과의 통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부장군이 직접 외교일선에 나서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역시 막부장군에 의한 일본 국내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능력이 없었다는 데에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던 중 九州와 大内氏의 지배가 가능해지자, 足利將軍은 명과 조선과의 통교관계 수립을 위해 1403년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곧이어 1404년 7월에는 조선에 장군명의로 ‘日本國王使’를 파견함으로써 조선과 정식의 국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마도주를 중간매체로 이용하여 조선과의 통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室町幕府시대의 조·일관계를 볼 때, 조선사절(희례사·보빙사·통신사) 파견이 17회인 데 반하여, 막부로부터의 일본국왕사 파견은 71회에 달하고 있다. 당시 사절파견의 목적만 보더라도 조선사절은 막부장군의 왜구금

지와 피로인 송환에 대한 回禮와 答禮가 주목적이었음에 비해, 일본국왕사는 대부분이 통교요청과 대장경청구였다. 또한 일본국왕사의 파견이 조선에 비해 많았던 이유도 조선 측으로부터 답례가 후하자, 위장된 사신인 僞使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동제국기』의 「일본국기」 내조기사를 보아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세견선 약정자〉

	1척	1~2척	3척	4척	7척	50척	계
기내 5주	1인						1척
동산도							
산양도	3인						3척
남해도							
북륙도	1인						1척
산음도							
서해도	16인	12인					28~40척
대마도	3인		1인	1인	2인	1인	74척
일기도	3인	2인					5~7척
유구국							
세견선계	27척	14~28척	3척	4척	14척	50척	112~126척

위의 표는 15세기 일본각지로부터 내조자의 세견선 약정표인데, 세견선은 주로 현재의 구주지역인 서해도·쓰시마·이키에 집중되어 있으며, 46인에게 총 112척 내지 126척을 보내왔다. 이들은 대부분 유력세력가였으며, 수직인은 23인, 수도서인은 29인에 달하고 있다.

즉 막부장군 외에도 각 지역의 지방 세력가들이 사절을 보내 통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室町시대의 조·일 간의 통교는 전적으로 일본 쪽에서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들의 무질서한 왕래를 통제하기 위해 포소를 三浦로 제한했으며, 또 이들을 상경시켜 조선국왕을 알현케 하는 上京制度를 두었고, 대마도주에게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文引發行權)를 주어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통교자를 조선의 통제규정(『海東諸國紀』 조빙응접기)을 정하여 무역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선에서 통교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幕府가 이에 응했다는 기술은 역사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임진왜란에 관련된 부분이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벌인 전쟁으로, 전쟁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은 물론 명나라까지 개입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의해 삼국은 모두 승자·패자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일본은 豊臣政權이 붕괴하고, 명나라도 전쟁후유증으로 점차 쇠퇴해 갔으며, 조선은 전쟁에 의해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적자원이 손상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후소샤교과서는 이러한 침략전쟁을 단순히 야망을 달성하려 했던 豊臣秀吉의 영웅담으로 기술하고 있다.

임진왜란의 원인으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예를 들면 豊臣秀吉이 織田信長の 침략의도를 계승했다, 명나라와의 무역을 중계하던 조선이 이를 단절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 豊臣秀吉의 장남 鶴松의 죽음으로 인하여 벌여졌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벌였다, 국내평정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大名들과 무사들의 남아도는 무력을 외부로 전환하여 불만을 해소하려고 벌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후소샤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의 대제국을 세우려는 대의명분 내지는 豊臣秀吉의 개인적인 망상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인적손실은 물론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침략전쟁에 의한 극심한 피해의 대부분을 무고한 백성들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수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거나 일본으로 유출되었고, 조선의 陶工, 細工人, 農夫, 韓醫師 등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끌려갔으며, 일본의 전쟁복구에 동원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루투갈과 일본상인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갔다.²⁴⁾ 그 숫자는 임진왜란을 노예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많으며, 전쟁의 희생자가 묻힌 耳塚(豊國神社)이 지금도 京都에 안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24) 北道万次, 1990,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_____, 1995,

『清正高麗陳覺書』에 의하면, 병사 1명당 코 3개가 배당되었는데, 吉川廣家の 경우 1만 8350개, 鍋島直茂의 경우 1만 901개나 되었다. 또 大河内秀元の 『朝鮮物語』에는 21만 4700여 개를 잘라 15개의 통에 운반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경제적 손실로는 전쟁 직전 150여 만 결이던 토지가 30만 결로 격감되었으며, 문화재의 손실도 상상을 초월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과 관청이 불탔고, 지방에서는 불국사를 비롯한 많은 중요문화재가 소실되고, 춘추관에 보관되어 오던 각종 서적들도 불탔다. 수많은 도자기와 미술품(종·불화 등)이 약탈당했으며, 고려불화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에 남아 있어 한국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 결과 조선인에게는 잇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고, 일본을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不俱戴天의 원수국으로 각인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은폐한 교과서는 결국 편협한 국가주의와 자의적인 역사해석으로 豊臣秀吉을 전쟁 영웅으로 우상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의 발발원인이나 침략상을 나타내는 전쟁의 경과나 조선의 피해상황 등이 좀더 사실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와 왜관에 대한 기술이다. 통신사는 막부장군에 대한 경하나 조문, 기타 두 나라의 긴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에게 공식적으로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막부에서는 대마도주를 통해 통신사파견을 먼저 조선에 요청했고, 몇 개월 전부터 통신사접대를 준비했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면 지역마다 수많은 문인들이 통신사의 숙소에 모여들어 異國 선진 문화에 대한 동경과 흥미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통신사행의 역사적 자취는 아직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어, 두 나라의 성숙된 우호관계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1970년대 이후 선린외교와 문화교류의 통신사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지만,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통신사연구에 몰두해 온 三宅英利는 자신의 통신사연구가 일본의 끊임없는 불법에 대한 속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할 정도로 통신사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참조.

의 선린외교의 정신을 강조했다.²⁵⁾

과거에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본 주된 이유는, 일본의 막부장군이 바뀔 때 조선국왕이 국서를 바치기 위해 통신사를 보냈다는 것과 통신사와 비견되는 日本國王使가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통신사의 파견과정과 일본의 접대방식 및 외교의례 등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통신사파견에 앞서 절차상 먼저 조선 측에 통신사파견을 요청했으며(通信使請來差倭), 조선통신사가 부산을 출항하여 江戸에 이를 때까지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통신사를 안내하였고, 각번의大名들을 동원하여 접대를 준비하는 등 ‘장군 일대의 성대한 의식’으로 통신사를 맞이하였다. 한 자료에 의하면 통신사의 접대에 막부의 1년 예산을 지출했다는 기록도 있다.²⁶⁾ 결국 통신사의 왕래를 더욱더 필요로 한 것은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국왕사의 파견도 조선후기에는 ‘大差倭’가 대신하였으며, 조선전기 일본인의 상경로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의 진격로로 활용되어, 조선후기에는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하고, 왜관에서 모든 통교업무를 처리했다.

따라서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장군의 즉위를 축하했다는 표면적인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통신사가 마치 저자세로 일본을 방문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우호교린의 상징으로 양국의 대등관계의 상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하면서, 부산 초량왜관을 새로 지어 외교·무역 업무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왜관을 ‘宗氏의 왜관’으로 표기하여 마치 근대적인 의미의 영사관과 같은 인식을 주고 있다.

‘倭館’이란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의 거류지역으로, 일본에서 건너온 사자들을 응접하는 使館이자 客館이며, 조·일 양국 간의 商館을 말한다. 왜관이 창설될 당시인 15세기 초 무렵에 조선은 무역상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쇄도

25) 손승철 역, 1991, 『근세한일관계사연구』, 이론과 실천 참조.

26) 李元植, 1997,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仲尾宏, 1997,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참조.

하는 일본인 도항자를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도항해 온 일본인에 의해 국가적인 기밀의 누설과 밀무역의 횡행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조선은 일본인의 도항장과 체류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만들었다.

그 결과 1407년 조선은 일본인의 入港所를 富山浦(부산)와 薺浦(웅천)로 정하고 응접의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그들을 접대토록 하였다. 입항소는 1426년 鹽浦(울산)가 추가되어 ‘三浦倭館’으로 불렸다. 그리고 상경하는 일본 사자들을 위해서는 수도 한양에 별도로 東平館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浦所에 위치한 왜관은 1419년 대마도 정벌, 1510년 삼포왜란, 1544년 사랑진왜변 등 조·일 간의 격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16세기 중반에는 부산포 1개소로 한정되는 선례가 정착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왜관을 폐쇄한 조선은 강화교섭을 위하여 쇄도하는 일본 사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1601년에는 絶影島(지금의 影島)에 임시 왜관을 설치하여 그들을 접대하였다. 이후 조·일 양국 간에 국교가 재개되면서 무역과 외교 교섭을 위한 장소로서 왜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자 조선은 1607년 豆毛浦에 1만여 평 규모의 왜관을 설치하고, 1609년에는 서울에 있던 東平館을 폐지하였다.

두모포 왜관(지금의 수정 2동) 성립 이후 부산에 위치한 왜관이 대일외교와 무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포소 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 전기와는 달리 크게 강화되었다. 즉 조선 전기에 도항해 들어왔던 일본 사자들의 상경로가 임진왜란 때 침략 경로로 이용되자 조선은 일본에서 건너오는 모든 사자들에 대해서 상경을 금지하였고, 그에 따라 조·일외교와 무역업무가 부산에 있는 왜관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왜관은 조선의 對日交涉에 있어서 접대처로서, 무역처로서, 숙박처로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豆毛浦 왜관은 설치 당시부터 수심이 얇고,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선창이 남풍을 직접 받는 위치에 있어서 배를 정박시키기에 부적절한 곳이었다. 그래서 대마도 측은 수차례에 걸쳐 왜관을 부산성 안으로 이전해 줄 것을 8차례나 요청하였다. 대마도의 거듭된 이관 요구를 거절하던 조선은 급

기야 1673년에 초량으로 이관을 결정하고, 1678년에 초량 왜관으로 옮김으로써 조·일교섭은 초량 왜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산 초량 왜관이 낙성된 것은 1678년 4월이며, 기록에 의하면 이전하는 날(23일) 두모포왜관으로부터 관수 이하 450여 명의 대마도 사람들이 신관에 들어갔다고 한다. 초량 왜관은 1678년부터 1872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에 침탈되기 전까지 약 200년간 대일외교와 무역의 장이 되었다.²⁷⁾

이와 같이 부산 초량왜관은 조선에서 대일교섭을 위해 설치해 주었던 기관이므로 이것을 ‘宗氏의 倭館’으로 기술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상의 오류이며, 시정되어야 한다. ‘宗氏의 倭館’은 對馬島主 宗氏가 사적으로 ‘倭館’을 설치했다는 표현이며, 이것은 엄연히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현재 한·일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고교 교과서 중·근세 분야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으며, 기술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현황을 소개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첫째,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一國史的이고 一方的인 기술을 벗어나 客觀化해 가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사가 기본적으로 양국의 관계인 만큼 어느 한편의 상황만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쌍방의 입장을 편견 없이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신사가 일본문화 발전에 공헌하였고 이들로 인해 조선문화와 풍속이 퍼졌다는 것과, 임진왜란 시 일본의 침략성을 분명히 기술하고 그로 인한 조선인의 피해를 통해 양국간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전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7) 손승철, 2005d,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제5장 개정판, 경인문화사 참조.

둘째,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歷史事實을 충실하게 기술해야 한다. 왜구 구성원이나 성격에 관한 기술, 통교계기와 과정, 三浦를 통한 양국의 평화적인 통교관계, 임진왜란에 관한 원인이나 성격에 관한 사실적인 기술, 양국의 피해상황, 국교재개를 위한 양국의 노력, 통신사의 성격과 역할, 부산왜관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통교관계 등이 보다 역사사실에 충실하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시기의 양국관계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專門家の 집필 내지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임에도 오류가 적지 않고, 또 최근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도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기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교과서의 경우 류큐와의 무역품으로 유교경전과 부채가 등장하는 점, 피랍 조선인을 포로로 표기한 점, 일본군의 출병이라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 조선전기 통교가 일본의 허락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 오류가 적지 않다.

현재 한·일 양국에서는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교과서왜곡으로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2기에는 <교과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양국교과서의 비교분석이 상호 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에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부분을 시정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n Analytical Comparison on Main Issues in
Medieval & Modern Times within Korean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s

Son, Seung-Che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ssues in the area of medieval and modern times within Korean or Japanese history textbooks which are us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and Japan. As the textbooks for comparison, in the case of Korea,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ublished by the committee of state-designated books i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ere chosen, and in the case of Japan, the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published by Tokyo books and Hუსyosya and the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published by Yamagawa publishing company were chosen.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main issues in the textbooks were attack of Korean & Mongolian military to Japan, Japanese invaders, friendly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Joseon,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952, Tongshinsa, and the official residences for Japan and the parts of issues are as followings.

First, it was the issue of component of Japan invaders: Korea recognized them as Japanese with natural sense but Japan described them as Joseon people as well as Japanese or the mixed group of Japanese and Joseon people. Second, as for the part of friendly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Joseon, the Japanese textbooks distorted the historical truth with describing the opening as our request. Third, as for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952, Korea focused on overcoming national difficulty or damage while Japan focused on the lust of conquest or idolization of Toyotomi Hideyosh thus it showed little recognition that it was an aggressive war. Fourth, they lessened the meaning of Tongshinsa that had characteristic of friendly relation with neighboring country and also described the official residences for Japan in Busan as for clansmen. To correct these distorted descriptions, it needs the effort to escape from the attitude of beautifying their own history, to be honest in the fundamental historical facts between Korean and Japan, and to describe and verify the facts by experts in Korea-Japan relationship.

keywords

History textbooks, attack of Korean & Mongolian military to Japan, Japanese invaders, friendly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Joseon,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952, Tongshinsa, the official residences for Japan, Tokyo books, Hუსyosya, Yamagawa publishing company, state-designated textbooks

한·일 역사교과서의 근대사 기술 분석

현 명 철 | 경기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본고는 1860년에서 1910년 한국 강점에 이르는 시기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일관계사의 기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서 행한 바가 있고, 한국사연구단체 협의회에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¹⁾ 또한 일본에서도 재팬에코사가 외무성의 위탁을 받아 일본어와 함께 영어,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 한·일관계사를 웹 사이트에 띄워 부당한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²⁾ 2001년 扶桑社 교과서 파동 이후 일본 교과서에서 한·일관계사의 기술은 상당히 성숙되고 있으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변화 분석 연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2005, 「2005년 검정통과 일본교과서 주제별 분석 자료집」; 한국사연구단체 협의회 주관 심포지엄, 2005,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2) 주식회사 Japan echo社, http://www.je-kaleidoscope.jp/index_ja.html.

며,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기존의 교과서 분석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 해당 시기에 대한 한·일관계사 연구자로 일본과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한·일관계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 앞으로의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특성상 통설이나 정설로 인정된 학설을 기반으로 기술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기존의 통설이나 정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문제의식은 앞으로의 학문적 연구·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일본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 2001년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扶桑社)』의 기술과 같이 특별한 정치적 의도나 고의적인 왜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적인 왜곡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다만 식민지 시기 이래 일본인의 역사 인식과 일본의 통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도, 한국 내에서의 연구가 일본에서의 연구를 월등히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없고, 양국이 병행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 교과서의 오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고가 목표로 하는, 한·일 양국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함으로써 한·일관계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한·일 학계 공동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본고의 제Ⅱ장은 「정한론」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이에 관한 양국 교과서서술의 분석을 행하여 수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의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한·일수호조규에서 한국 강점에 이르는 시기의 각 사항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을 소개하면서 상식과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잘된 교과서와 잘못된 교과서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2007년 현재 사용 중인 한국 중학교 교과서 1종과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8종³⁾이다. 다만 정한론에 관해서는 한국 중학교

3)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와 그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東京書籍, 『新編 新しい社會-歴史』(51.3%); 大阪書籍, 『中學社會-歴史的分野』(14.0%); 教育出

교과서의 기술이 없으므로 한국 고등학교 근·현대사 5종⁴⁾을 분석한다.

II. 정한론에 관한 서술 분석

1. 정한론의 발생과 의미

‘征韓論’이란 일본 德川幕府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메이지 초기에 정점을 이루는 ‘조선에 대한 무력사용 논의’를 말한다. 이 ‘정한론’에 대해서는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이 주목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⁵⁾ 그러나 한·일관계사의 큰 흐름에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식민지기 이래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版, 『中學社會 歴史-未済を見つめて』(13.0%); 帝國書院, 『社會科 中學生の歴史』(10.9%);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歴史的 分野』(5.9%); 清水書院, 『新中學校 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2.5%);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歴史』(2.3%); 扶桑社, 『中學社會-新しい歴史教科書』(0.04%). 단, 점유율은 2002년의 수치(『教科書レポート』 46 (2002년, 出版勞連))이다.

4)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점유율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이 발표한 교육부 제출 자료(2004년 10월 4일)에 의하면, 금성출판사(49.5%), 두산출판사(16%)의 순이다.

5) 필자의 관전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長沼熊太郎, 明治39(1906), 『征韓論分裂始末』, 民友社; 煙山專太郎, 明治40(1907), 『征韓論實相』, 早稻田大學出版部; 山口宗之, 1961, 『幕末征韓論の背景』, 『日本歴史155』; 毛利敏彦, 1978, 『明治六年政變の研究』, 有斐閣; 毛利豊, 1980, 『幕末期大島・勝・山田らの合作 『征韓論』の形成』, 『駒沢史』 27; 上野隆生, 1985, 『幕末維新初の朝鮮政策と 齋藤藩』, 『年報近代日本』 7, 山川出版社; 木村直也, 1987, 『文久3年 齋藤藩援助要求運動について-日朝外交貿易 齋藤藩の矛盾と朝鮮進出論-』, 『日本前近代の國家と 海外關係』, 吉川弘文堂; 荒野泰典, 1988, 『明治維新期の日朝外交 齋藤藩一元化問題』,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部; 田村貞雄, 1990. 9, 『『征韓論』政變の評をめぐって-毛利敏彦論 批判-』, 『歴史地理教育』 461; 毛利敏彦, 1991, 『西陽隆盛は征韓を企てたか』,

정설로 남아 교과서의 기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⁶⁾

이러한 인식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기술을 찾기 위해 정한론의 발생과 의미를 살펴보자.

1) 복류(伏流)로 존재하였던 정한론

조선 후기(일본의 근세=德川幕府)의 한·일 간의 외교관계는 교린을 기본원리로 하는 우호·친선의 평화적인 외교관계였다. 이 시기의 외교관계는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에 대한 비판을 공유하면서 성립되었다. 즉 德川막부가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豊臣家와의 대립, 그리고 부로인 송환에 보여준 성의 등 임진왜란 戰後 처리에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 측과 국교를 맺을 수 있었고,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때 조선통신사의 역할은 평화 유지를 위해 親조선 정권인 막부 장군의 권위에 국제적 위상을 부여하고 서국 지방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⁷⁾ 따라서 서국지방 다이묘들의 막부에 대한 불만은 조선 통신사나 조선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들 서남옹변은 豊臣秀吉의 후계를 자처하면서 막부 말기부터 막부의 대조선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豊臣秀吉에 의한 ‘정한(침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광옥은 시마즈

『歴史地理教育 469』; 木村直也, 1993. 4, 「幕末の日朝關係と征韓論」, 『較史評論516』; 현명철, 1994, 「일본 막부 말기의 대마도와 소위 ‘정한론’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 _____, 1999. 11, 「對馬藩攘夷政權と援助要求運動」, 田中彰 편, 『幕末維新の社會と思想』, 東京: 吉川弘文館; _____, 2003. 9,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한국사연구총서 46), 국학자료원.

- 6) 일례로, 1911년 발행된 일본 국정 교과서 『尋常小學日本歴史』에는, 처음 조정은 외국과 화친한다는 뜻을 결정하시고 특별히 사절을 조선에 보내 시어 왕정유신의 뜻을 알리고 수호를 권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당시 배외사상이 성하여서 우리 권고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례한 일이 많았다. …… 참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은 크게 분노하여…… 라고 정한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국정 교과서의 내용의 원형이 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인식이 남아 있다.
- 7) 현명철, 2003. 9, 앞의 책, 225~229쪽, 「終章 한일관계사의 전통과 변혁」 참고.

[島津]가 『朝鮮征伐記』(1659)와 『征韓錄』(1671), 『征韓實記』(1814), 『征韓武錄』(1856) 등의 책을 출판하였음을 분석하고, 西南雄藩에서는 막부의 인식과는 달리 이러한 책을 출판할 때마다 임진왜란 시 활약하였던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음을 지적하고 있다.⁸⁾ 따라서 西南雄藩 사이에는 막부의 외교 정책과는 다른 조선관 - 「征韓論」이 이미 복류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한론의 분출과 정착 과정

에도[江戸]시대 조선과 평화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일본에서 복류로 존재하고 있었던 정한론은 일본 徳川막부의 붕괴 과정 속에서 다름 아닌 조선과의 교역을 담당하고 조선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었던 對馬州 무사들에 의해 분출된다.

막부 말기(1861) 對馬州는 막부의 개항 정책에 있어서 영국과 러시아의 요구로 대마도에 개항장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대마도 전토를 막부 직할지로 하고 對馬島 태수에게는 九州의 땅을 달라는 이봉(移封)운동을 전개하였다.⁹⁾ 막부도 외교권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幕府 老中 안도 노부마사[安藤信正]가 양이파의 무사들에게 습격을 받고 실각을 하였으며(1862, 1), 또한 조정도 사쓰마[薩摩]와 조슈[長州] 그리고 도사[土佐] 양이파 무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막부에 양이를 단행하라는 칙지를 전달하였고, 막부는 회의를 거쳐 이 칙지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1862, 11).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마주의 젊은 무사들은 이봉운동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존왕양이를 藩論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藩主 요시요리[義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집단행명(主君押しつめ)을 단행¹⁰⁾하고 세자에게 가독을 상속하게 하여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다.

8) 김광옥, 2006. 4, 「일본 에도시대 임진왜란 기록물에 대한 연구 - 島津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27집』.

9) 현명철, 1993. 1, 「文久元年對馬藩の移封運動について」, 『日本歴史』 536호; 吉川弘文館, 2000. 4, 「1861년 대마주의 이봉운동」, 『한일관계사 연구 12』, 한일관계사학회.

이것이 이른바 대마도 攘夷정권이다.¹¹⁾

새로이 권력을 장악한 攘夷派 무사들은 조슈[長州]와 동맹을 맺고, 원조를 얻기 위해 치열한 활동을 전개한다. 1863년 초의 사료를 보면 대마도의 무사들이 마치 일본의 양이운동을 선도한 듯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양이를 역설하며 주선하고 있다. 양이운동의 세례를 받은 대마주의 무사들은 기존의 한·일관계를 부정하고, “대마주가 조선의 식량에 의지해서 생활이 가능한 현실은 일본의 치욕이니, 이를 극복해야 앞으로 조선을 복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마주의 원조를 요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막부말기의 정한론’이다.¹²⁾ 당시의 정한론은 기본적으로 원조 요구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원조 요구의 근거로 西南雄藩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 진출 의식을 받아들인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막부가 주장한 해외옹비론을 접목한 것이었다. 결국 서남옹변의 조선 진출론과 막부 일각의 해외옹비론이 대마주 攘夷政權의 원조요구와 결합하면서 지표상으로 분출된 것이다. 이 조선 침략론의 근거에는 기존의 막부가 맺은 한·일관계를 ‘일본의 치욕’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있었으며, 임진왜란을 ‘일본의 국위를 떨친 쾌거’로, 그리고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기사를 찬미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을 공유하면서 성립되었던 한·일 간의 평화적 외교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정세는 다시금 변하여 막부가 권위를 회복하고 長州를 정벌하게 되자, 대마주는 막부파와 長州派로 나뉘어 内訌에 휩싸이게 된다.¹³⁾ 그 결과 대마주의 무사들은 정작 메이지 정부의 성립 과정에서는 별 역할을 담당하지 못

10) 이는 막부 시대에 종종 있었던 일이다. 일종의 쿠데타인 썬인데 막부의 개입 여하에 따라 유형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대마도의 경우에는 長州와 동맹을 맺고 長州藩主의 강력한 입김으로 세자가 승계를 받아들이고 막부의 개입도 없어서 비교적 순탄하게 권력이 이동하였다. 한편 「主君押し扱め構造」에 대해서는 笠谷和比古, 1988, 『主君「押扱」の構造 - 近世大名と家臣 -, 平凡社新書, 11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현명철, 1992, 8, 「對馬藩攘夷政權成立について」, 『北大史學』 32호, 北大史學會.

12) 현명철, 1999, 11, 앞의 논문.

13) 이를 ‘甲子の變’이라고 부른다. 藩主 宗義達이 막부의 요구에 굴복하여 藩 내부의

한다.

明治政府 성립 후 明治 정부 성립에 공이 없었던 대마주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슈[長州] 출신의 신정부 핵심 인물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합의 하여, 藩의 사활을 걸고 무리한 외교 개혁을 조선에 요구하게 된다. 이는 1868년, 서계를 보내기 전에 藩主가 무사들에게 직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¹⁴⁾ 한편 서계가 아직 조선에 도착하기도 전인 1868년 12월에 이미 일본 정부 사료에서 기도[木戶]가 서계가 수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征韓’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음에서도 정한론(침한론)은 막부에서 메이지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권 담당자들의 대외 인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征韓어론은 무력을 배경으로 기존의 한·일관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논리였다. 따라서 메이지 정부가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고 보낸 서계 자체가 정한의 구실을 얻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일본의 사료에서는 꾸준히 정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사관은 정한론을 ‘일본의 국교 수립 요구(혹은 서계)를 조선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論議’로만 파악해 왔고, 이러한 이해는 정한론의 발생 이유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서계는 정한의 구실을 얻기 위해 보낸 것이 명백하다. 또한 왜관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사료에서 확인할 때, 조선은 일본과의 국교를 거절한 적이 없다. 특히 廢藩置縣(1871. 7)을 통해 대마주의 실체가 없어지고 메이지 정부가 대외적으로 유일한 주권자임을 과시하자, 조선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72년 일본 외무대승 하나부사

양이세력을 탄압하고 막부에 대해 공순을 표시하였다. 이때 많은 무사들이 脫藩하거나 저항하여 처벌되었다.

14) 『宗重正履歷』 권3(田保橋潔, 1972, 『近代日鮮關係の研究』, 종고서방, 복각판, 152~153쪽).

…… 지금의 서계부터는 조선이 주조해 준 圖書를 사용하지 않고 조정이 준 新印을 사용하여 그들이 우리를 변신으로 대해 온 오류를 바로잡아 舊來의 國號을 씻고 오로지 國體와 國威를 세우고자 한다. …… 설령 장래 국맥에 관계되는 곤란이 생긴다 하여도 조정으로부터의 보답이 있을 터이며 土主王臣의 입장에서 대마도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가 왜관에 도착하여 폐번치현의 사실을 알리고, 대마주 상인을 철수시키면서 왜관을 외무성 소관(대일본국공관)으로 하였을 때, 조선 정부는 이를 허용하였다. 즉 대마주에 빌려 준 왜관부지를 회수하지 않고 일본국 공관으로 허용한 것은 오랜 한·일간의 우호를 유지하려는 배려였다. 표류민 송환이 기존의 틀(대마주를 통한 송환)이 아닌 새로운 형태, 즉 외무성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조선은 납득하였다. 왜관에 들어오는 배가 和船이 아니어도 더 이상 조선은 문제 삼지 않았다.¹⁵⁾ 따라서 조선이 국교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정한론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정한론이 먼저 생겼고, 이에 기초하여 강요하는 새로운 관계를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왜관에서는 기존의 외교관계에 의거하여 치열한 탐색전과 논쟁이 전개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상의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외교사무서』를 번역한 별고에서 논하고자 한다.

2_ 교과서의 정한론 기술 검토

교과서의 기술 검토는 보급률 순으로 검토하고 비판의 여지가 있는 기술에 한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토

출판사	내 용
1) 東京書籍 『新しい社會歴史』	중국에 조공(주)하고 있던 조선은 구미에 대해 쇄국하고 명치정부와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내에는 무력으로 개국시키자는 주장(정한론)이 높아지고 1873년 일단 사절의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구미로부터 귀국한 이와쿠라[岩倉具視]와 오쿠보[大久保利通]는 국력의 충실이 우선이라고 하여 ¹⁶⁾ *주: 중국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황제에게 공물을 보내고(조공) 대신에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77쪽.
2) 大阪書籍 『中學社會歷史的分野』	[조선의 개국] 西郷隆盛 등은 신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족의 관심을 해외로 향하게 하기 위해 쇄국을 하고 있었던 조선에 대해 무력으로 호소하면서까지 일본과 국교를 맺게 하려고 하였다(정한론). 그러나 ¹⁷⁾
3) 教育出版 『中學社會・歴史』	[조선과의 외교] 1868년 대마번은 조선에 메이지유신을 알리는 문서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조선의 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문서 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西郷隆盛과 板垣退助 등을 중심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조선에 새로운 외교관계를 인정하게 하자는 주장(정한론)이 일어났습니다. ¹⁸⁾
4) 帝國書院 『社會科中學生の歴史』	[정한론] 신정부는 구미제국에서 배운 외교방법을 아시아에 행하려고 하였다. 우선 신정부는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고 하였지만, 조선은 에도시대부터의 관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여겨(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西郷隆盛과 板垣退助 등은 무력에 호소해서라도 조선에 요구를 통하게 하려는 정한론을 주장하였고, 사족의 불만을 해

(계속)

16) 2005, 『新編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48~149쪽.

17) 2005, 『中學社會歷史的分野』, 大阪書籍, 144쪽.

18) 2005, 『中學社會・歴史』, 教育出版, 120쪽.

출판사	내 용
	<p>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 19)</p> <p>* 주 : 조선은 종래의 대마번을 통한 외교방법을 주장하였으며,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기술한 일본의 국서에 반발하였다.</p>
<p>5)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p>	<p>[중국·조선과의 관계] 한편 조선에 대해서는 1873년 군대를 보내어 공격하자는 주장(정한론)이 있었다.²⁰⁾</p>
<p>6) 清水書院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p>	<p>[이웃나라와의 관계] 또한 국교를 계속하고 있던 조선에 왕정복고를 통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당시 양이정책을 취하고 있던 점도 있어서 일본의 새로운 정부와의 교섭을 거절하였다(주). 왕정복고 이후 국내 일부에서는 조선에 출병하여 나라의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정한론)이 있었으며, 조선의 대응은 이에 좋은 구실이 되었다. 정한론은 폐번치현이나 징병령 등의 개혁으로 지위를 위협받고 있었던 사족에게 지지를 얻었으며, 정부에서는 西郷隆盛이나 板垣退助가 그 대표였다. 하지만 …… 21)</p> <p>* 주 : 조선은 1866년에 프랑스 군함, 1871년에는 미국 군함을 몰리쳐 양이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다. 또한 1868년에 메이지 정부가 조선에 보낸 국서에 무례한 문자가 있다고 하여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p>
<p>7)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歴史』</p>	<p>[조선과의 관계] 정부는 조선에도 국교를 추구하였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정한론이 일어났다.²²⁾</p>
<p>8)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p>	<p>메이지 정부는 유신 직후인 1868년, 새로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준비한 국서에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과의 외교에서는 처음부터 좌절하게 되었다.</p> <p>[정한론] …… 1873년 일본의 개국 권고를 거절하였던 조선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하여, 사족들 사이에는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의 개국을 촉구하는 정한론이 들끓었다. 폐번으로 실업한 사족들은 징병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무사의 자존심이 상치받았다고 하여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는 조선과의 전쟁으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보이려고 하는 자도 있었다. …… 사이고 자신은 전쟁을 각오한 협상에 의해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생각하였다.²³⁾</p>

19) 2005, 『社會科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157쪽.

기술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눈에 띄는 것은 8개 교과서 중 東京書籍의 교과서와 教育出版의 2개 교과서가 경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라 생각된다.

우선, 1)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점유율이 51.3%에 달하므로 가장 영향력이 큰 교과서라고 할 수 있으나 기술상 가장 문제가 많다. 우선 ‘중국에 조공하고 있던’이라는 표현은 딱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 의심된다.²⁴⁾ 다음으로 ‘일본과의 국교도 거부’하고 있었다는 기술은 명백한 오류이다. 조선은 일본과 평화관계를 위해, 2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국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의 사료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부사가 귀국한 직후(1872. 11) 태정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 정부는 우리를 거절하고 배척할 결심을 하고 있는지 여부—추호도 거절이라는 표현이 없고, 결코 거절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다.
둘째, 조선인은 일본인의 왕래 교통을 싫어하는가 여부—조선인 중 아직 한 사람도 양국의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듣지 못하였다.
셋째, 조선인이 일본인을 경멸하는가 여부—예로부터 조선인은 우리 일본인을 두려워하였다. 일본이라면 두려워하는 바가 지금도 있다.²⁵⁾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교가 아니라,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 질서, 즉 ‘정한론’에 기초하고 있는 일본에 종속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치열한 탐색전을 전개한 것뿐이

20) 2005, 『私たちの中學社會』, 日本書籍新社, 147쪽.

21) 2005,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152쪽.

22) 2005, 『中學生の社會科 歴史』, 日本文教出版, 120쪽.

23)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51~152쪽.

24) 이는 전근대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인식 틀이다. 여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기술에서 검토한다.

25) 『조선외교사무서』 권18.

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국교를 거부하였다고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오류이다.

다음으로는 정한론이 무력으로 조선을 ‘개국’시키자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일본이 폐번치현을 단행한 후, 조선은 일본의 변혁을 인정하여 외무성 관리인 후카미[深見]를 관사로 인정하였다. 관사 후카미는 표류민 송환 등 기존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당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무역은 오히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왜관을 근거로 활발히 무역이 이루어지고, 외교교섭이 진행되고, 왜관이 ‘대일본국공관’으로 바뀌어 일본과의 외교 교섭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무력으로 조선을 ‘개국’시키자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오해를 불러 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을 강구함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2) 大阪書籍은, ‘쇄국을 하고 있었던 조선에 대해 무력으로 호소하면서까지 일본과 국교를 맺게 하려고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쇄국을 하지 않았으며 교섭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教育出版의 교과서는 정한론을 ‘무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계를 인정하게 하자는 주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함축적이고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6) 清水書院 교과서의 기술은 우선 ‘국교를 계속하고 있던’이라고 표현하여, 조선과 일본 양국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거절 이유로 ‘양이정책을 취하고 있던 점도 있어서’이라는 표현이 걸린다. 다음으로는 조선이 ‘일본의 새로운 정부와의 교섭을 거절하였다’는 표현이다. 廢藩置縣이 단행된 다음 조선 정부는 외무성 관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무성이 보내오는 표류민을 받아들이고, 외무성이 임명한 관사를 인정하고 교섭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일본의 새로운 정부와의 교섭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오류이다.

한편 정한론을 ‘조선에 출병하여 나라의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으로 정의한 것은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술이라 생각한다.

7) 日本文教出版의 기술은 ‘국교를 추구하였으나 조선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한론이 일어났다’는 식민지 사관의 서술을 답습한 것으로 정한론의 발생 책임을 조선 측에 묻는 책임 전가라 평할 수 있다.

8)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의 기술은 조선이 ‘부적절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한론이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한론은 서계를 보내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처음의 서계(편지)는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조선이 준 도서(圖書)를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조선에 도항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조선이 일본에 복속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를 단순히 부적절한 문자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조선의 외교 능력이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알맞다.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2) 한국 교과서의 기술 검토

『한국 근·현대사(두산)』와 『한국근·현대사(법문사)』의 기술에서는 ‘국교를 요청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 이미 국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교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의 연구 성과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정한의 실마리(구실)를 잡기 위해 서계를 보내왔다’는 사실보다 ‘서계가 거부되어 정한론이 일어났다’는 오해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기술이라 판단된다.

『한국 근·현대사(천재교육)』의 서술에서는 우선 서계 접수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실로 외무성 관리를 직접 왜관에 파견한 것이라는 점은 근거가 없다. 외무성 관리를 왜관에 파견하게 되는 것은 廢藩置縣으로 대마번이 없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교 일원화 추진이며, 조선의 거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²⁶⁾ 또한 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는 기술은 심각한 오류이다. 고종 친정 후 양국관계는 점차 좋아지고 있었다. 다만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진전되지

26)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철, 2003. 9, 앞의 책, 제2부 2장과 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출판사	내 용
1) 『중학교 국사』	내용 없음
2) 두산 『한국 근·현대사』	그리하여 일본은 관례를 무시한 고압적인 외교 문서로 조선에 국교 수립을 요구해 왔고, 흥선대원군 정권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때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으나, 내부의 대립과 준비의 미비 등 일본 국내 사정으로서 이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²⁷⁾
3)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메이지 유신을 통해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를 강화해 가던 일본 정부는 그 과정에서 불만을 갖게 된 무사 계층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이 정한론(征韓論)은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 ²⁸⁾
4) 법문사 『한국 근·현대사』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조선 정부에 국교를 요청하기 위해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일본이 보낸 외교 문서가 종래의 격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제기되었으나 권력층 내부 대립, 전쟁 준비 미비 등의 이유로 정한론은 수그러들었다. ²⁹⁾
5) 천재교육 『한국 근·현대사』	조선 정부는 외교 문서(서계)가 전통적인 격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를 구실로 일본은 외무성 관리를 직접 왜관에 파견하여 조선 측과 교섭하도록 하는 한편 청에 접근하여 청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타진하면서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일본에서는 무력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한론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³⁰⁾
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한국 근·현대사』	흥선대원군은 외교문서에 황제의 국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고, 조선 정부에서 보내준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본사신의 입국을 거부하고 문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선과의 교섭도 쓰시마 도주 대신에 일본 외무성에서 직접 관장하게 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일부세력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펼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받아들여 침략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 조선 침략에 대한 의도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³¹⁾

27) 김광남 외 4인, 2006,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주)두산, 41쪽.

않았을 뿐이었다. 논리적으로는 조선의 주장이 타당하였기 때문에 논리적이 아닌 힘으로 한꺼번에 뒤집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일본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한국 근·현대사(중앙)』의 기술에도 오류가 있다. 조선이 서계 수리를 거절하고 고쳐오게 한 이유는 기존의 외교관계와 형식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이지 단순히 자구 때문은 아니었다. 조선의 외교 역량을 너무 무시하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줄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일본사신의 입국을 거부하고 문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의 오류이다. 사신(대수대차사로 相良)은 와 있었다. 문서는 수 십 번도 더 읽고 논쟁을 벌였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단순한 문구와 도장 때문에 이렇게 오만하게 거부하였다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외무성이 조선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대해 조선이 반대하였다는 서술도 오류이다. 물론 조선은 일시적으로 대마주의 외교권을 유지하고자 하기는 하였으나 일본에서 廢藩置縣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한·일 간의 외교媒介역을 담당하였던 대마주가 없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은 이를 인정하여 외무성 관리들과 교섭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외무성과의 교섭을 거절하고 대마주의 외교권을 주장한 사실을 들어 나중에까지 외무성과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류이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28) 한철호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주), 37쪽.

29) 김홍수 외 3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법문사, 41쪽.

30) 김홍수 외 5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천재교육(주), 67쪽.

31) 주진오 외 4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주) 중앙교육진흥연구소, 46~47쪽.

3) 분석 결과의 요지와 연구의 제안

이하 교과서의 문제가 되는 점들을 검토하여 정확하고 바람직한 서술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선은 쇄국정책을 유지하였으며’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근저에는 일본이 행한 개국 요구는 시대적 흐름이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청)과 일본에 대해서는 쇄국을 하지 않았다. 왜관에서의 외교·무역·표류민 송환 업무는 메이지 정부의 성립까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³²⁾ 또한 메이지 정부가 성립한 후에도 양국 사이에는 꾸준한 대화와 갈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류이다.

둘째, ‘서계에 부적절한 문자가 있다는 이유로’라는 기술이다. 조선 정부의 서계 수리 거부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일면적이다. 중요한 것은 자구 문제가 아니라 서계의 내용과 서계 수용이 초래할 외교관계의 변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조선이 일본의 국교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정한론이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정한론이 고양된 것을 조선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자세이다. 그러나 정한론은 조선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1868년 일본 측은 서계를 보내면서 서계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조선은 이를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다만 고쳐올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정한론’은 조선이 일본의 국교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한편 이 시기 한·일관계사에서 좀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미시적으로 왜관에서의 교섭 경과를 추적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조선을 속방으로 취급하거나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던 일본과,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였던 조선 사이의 외교 갈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근대적인 외교

32)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철, 2005. 6, 「통신사 단절과 서계문제」,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6,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참고.

에는 어두웠지만 전통적인 외교에 밝고 논리적이었던 문화 국가로서의 조선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무성 관리에 의한 '왜관접수'를 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왜관은 조선의 관문을 담당하였던 대마주에게 특별히 준 것이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기에 당시 상당한 논쟁거리였다.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외무성 관리들에게 왜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간단히 몰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교 단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모두 철수를 하게 되면 왜관이 폐쇄될 것이고, 왜관은 원래의 초량읍으로 돌아가게 되면 왜관에 거주하는 임역들이 모두 실업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었다. 이런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왜관의 임역들은 외무성 관리들과 교섭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한다.

Ⅲ. 조·일수호조규에서 강점에 이르기까지의 기술 분석

1_ 강화도 사건과 조·일수호조규 관련(1875~1876)

明治 일본에서 '정한론'이 일어났을 때, 정한을 당장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임진왜란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중국(청)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일본은 국제법을 검토하여 청이 자동 개입할 수 없도록 논리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873년 6월, 청·일수호조규 비준 교환을 위해 중국에 건너간 전권대사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와 야나기 하라마에미쓰[柳原前光]는 "속국이라고는 하여도, 內政敎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을 중국 측으로부터 받아내고, "그 나라(조선)의 和戰의 권리도 귀국(중국)이 절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³³⁾ 이후 근대적인 개국을 명분으로 조선의 문명화를 명분으

로 강화도 사건을 일으킨다. 이때에도 전쟁을 수행하고 청조의 개입을 막기 위해 특명전권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총리아문으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변속이라고는 해도 그 일체의 정교·금령은 그 나라에 있으며, 전적으로 자주이다. 중국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지금 일본국이 조선과 수호를 맺고자 함도, 마땅히 조선이 스스로 할 것이다”라는 언질을 받아내었다.³⁴⁾

그러나 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철저한 불개입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고, 또한 조선도 유사시 청의 원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청과 조선의 관계를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한 것이었다.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정한’이라는 일본의 대외 목표가 실마리를 잡았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침략의 제1보였고, 이후 일본은 힘을 바탕으로 전쟁의 위협을 통해 이권을 빼앗아 갔다. 따라서 이 조규 제1조의 자주국 규정이 중국의 속국에서 독립국으로 해방시켰다는 영똥한 의미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문제로 제기하고 싶다. 식민지 시기 역사인식 이래 일반적으로 조·일수호조규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고 이로 말미암아 조선이 개항하였다고 평가한다. 과연 이러한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 필자는 의문을 품는다. 왜냐하면 사료상 조선은 조·일수호조규를 기존의 전통적인 조·일관계의 회복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일수호조규 이후에도 조선은 쇄국을 단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이 아니라 조선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첫 번째 조약은 1882년의 조·미수호조약이라고 사료는 말한다.³⁵⁾

이상의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기술을 검토해 보자.

33) 『日本外交文書』, 明治 6년 6월 21일조, 177~178쪽.

34) 『中日韓』 제2권, 총리아문의 상주, 관서원년 12월 21일, 270쪽; 『日本外交文書』 제 9권, 明治 9년 1월 20일, 164쪽.

35) 조·미수호조규 제12관에는 이 조약이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되어 있다.

1)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

출판사	내 용
1) 東京書籍 『新しい社會歴史』	<p>그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해 1875년의 강화도사건(주)을 계기로 다음해 <u>조선</u>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일·조수호조규)을 체결, <u>조선</u>을 개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불평등조약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u>일본</u>이 <u>조선·중국</u>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u>중국</u>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여, 일본과 중국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심화해 갔습니다.³⁶⁾</p> <p>*주: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여 연안을 무단으로 측량하고 압력을 가한 일 때문에 일어난 무력 충돌</p>
2) 大阪書籍 『中學社會歷史的分野』	<p>1875년 일본은 조선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연안을 측량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였으므로 강화도 포대와의 사이에 포격전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것을 이유로 다음해 치외법권 등을 포함하는 일·조수호조규를 조선이 인정하도록 하고, 부산항 등의 3항을 개항시켜 무역을 시작하였다.³⁷⁾</p>
3) 教育出版 『中學社會·歴史』	<p>1875년의 강화도사건(주)을 계기로 다음해 일본은 군함을 인솔한 사절을 조선에 보내어 압력을 가하고 일조수호조규를 체결, 개국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에 유리한 조약이었습니다.³⁸⁾</p> <p>* 주: 일본 군함이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접근해 측량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 포대의 공격을 받고, 일본이 반격하여 이를 점령한 사건을 말합니다.</p>
4) 帝國書院 『社會科中學生の歴史』	<p>이듬해 조선의 강화도 부근에서 일본의 군함이 무단으로 측량을 하였기 때문에 포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 사건을 구실로 정부는 조선에 불평등조약인 일·조수호조규를 맺도록 하여 개항하게 하였다.³⁹⁾</p>
5)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	<p>그후 일본은 조선에서 강화도사건을 일으키고(주), 이를 계기로 조선에 압력을 가하고 일본이 구미제국에 강요당한 것과 동일한 불평등조약을 조선에 체결하게 하였다(日朝</p>

(계속)

36) 2005,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49쪽.

37) 2005, 『中學社會 歷史的分野』, 大阪書籍, 144쪽.

38) 2005, 『中學社會·歴史』, 教育出版, 121쪽.

39) 2005, 『社會科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157쪽.

출판사	내 용
	修好條規) ⁴⁰⁾ *주 : 조선의 강화도 부근에서 측량하는 등 일본의 군함이 조선 측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조선군으로부터 포격을 받고 일본 측이 이에 응전한 사건
6) 清水書院 『新中學校歷史-日本の歴史と世界』	한편 정부는 1876년, 양이정책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던 조선에 강경한 태도로 압박하여 일·조수호조규를 맺었다. 이것은 막부 말기에 구미가 일본에 맺도록 한 조약과 같고, 조선 측에 불평등한 조약이었지만, 일본의 국내에서는 <u>정한론</u> 이 명목을 잃게 되었다. ⁴¹⁾
7)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歷史』	1875년 일본군함이 한성 부근 연안에서 연습과 측량을 하여 포격을 받자(강화도사건) 정부는 이를 구실로 강경한 태도로 교섭, 다음해 일·조수호조규를 체결하고 국교를 <u>재개</u> 하였다. 이 조약은 조선에는 불평등한 것이었다. ⁴²⁾
8)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	*주 : 이 이후 일본은 1875년 조선 강화도 앞바다에 군함을 파견하여 무단으로 주변 연안을 측량하는 등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군함이 포격을 받아 교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강화도사건). 이를 이유로 일본은 다음해인 76년 일·조수호조규를 체결하고 <u>조선을 개국</u> 시켰다. 이것은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⁴³⁾

※ 밑줄은 문제가 있는 기술 내용

우선 강화도 사건에 대해서 모든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성을 인정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기 일본의 국정교과서에

明治8년(1875) 우리 군함이 청나라에 가고자 하여 도중에 조선 근해를 지나 땀나무와 물을 조선 강화도에서 얻고자 하였는데, 그 수비병이 예기치 않은 공격을 해 왔으므로 우리 병사들이 이에 대항하여 포대를 함락시켰다.⁴⁴⁾

40) 2005, 『私たちの中學社會』, 日本書籍新社, 147쪽.

41) 2005, 『新中學校歷史-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153쪽.

42) 2005, 『中學生の社會科歷史』, 日本文教出版, 120쪽.

43)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53쪽.

44) 1911, 제2기 국정교과서, 『尋常小學國史』.

라고 서술된 이래 최근까지 교과서에 영향을 주었음을 생각해 보면 ‘무단으로 측량하였다’거나 ‘공격을 유도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 측의 요구와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기술에서는 내용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8개 교과서 중 문제가 되는 교과서는 東京書籍과 清水書院 그리고 扶桑社 3개 교과서의 기술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류가 많은 것은 東京書籍의 교과서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하였다’는 부분과 조·일수호조규를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이라고 한 부분, ‘조선을 개국시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 조선·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한다’고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자.

우선 ‘그후 일본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는 교섭을 추진하였다’는 부분과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개국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하나부사[花房義質]의 보고와 같이 조선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쇄국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미 일본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만 明治정부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국을 요구하는’이 아니라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조약 교섭을 추진하였다’고 학생들이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개국하였다는 기술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조선은 조·일수호조규를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일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중전의 한·일관계의 부활 정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⁴⁵⁾

다음으로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이라고 한 부분과 ‘일본이 조선, 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였다’

45) 『中日韓』 제2권, 조선국왕의 咨覆·예부가 총리아문에 보낸 咨文·광서 2년 3월 27일 수리된 문서에 첨부된 내용, 316쪽~318쪽.

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교과서 표현은 식민지 시기 역사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광복 이후의 연구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최근에도 한·일 간의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다. 이 논의⁴⁶⁾를 검토해 보면 전근대 외교관계나 중주국-속국을 둘러싼 평가 문제가 사실을 떠나 이론적 틀 안에서 전개된 감이 있다. 위의 기술을 보면, 조·일수호조규 제1관은 일본이 조선이 전근대 외교관계를 탈피하고 완전한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이끈, 마치 외교적 은혜를 베푼 내용인 듯 일본 측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틀을 벗어나 사료를 통해 사실관계만을 추구하면, 이는 유사시 즉 조선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임진왜란 때와 비슷하게 청의 자동 개입 우려를 막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정한론이 조·일수호조규로 실마리를 잡았다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뿐이다. '조·일수호조규, 청·일수호조규가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였다'는 부분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일본 측 연구자들은 침략의도를 은폐할 의도는 없고 순수한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틀은 '전근대(악)-근대(선)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근대라는 명분을 일본이 갖고 일본이 전개한 역사를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론적 틀을 벗어나서 사실만을 사료를 통해 추구해 보면, 청과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점차 노골화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오래된 동맹국인 청에 의지하여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청 역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대립한 것이었다. 물론 임오군란 이후에는 조선의 의도를 이용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므로 조선에서 반청감정이 일어나게도 한다. '조·일수호조규나 청·일수호조규가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는 부분은 없다. 청·일수호조규도 처음 공수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

46) 이 논쟁은 한일역사공동위 제1기 제3분과(근·현대사)에서 전개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 제4권, 제4장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그 근대화」 참조.

기 때문에 서양 열강의 의심을 사게 되어 비준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립한 것은 조규와 질서가 아니라 청과 일본이었다. 일본은 정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인 조선-청의 동맹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清水書院의 교과서에서 '조·일수호조규로 정한론이 명목을 잃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조·일수호조규로 정한론이 실마리를 잡고 계속하여 조선을 압박하면서 침략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

扶桑社の 기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을 개국시켰다'라는 부분이다.

반면 大阪書籍과 教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書籍新社 그리고 日本文教出版의 교과서는 '강화도 사건을 유도하여 이를 구실로 일·조수호조규를 맺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략히 서술하여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 기술이 되고 있다.

2)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 분석

강화도조약은 우리 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부산·원산·제물포의 세 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장의 일정 지역에 일본인이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조·일수호조규에서는 조선이 자주 국가임을 밝혔지만, 조선에 불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하는 것을 허용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도 일본의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불평등한 내용의 대표적인 예이다.⁴⁷⁾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평가가 학생들에게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에 의한 연구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연구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적

47)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197~198쪽.

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일수호조규가 어떤 점에서 근대적이며 비근대적인 요소는 무엇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비관세 조항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비근대적인 요소이다.

이 비관세 조항의 폐해를 축소시키기 위해 조선 정부가 두모포에 세관을 설치하여 조선 상인에게 세금을 받음으로 조약의 규정을 비켜가면서 주권을 유지하려고 하였을 때 일본은 군함을 파견하여 상륙시키고 압력을 가하여 좌절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국’, ‘근대적’이라는 개념과 조·일수호조규와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국 미국과의 조약을 통한 전방위 압박으로 일본이 무관세를 양보하게 된다.

3) 소결

이상 강화도사건과 조·일수호조규에 관한 교과서 기술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본 중학교 교과서 8종 중 3종과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서 좀더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특히 東京書籍 교과서에서 조·일수호조규를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조약’이라고 평가하고, ‘일본이 조선·중국과 맺은 조약은 근대 국제법에 기초하여 구미형 외교관계를 아시아에 적용한 것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와 대립하였다’고 평가한 부분은, 조·일수호조규를 ‘근대적’으로 규정하고 침략성을 감추는 서술임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타나, 이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평하여, 여러 불평등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소개할 수 있었다. 필자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식민지기 이래 일본이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역사 인식이며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적’이라는 기술이 조·일수호조규를 미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당시 일본은 조선과의 외교를 독점하려는 생각이 강했다. 어느 나라로부터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의 사실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본심은 조

선을 개항시켜 세계 속의 한 독립국으로 지원하려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조선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권을 얻어낼 것인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이참에 당시의 사료를 존중하여 우리나라 개국의 시점을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는 1882년으로 상정하고, 개국의 전단계로 조·일수호조규를 자리매김하는 연구를 제안한다.⁴⁸⁾ 이러한 자리매김은 한·일관계사에서 또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2_ 조·일수호조규 이후 청·일전쟁 이전의 기술 분석

출판사	내 용
1) 東京書籍 『新しい社會歴史』	<p>[조선반도의 정세] 이러한 가운데 조선에서는 일·조수호조규를 맺은 일본과 조선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청이 세력다툼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국내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본떠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친일파와 <u>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미와 대항하고자 하는 친중파가 격렬하게 대립하였습니다.</u> 1884년에 일어난 정변(주) 이후,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일본은 <u>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조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도 위협하다며, 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비증강을 도모해 갔습니다.</u></p> <p>*주 : 친일파가 일본과 손을 잡고 무력으로 정치의 실권을 잡으려 하였지만, 청에 패배하여 일본의 영향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⁴⁹⁾</p>

(계속)

48)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돌출되고 모난 견해의 피력으로 보일 수 있다. 보통 교과서 분석이란 정설에서 이탈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분석은 학문적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한·일관계사의 연구 경험에서, 교과서 기술을 통해 한·일관계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과감히 언급하였음을 양해 바란다.

49) 2005,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54~155쪽.

출판사	내 용
2) 大阪書籍 『中學社會歷史的分野』	<p>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조선은 그 후 개화정책(주)으로 전환해 갔다. 그러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도 강했고, 또 일본과 청이 정치에 간섭한 일도 있어서 조선 국내는 불안정했다. 게다가 조선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민중의 반발이 심했다.</p> <p>*주 :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근대화를 추진하고 외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력 있는 근대국가를 목표로 하였다.⁵⁰⁾</p>
3) 教育出版 『中學社會・歴史』	<p>조선에 세력을 확장하려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는 청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의 권유로 구미 나라들과도 외교를 맺었습니다. 조선에서도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나, 일본과 청의 간섭으로 충분한 성과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에서는 정치가 부패되어 가고, 백성의 생활은 힘들어져 갔습니다.⁵¹⁾</p>
4) 帝國書院 『社會科中學生の歴史』	<p>일본도 구미제국의 방식을 모방하여, 조선 반도에 세력을 넓히고자, 강화도 사건 이후 조선에 출병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을 자신의 세력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청과 대립하게 되었다. 그즈음 조선에서는 세금이 무거운 뿐 아니라, 흉작과 조선 개항 후에 진출한 일본 상인의 쌀 매점으로 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⁵²⁾</p>
5)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	<p>일본은 조선에 대해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 끝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에 점차로 세력을 넓혀 나갔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는 반발이 강해졌다. 일본은 조선의 궁정 내부의 대립을 이용하여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청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해, 청과의 대립을 심화시켰다.⁵³⁾</p>
6) 清水書院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	<p><u>원래 조선은 琉球 왕국과 똑같이 중국을 섬기는 나라였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일본과 똑 같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서구풍의 개혁을 해, 세계와 넓게 교제하도록 요구해 갔다. 일·조수호조규를 맺은 뒤 일본과 조선은 무역을 시작했다. 또한 조선은 청과 일본에 사절을 보내어, 개화의 길을 모</u></p>

(계속)

50) 2005, 『中學社會歷史的分野』, 大阪書籍, 156쪽.

51) 2005, 『中學社會・歴史』, 教育出版, 127쪽.

52) 2005, 『社會科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170쪽.

53) 2005, 『私たちの中學社會』, 日本書籍新社, 158쪽.

출판사	내 용
	<p>색하기 시작하였다. 도쿄에 공사관을 연 청의 외교관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일본에 온 조선 사절에게 청과 유대를 깊이 하면서 일본과 우호에 힘쓰고, 구미와는 우선 미국부터 관계를 열도록 권유했다. 그 결과 조선국왕은 개화정책을 단행하여, 유학생을 청이나 일본에 보내기도 하고, 서양식 군대를 만든 후, 1882년에는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해에 조선에서는 구식 군대가 보수파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청은 군대를 보내어 이를 진압하고 개화정책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에 유학하여 진보적인 개혁을 지향하게 된 사람들은, 1884년 일본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역시 청의 군대에 진압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과 청의 관계는 험악해졌으나, 다음 해 양쪽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해 불편한 관계를 누그러뜨렸다. 청은 그후 유력한 정치가를 조선에 보내어 내정에 강하게 간섭하였다. 당시 일본은 청에 비해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였다.⁵⁴⁾</p>
<p>7)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 歴史』</p>	<p>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의 대국이 될 것을 목표로 조선을 개국하게 하고,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청과 대립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대화를 둘러싸고 왕실 안에서 청국파와 일본파가 대립하고 있어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농민은 무거운 과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⁵⁵⁾</p>
<p>8)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p>	<p>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조선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대 제도의 개혁을 원조하였다. 그러나 1882년(明治 15) 개혁에 뒤처져 냉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선 군인의 폭동이 발생했다(임오사변). 청은 이를 틈타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바로 폭동을 진압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1884년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한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이때에도 청의 군대는 이것을 탄압했다(갑신사변). 조선에서 청조와의 세력 다툼에 두번 패배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급속히 군비를 확장하여, 이윽고 거의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⁵⁶⁾</p>

※ 밑줄은 문제가 있는 기술 내용

54) 2005,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166쪽.

55) 2005, 『中學生の社會科歴史』, 日本文教出版, 139쪽.

56)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64쪽.

1)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

조·일수호조규 이후 청·일전쟁 이전의 기술에서도 東京書籍, 清水書院, 扶桑社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 야욕을 기술한 교과서는 3) 教育出版, 4) 帝國書院, 5) 日本書籍新社 그리고 7) 日本文教出版 교과서로 연구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大阪書籍의 기술은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비판할 거리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잘못된 기술에 대해 검토해 보자.

우선 東京書籍 교과서에서는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미와 대항하고자 하는 친중파’라는 기술이 타당하지 않다. 조선이 1882년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은 이유는 일본이 조선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청나라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슈펠트와 맺은 조·미수호조약은 수입은 일반품 10%, 사치품 30%, 수출은 모두 5%의 관세를 정하였으며, 이는 조선이 일본에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위협으로 거부하였던 사항이었다. 조선은 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미와 외교관계를 맺어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고자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이 대항하고자 하였던 것은 ‘구미’가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압력’이었으므로 명백한 오류라 지적할 수 있다.⁵⁷⁾ 또한 ‘청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일본은 구미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조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도 위험하다며 군비를 증강하였다’는 기술도,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의 기술로는 적합하지 않다. 조선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교육적 배려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6) 清水書院의 기술 중 ‘원래 조선은 琉球 왕국과 똑같이 중국을 섬기는 나라였다.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일본과 똑같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서구풍

57) 이 부분에 대해, 教育出版 교과서는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의 권유로 구미 나라들과도 외교를 맺었습니다”라고 연구 성과와 일치하는 기술을 하고 있으므로 대비된다.

의 개혁을 해 세계와 넓게 교제하도록 요구해 갔다. 일·조수호조규를 맺은 뒤 일본과 조선은 무역을 시작했다’는 부분은 일본의 침략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조·일수호조규 이후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琉球왕국과 조선을 일부러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능하다. 류큐는 사쓰마[薩摩]의 공격을 받아 그 영향하에 있었음을 일본의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와 조선이 똑같다고 서술하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또한 다른 교과서의 기술과 비교할 때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文教出版의 교과서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의 대국이 될 것을 목표로 조선을 개국하게 하고,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청과 대립하였다’고 명확히 언급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8) 扶桑社의 기술은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돕기 위해 근대 제도의 개혁을 원조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꺼렸다는 연구 성과와는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근대 개혁에 관여한 것은 군부를 일정부분 장악하고 군사정보를 획득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가 일본을 경계하여 임오군란이 발생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2)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개항 이후 일본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적다. 관련된 부분을 전부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김기수와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 …… 젊은 관리들을 일본에 파견하여…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에서 들어온 새로운 무기로 훈련 ……⁵⁸⁾
- 구식 군인들은 ……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으며, 별기군의 일본인 군사교관을 살해하였다. …… 일본의 강압으로 제물포조약을 맺고

58)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199쪽.

임오군란 중에 일본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였다.⁵⁹⁾

- 예조 참판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변 개입에 항의하고 김옥균 등 망명자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도리어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이 희생된 데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를 하였다. …… 이에 정부는 한성조약을 맺고 사죄와 더불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⁶⁰⁾
- 일본은 방곡령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며 조선 정부에 배상을 강요하였고,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농민 생활을 더 어렵게 하여 농민들 사이에는 일본을 배척하는 기운이 널리 퍼졌다.⁶¹⁾

위 내용으로는 일본의 세력 확장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지 조선 정부의 당황스러움과 무능이 강조되는 교육적 효과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은 일본의 세력 확장 의도와 조선 정부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소재목을 설정하여 힘의 역학관계를 포함한 기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 소결

지금까지 조·일수호조규 이후 청·일전쟁 이전까지의 교과서 기술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를 개략해 보면, 일본은 무력을 앞세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무리한 조약 강요를 거듭하였고, 이러한 조약의 폐해를 절감한 조선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거듭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청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일부 강해지고, 일본의 부당한 압력을 해소하고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 외중에 임오군란이 발생하였고, 군란 이후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자주성을 침해 받았고, 이를 참지 못한 젊은 정치

59)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200쪽.

60)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202쪽.

61)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206쪽.

가들에 의해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 갑신정변이 청군에 의해 진압된 후, 청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반청감정이 고양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청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1884년 「淸國征討策案」을 만들어 10년간 전쟁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시기의 교과서 기술을 분석한 결과, 東京書籍의 교과서와 清水書院, 그리고 扶桑社の 교과서가 침략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근대화’를 지원하였다거나, 침략이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는 상황논리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는 수정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반면에 教育出版, 帝國書院, 日本書籍新社, 日本文教出版교과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꾸준한 지배 의지를 사실대로 솔직히 표현하고 있다.

3_ 갑오농민운동, 청·일전쟁(1894)에서 러·일전쟁까지의 기술

1)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 분석

출판사	내 용
1) 東京書籍 『新しい社會歴史』	조선에서는 일·청 양국의 대립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1894년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동학)를 신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부패한 관리의 추방과 외국인의 배척을 목적으로 조선남부 일대에서 봉기하였습니다(갑오농민전쟁). 이것을 계기로 <u>청과 일본은 조선에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u> ⁶²⁾
2) 大阪書籍 『中學社會歷史的分野』	1894년(明治 27), 동학(주1)을 믿는 사람들이 농민과 결합하여 외국세력의 추방과 정치개혁을 지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조선정부가 청에 출병을 요구하자 전쟁준비를 하고 있던 일본도 <u>청과의 조약을 이유로 출병(주2)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u> 전쟁은 근대적 군대를 갖춘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다음 해 시모노세키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다. ⁶³⁾

(계속)

62) 2005,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56쪽.

63) 2005, 『中學社會歷史的分野』, 大阪書籍, 57쪽.

출판사	내 용
	<p>*주1 : 조선의 민간 신앙을 근거로 한 종교 단체로 서학(기독교)에 반대했습니다.</p> <p>*주2 : 일청 양국은 조선에 출병할 경우 사전에 서로 통지할 것을 정한 조약(텐진조약)을 1885년에 체결하였습니다.</p>
<p>3) 教育出版 『中學社會・歴史』</p>	<p>1894년 조선의 남부에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믿는 농민들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인과 구미인을 축출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갑오농민전쟁). 조선정부가 <u>청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은 이에 대하여 출병하여</u>, 1894년 일·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 일·청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은 커졌고, 일본인 중에는 중국이나 조선에 대해 우월감이나 차별의식을 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⁶⁴⁾</p>
<p>4) 帝國書院 『社會科中學生の歴史』</p>	<p>1894년(明治 27) 서양문화(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동학)를 믿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구미제국을 몰아내고 조선의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정부군을 격파하고 조선남부로 세력을 넓혔다(갑오농민전쟁). 조선 정부는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청에 원군을 요청했다. 일본은 <u>청에 대하여</u> 곧장 조선에 군대를 보내었다. 농민군과 조선정부는 휴전했지만, 일본은 조선왕궁을 점거하는 등의 내정간섭을 행하고, 청과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1894년 7월 풍도해에서의 충돌을 계기로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⁶⁵⁾</p>
<p>5)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p>	<p>〈조선을 둘러싼 대립〉 1894년 조선에서는 일본과 구미제국의 진출과 조선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동학(주)을 믿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갑오농민전쟁). 농민군은 외국세력의 추방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각지에서 정부군을 물리쳤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청국에 도움을 요청하자, 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바로 조선에 출병을 감행했다.</p> <p>*주 : 1860년대에 탄생한 종교의 일종으로, 기독교(서학)에 대항하고 인간 평등을 주장하였다. 조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사이에서 확대되었다.</p>

(계속)

64) 2005, 『中學社會・歴史』, 教育出版, 127쪽.

65) 2005, 『社會科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170~171쪽.

출판사	내 용
	<p>〈일·청전쟁〉</p> <p>일본과 청 두 나라가 출병하였을 때, 이미 농민군과 조선 정부는 휴전 중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강제로 떠밀고, 그에 대한 조선 정부의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구실로 조선의 왕궁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청의 해군을 공격한 후, 선전포고를 하여 일·청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8개월가량 걸려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p>
<p>6) 清水書院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p>	<p>조선에서는 1894년 동학을 믿는 농민이 큰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정부는 청에 원군을 요구했는데, 일본도 이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었다. 농민들은 정부와 화약을 맺었지만, 일본군은 물러가지 않고 조선정부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청국군과는 전쟁을 시작했다.⁶⁶⁾</p>
<p>7)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歴史』</p>	<p>1894년 조선에서는 개국이 초래한 생활 불안 때문에 외국 세력을 추방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이 봉기하였다. 조선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에 원군을 요청했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도권을 얻기 위해 출병하여 8월에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⁶⁷⁾</p> <p>일·청전쟁은 근대 일본에 있어서는 첫 대외전쟁이었다. 전쟁의 승리로 아시아의 대국이 된 일본에는 중국이나 조선에서 유학생이 왔지만, 국민 사이에는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알보는 생각도 퍼져 있었다.</p>
<p>8)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p>	<p>1894년(明治 27) 조선남부에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폭동이 일어났다. 농민군은 외국인과 부패한 관리를 추방하려고 하였고, 한때는 조선반도의 일부를 제압할 정도였다. 적은 군사력밖에 없었던 조선 왕조는 청에 진압을 위한 출병을 요구하였고, 일본도 갑신정변 후 청과의 합의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 일·청 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되었다.⁶⁸⁾</p>

※ 밑줄은 문제가 있는 기술 내용

일본 중학교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갑오농민전쟁을 청·일전쟁의 이유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출병 목적이나 청·일전쟁의 목적 나아가 책임

66) 2005,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166쪽.

67) 2005, 『中學生の社會科歴史』, 日本文教出版, 139쪽.

68)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64쪽.

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파견된 것과는 달리, 일본은 처음부터 전쟁 도발을 목적으로 출병하였음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교과서는 2)大阪書籍 교과서의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던 일본’이라는 기술과 5)日本書籍新社 교과서의 ‘전부터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은’, 그리고 7)日本文教出版 교과서의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도권을 얻기 위해’라는 내용으로, 전쟁 도발을 위한 출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군대 파견은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東京書籍의 교과서는 ‘농민전쟁의 발발을 기회로 양군이 출병하여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술하여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教育出版, 帝國書院의 교과서는 ‘이(청군 파견 요청)에 대하여 출병’하였다고 기술하고, 또 大阪書籍, 扶桑社의 교과서는 ‘일본이 (헨진)조약을 이유로 출병하였다’고 기술하여, 청과 같은 조건이었음을 주장하는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전쟁 도발의 책임을 호도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청·일전쟁 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을 언급한 교과서는 帝國書院과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이며, 한·일 양국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을 서술한 교과서는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라 말할 수 있겠다.

청·일전쟁은 조·일수호조규 이래 조선에 대한 지배가 청나라의 견제로 뜻대로 되지 않자 청나라를 배제하기 위해 일본이 청국을 공격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청·일전쟁이 끝난 후,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서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한 것은 조선과 청나라의 역사적 동맹 관계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청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약속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⑦의 日本文教出版 교과서의 ‘조선에서의 지도권을 얻기 위해’ 출병하였다는 기술만이 출병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기술 분석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을 국내문제로 다루어 항일의 성격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그 영향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다.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知彼知己라고 했다. 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는지, 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을 요구하였는지, 시모노세키 조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술되기를 희망한다.

3) 소결

갑오농민운동과 청·일전쟁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기술은 일본의 출병 목적이거나 청·일전쟁의 목적, 즉 조선 지배의 야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조·일수호조규 이래 조선에 대한 지배가 청나라의 견제로 뜻대로 되지 않자 청나라를 배제하기 위해 청국을 공격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일본 군대의 파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침략행위였다. 또한 시모노세키 조약은 조선과 청나라의 역사적 동맹관계를 부정하고 한·일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청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약속받은 것이었고, 정한론 이래 일본이 추구해 온 청나라 배제 방침이 성공한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의 세력권에 넣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한편 우리 교과서의 기술은 청·일전쟁과 그 영향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는지, 시모노세키 조약이 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꾸었으며 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술되어야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신장될 것이라 생각한다.

4_ 을미사변(1895)에서 국권침탈에 이르는 기술

1)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기술

일본의 교과서는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10년간의 한·일 관계사가 기술되지 않고 있다. 청·일전쟁에서 바로 러·일전쟁으로 연결되고 러·일전쟁에서 강점에 이르는 사항이 간략히 기술되었을 뿐이다. 이는 일본 사의 전개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을미사변에 대해서 기술한 교과서

출판사	내 용
1) 東京書籍 『新しい社會歴史』	<p>일·러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움직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황제가 퇴위를 당하게 되어, 한국의 내정은 한국통감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적 저항운동이 퍼져나가, 일본에 의해 해산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봉기하였습니다. 이는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일본의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무력을 배경으로 한 식민지 지배를 추진하였습니다(주).</p> <p>*주 : 토지제도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일본이 행한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많은 조선 농민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작인이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일본이나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⁶⁹⁾</p>
2) 大阪書籍 『中學社會歷史的分野』	<p>일·러전쟁 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통감부를 두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내정권도 장악하여 군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당한 병사들은 농민과 함께 일본에 저항(의병운동)했고, 초대 한국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민족운동가인 안중근에게 사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한다.⁷⁰⁾</p>

(계속)

69) 2005, 『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60쪽.

70) 2005, 『中學社會歷史的分野』, 大阪書籍, 160쪽.

출판사	내용
3) 教育出版 『中學社會・歴史』	<p>일·러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아,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무기를 들고 일본과 싸우는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윽고 한국 내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해산된 병사들은 의병(주)에 가담하여 싸웠습니다. 한국의 안중근이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저항을 억누르고,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한국병합), 한국을 조선이라고 고치고 조선총독부를 두어 지배하였습니다.⁷¹⁾</p> <p>*주 : 조선에서 반일을 내세워 무장 투쟁한 민중</p>
4) 帝國書院 『社會科中學生の歴史』	<p>1905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통감으로 파견하고, 내정·외교도 일본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전국으로 퍼져,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1910년 일본은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었다. 조선총독부를 두고 지배를 시작하여, 한국을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인 한성도 경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였다. 일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조선 민중의 저항은 그후로도 계속되었다.⁷²⁾</p>
5)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	<p>…… 조선에서는 일본 공사 등이 조선의 왕비(주)를 암살했으나 일본에 의한 정권을 창출하는 데는 실패했다.⁷³⁾</p> <p>*주 : 閔妃(1851~95) 조선국왕의 비, 자주정치의 실권을 쥐었다. 일·러 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압력을 가해 외교권을 빼앗고, 한국통감부라는 관청을 두어 한국의 국내 정치도 지배하였다. 게다가 군대도 해산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 조선의 민중은 무기를 들고 각지에서 봉기하여 의병운동을 일으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1909년에는 조선의 독립운동가인 안중근이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의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을 군대의 힘으로 진압하였다. 그리고 1910년 일본 군대의 경계 속에 한국 황제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일본에 넘기도록 하는 조약에 조인하게 하여, 한국을 일본 영토에 병합시켰다.⁷⁴⁾</p>

(계속)

71) 2005, 『中學社會・歴史』, 教育出版, 132쪽.

72) 2005, 『社會科中學生の歴史』, 帝國書院, 175쪽.

73) 2005, 『私たちの中學社會』, 日本書籍新社, 159쪽.

74) 2005, 『私たちの中學社會』, 日本書籍新社, 162~163쪽.

출판사	내 용
6) 清水書院 『新中學校歴史- 日本の歴史と世界』	한국에 대해서는 구미강국의 지지를 얻은 후 1905년에 보호국으로 삼았다. 외교권을 빼앗아 통감을 두고 내정도 감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은 격렬히 저항하고, 독립운동가 안중근이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그 다음 해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을 강행하였다. ⁷⁵⁾
7)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 歴史』	일·러전쟁 후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하고, 통감부를 두어 내정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를 해산시켰다. 한국사람들은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여 각지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그러한 가운데 안중근이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암살하였다. 일본은 반일항쟁을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진압하고, 1910년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병합하고, 조선이라 부르고 식민지로 지배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조국을 잃고, 강제로 동화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⁷⁶⁾
8)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	일·러전쟁 후 일본은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지배를 강화해 갔다. 구미열강은 영국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골 등 자국의 식민지나 세력권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영향하에 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국병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910년 일본은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내의 반대를 억누르고 병합을 단행했다(한국병합). 한국 국내에는 민족이 독립을 잃는 것에 대해 격심한 저항이 일어났고, 그후에도 독립 회복 운동이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⁷⁷⁾

는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뿐이다.

반면 러·일전쟁 이후 한국 강점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한국민의 저항과 독립 회복 운동을 서술하고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기술하고 있다.

75) 2005, 『新中學校歴史-日本の歴史と世界』, 清水書院, 168쪽.

76) 2005, 『中學生の社會科歴史』, 日本文教出版, 142쪽.

77)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71쪽.

2) 한국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기술 분석

을미사변 이후 국권피탈에 이르는 과정은 상세히 잘 기술되어 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침략과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으로 구분되어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조선은 일본의 더욱 심한 내정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 삼국간섭으로 러시아 세력의 우위가 드러나자, 일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이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⁷⁸⁾

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청·일전쟁의 결과 한·일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청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약속받음으로 그 옛날 임진왜란 때와 같이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욕심을 부린다면 대한제국 시대의 광무개혁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국정을 농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양 여러 나라에 이권을 넘김으로 개혁의 자금으로 삼고 또한 일본의 독점을 막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점과, 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조선이 일본의 군정치하에 이미 속하게 되어 역학상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전락하는 사실을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질 때, 대신들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음을 이해시키고, 그들에 대한 지나친 평가(매국노, 을사5적)가 앞으로의 화합을 막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러·일전쟁 이후 국권침탈의 과정은 한·일 양국의 교과서의 서술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78) 국사편찬위원회, 2007, 『중학교 국사』, 221쪽.

IV. 맺음말

이상, 근대 일본의 대외인식의 출발점인 '정한론'에서 '합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교과서의 기술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일 양국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한 기술을 한 교과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술을 한 교과서도 양쪽 모두 있었다.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화도사건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강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기고자 하는 의식이 남아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 일으킨 식민지침략전쟁으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과서 중에서 일본의 침략 의도를 명확히 기술하고 근린제국에 대한 배려를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일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가 진척된다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사 기술이 탄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담당할 시기의 각 사항에 대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기술의 공유 가능성 여부에 관한 필자의 평가를 표로 만들어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출판사	기술 내용	정한론	강화도사건과 조·일수호조규	1876~ 1894	1895~ 1904	1904~ 1910
1) 東京書籍, 『新しい社會歴史』		×	×	×	×	◎
2) 大阪書籍, 『中學社會歴史的分野』		△	◎	△	△	◎
3) 教育出版, 『中學社會·歴史』		◎	◎	◎	△	◎
4) 帝國書院, 『社會科中學生の歴史』		◎	◎	◎	◎	◎
5) 日本書籍新社, 『私たちの中學社會』		◎	◎	◎	◎	◎
6) 清水書院, 『新中學校歴史』		×	×	×	△	◎
7) 日本文教出版, 『中學生の社會科歴史』		×	◎	◎	◎	◎
8) 扶桑社, 『新しい歴史教科書』		×	×	×	△	◎

◎좋은, △약간의 문제점 있음, ×비판이 필요함

[ABSTRACT]

Points of dispute in Modern Times within Korean
and Japanese history textbooks

Hyun, Myung-Cheol

Because of the nature of textbooks, descriptions of history textbooks tend to stand on the basis of common notion. Analysis of them, therefore, means make clear the difference over the perception of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offer a critical view about common notion. This study is critical investigation about the descriptions of Korea and Japan history textbooks and about common notions which those textbooks are based. As results, I could suggest follows ;

1. A description, which 「Appeal of aggression Chosun to arms(征韓論)」 had been arisen because of Chosun's refusal about Japanese ask for diplomatic relations, is not true. Because there wer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osun-Japan, and a 「Appeal of aggression Chosun to arms」is existed before Japan send the letter. The truth is that the letter was written for incite refusal and make a excuse for aggression.

2. A description, which assert 「A treaty of amity between Chosun and Japan in 1876」 made Chosun open port to foreign trade, is not true. Chosun had opened a port in “Cho-Ryang”, which is called ‘Waekwan(倭館)’, for Japan since 1678. At the port there were diplomatic services, such as castaways’ repatriation. Also, Chosun did

not open port to other countries from that treaty. Chosun had signed that treaty just for maintain preexistence friendship.

3. So called 'a provision of sovereign in Chosun-Japan treaty of amity' did not aim for Chosun's joining the family of nations as a sovereign. This provision aim for exclusion of China who is time tested confederacy of Chosun when a war occur between Chosun and Japan. At that time, Japan did not want Chosun joining the family of nations but exclusive possession of diplomacy with Chosun.

4. When peasants upraised in 1894, Japan sent a military expedition to fight against China. The goal of the action was to gain a controlling interest about Chosun. So it was an act of aggression which is not based international law. But we can not find this fact as aggression in history text books of Japan. Only two text books describe about military occupation of a royal palace.

keywords

history textbook, descriptions, analysis, open ports, treaty of amity, aggression

한·일 양국의 근·현대사 서술과 재일조선인사 인식

김 인 덕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서론

한국의 본격적인 역사교육은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3년 3월에 일선에 배포되었다. 그것은 김인정으로 금성출판사,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두산출판사 등 6개 출판사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하고 비판한 글은 많다.¹⁾ 서중석은 일본 교과서를 몇몇이 비판하기 위해 한국 교과서의 근·현대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²⁾ 김동명은 ‘한국병합’을 일단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시혜론

- 1) 구체적인 내용은 윤선자·장세운의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윤선자, 2006,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3·1운동과 국내 독립운동” 서술과 쟁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 경인문화사; 장세운, 2006, 『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국제정세와 해외 독립운동 서술 검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 경인문화사.
- 2) 서중석, 2002, 『한국 교과서의 문제와 전망-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211쪽.

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초가 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병합’에 대한 의병운동의 저항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다면서, 황민화정책과 ‘강제동원’ 등으로 인한 한국인의 고통에 대해 적극 서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그 정당성을 적극 평가하는 데 인색하며, 한국인의 저항운동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³⁾

한국 역사교과서는 아직 일국사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의식과 민족주의 중심의 단순한 서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 한국의 교과서는 단지 ‘침략자로서의 일본’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채택률이 높은 5종 교과서는 대체로 현대 한국에 대해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일본사를 체계화하는 점, 냉전의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점, 민주주의·평화·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한다.⁴⁾

일본 국내에서는 연구자들이 일본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성과물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미우라 슈몬[三浦朱門]이 내놓은 분석 결과는 포괄적인 연구방법론을 도입한 것으로,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이다.⁵⁾ 이와 함께 후소샤[扶桑社]판 교과서에 대해서는 열린역사교육회의 『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青木書店, 2007)이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은 유아독존적인 일본관, 과거 일본 전쟁의 정당화, 민중 운동의 경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적 논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⁶⁾

3) 김동명, 2006, 「일본사 개설서 및 사전류의 한일관계 서술의 문제점」, 『한일관계사 연구』 25, 참조.

4) 김성보, 2002,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비교」,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46쪽.

5) 三浦朱門, 2005, 『全「歴史教科書」を徹底読解する』, 小舎館.

6) ひらかれた歴史教育の會, 2007, 『新しい歴史教科書の正しい読み方』, 青木書店, 머리말.

국내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다. 그 가운데 중학 역사교과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한 연구로는 신주백의 글이 주목된다. 신주백은 2005년도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부분을 평가하며, “일제강점기와 1945년 이후의 한·일관계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지배의 수탈성과 강제성을 은폐하며 합리화하는 한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부정하고 전쟁을 미화하려는 일본 보수우파의 영향력이 2001년도 교과서 집필에 비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밝혔다.⁷⁾

특히 일본 교과서 가운데 후소사판의 집필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 논문이 나와 있다. 이 가운데 박찬승·허동현의 성과가 주목된다.⁸⁾ 전자는 주로 전쟁과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서술하고, 후자는 자민족 우월주의적 관점과 침략사의 부정 및 전체주의의 찬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후소사판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한·일 양국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 중 가장 대중적인 서적 6권과 재일조선인이 발간한 교과서, 그리고 비교 서술에 필요한 다른 교과서를 살펴보겠다. 주된 비교 고찰 대상은 시기의 경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내용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한국사와 일본사의 서술 내용 중 관계사적인 부분이다.

특히 미래지향적 역사 이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근현대사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소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침략·전쟁과 강제연행, 둘째는 정치와 운동, 셋째는 생활과 문화이다. 그리고 넷째는 재일조선인사이다. 재일조선인사는 한·일 두 나라의 현재 문제이자 과거의 문제지만, 미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서술체제를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7) 신주백,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33.
8) 박찬승,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한국사연구』 129; 허동현, 2005,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후소사版) 문제의 배경과 특징」, 『한국사연구』 129.

II. 분석 대상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

미래를 지향하는 시점은 현재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를 규정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성찰없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거 양국 근·현대의 관계사적 테마들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_ 한국 교과서

한국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중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두산출판사(김광남·유영렬·신재홍·김동운·최병도, 2007)와 금성출판사(김한중·홍순권·김태웅·이인석·남궁원·남정란, 2007)⁹⁾의 것이다. 이들 역사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교과서의 경우는 대표성, 고등학교 교과서는 채택률에 따른 것이다.

근·현대사 검인정 6개 교과서의 대단원, 중단원의 내용 체계는 대체로 일치한다. 이 가운데 1910~1945년의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단원 :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정치영역 : 1.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수난

(금성: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의 수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

경제·사회영역 : 4. 사회·경제적 민족운동

문화영역 : 5. 민족문화 수호운동

실제로 6종 교과서의 목차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지침에 따른 결과이다. 이 6종의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체로

9) 약 50%의 채택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며, 근대사의 경우 침략과 저항 위주의 단조로운 서술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수 검인정 교과서에서 배제되고 있는 동북항일연군과 그 안에서의 한인부대 활약상 등 좌파계열의 항일무장투쟁, 조국광복회 등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표방하며 조직된 대중조직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신간회와 민족유일당운동, 1940년대 통합 임시정부, 조국광복회 등에 주목해야 한다.¹⁰⁾ 아울러 1930년대 혁명적 노동·농민조합운동, 생활사와 여성사 비중의 증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서술 등이 요구된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운동사 중심의 서술, 민족주의적 관점, 산만한 편집 등이 문제이다. 편집상으로는 본문 이외에 다른 내용이 많아 독자들의 시선을 흐리게 한다. 아울러 국제관계와 일본에 대한 서술이 지나칠 정도로 간략하다.

두산출판사 교과서는 지배정책 중심의 서술 체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에 대한 서술이 전무하다. 그리고 기존 국정교과서 시대의 근·현대사에 대한 주요한 역사적 개념이 무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운동사적 서술 체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중국지역의 지명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중학 교과서의 경우도 「IX.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장을 편성하여 일제시대의 역사를 투쟁사적인 관점에서 주로 기술하고 있다.¹¹⁾ 이 중학 교과서의 문제점은 이야기가 단절적이고, 세계사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에 대한 저항에 서술의 중심이 놓여 있다. 또한 비역사적 기록화나 너무나 잘 알려진 사진을 실어 역사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1904년부터 1910년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이 잘못되어 있다. 아울러 '수탈'과 '약탈'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약화시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10) 장세운, 2006, 앞의 논문, 218쪽.

11) 절의 세부적인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족의 수난, 2. 3·1운동, 3. 독립전쟁의 전개, 4. 국내의 민족운동.

12) 서중석, 2002, 앞의 논문, 215쪽.

2. 일본 교과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본 교과서는 후소샤[扶桑社]판 중학 교과서 시판본 『新しい歴史科書』(2005)와 도쿄[東京]서적의 중학 교과서 『新編 新しい社會歴史』(2005),¹³⁾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고등학교용 『改訂版 詳説 日本史』(B)(2007)이다. 일본의 많은 역사교과서 중에 이들 3종을 선택한 것은 후소샤판의 경우는 역사 왜곡의 구체성을 확인함에 있고, 나머지 2권은 채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일본 역사교과서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야마카와 고등학교용 2007년판은 3·1운동, 강제연행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서술을 하지 않고 ‘군위안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1998년도판보다 2007년도판은 한국관계 서술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도쿄서적 중학 교과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서술이 아주 소략하고, 한국 관련 본문 내용이 극히 소량에 지나지 않다. 한일병합, 3·1운동, 야나기 무네요시, 황민화 관련 내용 정도이다.

후소샤의 일본사교과서는 1910년 이후 부분은 「제5장 세계대전의 시대와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으로, 1910년 이후 20세기의 역사를 전전·전중·전후로 나누어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¹⁴⁾ 다른 책과 달리 후소샤판은 일본이 일으킨 일련의 전쟁, 즉 ‘만주사변’ ‘중일전쟁’ ‘대동아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모두 총력전이라고 강조한다. 2005년 후소샤 시판본은 검정신청본에 비해 좀더 일본 중심적이고, 침략적인 서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관계 기술은 3·1운동, 강제연행, 관동대지진 정도이다.

13) 이 책도 일본에서 2002년의 경우 중학생의 51.2%가 배우고 있다.

14) 박찬승, 2005, 앞의 논문, 277쪽.

3_ 재일조선인 교과서

1920~1940년대를 다룬 재일조선인 교과서로 총련계 학생의 교재인 『조선력사』(중급3)(2006, 학우서방)를 살펴보겠다. 이 책은 2003년 초판이 나왔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가 만들었다.

다음으로 민단계의 교과서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2006, 明石書店)를 비교 검토하겠다. 이 책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중앙민족교육위원회가 주도하여 만들었다. 2005년 말에는 오사카[大阪] 한국인회관에서 집필자들이 직접 교과서 작성을 위한 연속 강좌인 ‘재일의 역사(在日の歴史)’를 4번에 걸쳐 열기도 했다.

책의 필자는 강덕상(姜德相 : 시가[滋賀]현립대학 명예교수(제1장, 제2장, 칼럼 1, 6)), 강제언(姜在彦 : 하나조노[花園]대학 객원교수(제3장 제1절, 제3장 제2절)), 김경득(金敬得 : 고인, 변호사(제3장 제3절)), 박일(朴一 : 오사카시립대학 교수(제4장, 칼럼 4, 13)), 강성(姜誠 : 르포라이터(칼럼 2, 3, 9~12, 14~18)), 정대성(시가현립대학 명예교수(칼럼 8))이다.

Ⅲ. 주요 쟁점별 양국 근·현대사 서술

1_ 침략·전쟁과 강제연행

1910년 일본의 조선침략 이후 물적·인적 자원의 수탈은 본질적으로 식민통치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침략에서 전쟁으로 귀결된 식민통치의 역사는 분명 제국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구상 속에서 귀결된 중착점이었다. 특히 관동군의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의 길은 역사에 대한 소비니즘적 합리화의 대상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역사 그 자체이다. 아울러 여성노동력과

‘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침략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이다. 침략과 전쟁을 서술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취해야 한다.

1) 한국

2002년판 중학 교과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을 설명한다.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한 일제는 이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1941). 나아가, 일본군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침략하였다.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제는 전시 동원체제를 발동하여 우리 민족을 전쟁터에 동원하였다.”¹⁵⁾

물론 20세기에 들어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객관적 사실인데, 결국 모든 것이 전쟁으로 귀결되어 서술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금성 교과서는 제1차 세계대전, 1931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축으로 하여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의 수난’을 설명한다. “제국주의 열강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결국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 일본제국주의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¹⁶⁾

강제연행에 대해서 2002년 중학 교과서는 물질·인적 자원의 수탈을 서술할 때, 한반도의 병참기지화를 지적하고 물자의 약탈과 함께 인력의 수탈을 거론한다. 여기에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수탈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전쟁 초기부터 조선인 청년학생을 끌고 가지는 않았다.

특히 2002년 중학 교과서는 여성 동원에 주목한다. “일제는 여성들도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 위안부로 만들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하였다.”¹⁷⁾ 실제로

15)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61쪽.

16)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42쪽.

일본 내의 여러 곳에 위안소가 설치되었고, 이곳에 '군 위안부'가 존재했다. 아울러 노동 현장에도 위안소를 만들어 운영했다.

고등학교용 두산 교과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상술하는 중에 인적 수탈에 대해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본·중국·사할린·동남아시아 등지에 강제로 끌고 갔고, 여성도 근로보국대와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아가 위안부로 여성을 동원했다고 한다. “많은 여성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위안부로 희생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¹⁸⁾ 그리고 침략 전쟁의 도구로 그들이 희생되었다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의 시작과 함께 국가총동원령의 발령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었다. 이때 일제는 전투 병력을 지원병과 징병제로 보충했다. 두산 교과서는 징병제 실시의 결과 20만여 명이 징집당했다고 한다. “마침내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20만여 명의 청년들이 징집당하였다.”¹⁹⁾

2) 일본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서술할 때 2007년 야마카와판은 만주를 일본의 이익 범주 밖으로 인정하는 대신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사적·정치적 우월권을 확립한 것에 주목한다.²⁰⁾ 즉, ‘한일병합’의 국제적 승인을 암묵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것은 도쿄서적 중학 교과서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일병합’과 관련해 서술할 때, 먼저 일본의 중국 침략을 거론하고 일본 내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조선에 ‘진출’했다고 한 것이다. “한편 군수와 정부의 보호에 의해 중

17)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62쪽.

18)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53쪽.

19)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62쪽.

20) 2007, 『改訂版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298쪽.

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하여, 경공업의 생산을 회복했다. 화학공업 등에서는 새로운 재벌이 급성장하고, 조선·만주에도 진출했다.”²¹⁾ 결국 식민지 지배는 일본인으로서의 동화였다. “1910년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 학교에서는 조선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일본사와 일본어를 가르치며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교육을 했다.”²²⁾

선행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후소사관 역사교과서 집필의 가장 큰 목적은 청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까지 일본이 저지른 여러 차례의 침략전쟁 도발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과거 일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 도발을 ‘죄악시’하는 이른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²³⁾ 따라서 2005년판 후소사 수정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자의적으로 서술하고, 더 나아가 ‘한국병합’은 구미열강과의 국제적 거래였다면서 식민지 지배의 객관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만주사변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2007년 아마카와판은 관동군의 만주사변을 합리화하고 있다. “관동군은 참모 이시하라 간지를 중심으로 하여, 1931년 9월 18일 봉천 교외의 유조호에서 남만주철도의 노선이 폭파되자(유조호사건), 이것을 중국군의 행위로 간주하여 군사행동을 개시해서 만주사변이 시작되었다.”²⁴⁾ 그것은 후소사관의 논지와 거의 유사한데, 관동군의 행동이 마치 정당했다는 식이다.

2005년도 후소사 검정신청본은 긍정적으로 일본의 ‘만주 진출’을 서술한다. “그후 중국과의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만주국은 오족협화, 왕도낙토건설의 슬로건 아래 일본의 중공업 진출 등에 의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많은 중국인 등의 인구 유입도 있어, 만주국 건국은 점차 기정사실로 되고 있었다.”(197쪽) 이렇게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은 전혀 다루지 않고, ‘만주국’ 건국이 기정사실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후소사 시판본은 “만주국 건국은 점차

21) 2005,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187쪽.

22) 2005,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160쪽.

23) 박찬승, 2005, 앞의 논문, 282쪽.

24) 2007, 『改訂版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322쪽.

기정 사실로 되고 있었다”는 내용 대신 “그러나 실제로는 만주국의 실권은 관동군이 장악했다. 항일운동도 있었다”²⁵⁾고 수정 서술하고 있다.

중일전쟁에 대한 서술을 보면, 왜곡의 수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후소샤 판은 판이 거듭되면서 침략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2005년 후소샤 검정신청본은 사소한 일에서 중일전쟁이 출발했다고 한다. “1937년 7월 7일 밤 북경 교외의 노구교에서 연습하고 있던 일본군을 향하여 누군가가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에도 중국 측으로부터 발포가 계속되어 전투상태에 들어갔다(노구교사건). 사건 그 자체는 사소한 마찰에 지나지 않았고, 현지 해결이 모색되었으나, 일본 측과의 충돌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해결을 곤란하게 하였다. 동년 8월 외국의 권익이 집중된 상해에서 2인의 일본인 장병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일·중 간에 충돌이 확대되었다.”(199쪽) 후소샤 시판본은 “일본 측과의 충돌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해결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검정신청본의 서술에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일본 측도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고, 국민당 정부도 곧바로 동원령을 발했다. 이렇게 해서 8년간에 걸친 일중전쟁이 시작되었다.”²⁶⁾ 마치 중일전쟁이 국민당 정부의 적극 대응 때문에 전면전으로 귀결되었다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태평양전쟁에 대해 도쿄서적 중학 교과서는 총력전으로, 국민은 올바른 전쟁으로 인식하고 정부에 협력했다고 밝혔다. “이 전쟁은 총력전으로, 대부분의 일본 국민이 전쟁 때문에 동원되었다. 남성이 전장에 끌려갔고, …… 학도동원으로 고교생과 중학생도 공장과 농촌에서 일했다. 많은 국민은 이 전쟁을 ‘바른 전쟁’이라고 믿고, 정부에 협력했다.”²⁷⁾

후소샤 검정신청본은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중남미지역에서 배타적인 불록경제권을 형성한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배일정책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이다. “1938년 고노에 후미마로 수상은 동아시아 신질서의 건

25)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97쪽.

26)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99쪽.

27) 2005, 『新編新しい社会歴史』, 東京書籍, 193쪽.

설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만주·중국을 통합한 경제권을 만들 것을 시사했다. 이것은 나중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슬로건으로 발전되었다. 미국은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주장하면서(주장하였는데,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타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이 독자의 경제권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중일전쟁에서 일단 중립을 지킨(미국은 표면상 중립을 지켰지만) 미국은 고노에 성명에 강하게 반발하여 중국의 장제스를 공공연히 지원하였다. 미일전쟁에 이르는 대립은 직접적으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1939년 미국은 미일통상항해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고했다. (석유를 비롯하여) 많은 물자를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점점 경제적으로 괴롭게 되었다.”(팔호안의 부분은 2005년판 김정신청본에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임, 200~201쪽)

이러한 서술체계가 후소샤 시판본에서는 바뀌고 있다. “미국은 고노에 성명에 강하게 반발하여 중국의 장제스를 공공연히 지원하였다”는 문장 중에, 즉 ‘반발하여 중국의’라는 표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서술하고 있다. “일본이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중전쟁에서 미국은 표면상 중립을 지켰다. 그 전후부터”²⁸⁾ 또한 후소샤 시판본에 ‘석유를 비롯하여’라는 문장이 다시 살아났다. 결국 후소샤 시판본은 다시 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침공에 대해 2005년 후소샤 시판본은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모두 ‘진주’ ‘상륙’ ‘진격’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²⁹⁾ 일본이 도발한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부르기 싫어하는 태도가 그대로 보인다.

강제연행에 대해 도쿄서적 중학 교과서는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황민화’라는 이름 아래, 일본어의 사용과 성명의 표기를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한 창씨개명을 추진하였다. 더하여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하였다.”³⁰⁾ 이들은 일본에 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조건과

28)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201쪽.

29)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201쪽.

30) 2005, 『新編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89쪽.

낮은 임금으로 지극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³¹⁾ 이러한 강제연행에 대한 약술이 곧바로 개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1998년 야마카와판은 일본인의 전시동원과 함께 “다수의 중국인·조선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연행되어 광산이나 토목공사장 등에서 일하게 되었다”(453쪽)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등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군위안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기술하고 있다(453쪽). 2007년 야마카와판은 ‘중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본문은 아니지만 좀더 구체적이다. “조선에서는 1943년, 대만에서는 1944년에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1938년에 지원병제도가 도입되어 식민지에서도 병사를 모집했다.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중군 위안부).”³²⁾ 문제는 ‘중군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한 서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다.

후소샤 시판본은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전시하의 생활’을 서술하며, 간단히 그 역사적 사실을 거론한다. “전쟁 말기에는 징병이나 징용이 조선이나 대만에도 적용되어, 현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한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 등에 연행되어 혹심한 조건하에서 노동을 하였다.”³³⁾ 이렇게 강제연행과 관련해서는 징병과 징용만 언급되고 ‘군위안부’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³⁴⁾ 과연 역사교육 소재로 ‘군위안부’ 문제가 부적절한지는 의문이다.

2_ 정치와 운동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중추 기관이다. 이곳을 통해 동화주의를 기저로 한 각종 정책이 입안되고 실시되어 식민지 조선이 운영되어 갔다. 각종 정책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제는 ‘친일파’를 육성하여 제국의 식민

31) 2005, 『新編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193쪽.

32) 2007, 『改訂版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342쪽.

33) 2005, 『新しい 歴史叢書』, 扶桑社, 208쪽.

34) 박찬승, 2005, 앞의 논문, 299쪽.

지 지배질서를 이중적인 구조로 만들어 갔다.

일제는 발흥하는 각종 반일투쟁을 철저히 탄압했다. 조선의 반일운동은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띠면서 사회주의의 보급으로 질적 발전을 이뤘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계열의 투쟁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반일운동사에서 3·1운동은 거족적 투쟁으로, 통치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개편시켰고, 국외의 조선인이 참가하여 운동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했다. 나아가 학생 중심의 대중운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3·1운동은 조선에서 출발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1) 한국

2002년판 중학 교과서의 경우 조선총독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였다.”³⁵⁾ 물론 이 조선총독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헌병 경찰을 갖고 통치를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방식은 헌병 경찰을 앞세운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 통치로, 헌병들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경찰의 임무를 맡았다.”³⁶⁾

아울러 ‘도움글’을 통해, 식민지배의 필요성에 따라 친일파 육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이토 총독은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1920)에서 친일파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등에 침투시켜 그 계급과 사정에 따라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등 친일파 육성안 6개 항목을 내놓고 친일파 육성에 힘을 쏟았다.”³⁷⁾ 이러한 내용은 교재의 편재에서 볼 때, 동떨어진 것이다. 이완용의 병합조약에서의 역할을 거론하고 있으나, 친일파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이 본문 중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2002년판 중학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35)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55쪽.

36)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56쪽.

37)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57쪽.

조선독립동맹이나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활동, 1930년대 중국 공산당계 항일유격대나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대해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다.³⁸⁾

고등학교용 두산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지배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피탈」이라는 절에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일련의 과정을 서술하고, 을사조약 당시 고종을 “조약체결을 끝까지 거부하였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음을 들어”³⁹⁾ 그의 역할에 새롭게 주목했다. 결국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아울러 두산 교과서는 세계 경제공황과 연동하여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설명하며,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국제연맹이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비난하자,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군비확장에 힘쓰면서 군국주의의 길로 나갔다”⁴⁰⁾고, 마치 주체인 일본이 부득이 침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한다.

금성 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침략’을 서술하며,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에 주목했다. 특히 의병전쟁이 일제에 위협적이었다고 전한다. “거칠 것 없이 국권을 강탈해 가던 일제를 막아선 것은 의병항쟁과 계몽운동이었다. 특히 의병항쟁은 일제에 큰 위기감을 주었다.”⁴¹⁾ 이 때문에 일제는 의병 토벌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책과 달리 금성 교과서는 문화통치기를 서술하며, ‘이때 세계는’이라는 지면에서 당시 일본 사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어 ‘문화통치’가 실시되던 시기의 일본 정치를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라고 부른다. 메이지 시기가 끝나고 다이쇼 시기(1912~1926)에 접어들면서 일본에서는 민주주의 사상이 보급되었다.”⁴²⁾

특히 금성 교과서는 ‘어두운 시대의 변절자, 친일의 길’이라는 지면에서,

38) 장세윤, 2006, 앞의 논문, 156쪽.

39)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38쪽.

40)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51쪽.

41)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48쪽.

42)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52쪽.

문인, 경찰, 예술, ‘친일 예술 자본주의’, 교육계의 친일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다음과 같은 지문이 주목된다. “생각해 보기 : 위 자료에는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나 애국적 인사로 추앙되어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다. 일제에 굴복하기보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한 이와 강자의 압박에 못 이겨 굴복한 이들을 비교해 보자. 그리고 광복 이후 친일파 척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보자.”⁴³⁾ 친일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일제시대 우리 역사 이해의 새로운 첫 출발점이다.

이와 함께 금성 교과서는 친일에 대해 여러 대목에서 거론하고 있다. 물산장려운동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도 했다. “토산품 애용 운동은 상인이나 자본가 계급에 이용당하여 상품의 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한 박영효·유성준 같은 친일세력이 관여하면서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⁴⁴⁾ 그리고 실력양성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친일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다. “실력 양성 운동은 ‘선 실력 양성, 후 독립’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결국 실력의 양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그 가운데 타협적 성격을 띤 일부 세력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사실상 독립운동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는 자치운동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1930년대 이후에는 점차 친일 노선을 걷게 되었다.”⁴⁵⁾

금성 교과서는 ‘식민 사관과 역사 왜곡’이라는 지면에서 정체성론, 당파성론, 타율성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도쿄 제국대학의 한국사 연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일본인들은 조선 침략을 역사적으로 합리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쿄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식민사관에 기초를 둔 한국사 연구를 전개하였다.”⁴⁶⁾

운동사와 관련하여 근·현대 교과서의 경우 두산출판사, 천재교육,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소단원명은 같다. 이들 4종의 교과서가 「사회적 민

43)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65쪽.

44)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4쪽.

45)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7쪽.

46)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42쪽.

족운동」으로 편재한 것을 금성출판사는 「사회 각 계층의 자각」과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소단원으로 분리 편성했다. 실제로 단원 구성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의 등장과 관련한 소항목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띄는데, 부정적 평가는 여전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두산 교과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이라는 항목에서 반공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전개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은 그 노선에 따라 이념과 이해를 달리하는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어 갔고, 더욱이 민족주의 계열과는 사상적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인해 대립이 격화되어 독립운동 자체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했다.”⁴⁷⁾

두산 교과서는 농민운동을 설명하며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관련해 서술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와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금성 교과서는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1930년대 민중운동을 설명한다.

민족 협동 전선 운동과 관련해 금성 교과서는 신간회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금성 교과서는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된 정우회 선언에 특기하여, “1926년 11월, 정우회는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을 천명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⁴⁸⁾고 전한다. 특히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을 다루는 제4장의 제2주제는 신간회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사료의 구제성에 있어 탁월함이 돋보인다. 조선민흥회의 창설 기사(『조선일보』, 1926년 7월 11일), 신간회 도쿄지회 제2회 대회 정책안(『대중신문』(제9호), 1928년 1월 1일) 등이 그것이다.

3·1운동에 대해 2002년 중학 교과서는 한 장을 할애하고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그 결과물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정과 그 활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배경과 함께 전개과정을 언급하면서 2·8독립선언 결의

47)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3쪽.

48)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8쪽.

문에 주목한 것이 새롭다. 나아가 독립만세 시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는 해외 도처에서도 즐기치게 이어졌다”⁴⁹⁾고도 했다.

이와 함께 2002년 중학 교과서는 그 의의를 평면적으로 서술하며, “한민족의 민족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거족적으로 전개한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전개한 독립운동” “아시아 각지의 민족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⁵⁰⁾는 기존의 서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산 교과서의 경우는 ‘3·1운동’을 민족운동의 시간적 연결선상에서 서술하여 이전의 민족운동으로 의병전쟁과 독립의군부·대한광복회에 대해 주목하고, 나아가 해외독립군 기지에 대해 상술했다. 그런 연후에 3·1운동의 태동과 운동의 진행 과정,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에서의 시위 운동에 주목하여 만주지역에서는 서간도·북간도, 연해주에서는 신한촌, 미주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필라델피아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⁵¹⁾ 그런데 아쉽게도 일본지역에서의 시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금성 교과서는 도쿄와 오사카의 시위를 간단히 소개했다. 그리고 3·1운동을 서술하며, ‘대동단결의 선언’(1917) ‘대한 독립 선언서’(1918) ‘기미 독립 선언서’(1919)를 소개하고, 선언의 비교를 통한 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02년 한국의 중학 교과서는 3·1운동 이후 학생들이 민족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 민족 운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6·1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다”⁵²⁾고 밝히고 있다. 즉 6·10만세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6·10만세 운동은 이후 국내 대중운동에 있어 학생의 역할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금성 교과서는 6·10만세운동을 최근의 연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비롯한 학생들은 예정대로 시위 운

49)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67쪽.

50)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68쪽.

51)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70쪽.

52)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86쪽.

동 계획을 추진하였다.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의 삼엄한 경비 아래에서도 군중 사이에서 격문을 뿌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때 검거된 학생이 200명이 넘었다.”⁵³⁾ 이후 학생운동은 독서회나 비밀결사에서 벗어났다.

2) 일본

2007년 야마카와판은 중국 5·4운동에 뒤이어 3·1운동을 서술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민족자결주의를 들고, 도쿄 중심의 유학생운동에 뒤이어 3월 1일 파고다공원의 선언서 낭독을 계기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갔다고 전한다. 아울러 3·1운동의 성격을 평화적·비폭력적이라고 규정했다.⁵⁴⁾

도쿄서적 중학 교과서는 3·1운동에 대해 학생 중심의 ‘독립만세’로 규정하고,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으며,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3·1독립운동’에 대해 공감한 일본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있고, 그를 ‘인터내셔널리스트’로 규정했다. “야나기 무네요시야말로, 각각의 민족성을 존중하는 국제성-인터내셔널리즘을 갖고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후소사 시판본은 3·1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서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왜곡의 함정에 빠지게 한다. “일본 지배하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구 국왕의 장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데모행진을 했다. 이 움직임은 곧바로 조선 전토에 퍼졌다(3·1독립운동). 이때 조선총독부는 무력으로 이것을 탄압했는데, 그후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식을 변경했다.”⁵⁶⁾ 역사 서술에 있어서는 용어의 사용이 중요한데, 후소사 시판본은 고종황제를 ‘구 국왕’이라고 비하하고, 마치 일본이 자주적으로 무력 통치를 그만두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53)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83쪽.

54) 2007, 『改訂版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305쪽.

55) 2005, 『新編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175쪽.

56) 2005, 『新しい 歴史教科書』, 扶桑社, 185쪽.

3_ 생활과 문화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은 동화주의 아래 전개된 침략정책이었다. 이 문화정책의 제도적인 차원의 본질은 ‘일본(인)화’였다. 일제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은 일본적 근대로 탈바꿈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식민지적이었다. 그 모습은 박물관과 각종 대중시설을 통해 대중과 접점을 형성했고, 문화 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⁵⁷⁾ 다루고 있는 주제는 우리말과 우리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 종교정책,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 한국어 연구 등이다.

대체로 한국 근·현대 교과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라는 문맥에서 소비문화, 대중문화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⁵⁸⁾ 또한 의식주 생활의 변화,⁵⁹⁾ 대중문화의 수용 양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⁶⁰⁾ 아울러 민족기업에 대해 서술하는데, 호남지방의 지주 출신인 김성수가 1920년대 세운 경성방직주식회사는 전국의 대지주와 상인자본을 규합하여 창설한 회사라고 한다.⁶¹⁾

두산 교과서는 예술 활동에 대해 중학 교과서보다 구체적이어서, “홍난파는 봉선화를 작곡하여” “동요로는 윤극영의 ‘반달’이 등장하여”라는 기술이 보인다.⁶²⁾ 그리고 우리의 근대 회화가 식민지적 체험에서 출발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근대 회화의 서구적 체험은 일제의 식민지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⁶³⁾

57) 강영철, 2006,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운동의 전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 경인문화사, 104쪽.

58)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24쪽.

59)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15쪽.

60) 마쓰모토 다케노리, 2005,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근대의 ‘일상생활’ 서술 분석」,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연구총서), 고구려연구재단, 189~195쪽.

61)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09쪽.

62)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38쪽.

63)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39쪽.

이와 함께 두산 교과서는 민중예술에 주목하여 민족 미술과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민족 풍자화가 등장하여 일제에 수탈당하는 민족의 참혹한 생활상을 그리는 화가들이 나왔으며 1920년대 중반기에는 프로예술연맹에 창립되었으나 1935년 해산되었다. 그후 점차 민족 미술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⁶⁴⁾ 이 프로예술연맹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카프로 줄인다)이다. 이와 함께 역사 속의 인물로 아사카와 다쿠미와 야나기 무네요시를 들어, 긍정적 조선관을 갖고 있던 일본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⁶⁵⁾

금성 교과서는 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신경향파 문학으로 서술한다.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신경향파 문학도 나타났다. 신경향파 작가들은 사회주의적 영향 아래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문학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였다.”⁶⁶⁾

2002년 중학 교과서는 문화 활동 대강을 기술한다. 특히 “문학과 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살리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면서 문학가로는 한용운·심훈·윤동주·이육사·이상화를, 영화배우로는 나운규, 음악 분야에서는 봉선화·고향생각·반달 등의 작품을 거명했다. 아울러 미술에서는 “이중섭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일본에 팔려 나가는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여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있었다⁶⁷⁾고 전한다. 그 사람이 간송 전형필이었다.

이 전형필에 대해서 금성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문화재 약탈에 대해 전면에서 맞서 싸웠고, 1938년 보화각을 건립하여 최초의 사립 박물관을 건립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문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실로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문화재를 마구 약탈하였다. …… 이와 같은 일제의 문화재 약탈에 맞서, 전형필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 자신의 재산을 문화재를 모으는 데 썼다. …… 당시 서울의 한

64)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39쪽.

65)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41쪽.

66)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38쪽.

67)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90쪽.

적한 교외이던 성북동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1938년에 보화각(현 간송미술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을 열었다.”⁶⁸⁾

한편 일본 역사 교과서의 경우 문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및 재일조선인(사)에 대해 거의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인 서술은 야나기 무네요시에 대한 내용 정도이다.

IV. 일제시대 재일조선인사에 대한 서술과 인식

재일조선인의 역사도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다. 물론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민족사’의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일제시대 다른 지역사와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의 이주, 운동, 삶의 보편적인 내용이 총괄적으로 서술되고, 부가적으로 특수한 역사적 사실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⁶⁹⁾

1. 한국

1) 일본 이주 동포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세기 말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정치적 망명자와 유학생들이었다. 1910년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은 생계유

68)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29쪽.

69) 재일조선인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조. 外村大, 1995, 「在日朝鮮人史研究の現狀と課題についての一考察-戰前期を對象とする研究を中心に-」, 『在日朝鮮人史研究』 25; 김인덕, 1996,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金仁德, 2003, 「韓國における在日朝鮮人史の研究の現況」, 『在日朝鮮人史研究』 33.

지를 위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도일은 철저히 일본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었다. 두산 교과서에는 「일본 이주 동포」라는 항에서 이를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자 생활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산업 노동자로 취업하게 됨으로써 이주민이 증가하였다.”⁷⁰⁾ 이러한 내용은 금성 교과서도 거의 유사하다. “주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자 생활 터전을 상실한 많은 농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산업 노동자로 취업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본인 자본가에게 착취당하였으며, 민족 차별로 온갖 수모를 당하였다.”⁷¹⁾

조선인의 도일은 시기적으로 그 모습이 달랐다. 1920년대의 도일은 유학생과 독신이 많았고, 1930년대의 경우는 정착의 길로 이행해 갔다. 결국 이들은 민족적·계급적 차별을 받았고, 배일의식과 민족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노동환경이 큰 역할을 했다. 즉 “이주 노동자들은 일제의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리하여 이들 일본 이주민은 다른 어느 지역 이주민보다 배일사상과 민족의식이 강하였다.”⁷²⁾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남게 되어 재일조선인 사회가 형성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광복 이후 돌아왔지만, 남아 있는 인구도 적지 않아 오늘날 재일동포 사회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되었다.”⁷³⁾

2) 학우회

일본 지역의 유학생 단체의 핵심은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로 줄임)이다. 이 학우회는 대중강연과 기관지 『學之光』을 발간하여 당시 사회 발전 이론과 반일투쟁을 선도했다.

두산 교과서는 학우회를 ‘조선 유학생 학우회’로 지칭하고, “유학생들은

70)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19쪽.

71)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22쪽.

72)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19쪽.

73)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22쪽.

…… 유학생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면서 각종 모임을 통하여 배일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일본인의 잘못된 한국인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⁷⁴⁾고 전한다. 그러나 학우회는 일본인의 잘못된 한국인관을 시정하는 노력 보다는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학우회는 유학생의 중심 조직으로 대중적인 반일 투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3) 2·8독립선언

2002년판 중학 교과서는 3·1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재일유학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일본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독립 운동의 기호로 생각하여, 일본 도쿄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2·8독립 선언이다(1919. 2. 8).”⁷⁵⁾ 그리고 2·8독립선언결의문을 ‘읽기자료’로 실어 놓았다.

교과서의 개편에 있어 2·8독립운동에 대한 서술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두산 교과서도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3·1운동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1919년 2·8독립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동맹 휴학을 한 후 국내로 들어와 만세시위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⁷⁶⁾

4) 3·1운동

2·8독립운동과 3·1운동을 연결선상에서 서술하며 투쟁의 전개과정을 사실적으로 설명한다. “국외의 3·1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에서도 시위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2·8독립선언을 하여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도쿄 유학생들은 국내의 3·1운동 붐기 소식을 듣자마자 곧 만세시

74)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20쪽.

75)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65~266쪽.

76)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20쪽.

위를 전개하였으며, 오사카 동포들도 뒤이어 시위를 벌였다.”(『고등학교 국사』, 146쪽) 그리고 일본지역에서 국내의 3·1독립운동에 연동하여 시위투쟁을 일으킨 것은 국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사례이다.

5) 이봉창 의거

이봉창의 경우 재일의 경험이 그에게 반일투쟁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일본 경험에 대한 서술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중학 교과서에는 이봉창의 사진과 선서문이 유물사진으로 그대로 실려 있다. 선서문은 다음과 같이 활자화도 해 놓았다.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⁷⁷⁾

두산 교과서는 이봉창의 투쟁을 서술하면서, 김구의 역할과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김구의 지령을 받은 이봉창은 단신으로 일본 도쿄에 가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 국왕이 탄 마차를 향해 일본 왕궁 부근에서 폭탄을 던졌으나 …… 이 의거는 대륙 침략에 나선 일제에 한민족의 항일 의지를 보여 준 것이며 일본에는 경종을 울려준 것이었다.”⁷⁸⁾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은 결국 상하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다. 상하이 사건이란 일제가 만주국 수립 음모에 대한 세계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상하이를 무력 침공한 사건이다. 이봉창의 일본 국왕 저격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는 “불행하게도 뒤따르던 마차 폭파에 그쳤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이 빌미였다.⁷⁹⁾

한편 2002년 한국의 중학 교과서는 1920년대 초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인 활동가였던 박열에 주목한다. “일본 왕실의 결혼식이 거행되던 날에 일본 국왕 부자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발각되어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2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다.”⁸⁰⁾

77)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77쪽.

78)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184쪽.

79)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188쪽.

80) 국사편찬위원회, 2002, 『중학교 국사』, 277쪽.

6) 관동대지진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은 조선인의 학살을 불러왔다. 조선인 학살은 준비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유언비어와 일본 정부의 정책, 즉 사회주의자 척결과 불령선인의 정리였다. 두산 교과서는 일본 내 민심의 동요와 유언비어에 주목한다. “1923년 일본 관동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민심도 크게 동요시켰다. 이때 일본 당국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을 죽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불안의 원인을 한국인 탓으로 돌림으로써 광분한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공격하게 되었다.”⁸¹⁾ 실제로 조선인을 거리에서 죽인 것은 자경단원이었다. “홍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다.”⁸²⁾

결국 제일조선인이 6000명 이상이 이 사건으로 죽어 갔다. 관동대지진의 키워드는 조선인 학살과 대참사이다.

7) 강제연행

전술했듯이 2002년 중학 교과서는 물질·인적 자원의 수탈을 이야기할 때 조선인을 강제 징용으로 끌고 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하였고, 지원병제도와 학병제·징병제를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역사를 서술한다. 그리고 여성동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더욱이 많은 수의 여성은 군대 위안부로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다.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침략 전쟁의 도구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81)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두산출판사, 220쪽.

82)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22쪽.

2. 일본

일본교과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부분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후소샤 시판본은 관동대지진을 마치 학문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923년 9월 1일에는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 요코하마 등에서 커다란 화제가 발생하고, 사망자·행방불명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관동대지진) 이 혼란 중에 사회주의자나 조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조선인·중국인·사회주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⁸³⁾ 이렇게 후소샤 시판본은 검정신청본과 달리 “이 혼란 중에 사회주의자나 조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능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후소샤 검정신청본은 관동대지진 때 미국이 구호물자로 군용 모포 등을 보내주었는데, 일본인들이 고마워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을 괴멸로부터 구제할 아메리카의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1945년 포츠담선언의 주역인 조지 프 그루 미국 국무장관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⁸⁴⁾

도쿄서적 중학 교과서도 관동대지진에 대한 서술이 후소샤판과 거의 유사하다.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진재가 일어나 …… 혼란 중에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퍼져 많은 조선인·중국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되었다.”⁸⁵⁾ 이렇게 원인과 경과보다 간단히 결과만을 서술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아마카와판은 관동대지진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동대진재’⁸⁶⁾라는 용어를 한 번 쓰고 있다.

83)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 189쪽.

84)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술에 있어, 후소샤의 검정신청본은 2002년도판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반중국 태도를 드러냈다. 이는 공민교과서의 검정본에서 반복한 태도를 드러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신주백, 2005, 앞의 논문, 207쪽).

85) 2005, 『新編新しい社會歴史』, 東京書籍, 181쪽.

86) 2007, 『改訂版 詳説 日本史』(B), 山川出版社, 309쪽.

3_ 재일조선인

재일조선인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사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해방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민족교육은 재일본조선인연맹이 결성되면서 조직화되었다. 이후 이 재일본조선인연맹이 재일조선인의 역사교육을 주도했다. 그들은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민족교육의 테두리에서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서술되고 정리되었다. 여기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으로 줄임)는 적극적이었다. 여러 차례의 편찬을 통해 총련의 역사 교재는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⁸⁷⁾ 최근 총련계 학생이 보는 『조선력사』(중급3)(2006, 학우서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0. 1920년대 민족해방투쟁
11. 1930년대 민족해방투쟁의 발전
12. 조국 광복
13. 1920~1940년대 전반기 문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 편재상으로 볼 때 10장과 11장,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에 재일조선인의 생활과 투쟁의 내용을 배치하여, 1920·1930·1940년대 재일조선인의 삶을 상술하고 있다.⁸⁸⁾ 물론 1920~1940년대 반일투쟁을 먼저 기술하고, 운동사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만주지역에서의 1930·194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많은 양을 할애하고 반일투쟁의 중심에서 김일성을 서술하고 있다.⁸⁹⁾ 김일성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본인과 가계 관련 각종 사진이 많이 실려 있다.

87) 강성은, 2003. 2. 27~3. 1, 「통일교과서를 목표로 한 조선학교의 조선사교과서 개정에 대하여」,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글로벌 화와 인권·교과서』 발표 요지문; 이신철, 2003, 「한국사 교과서 속의 '북한', 그리고 통일을 향한 민족사 서술 모색」,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334쪽.

88) 2006, 『조선력사』(중급3), 학우서방, 2쪽.

89) 2006, 『조선력사』(중급3), 학우서방, 42~115쪽.

셋째, 재일조선인에 대한 서술이 생활사 중심이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여기에는 주요 반일 조직이 부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조직을 보면 조선고학생동우회, 흑도회, 북성회, 일월회,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조선공산당 일본부,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전협조선협의회, 코프조선협의회 등이다.⁹⁰⁾

넷째, 근현대사 관련 인물을 새로이 선정하여 교과서의 성격을 전면 개편했다. 독립운동가로는 이동휘·안창호·여운형·홍명희·김구·이봉창·김무정·김원봉·박열 등이, 문화인으로는 작가 한용운·이기영·한설야·김사량·윤동주·강경애, 작곡가 홍난파, 영화감독 나운규, 무용가 최승희, 역사학자 정인보·백남운, 언어학자 이극로, 과학자 이승기, 운동선수 손기정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이밖에도 '식민지배자'들인 일본 총독 사이토 마코토, 미나미지로, 그리고 '친일조선인'도 실려 있다.

다섯째, 친일단체로 협화회⁹¹⁾와 강제연행⁹²⁾에 대해 상술하여, 교과서상 서술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기존의 교재가 부분적으로밖에 서술하지 못해 사실의 내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극복하고 있다.

한편 민간계의 교과서로 『역사 교과서 재일 코리언의 역사』가 2006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크게 둘로 나뉘어,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해방 전의 서술체계는 다음과 같다.

서문 재일 한국인의 역사를 전하기 위하여

제1부 해방 전

제1장 재일 한국인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 재일 한국인은 왜 해협을 건넜는가
2. 조국의 독립에 힘을 합친 재일 한국인

제2장 해방 전 재일 한국인의 생활

1. 관동 대지진과 재일 한국인의 수난-도일의 제1단계

90) 2006, 『조선력사』(중급3), 학우서방, 39~41쪽, 90~91쪽.

91) 2006, 『조선력사』(중급3), 학우서방, 90쪽.

92) 2006, 『조선력사』(중급3), 학우서방, 108~111쪽.

2. 차별과 편견 속에서의 정착 과정-도일의 제2단계
3. 강제 연행, 징용, 징병의 시대-도일의 제3단계

이 책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도일의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도일'은 일본 정부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었다. "1920년부터 1921년까지,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건을 붙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도항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1922년 12월에 '조선인 여행 단속에 관한 건'이라는 여행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후 조선인의 도일에 대한 제한은 필요에 따라 완화되어 1920년에 약 3만 명이었던 인구는 1924년에는 약 12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⁹³⁾ 이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전반에 국한해도, 1922년 12월 여행증명제도가 철폐되고 1923년에 '도항증명제'가 실시되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 때의 파괴된 시가지의 복구를 위해 노동력이 요구되자 일본 정부는 '도항증명제'를 폐지했다가 1925년 10월부터 다시 도항지(제한)를 실시했던 역사가 있다.

둘째, 재일조선인 단체인 학우회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멸시와 차별 가운데, 식민지 유학생으로서의 사명에 눈을 뜬 사람들은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공통의 장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행동하였다. 이 흐름은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전 유학생을 통합하는 학우회의 설립으로 발전하였다. 학우회는 신입생환영회·졸업생환송회·친목회 등을 구실로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관지 『학지광』을 발행 ……."⁹⁴⁾ 분명히 1910년대에서 1920년에 있어 학우회의 역할은 중요했다. 이와 함께 재일조선인 단체가 조직되어 노동자와 학생이 그 중심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술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동대지진에 대해 그 피해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인 피해자의 신원과 전체 숫자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5000명이라고도 하고 6000명이라고도 한다.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재일조선인은 약 8만 명이었기

93) 2006, 『歴史叢書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明石書店, 14쪽.

94) 2006, 『歴史叢書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明石書店, 21쪽.

때문에, 15명에 1명꼴로 희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⁵⁾ 관동대지진의 의미를 재일조선인과 관련지어 서술할 때는 좀더 세밀한 재일조선인의 피해와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협화회를 통해 친일 단체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협화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하여, 그 실천 기관으로 삼았다. 회장은 소재지 경찰서장이고, ‘센진계’의 형사와 지역의 조선인 유력자가 간부였다. 그 지역의 조선인은 전원 회원이 되고, 협화회 수첩을 갖고 다니게 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유명한 ‘황국 신민의 서사’가 인쇄되어 있었다.”⁹⁶⁾ 협화회는 내선일체와 동화의 상징적인 기관이었다. 이 조직의 전시동원체제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술해야 한다.

다섯째, 1930년대 후반 강제연행에 대해 그 성격을 ‘노동력 수탈’에서 멈추지 않고 ‘생명 수탈’이라고 표현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는 노골적으로 ‘노동력 수탈’과 ‘생명 수탈’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른바 강제 연행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고, 징병으로 전장에 내몰던 단계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⁹⁷⁾ 강제연행기의 재일조선인은 여러 모습으로 존재했다. 끌려가서 노무현장과 전장에 강제 배치된 경우도 있었고, 일본 사회 속에 그대로 남은 경우도 있었다.

95) 2006, 『歴史叢書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明石書店, 36쪽.

96) 2006, 『歴史叢書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明石書店, 42쪽.

97) 2006, 『歴史叢書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明石書店, 46쪽.

V. 결론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각각 3종씩 선정하고, 크게 4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서술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쟁점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침략·전쟁과 강제연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910년 일제에 의한 ‘한일병합’을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차별적이지만 국제적인 승인을 암묵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일제시대’를 양국 교과서는 ‘전쟁 개념’을 통해 일괄 서술하여, ‘고난의 시기’와 ‘총력전 시기’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역사교과서는 교재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전쟁책임론에서 멀리 가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셋째, 강제연행 문제는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가 물질·인적 수탈 구조 속에서 주목하는데, 한국 측이 좀더 구체적이다. 특히 ‘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여성동원’과 관련해서 한국 역사교과서가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역사교과서는 시기나 교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후소샤 시판본은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하고, ‘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서술 자체를 하지 않는 역사 왜곡을 범하고 있다.

2) 정치와 운동에 대해서는 첫째,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주목하여 통치방식의 변화를 중심축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식민 통치에 반대한 반일투쟁사와 함께 일제의 친일파 육성을 소개하고 ‘친일’의 문제를 대중적인 과제로 제기하여, 긍정적인 서술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둘째, (반일)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근현대 교과서가 동일하게 민족협동전선, 사회주의, 3·1운동에 주목한다. 두산 교과서는 반공주의적 관점이 그 대로 드러나고, 금성 교과서는 최근의 선행 연구를 적극 반영하여 1930년대를

‘민중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다.

셋째, 3·1운동에 대해서는 한국의 모든 교과서가 운동사의 핵심으로 삼아, 그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서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의 반일운동을 서술할 때 3·1운동만 거론하고 있다. 도교서적 중학 교과서는 3·1운동을 학생 중심의 ‘만세운동’으로 규정하였고, 후소샤 시판본은 한국을 폄훼하는 역사용어를 채택하여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방식의 변화를 후소샤 시판본은 일제에 의해 자주적으로 전개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3) 생활과 문화는 일제의 침략적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째,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생활과 문화’를 우리말과 우리 역사교육, 종교정책,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 한국사 연구 등으로 서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활사’적인 관점에서 소비문화, 대중문화, 의식주 생활의 변화 등에 주목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바른 문화사의 서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두산 교과서는 예술 활동을 중학 교과서보다 구체적으로, 민중 예술을 민족 미술의 연결선상에서 서술하고 있다. 금성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문화재 약탈에 대해 전면에서 맞서 싸운 전형필에 주목하여 올바른 민족 문화 서술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일본 역사교과서들은 조선의 문화는 서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나기 무네요시를 통해 ‘한국 문화 긍정론’을 서술하고, 그를 국제평화주의자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4) 재일조선인사에 대한 역사 서술은 ‘한민족사’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과연 이런 관점을 견지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한국 교과서는 일본 이주, 2·8독립선언과 3·1운동, 이봉창 의거, 관동대지진, 강제연행에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더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술이 어렵다. 물론 관동대지진의 역사와 강제연행의 역사가 재일조선인사를 다룰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것이 마치 사회사적으로 전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둘째, 일본의 교과서는 일제시대 재일조선인(사) 문제에 대해 관동대지진에만 서술을 국한하고 있다. 1920·1930년대 일본 사회 속에서 다양한 재일조선인이 존재했고, 이같은 사실은 당시 일본 정부 당국이 남겨 놓은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중생활과 운동을 거론할 때, 관동대지진만 간단히 언급하고 다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역사 사실의 은폐이다.

셋째, 재일조선인이 직접 만든 재일조선인사 교과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총련계의 교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아직도 일제시대를 북한의 역사관에 입각해서 서술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 (2)일본 내 조선인의 삶을 서술함에도 일본 자체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낮다. (3)생활사 중심의 서술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운동사적인 관점에 우선하여 재일조선인의 삶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민단계의 최근 교재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1)강연에 기초하여 책의 구성이 분절적이다. (2)학계의 연구 성과와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전의 역사에 있어서 2·8독립운동, 강제연행 등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 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전전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부분, 특히 1920·1930년대 운동의 내용과 재일조선인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 (3)국내의 움직임과 연동한 서술이 아쉽다. 재일조선인의 역사가 우리 역사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사실적인 국내의 상황을 동시에 서술해야 한다.

역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국가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국가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종교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는 세계사적인 관점과 지역사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민족 간의 주체적 입장을 상정하고, 양국의 내재적 발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미래지향적 근·현대한·일관계사가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cription of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
Japa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residents in
Japan's history

Kim, In-Duck

Selecting three different history books from each country (Korea, Japan), with the four main-issues, described contents and problems were investigated.

1) If examining invasion, war about enforcing haul, most of Korean history books are accepting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n 1910 as objective fact. However, Japanese history books are committing faults which are unspoken approvals but discriminative.

Issues of enforcing haul are readily focused by both countries' textbooks with losses of casualties and materials. Particularly, 'comfort women' is excessively written by Korean history books about mobilization of wome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ce among Japanese history books. Above all, Husosha marketing version, one of history textbooks, is briefly referring to enforcing haul and did not predicate 'comfort women' at all which is totally distorting history.

2) On politics and movements, we should inspect with awareness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defiance. First of all, Korean history books are observing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ilding(Joseon-chongdokbu)'s way of governing about political issues. Especially,

anti-Japanese history against colonizing government was introduced with pro-Japanese Koreans' (Chinilpa) nourishment in Japan. While presenting 'pro-Japanese' as popular problem, these books maintained a positive view of narrating attitude. Second, both of textbooks are noticing national cooperation line(民族協同戰線), May 1st movement, socialism about movements. Doosan's book disclosed anticommunism vision, Kumsung's book were reflected recent studies so that they depicted 1930s as a popular movements.

3) It is reasonable that mentioning people's life and culture were related to Japanese aggressive civilization policy. In this sense, Korean history books definitely described 'living and culture' from Korean history education, religion policy, Korean Studying Committee and Korean Language Association. Additionally, with the vision on 'living history of particular era', textbooks noticed consumer, popular culture, and alternation of food-clothing-shelter. It could be explained that they surely did maintain upright cultural history. Also, Japanese history books did not mention Chosun (Korea)'s culture at all. Only throughout Yanagi Muneyoshi(柳宗悅), they depicted 'affirmative Korean culture theory' and tried to evaluate Muneyoshi as International Pacifist but this should be re-argued by somehow.

4) Historical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uld begin with the sense that it is a part of Korean national history. It is questionable that whether Korean history books did try to stick to this standpoint or not. These books spared their pages with Japan emigration, May 1st movement, the patriotic deed of Lee Bong-Chang, enforcing haul, February 8th declaration, Great Kant? earthquake which is shame that they had not dealt with various

topics. Of course, that Great Kanto earthquake was quite important with history of enforcing haul but a problem is that those events and incidents were explained as social history.

The ultimate purpose of educating history is not cultivating people from nation or country. The present writer believes that contributing to coexist with humankind is the finale of goal. Henceforth,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s history textbooks should consider world-historical point of view and understanding of regional history. Assuming each nation's subjective situation, internal development of both should not be ignored. In the middle of that, future-oriented contemporary Korean-Japan relations history must be anchored in right ways.

keywords

a history book, enforcing haul,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orld-historical point of view, future-oriented contemporary Korean-Japan relations history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

최영호 | 영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본 논문은 한국·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과서에 전후 현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논문의 과제는 현대 한·일관계에 관련한 서술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의 현행 역사교과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 학생들에게 현대 한·일관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양국의 역사교육 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현대 한·일관계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연구자가 현행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반면에 한국의 연구자가 최근에 일본의 현행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주백과 박찬승의 연구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신주백은 8종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합격본을 분석한 연구논문에서, 후소샤[扶桑社] 발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으로 ‘반공’ 이념으로의 편향성,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적 서술’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과 연

동되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늘어난 반면 ‘전후처리’ 관련 서술은 줄어들었다고 보았다.¹⁾ 또한 박찬승은 후소사 발행의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본을 분석한 연구논문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자존 자위를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 하는 관점에서 도쿄재판에 대한 비판 서술이 강렬하게 나타나 있으며, 점령당국에 의한 평화헌법 ‘강요’를 비판하고 평화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²⁾

일본의 연구자가 한국의 현행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³⁾ 그러나 일본인 연구자들이 현행 일본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가운데 부분적으로 현대 한·일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 이 가운데 미우라 슈몬[三浦朱門]이 편찬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자료는, 비록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교과서 분석 방법 측면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⁴⁾ 그리고 한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오구시 준지[小串潤児]의 연구는 비록 분석대상 교과서가 현행 이전의 교과서이기는 하지만, 패전과 광복, 한국전쟁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조약, 전후 처리 문제를 주된 쟁점으로 설정하고 일본의 일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하고 있어 현대 한·일관계 관련 교과서 분석 방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⁵⁾

1) 신주백,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도 검정본 분석: 일제강점기 및 현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3집, 224~226쪽.

2) 박찬승, 2005,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1910년 이후) 서술과 역사관 분석: 후소사판 교과서의 ‘전쟁’ ‘식민지’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29호, 300~305쪽.

3) 三橋 勇夫가 한국의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한 일이 있으나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三橋 勇夫, 2005, 『韓半島の中 小學校 教科書』, 明石書店; 三橋 勇夫, 2006, 『韓半島の高學校 教科書』, 明石書店.

4) 三浦 朱門, 2005, 『全「較史叢科書」を徹底読解する』, 小泉館. 이 책은 일본 현대사의 쟁점으로, 일본 패전, 시베리아 억류문제, 평화헌법의 강제성, 도쿄재판의 공정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위대, 전후 처리 문제, 공산주의 등을 들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을 주장하고 있다.

5) 小串 潤児, 2000, 「일본 역사교과서의 현대 일한관계사 연구」,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역사교육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혜안.

또한 현대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대안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전후 처리, 평화,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일관계사를 재구성한 공동 역사교재⁶⁾와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교재⁷⁾ 등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한계와 과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는 현대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문제로서 9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들은 현대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즉 1)광복 후 조선총독부의 잔무 처리, 2)패전 직후 한반도 일본인의 귀환, 3)재일한인의 귀환과 '잔류', 4)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여, 5)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 6)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7)이승만 라인, 8)전후 처리와 역사인식 외교, 9)한·일 민간교류를 제시하고 각각의 쟁점에 관하여 양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9가지 쟁점을 선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필자는 2006년에 현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주요 쟁점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일본의 역사개설서와 사전 일부의 서술내용을 분석한 바 있으며,⁸⁾ 또한 2007년에 본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7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교과서 일부의 서술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⁹⁾ 두 차례에 걸친 분

6)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5,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일본역사교육연구회, 2007, 『한일교류의 역사: 선사부터 현대까지』, 해안.

7) 較史叢科書在日コリアンの較史作成委員編, 2006, 『較史叢科書在日コリアンの較史』, 明石書店.

8) 최영호, 2006a, 「일본사 사전과 개설서의 전후 현대사 서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일관계사연구』 제25집, 151~181쪽. 이 논문에서 제시한 7가지 쟁점은 ①식민지 종결을 위한 국제관계, ②패전에 의한 해외 일본인의 귀환, ③재일조선인의 귀환과 '잔류', ④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여, 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의 불참, ⑥이승만 라인, ⑦전후처리 및 역사인식 외교 등이다.

9) 최영호, 2007, 「한국에서는 한일관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 중등학교 역사

석 작업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본 논문에서 종합하면서 전후사에 국한하여 총 9가지 쟁점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9가지 쟁점이 분석의 준거 기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역사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다만 이러한 분석방법이 본 논문의 특징이자 한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각 쟁점의 내용과 의미를 개설하고, 각각의 쟁점에 비추어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분석 대상 역사교과서

1_ 한국의 역사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㉑『중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2002년판), ㉒『고등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2006년판), ㉓『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금성출판사, 2007년판)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하 편의상 교과서㉑, 교과서㉒, 교과서㉓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3종의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교과서㉑와 교과서㉒의 경우 한국 정부에 의한 국정 교과서이기 때문이며, 교과서㉓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총 6종의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 면에 있어서 커다란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이 교과서를 돌출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속의 전후사 서술을 중심으로,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부산·후쿠오카 심포지움 발표문』, 1~15쪽. 이 발표문에서 제시한 7가지 쟁점은, ①조선총독부 잔무처리, ②패전에 의한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 ③재일조선인의 귀환과 '잔류', ④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와 한국, ⑤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⑥대일 역사인식 외교, ⑦한·일 민간교류 등이다.

선정된 3종의 한국 역사교과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일반적인 역사 서술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시기 구분상 전후 현대사를 맨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④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내용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교과서⑤는 총론과 각론에서 각각 시대순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형식에 있어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교과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 전후 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④는 제10장의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전후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본문의 경우 전체 329쪽 가운데 '현대'에는 총 36쪽으로 10.9%의 비중을 두고 있다.¹⁰⁾ 교과서⑤는 4개 부문에 걸쳐 각각 부분적으로 전후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본문의 경우 전체 335쪽 가운데 전후사에 대해서는 총 32쪽을 할애하고 있어 9.6%의 비중을 두고 있다.¹¹⁾ 교과서⑥는 총론에 해당하는 제1단원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의 제3장 「현대사회의 이해」와 제4단원 「현대사회의 발전」 전체를 통하여 전후 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본문 내용 전체 353쪽 가운데 전후 현대사에 총 118쪽을 할애하고 있어 33.5%의 비중을 두고 있다.¹²⁾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전후 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사적 교과서의 경우 대체로 10분의 1, 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우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대체로 현대사 서술에 있어서 국내 사회의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경제 영역에 관한 서술을 제외하고는 대외관계에 관한 언급이 대체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외관계로 목차

10)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294~307쪽), 2. 민주주의의 시련과 경제개발(308~315쪽), 3.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316~329쪽).

11) 제3단원 「통치구조와 정치활동」(5-4.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123~131쪽), 제4단원 「경제구조와 경제생활」(5-3. 현대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 184~191쪽), 제5단원 「사회구조와 사회생활」(5-3. 현대사회의 발전, 245~251쪽), 제6단원 「민족문화의 발달」(5-3. 현대문화의 성장과 발전, 328~335쪽).

12) 제1단원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26~35쪽), 제4단원 「현대사회의 발전」(246~353쪽).

나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껏해야 「북한과의 관계」에 그치고 있다. 현대 한·일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전후사는 태생적으로 식민지 체제의 청산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 맥락에서 상호관련성이 높은 주변국 일본과의 관계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들은 공통적으로 지나치게 민족 내부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술로 일관하고 있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2005년 1월에 「교과서포럼」이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전상인은 한국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반외세적 감상적 민족주의가 넘치고 수정주의 역사관과 내재적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비록 한국의 건국과정에 관한 서술에 국한하여 교과서를 분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현대 한·일관계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으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¹³⁾

2. 일본의 역사교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①『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2005년판), ②『新編新しい社説歴史』(東京書籍, 2006년판), ③『詳説日本史』(山川出版社, 2007년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하 편의상 교과서①, 교과서②, 교과서③으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3종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교과서①의 경우 중학교 교과서 중 가장 보수 우파 성향의 교과서로 한·일 양국의 교과서 논쟁에서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며, 교과서②와 교과서③은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정된 3종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서술 형식에 있어서 과거에

13) 교과서포럼, 2005,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두레시대. 전상인은 여기에서 제 1주제인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관한 발표를 담당했다.

서 현재로 이르는 시간적 흐름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일반적인 역사 서술방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기 구분상 전후 현대사를 각 교과서의 맨 나중 부분에 기록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 전후 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①은 제5장 제3절과 제4절에서 전후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본문의 경우 전체 226쪽 가운데 전후사 서술에 총 15쪽으로 6.6%의 비중을 두고 있어, 비교적 전후 현대사에 대한 서술에 인색한 편이다.¹⁴⁾ 교과서②는 제7장 「현대 일본과 세계」에서 전후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본문의 경우 전체 220쪽 가운데 전후사에 18쪽을 할애하고 있어 8.2%의 비중을 두고 있다. 교과서③은 제11장에서 제13장까지 전후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본문의 경우 전체 387쪽 가운데 전후 현대사에 42쪽을 할애하고 있어 10.9%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¹⁵⁾ 이처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의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현대사에 비중을 낮게 두고 있으며, 출판사에 따라 전후 현대사에 대한 비중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는 일본사 서술 내용 전반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대체로 현대사 서술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그 이전의 역사에 관한 서술에 비해 일본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국제관계를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부터 보수적 성향의 역사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일본의 역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서구 중심적’ 세계사관과 ‘중국 중심적’ 동양사관이 개설서와 사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⁶⁾ 한·일관계를 중시

14) 제5장 제3절 「일본의 부흥과 국제사회」(212~219쪽), 제4절 「경제대국 일본의 역사적 사명」(220~226쪽).

15) 제11장 「점령하의 일본」(346~362쪽), 제12장 「고도성장의 시대」(363~375쪽), 제13장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376~387쪽).

16) 예를 들어 石渡延男은 「단순형 일본사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구미중심사관’을 비판하고 있다. 石渡延男·越田稜編, 2002, 『世界の歴史叢書: 1 1カ国の比較研究』, 明石書店, 258쪽.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일본의 전후사는 근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 맥락에서 상호관련성이 높은 주변국과의 관계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목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한 것 이외에는 일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서술이 보이고 있을 뿐이며, 한반도에 관해서는 대체로 한국전쟁과 일본 경제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는 현대사 서술에 있어서 교과서들이 국민국가 중심의 서술에 치우쳐 주변국, 소수자, 경계인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선이나 대만과 같은 전전 일본 제국의 식민지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일본군 점령지에 대한 전후 처리에 대해서는 서술이 미흡하거나 전무하다. 이와 함께 일본 경제발전의 축을 국제경제 '중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일본에 있어서 상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와 지역에 관한 서술이 미흡하다. 또한 국가의 정치체제 변동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서술하다보니 사람들의 움직임, 즉 '민족 이동'에 대해서는 서술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일본 국내에 있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관한 서술은 지극히 부족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학계도 기존의 근대국가 중심 사관을 비판하면서 자주 지적하고 있다.¹⁷⁾

17) 예를 들어 小谷汪之는 서구근대 중심적 세계사관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관에 비서구 세계의 역사, 특히 민중의 역사를 집어넣음으로써 서구 근대 중심적 성격을 상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歴史學研究會編, 2002, 『戰後歴史學再考: 「國民學」を越えて』, 青木書店, 18쪽. 또 二宮宏之는 '전후 역사학과 사회학'이라는 글에서 일본의 전후 역사학이 'nation 이야기'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모든 것을 국민국가, 국민경제, 국민문화, 즉 nation의 틀에 수렴시켜 버리는 역사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훨씬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사회, 일본민족, 일본문화, 일본인 등 언제나 '일본'을 주어로 논하고 그 내부에 있는 다양성과 외부와의 연관성에 눈을 돌리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했다. 歴史學研究會編, 2000, 『戰後歴史學再考: 「國民學」を越えて』, 青木書店, 128쪽.

Ⅲ. 쟁점별로 보는 현대 한·일관계 관련 서술

1_ 광복 후 조선총독부의 잔무 처리

일본 패전 이후에도 조선총독부는 종전사무처리본부의 형태로 식민지체제의 청산 업무와 함께 미군정 체제의 정립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 8월 24일 연합국군사령부(SCAP)의 요구에 따라 전쟁종결업무 연락을 위해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을 설치했으며,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도 8월 27일에 「종전사무처리본부」를 설치하고, 하부부서로 총무부·절충부·정리부·보호부를 두었다. 이 가운데 보호부는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 거주해 온 일본인을 송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총독부는 일본인 귀환자들의 수송을 위하여 귀환열차를 지정했으며 서울과 부산에 「안내소」를 설치하여 귀환 원호를 담당하게 했다.

광복 직후 미군정청(USAMGIK)이 들어서기까지 총독부가 행정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조선은행권 화폐를 남발함으로써 남한 사회에 물가 양등을 초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은행이 미군정청에 접수되는 9월 30일 당시,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86억 8000만 원이었으며 이는 1년 사이에 64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었다. 특히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반 사이에 38억 4000만 원이나 초과 발행되었다. 이러한 화폐 남발은 일본군 소집해제와 관공서·회사 등의 해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경비 지출이 많았던 것과 일본인 귀환자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했던 것에 기인한다. 총독부는 이러한 예금 인출 및 일본 송금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방만한 ‘종전사무처리’를 행함으로써 광복을 맞은 남한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으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9월 하순에 미군정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종전사무처리본부」는 해체되었으며 안내소의 업무도 10월에 들어 일본인 민간기구인 「일본인사회회」로 인계되었다.¹⁸⁾

18) 최영호, 2003,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36호, 20~26쪽.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에서 관련 사항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교과서㉗는 광복 직후에 관한 언급에서 조선 총독부에 대해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다. “광복과 더불어 국내의 일부 지도자들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독립국가의 건설을 준비하였다”라고 하여,¹⁹⁾ 광복 직후 국내 ‘애국지사’의 석방, 해외 ‘독립지사’의 귀국, 미·소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단만을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㉔에도 광복 후 조선총독부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정치 부문의 첨부 사진 설명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아베 총독”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²⁰⁾ 8·15 광복에 관한 언급에 이어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준비해 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라고 하여,²¹⁾ 강렬하게 임시정부 세력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도 “8·15 광복은 우리 손으로 국가를 수립하고 일제 지배의 잔재 청산과 각종 개혁 실시 및 제도 정비 등을 수행할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라고 하여,²²⁾ 광복이 곧바로 강대국에 의한 분단으로 이어진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광복 직후 정국에 관한 언급으로는 “갑작스럽게 전해진 일제의 항복 소식으로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고,²³⁾ 광복으로 인한 균중의 감격, 건국준비위원회의 치안 행정 담당, 정치범 석방 등 여운형이 조선 총독에게 요구한 5가지 사항,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귀국 움직임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어떠한가. 교과서㉑은 “일본 국민이 처음으로

19) 교육인적자원부, 2002, 『중학교 국사』(이하 교과서㉗), 298쪽.

20) 교육인적자원부, 2006, 『고등학교 국사』(이하 교과서㉔), 123쪽.

21) 교과서㉔, 123쪽.

22) 교과서㉔, 184쪽.

23) 2007,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이하 교과서㉑), 254쪽.

체험하는 패전”과 연합국군에 의한 점령 개시에 관하여 서술하면서도²⁴⁾ 이로 인한 식민지 통치 종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②는 전쟁 종결로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시아와 조선·대만 등 일본 식민지는 해방되고 독립을 맞았다”라고 하여 식민지 해방을 서술하고 있으나,²⁵⁾ 식민지 해방의 과도기적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교과서③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현대사 출발에 있어서 패전과 점령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일본의 패전이 곧 한반도의 해방이며 총독부 통치의 종결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서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독부의 잔무 처리과정에 대한 언급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군의 진주와 군정이 체계화되기까지의 시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한·일 양국의 역사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잔무 처리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령체제에 이르는 과도기 현상을 무시하는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역사 현상의 다양성에 관한 유연한 상상력을 차단하고 경직된 단순 논리에 빠지게 하기 쉽다.

2_ 패전 직후 한반도 일본인의 귀환

한반도 거주 일본인 문제는 한반도 식민지 체제와 사람들(people)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일본 귀환은 식민지 체제의 종결 내지 청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패전 이후 1947년 12월까지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남한 지역에서 59만 3088명, 북한 지역에서 32만 1752명이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²⁶⁾ 여기에 만주지역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귀환한 일본인 민간인과 군인들을 포함하면 100만명이 훨씬 넘는 일본인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귀환한 것이 된다.

24) 2005, 『新しい歴史教科書』, 扶桑社(이하 교과서①), 211~212쪽.

25) 2006, 『新編 新しい社説歴史』, 東京書籍(이하 교과서②), 195쪽.

26) 引揚援護庁, 1950, 『引揚援護の記白』, 84쪽.

이처럼 일본인의 본국귀환 문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민족 이동이며, 현대의 한·일관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재조 일본인 귀환자들은 귀환 과정과 귀환 이후에 자생단체를 결성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압력단체로 활동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²⁷⁾

패전 직후에 설립된 「일본인세화회」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어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귀환자 원호활동을 전개했다. 조직 활동에 있어서 조선총독부 「중전사무처리본부」나 미군정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스스로 귀환자이면서 귀환사업의 주체로 등장한 일본인 유력인사들이 조선총독부의 행정력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가운데 주도적인 세력은 일본 귀국 후 귀환자의 원호, 정착 지원, 재외재산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섭을 담당한 것은 물론 귀환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귀환자 계몽 활동 등을 담당했다.²⁸⁾

한국 역사교과서의 내용에서 관련 사항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교과서②의 경우는 광복 후 부분은 물론 식민지 시기 부분에서도 한반도 거주 일본인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④는 경제 부문에서 “광복 직후에 주로 일본 자본으로 운영되던 많은 기업이 원료와 기술, 자본 부족의 어려움으로 공장의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하여²⁹⁾ 일본인의 귀환에 따른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부문의 ‘심화과정’에서 시대별 인구의 변화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는 가운데,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한반도에 거주한 외국인(일본인 포함) 통계를 내놓고 있어, 패전 후 일본인의 귀환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³⁰⁾ 다만 본문에서는 광복 후 인구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일본인 귀환에 따른 급격한 인구 변화에

27) 노기영, 2006, 「해방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0호, 125~157쪽.

28) 최영호, 2002,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80~92쪽.

29) 교과서④, 184쪽.

30) 교과서④, 252쪽.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정치 부문에서는 교과서㉗와 마찬가지로 해외 망명 정치가들의 귀국만을 언급하고 일본인이나 한국인의 일반 귀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교과서㉔에는 일본인 귀환에 관한 언급은 있으나 지나치게 선악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인 기업주나 지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일본으로 도피하였다. 노동자들은 일본인 기업가가 시설을 파괴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한편 생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민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여,³¹⁾ 귀환해 간 일본인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한국인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①과 교과서②가 공통적으로 본문에서는 관련 서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사 서술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진 설명을 통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교과서①은 중국에서 귀환하는 일본인 병사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³²⁾ 교과서②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서 귀환해 오는 일본인 어린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³³⁾ 반면에 교과서③은 본문 가운데 「복원(復員)과 귀환」이라는 칼럼을 설정하고 귀환자 통계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련 서술을 하고 있다.³⁴⁾

패전의 시점에서 해외에 있던 일본 군대는 약 310만 명, 그 외에 약 320만 명의 일반거류민들이 있었다. 재산을 잃은 거류민과 복원 군인으로 이루어진 약 630만 명의 일본인이 일본 국내로 귀환하게 됐다. 특히 비참했던 것은 옛 만주국 지역의 거류민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적지 않으며 잔류 고아로서 남겨진 자도 있었다. 소련에 항복한 약 60만 명의 군인과 거류민들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이송되어 혹한 속에서 수년 간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6만 명 이상

31) 교과서㉔, 254쪽.

32) 교과서①, 212쪽.

33) 교과서②, 204쪽.

34) 2007, 『詳説日本史』, 山川出版社(이하 교과서③), 355쪽.

이 목숨을 잃었다. 소련으로부터의 귀환은 가장 늦었으며 마지막으로 1956년경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대륙으로부터의 귀환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대사 출발 시점에 관한 서술에서 일본인 귀환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다만 패전 후 일본인의 귀환이 부당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인 전쟁의 소산이며 전후 국제관계의 재편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에는 언급이 없으며, 대신에 ‘귀환=고난’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 군인에 대한 시베리아 억류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 속에 끼어 있던 조선인 군인 군속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일본인의 귀환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한국의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역사교과서도 결국 자국민과 자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3_ 재일한인의 귀환과 ‘잔류’

일본 패전 직후 원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에서 한반도로 14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대거 귀환이 전개되었던 것은 한인의 민족 이동뿐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³⁵⁾ 이들 귀환자 대부분은 ‘전재민(明災民)’으로 호칭되었던 것처럼 일본에 강제로 연행되어 전쟁수행을 위한 노동자로 이용되어 피해를 받았으며 일본의 패전과 함께 직장을 잃거나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절대빈곤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현대 한·일 간 전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일본에 ‘잔류’한 재일한인 문제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일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광복 후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가

35) 최영호, 2006b, 「일본의 패전과 재일동포의 귀환」, 한일관계사학회편,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근현대』, 경인문화사, 198~205쪽.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연합국군사령부가 1945년 11월에 발표한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에 있어 초기의 기본지령」에서 부터였다. 이 지령은 재일한인의 지위에 대해 ‘해방민’이지만, 여전히 계속 일본국민이기 때문에 연합국에 대해서는 ‘적국인’이라고 했으며, 그러면서도 ‘일본인’은 아니라고 규정하였다.³⁶⁾ 1947년에는 이들에게 「외국인 등록령」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일한인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는 점령기간 내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일본 정부는 이들에게 국적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들을 외국인화했다.

그후 재일한인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는 배경에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함께 일본 사회로부터의 차별이 있었다. 1959년부터 1982년까지 23년간에 걸쳐 도합 9만 3412명의 재일한인이 ‘북송’ 길에 올랐다. 이 가운데에는 2400명에 달하는 일본인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일회담의 파탄을 무릅쓰면서까지 ‘북송’ 추진을 결정했다. 당시 일본국민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은 재일한인 대부분이 실업자인 터라 생활보조 등 일본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성가신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돌아가고 싶어 하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라”는 주장이 많았다.³⁷⁾ 이처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교육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에서는 재일한인의 귀환과 ‘잔류’에 관한 언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일본의 교과서①, 교과서②, 교과서③ 내용을 살펴보면, 재일한인 관련 서술이라고는 교과서③이 말미 부분의 「민주화의 과제」에서 “재일한국·조선인과 아이누인,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도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제”³⁸⁾라고 언급한 것이 유일하다.

36) 外務省政務局, 1950, 『在日朝鮮人管理重要文書集, 復刻版』, 湖北社, 10쪽.

37) 최영호, 2006c, 「북한으로 보내진 재일동포」, 한일관계사학회편,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근현대』, 경인문화사, 323~332쪽.

38) 교과서③, 214쪽.

그런데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재일한인에 대한 서술에 지극히 인색하다. 재일한인의 ‘잔류’는 말할 것도 없고, 귀환과 관련해서도 교과서⑦는 광복 후 귀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본인이나 한인 중 일반인 귀환자들의 동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해외 ‘독립지사’의 귀환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광복 후 귀환 문제에 관한 지극히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④의 경우에도 정치 부문에서는 교과서⑦와 마찬가지로 해외 망명 정치가들의 귀국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인이나 한인의 일반 귀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④에도 재일한인을 특정하여 거론한 곳은 전혀 없다. 다만 한인의 해외 이주를 언급하는 가운데 “광복 당시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은 만주와 일본이었다. 이들은 주로 국내에서 살기 어려워 새로운 생활을 찾아 떠나거나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 정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상당수는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여,³⁹⁾ 간접적으로 간략하게 재일한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한·일 양국의 경계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일본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고 있는 재일한인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일본인 단일민족사회의 ‘신화’를 일본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거들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한국의 역사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민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이처럼 재일한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들 교과서가 말하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안에 거주하는 좁은 의미의 민족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 교과서④, 340쪽.

4_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여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점령하에 있던 일본 정부는 맥아더 사령부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전쟁에 협력하는 노선을 취했다. 일찍이 요시다[吉田茂] 총리는 “북조선 공산군의 침략을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살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1950년 8월에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정령(政令)의 형태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요시다는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독자적인 재군비에는 반대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안보태세를 확립했다.⁴⁰⁾

무엇보다 한국전쟁은 일본에 전쟁특수를 일으켜 경제적 불황을 탈피하게 했으며 전후 최초로 본격적인 호경기를 맞게 했다.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은 미군의 군수물자와 서비스 보급을 위한 기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쟁특수는 조달 대상이 된 품목 관련 산업부문을 윤택하게 하고, 광공업 생산액, 실질 GNP, 1인당 국민소득, 민간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에 있어서 1950년대 중반에 거의 전전 수준을 돌파하게 했다.⁴¹⁾

또한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재일한인의 민족교육과 민족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었으며, 일본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재일한인 운동가들은 단체 활동을 정지당했다. 점령당국에 의해 비합법 단체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일본공산당은 비록 당내에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전쟁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주류파들은 한반도 내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노선을 채택했으며, 이에 대해 당내 ‘국제파’는 북한의 ‘해방전쟁’과 결탁하여 반제국주의 공동투쟁을 주장함으로써 점령당국과 대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전쟁에는 재일한인 의용군이 참전하기도 했으며, 일본인 군사 기술자가 연합국의 작전하에 전쟁에 관여하기도 했다.

40) 和田春樹, 1995, 『朝鮮쟁점』, 岩波書店, 227~230쪽.

41) 佐々木潤之介 外編, 2000, 『論日本戦史』, 吉川弘文館, 279~280쪽.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관련 서술 내용을 살펴보자.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6·25전쟁'에 대한 기술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재일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과서⑦가 “많은 청년들이 군에 지원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고 서술하고 있어 해외 한인에 대해서까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⁴²⁾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을 지나치게 국내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전쟁과 일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군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서술이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전반적으로 재일한인에 관한 언급이 없는 가운데, 한국전쟁과 재일한인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 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경제적 회복을 논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서의 성격에 따라 군사적 재무장에 대한 평가는 달리 서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①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한 후 치안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설치했다”라고 하여,⁴³⁾ 일본의 재무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교과서②는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찰예비대를 전신(前身)으로 하는 자위대가 1951년에 체결된 미일안보조약과 함께 커다란 정치문제가 되었다”고 하여,⁴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중립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교과서③의 경우는 「조선전쟁과 일본」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비교적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옛 군인들에 대한 공직 추방이 해제되고 경찰예비대에 이들이 채용되었다”고 하여 재무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으며, 반공정책의 일환으로 재무장 움직임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⁴⁵⁾

42) 교과서⑦, 305쪽.

43) 교과서①, 217쪽.

44) 교과서②, 208~209쪽.

45) 교과서③, 358~359쪽.

5_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후 일본의 점령 종결과 새로운 독립국가로서의 출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며 전후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조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다. 대일점령 종결을 위한 강화조약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되었으며 이듬해 4월에 발효되었다. 미 국무부는 1947년 7월 11일 극동위원회를 구성하는 11개국 대표에게 대일강화의 예비회의를 제창했으나 강화회의의 방식에 대한 미·소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냉전이 절정기에 달했던 1949년 9월 미국과 영국 외무장관의 워싱턴 극동회의에서 대일강화의 방침이 협의되었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1950년 2월 중국과 소련의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을 통해 일본과의 강화를 촉진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전면적인 강화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개별접촉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어 결국 대륙의 중국과 대만(臺灣, 중화민국)은 강화회의에서 제외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승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의 강화회의에서 배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전후 처리 문제 등을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본과 개별적으로 힘겹게 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해야 했다. 한국정부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상해임시정부가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을 통해 일본제국과 전쟁을 했다고 하는 전쟁 당사자로서의 논리를 세워 강화조약에 서명국으로서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의 주장은 요시다 총리와 덜레스(J. F. Dulles) 특사에 의해 무시되었으며, 그 대신에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의 주선으로 일본과 단독으로 수교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⁴⁶⁾ 이렇게 볼 때, 대일 강화를 ‘부분 강화’라고 표현하는 경우, 그것은 소련과 중국을 제외한 것과 함께,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식민지에서 새로

46) 최영호, 2002, 앞의 책, 128~129쪽.

태어난 국가도 제외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 내용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한 언급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경우 3가지 교과서 중 어느 것에도 일본의 점령 종결과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일본의 점령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한·일 국교정상화 개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보니 대일 강화조약에 관한 서술이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교과서④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즉 냉전의 확산을 논하는 부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나 제3세계의 형성을 논하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이나 점령 종결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주변국 일본의 전후 독립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편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3가지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일본의 주권 회복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교과서①과 교과서②는 한국과의 관련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③의 경우 강화조약에 일본 영토에 대한 엄중한 제한 조치로서 ‘조선의 독립’ 등이 규정되었다고 했으며, 강화조약 이후 “비교전국인 태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배상에 준하는 지불을 행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서술에서 한반도 독립을 지나치게 국제정치의 소산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점령 종결 후 전후보상에 노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과서③에는 대일 강화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초청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가 중화민국을 유일 정통정부로 인정하여 1952년에 평화조약을 맺은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다.⁴⁸⁾ 이에 반하여 초청받지 않은 국가로서 한반도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

47) 교과서③, 360쪽.

48) 교과서③, 360쪽.

혀 없으며,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6_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국교정상화 회담은 1951년 10월에 미국의 중재 아래 예비회담을 개최하여 기본조약을 체결하기까지 14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일회담 과정과 그 결과로서 맺어진 한·일기본조약은 전후 외교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기능을 했지만 그와 함께 그 후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인식 외교문제의 원점이 되었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조약이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양국이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모호한 타협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현대 한·일관계에서 끊임없이 역사인식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역사 문제가 말끔히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⁹⁾

박정희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으로 국민의 생활고 해결과 경제의 자립화를 내걸었던 만큼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서 일본과의 수교타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외상이 청구권자금에 대해서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장기 정부차관) 2억 달러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수교교섭은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한·일 수교교섭이 타결된 데에는 미국의 권유도 크게 작용했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시기는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냉전구조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였다. 1960년대 중반에 들면서 한미방위협정과 미일방위협정을 양축으로 하여 미국 주도의 반공동맹체제가 견고해지고 있었으며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한국과 일본을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체제에 더욱 긴밀하게 끌어들이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김도 강해졌으며 이러한 미국의 지지와 권유가 수교 타결의 촉진제가 되었다.

49)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출판부, 1~4쪽.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을 조인했다.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일 수교를 단행했다. 한국 측은 청구권자금을 얻는 대신에 식민지 역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보상을 유보했다. 특히 기본조약에서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구조약에 대해 양국의 인식차이를 ‘이미 무효’라는 모호한 문구로 처리함으로써 양국이 식민지 지배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수궁하는 태도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 내용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 관한 언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한국의 교과서⑦는 국교정상화 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5·16 군사정변」 부분에서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협정을 체결하였다”라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⁵⁰⁾ 교과서④ 역시 대일 수교 과정에 대해서는 서술을 생략하고 있다. 다만 국교정상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 실현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학생들의 격렬한 반대를 억누르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라고 하여,⁵¹⁾ 중학교 교과서인 교과서⑦보다는 진일보한 서술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고도성장」 부분에서 경제성장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박정희 정부의 ‘외국에서 도입한 차관’을 언급하면서도, 대일 청구권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교과서④는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실습 활동을 위한 문제로 김종필과 오히라에 의한 비밀회담 기록을 제시하고 한·일 회담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도록 한 것은 이 문제의 복합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의 서술에서는 다음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 문제의 복합성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50) 교과서⑦, 311쪽.

51) 교과서④, 126쪽.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²⁾

“한·일 회담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과 시민, 언론들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에 반대하였다. 학생들은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1964년 6월에는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대적으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비상계엄과 휴교령으로 반대운동을 억눌렀다. 그리고 이듬해 대학과 고등학교의 문을 닫고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한 가운데 한·일 협정을 비준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의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한·미·일 공동 안보체제가 형성되었다.”

한편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도 한국과의 관계수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역사인식의 차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교과서①은 “1965년에는 일본이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으며 유상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라고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데,⁵³⁾ 이는 경제협력으로 전후처리를 다했다고 보는 관점이 드러난 서술이다. 교과서②는 “일본이 1965년에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어 한국 정부를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서 승인했다”라고 간단히 서술하는 있는데,⁵⁴⁾ 이는 냉전체제에 맞추어 북한을 제외시킨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내포한 서술로 보인다. 교과서③에서는 한·일기본조약이 “1910년 이전의 모든 조약의 실효(失效)를 확인했다”라고 하여, 한국 측이 무효(無效)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정부를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한국과 국교를 맺었다”라고 하여, 교과서②와 동일한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⁵⁵⁾

52) 교과서④, 286쪽.

53) 교과서①, 221쪽.

54) 교과서②, 211쪽.

55) 아울러 교과서③에는 각주에서 7차에 걸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해설하고 있다. 교과서③, 367~368쪽.

7_ 이승만 라인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문제는 1950년대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의 이슈가 되었으며,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한 쟁점이 되었다. 오늘날의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신생 한국 정부가 독립국가로서 일본에 대해 해양법 규범과 영유권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후보상 문제와 함께 일본과의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심한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50년대 당시와 오늘날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1951년 9월 독도를 포함하여 기존의 ‘맥아더라인’과 거의 유사하게 어업보호수역 확보를 위한 경계선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의 어족자원 남획에 대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경계 설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일본인들이 그어놓은 트롤어업금지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어업관할수역 안을 참고하면서 수역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어업보호수역의 설정은 나중에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맥아더라인’이 철폐되면 일본 어선의 무분별한 대거 침범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호수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국무회의는 어업보호수역 안에 대륙붕 이론을 가미하고 국방상의 안보 의미까지 포함하여 ‘평화선’을 결정하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⁵⁶⁾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평화선’ 문제에 관하여 하등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3종의 한국 역사 교과서는 한결같이 이승만 정부의 비민주성에 대한 언급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신생 정부의 고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정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평가로서 이것은 역사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평화선’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 개인 혹은 이승만 정

56) 지철근, 1979, 『평화선』, 범우사, 109~129쪽.

부에 관한 서술조차 전혀 없어, 일본의 중·고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신생 한국 정부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8_ 전후 처리와 역사인식을 둘러싼 외교

일본 정부는 전후 일관되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주변국과의 사이에 외교적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대일관계에서 우호와 협력을 중시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당국으로 하여금 그 대응에 있어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왔다.

다만 일본 사회에서 일본 정부를 향하여 과거사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일 역사인식 외교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되어 왔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 정치가는 물론이고 지식인들이나 일반 대중이 과거 전쟁에 대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아시아에 행한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는 데 소홀히 했던 것에 비추어, 1960년대에 들어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과거사 반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의 일부 정치가들이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식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의 움직임 가운데에도 양국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역사인식 문제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해 왔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외교적 갈등현상은 역사인식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갈등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양국 국민간의 상호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⁵⁷⁾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 내용에서 관련 사항에 관한 언급 상황을 구체적으

57) 최영호, 2005,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외교』 제73호, 34~42쪽.

로 살펴보자. 한국의 역사교과서 3종 모두 국교정상화 과정이나 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에 관한 집중 서술이 없다 보니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일외교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과서④만이 「현대 문화의 동향」 부분에서 실습활동을 위한 문제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있다. 후소샤 발행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실례(實例)로 들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실태를 제시하는 가운데 “1982년에 이어서 2001년에도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페이지에서 실습활동 과제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식을 조사해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 보자” “우리가 다른 나라인 일본에게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토의해 보자”라고 하고 있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가운데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⁸⁾

일본의 3종 역사교과서 모두에서도 본문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외교에 관한 서술이 없으며, 일부 교과서에서 사진 설명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교과서①과 교과서③에는 관련 서술이 전혀 없다. 교과서②에는 「세계의 일체화와 일본의 역할」 부분에 “현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많으며 다른 나라와 협조·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협조 외교의 과제에 관한 서술이 있는데, 그것을 역사인식과 관련한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페이지에 전후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일본 기업(신일본제철)과 화해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한국인 사진을 게재하면서, “전쟁 중에 끌려와 강요받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몇 가지 재판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⁵⁹⁾ 한·일 간 역사인식으로 인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모두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관한 서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⁶⁰⁾ 전반적으로 역사인식 외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극히 미약하다.

58) 교과서④, 343쪽.

59) 교과서②, 215쪽.

60) 교과서①, 223쪽; 교과서②, 213쪽; 교과서③, 387쪽.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전후에 들어 한·일관계에서 언제나 쟁점이 되어 왔던 역사인식 문제와 전후 처리 문제를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_ 한·일 민간교류

한국과 일본의 민간교류는 전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한·일 양국의 상대방 인식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인식을 억제해 왔다. 1990년대 일본사회의 보수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 한·일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에도 그런대로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민간교류의 긍정적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일 양국은 1965년의 국교 수립 이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꾸준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965년에 2억 달러에 지나지 않던 양국의 무역규모가 2004년에 이미 연간 6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양국 시장통합의 개시를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인적인 교류도 점차 활발해져 1965년의 수교 당시에는 연간 1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4년 한 해에 4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양국을 왕래했다. 나아가 오늘날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화교류행사가 양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후하여 한·일 양국 국민간의 우호적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라든지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난 것 등은 전반적으로 양국 민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⁶¹⁾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에서 한·일 간 민간교류에 관한 언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한국의 교과서(가)와 교과서(다)에는 이

61) 최영호, 2006d, 「현대 일본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일본인의 한국 인식」, 박영철 외, 『동아시아의 타자인식』, 제이앤씨, 284~285쪽.

와 관련한 서술이 전혀 없다. 그런데 교과서①은 「대중문화의 성장」 부분에서 한류 문화가 일본 등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고 관련 사진을 싣고 있다.⁶²⁾ 그리고 「체육활동의 성장」 부분에서 2002년 한·일 공동주최 월드컵 축구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그곳에서 “2002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한국 축구는 4강 진출의 성과를 올렸고, 거리 응원이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응원문화도 만들어냈다”⁶³⁾고 기술하는 등 한·일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한국 중심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 책이 현대 대중문화의 변화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북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3종 모두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국제관계에 있어서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선정된 교과서가 모두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성과와 과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②가 유일하게 「세계의 일체화와 일본의 역할」 부분에서 “일본 국민으로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지구시민)으로서 좀더 나은 사회 만들기를 생각해 가자”라고 하여,⁶⁴⁾ 민간교류의 과제와 필요성에 관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민간교류에 의한 상호 이해에 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없다.

62) 교과서①, 331쪽.

63) 교과서①, 332쪽.

64) 교과서②, 215쪽.

IV. 맺음말

본 논문은 본론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3종씩을 선정하고 9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후 현대 시기에 관한 교과서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인 쟁점별로 역사개설서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일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전후 조선총독부의 잔무 처리과정, 즉 일본의 패전과 미군정 확립 사이의 과도기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2. 패전 직후 한반도 일본인의 귀환에 관한 서술과 관련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대체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 교과서는 언급에 인색하다. 일본제국 신민이 전후 재편되는 국가의 국민으로 어떻게 재편되어 가는지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것이다. 귀환을 다루는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귀환이 부당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인 전쟁의 소산이며 전후 국제관계의 재편과정의 일환이었다는 것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고난으로 점철된 귀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재일한인의 귀환과 '잔류'에 관한 서술과 관련하여, 양국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무시하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계인으로 살아 온 마이너리티를 역사교육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다.

4.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여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일본경제의 전쟁특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나 일본 사회의 반전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교과서가 점령당국이 반공정책을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일본 사회의 반전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6·25'에 관한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여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국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는, 한·일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강화조약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일본의 교과서는 강화조약에 관한 언

급은 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대일 강화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국가로서 중국과 중화민국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한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6.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14년간에 걸친 과정에 관한 언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교과서 일부가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으로서 전후처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의 교과서는 일부가 한반도에서 한국만을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7. 이승만 라인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모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교과서는 주로 이승만 정부의 비민주성에 초점을 맞춘 서술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교과서는 아예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양국 모두 역사 교육에 있어서 신생 한국의 고뇌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8. 전후 처리와 역사인식 외교에 관한 서술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교과서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부 교과서에서 실습활동 과제나 사진 설명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9. 한·일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역사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언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가 적극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언급하고, 일본의 교과서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인의 과제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실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국간 민간교류와 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개별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파악한 교과서 내용과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이미 머리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국의 교과서 서술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는 국제관계에 관한 묘사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상호관련성이 높은 주변국으로서의 한·일관계에 대한 서술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는 국가와의 관계와 한·일 양국 국내의 정치체제 변동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국이나 경계인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며, 따라서 식민지와의 전후 재편과정이나 '민족 이동'에 대한 언급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사교육이 지나치게 민족 중심적이라는 데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통일되고 고정된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을 중시하다 보니 재일한인이나 한반도 거주 일본인과 같은 해외의 민족이나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광복 전 식민지 사회에서 전후 사회로의 변화 과정, 일본 식민지 지배의 전후 처리 과정에 대한 서술을 미흡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국내 사회의 변동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서술하면서도 국가간 사람들의 움직임, 즉 '민족 이동'에 대해서는 서술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Portrayals on Korea – Japan Relations in the Text Books of National History in Korea and Japan

Choi, Young-Ho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portrayed on the postwar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text books about national history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today's Korea and Japan. Three books widely used in each country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for this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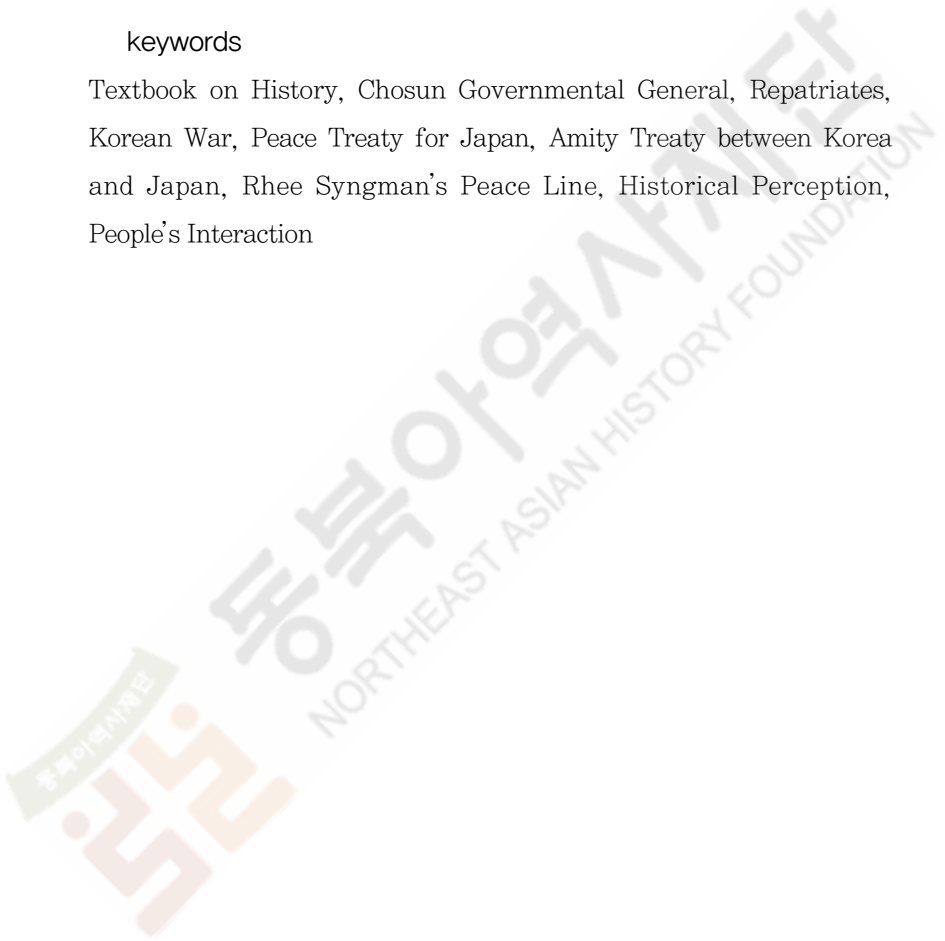
The important issues in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nations are in writer's opinion as follows : (1) Chosun Governmental General's operations after the war, (2) Japanese repatriates from Korean peninsula, (3) Korean repatriates from Japan, (4) Japan's engagement in Korean war, (5) Korean problems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for Japan, (6)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of two nation's diplomatic relation, (7) Rhee Syngman's Peace Line, (8) Postwar problems and diplomatic dispute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9) People's interaction across two countries.

In conclusion, two problems in common are found in the books as weak points in the field of history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First, the text books lack contents about postwar relation of Korea and Japan on the whole, regardless many or few descriptions on the international affairs within them. Second, there is little consideration on the marginal people, the social minorities and people's migration

in the books, while focused mainly on own nationals, politicians, and social majorities.

keywords

Textbook on History, Chosun Governmental General, Repatriates, Korean War, Peace Treaty for Japan, Amity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Rhee Syngman's Peace Line, Historical Perception, People's Interaction



논문



중국의 신교육과정과 역사과정표준실험교과서

김 지 훈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I. 머리말

최근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이 언론에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후소사[扶桑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등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었다. 한편 중국학계의 고구려·발해사 등 고대사 인식은 한국학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공정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양국의 역사인식의 편차가 표면화되었다.¹⁾

우리 학계에서는 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는 중국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인식의 특징과 국가주의·애국주의와의 관련성 등에서 성과를 얻었다.²⁾ 또한

1) 여호규, 2004,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 인식체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26집 참조.

2) 중국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인식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은자, 2003, 「아편전쟁과 중국의 '문화개방'에 대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중국교과서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중화민족론 등에 관한 연구³⁾와 1949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중국의 역사교과과정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⁴⁾ 그리고 중국의 역사교과서가 한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다.⁵⁾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교과과정과 역사교과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중국의 『역사과정표준』과 역사교과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과정표준』과 실험교과서의 전반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지 못한 상

19집; 박정현, 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중국 근현대사연구』 20집; 유용태, 2002, 「중국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과 국가주의」, 『역사교육』 84집; 유용태, 2004, 「환호 속의 경종: 전장 중국에서 본 러일전쟁」, 『역사교육』 90집; 윤휘탁, 2002, 「중국의 애국주의와 역사교육」, 『중국사연구』 18집; 오병수, 2004, 「중국의 위험한 민족수난사 교육: 근현대교과서의 전쟁사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4집; 윤휘탁, 2005, 「'동아시아 근현대사상 만들기의 가능성 탐색」, 『중국근현대사연구』 25집.

- 3)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중국의 역사교육과 민족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박장배의 연구가 있다. 박장배, 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中華民族 정체성 2 -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민족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20집.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김유리, 2005a,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 론」, 『북방사논총』 6호.
- 4)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에 관해서는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6,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 『중국 역사 교과서의 민족 국가 영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김지훈, 2006,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집이 있다. 역사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오병수, 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80집; 오병수, 2002,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추이와 최근 동향」, 『역사교육』 84집; 김유리, 2001, 「중국 교육과정의 변천과 역사교육」, 『근대중국연구』 2집; 김유리, 2005b, 「역사교과학대강에서 역사과정표준으로- 최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개혁」, 『역사교육』 96.
- 5) 최근 중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사 서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다. 박영철, 2002, 「중국역사교과서의 한국사서술」, 『역사교육』 84집; 전인영, 2002, 「중국근대사 교육의 관점과 한국사 인식」, 『역사교육』 84집; 장세윤, 2004, 「近刊한·중 역사교과서의 양국 관련내용 검토」, 『백산학보』 68집; 김지훈·정영순, 2004, 「최근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한국사」, 『중국근현대사연구』 23집; 김지훈·정영순, 2005, 「중국 실험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인식」, 『사학연구』 78호; 김지훈, 2006a, 「중국의 역사과정표준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서술」, 『한국근현대사연구』 36집.

태에서 주로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역사교학대강』·『역사과정표준』과 역사교과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다.

중국의 교과서제도는 1980년대 이후 과거의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이행하였고 과거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교과서에서 『역사과정표준』에 의한 교과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역사교과과정은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국가과정과 한정된 지역에서 사용되는 지방과정, 특정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중국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의 교과과정의 변화에 따른 새 교과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국가과정과 실험교과서를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II.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와 새로운 교과과정의 특징

1. 중국 교과과정의 변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교과과정은 8차례의 비교적 큰 변화를 겪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1950년 8월 교육부에서 『중학삼행교학계획(초안)』과 『중등학교삼행교력』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1952년 3월 18일 교육부는 다시 『소학삼행규정(초안)』을 공포하였다. 소학교의 학제를 5년으로 하고 어문,

산술, 체육, 미술과 음악과정을 개설하였으며 4~5학년에 자연과 역사, 지리과목을 두었다. 이 과정은 소련의 과정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으며 단일한 필수과목을 설치하여 전국에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제2차 교과과정개혁은 1953년 3월 교육부에서 『중소학교학대강(초안)』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교학대강은 소련의 교학대강을 참조하여 소학산술, 중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5과목의 교학대강을 채용하였다. 1956년 새로운 교재가 편찬되어 사용되었고 12년의 학제가 수립되었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교육부는 거의 매년 새로운 교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치와 외국어 과정의 변화가 많았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58년 9월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교육공작에 관한 지시』를 반포하면서 실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학제를 단축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959년 5월 『보통중소학과 사범학교 교재 편찬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어 다시 중소학 교재를 편찬하였다. 1960년 하반기부터 인민교육출판사는 학제 단축에 부응하여 10년제 중소학교재를 편찬하였다.

제4차 교과과정은 1963년 7월 교육부에서 『전일제 중소학 교학계획(초안)』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문화과, 정치과, 생산지식과에 교육과 생산노동과 방학을 배치했다. 그러나 1964년 초 毛澤東은 학제를 단축하고 교과과정을 줄이도록 하였고 이어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이 교과과정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⁶⁾

제5차 과정개혁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인 1978년 1월 교육부에서 학제와 수업시간, 각 학년의 정치과정과 문화과, 공업학습, 농업학습, 군대학습 등의 시간을 규정한 『전일제 10년제 중소학 교학계획 시행초안』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초안은 소학 5년, 중학 5년의 10년제를 실시했고 외국의 교과과정 개혁을 참고하여 교육내용을 현대화시켰다. 1981년 교육부는 『전일제 5년제 중학 교학계획 시행초안의 수정의견』과 『전일제 6년제 중

6) 鍾啓泉·崔允潔, 2004, 『新課程的理念與創新』,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2~24쪽.

점중학교학계획』을 반포하였다.

제6차 과정개혁은 1985년 중공중앙이 교육체제의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반포하면서 시작되었다. 1988년 9월 교육부는 『의무교육전일제 소학, 초급중학교학계획(시행초안)』과 24개 학과의 교학대강을 반포하였다. 1990년 3월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시 『현행 보통고중 교학계획의 조정의견』을 반포하였다. 이 조정계획으로 교육내용이 감소하고 선택과목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보통고중(고등학교)의 교학계획이 처음 단독으로 제정되었다.

제7차 교과과정은 1992년 8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이 시행되고 『9년의무교육전일제 소학, 초급중학교과정방안(시행)』이 반포되었다. 1996년 교육부는 『전일제 보통고중과정계획(시행)』을 반포하였고, 2000년 다시 『전일제 보통고중과정계획(시험수정고)』이 반포되었다. 이후 교학계획이 과정계획으로 바뀌었다.⁷⁾

제8차 과정개혁은 2001년 교육부에서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가 반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1년 11월 『의무교육과정설치실험방안』과 2003년 『보통고중과정방안(실험방안)』⁸⁾이 반포되어 전국 각지에서 과정개혁이 실시되었다.⁹⁾

2_ 8차 교과과정의 채택과 실험교과서 발행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중국의 교육 외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지식경제로 진입하였으며, WTO에 가입하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초교육 분야의 학과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학생들의 발전과 개성을 배양

7) 중국의 교과과정변화와 역사교육에 관해서는 김유리, 2001, 앞의 논문 참조.

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3,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9) 馮生堯, 2004, 『課程改革—世界與中國』, 廣州: 廣東教育出版社, 1~2쪽.

하는데 적합하지 못했다. 특히 과정목표가 지식 측면에만 치중되어 학생들의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부적합하였다. 또한 과정이 학과 단위로 되어 있어 종합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내용이 진부하여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¹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에서 국민 전체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에 편중된 교육에서 탈피한 사회주의 근대화 건설에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였다.¹¹⁾

1996년 7월 중국 교육부의 基礎教育司는 6개 대학 등의 전문가들로 1993년에 시작된 9년 의무교육과정의 실시상황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하였다. 1997년 9월 이후 교육부의 기초교육사는 관련 전문가를 동원하여 새로운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의 기초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고 새로운 기초교육과정의 방향을 연구하여 1998년 말 신과정에 대한 기본 골격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1999년 1월 교육부 기초교육사는 사범대학, 교과과정, 교육학, 심리학, 학교 교장 등 40여 명의 교육전문가들로 ‘기초교육과정개혁 전문가공작조’를 만들었다. 이들은 2년 반의 연구를 거쳐 『기초교육과정개혁강요(시행)』를 기초하여 2001년에 정식으로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 18개 학과의 과정표준과 49권의 실험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하여 전국의 38개 실험구에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전국의 매 地區와 市에서 적어도 1개의 실험구(500개)가 설치되었고,¹²⁾ 2003년 과정표준과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중국의 중학교 실험교과서는 원래 계획으로는 2005년 정식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시기가 늦춰져서

10) 靳玉樂, 2003, 『新課程改革的理念與創新』,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3~16쪽.

11) 諸外國の教科書に關する調査研究委員會, 2003, 『中國の教育課程改革と新しい教科書—歴史教科書を中心に—(中間報告)』, 7쪽.

12) 教育部基礎教育司, 2002,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解讀』,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쪽

2007년 가을학기(중국의 1학기)부터 기존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하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2003년에 『역사과정표준』¹³⁾이 발표되었고 2004년 가을학기부터(중국의 1학기) 海南島, 廣東, 寧夏, 山東 등 4개 성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실험이 시작되었으며¹⁴⁾ 2006년에는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3_ 8차 교과과정의 특징

2001년의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에 의하면 8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애국주의, 집체주의(集體主義)정신을 갖추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민주법제 의식을 갖추고 국가의 법률과 사회의 공공도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다. 넷째,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창조 정신, 실천능력, 과학과 인문소양 및 환경의식을 갖추는 것 등이다.¹⁵⁾

8차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이 학과 과목을 강조하여 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실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균형성, 종합성, 선택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의 어렵고, 과다하고, 편중되고, 낡은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하였다. 이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급중학(중학교)과정은 분과(分科)과정과 종합과정이 결합한 과정이다.

13)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4) 馮生堯, 2004, 앞의 책, 2~4쪽.

15)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2001. 6).

특히 새로운 교과과정은 몇 개의 과목이 종합된 종합과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과정에는 사상품덕, 어문, 수학, 외국어, 과학(또는 물리, 화학, 생물), 역사와 사회(또는 역사, 지리), 체육, 예술(또는 음악, 미술) 등이 있다. 초급중학과정은 의무교육의 과정이므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公民 소질교육을 체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급중학(고등학교)과정은 분과 과정 위주로 편성되었다. 고급중학은 필수 과목을 개설하고 풍부하며 다양한 선택과목[選修科目]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¹⁶⁾ 고급중학과정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요구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전제로 차별성과 선택성을 갖춘 선택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생존력, 실천력과 창조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실천을 통하여 탐구와 창조성을 높이고 과학연구의 방법을 학습하며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려 한다.

III. 중학교 역사교과과정과 실험교과서

중국의 역사교과과정은 과거 『역사교과대강』체제에서 『역사과정표준』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중학교의 역사교과과정은 『역사교과대강』이외에 북경사범대학, 화동사범대학, 서북사범대학에서 편찬한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고)』¹⁷⁾과 북경사범대학에서 편찬한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1)』,¹⁸⁾ 인민교육출판사에서 편찬한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 과정표준(2)』¹⁹⁾ 등 3

16)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2001. 6).

17)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3,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2, 『全日制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1)(實驗稿)』,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2, 『全日制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2)(實驗稿)』,

〈표 1〉 2006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역사 실험교과서²⁰⁾

지역	과정	교과서명	출판사	출판권수
전 국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고)』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7년급 상하, 8년급 상하책)(4권)	人民教育出版社	4
			人民教育出版社	4(5·4제)
			華東師範出版社	4
	상 해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사회 과정표준 1·2』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6권)	岳麓書社
四川教育出版社				4
中華書局				4
中國地圖出版社				4
山東教育出版社				4(5·4제)
人民教育出版社				2
人民教育出版社				2(5·4제)
복 경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 과정표준(실험고)』	北京市義務教育課程改革實驗教材 歷史 1~6권	北京師範出版社	6
			河北人民出版社	6
상 해	『上海市 中學 歷史課程標準(征求意见稿)』	九年義務教育教本 中國歷史(7년급1,2학기 2권) 世界歷史(8년급1,2학기 2권)	人民教育出版社	5
			上海教育出版社	6
상 해	『上海市 中學 歷史課程標準(征求意见稿)』	九年義務教育教本 中國歷史(7년급1,2학기 2권) 世界歷史(8년급1,2학기 2권)	地質出版社	6
			華東師範出版社	4
복 경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 과정표준(실험고)』	北京市義務教育課程改革實驗教材 歷史 1~6권	北京出版社	6
			北京師範大學出版社	

종의 『과정표준』으로 다양해졌다. 이렇게 과정표준이 다양해지면서 『역사와 사회』 교과서 3종을 포함하여 모두 13종의 국가급 중학교 역사 실험교과서가 출판되어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 이 표는 『2005年秋季普通初級中學教學用書目錄』과 『2005年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學用書目錄』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_ 중학교 역사교과과정과 역사 실험교과서

중학교의 역사교과과정은 북경사범대학·화동사범대학·서북사범대학에서 편찬한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고)』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초급중학교의 『역사과정표준』은 기초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과정표준이 규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업성취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²¹⁾ 이 『역사과정표준』은 중국고대사, 중국근대사, 중국현대사, 세계고대사, 세계근대사, 세계현대사의 6부분의 내용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고대사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9년 의무교육 전일제 초급중학 역사교과학대강』의 중국고대사 부분이 21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던 것²²⁾에 비하면 『역사과정표준』의 중국고대사 부분은 9개의 비교적 큰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사과정표준』의 중국고대사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성립을 강조하고, 척계광의 왜구토벌과 정성공의 타이완 수복 등을 가르쳐서 중국인민의 반침략 투쟁정신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에 주장대신을 설치한 것 등을 통해 청나라의 변강지역 관리와 국가통일을 유지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는 중국 고대사의 업적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의 표지에서도 인민교육출판사는 진시황 병마용과 동마차를 수록하여 진나라 문화를 강조하고 있고,²³⁾ 岳麓書社は 진시황 병마용을 배경으로 공자와 각종 청동기로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²⁴⁾

21) 劉軍, 2003, 『歷史教學的新視野』,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53쪽.

22)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2,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試用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6~11쪽.

23)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년 6월 1판, 2003년 7월 2쇄,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4) 初中歷史課本編寫組, 200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教學參考書 7年級 上冊』, 長沙: 岳麓書社.

〈표 2〉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의 중국고대사 부분²⁵⁾

	학습주제	내용표준의 개요
중 국 고 대 사	1. 중화문명의 기원	원모인 등 중국 내 원시인류의 문화 이해, 하모도, 반파유적의 특징, 염제·황제, 요·순·우의 전설을 알고 전설과 사실을 구별
	2. 국가의 탄생과 사회변혁	하, 상, 은나라의 교체, 서주 봉건제, 춘추쟁패와 전국칠웅, 상앙의 변법을 통하여 전국시대의 사회변혁 인식
	3. 통일국가의 건립	진시황의 통일국가 건립의 의의, 진승·오광의 起義, 한무제의 大一統의 사실, 장건의 서역 방문과 비단길을 통한 중국과 외국의 교류인식
	4. 정권분립과 민족융합	삼국정립 이해, 인구의 남쪽으로 이동과 강남개발, 북위 효문제의 민족융합 조치 기술
	5. 번영과 개방의 사회	수와 당의 과거제도의 내용, 정관지치의 내용, 무척천과 개원성세의 사실, 당과 토번 등 민족교류, 건당사, 현장의 西行, 監眞의 東渡 등
	6. 경제중심의 南移와 민족관계의 발전	송대 남방의 생산과 상업번영, 송대의 사회생활, 요·송·서하·금 등 정권의 병립, 칭기즈칸의 몽골통일과 쿠빌라이의 원조 건립 등 민족관계
	7.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공고와 사회의 위기	명청의 전제통치의 강화, 정화의 원정, 척계광의 항왜, 정성공의 타이완 수복 등 청조의 주강대신 설치, 쇄국의 주요표현
	8. 과학기술	중국고대 청동공예의 성취, 『구장산술』로 고대 중국의 수학을 이해하고 장중경과 『상한잡병문』, 이시진의 『본초강목』, 『수경주』, 『제민요술』, 『천공개물』 소개, 중국의 4대발명 이해
	9. 사상문화	갑골문, 금문 소전, 예서 등의 자체의 변천, 공자와 백가쟁명, 불교의 전래와 도교의 흥기, 당시와 宋詞, 명청 소설로 고대문학 이해, 『사기』와 『자치통감』 등

이들 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25)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6~10쪽.

의 연구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추진된 ‘하상주단대공정’은 중국 고대사의 연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역사학, 고고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과에서 공동으로 연구하여 중국고대의 하왕조와 은왕조의 연대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공정의 결과로 夏나라의 연대를 기원전 2070년에서부터 기원전 1600년까지, 商나라를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046년까지로 확정했다.²⁶⁾

1990년대에 출판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연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기원전 841년 주나라의 共和 元年 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대를 기술하지 않았다. 1998년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 1책에는 하나라의 연대를 약 기원전 21세기부터 약 기원전 16세기로 보았고, 상나라의 경우 약 기원전 16세기에서 약 기원전 11세기까지로 추정된 연대표를 수록했다.²⁷⁾ 사천교육출판사에서 1998년 출판된 『중국역사』 1책의 중국역사연대표에도 같은 서술을 하고 있었다.²⁸⁾

그러나 ‘하상주단대공정’의 결과가 발표된 2000년 이후에 출판된 교과서에는 하왕조와 은왕조의 연대를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중국역사』 7학년 상책에는 중국역사연표에는 하왕조가 기원전 2070년부터 1600년까지, 상왕조가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존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이외의 악록서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중화서국, 중국지도출판사, 하북인민출판사, 사천교육출판사, 산둥교육출판사 등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단지 화동사범대학출판사의 『중국역사 초급

26) ‘하상주단대공정’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방향숙, 2006, 「夏商周斷代工程」의 현황과 의미, 『북방사논총』 10호, 고구려연구재단 참조.

27) 人民教育出版社歷史室, 1992년 10월 1판, 1998년 4월 8쇄, 『義務教育三年制四年制 中國歷史 1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74쪽.

28) 內地版初中歷史教材編寫組, 1994년 6월 2판, 1998년 5월 6쇄,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試用課本 中國歷史 1冊』,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42쪽.

29)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2001년 6월 1판, 2003년 7월 2쇄,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34쪽.

중학 1학년 상』에서만 하왕조가 기원전 21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 존재했다고 보고 상왕조가 기원전 1046년에 멸망했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⁰⁾

따라서 ‘하상주단대공정’에서 하나라와 상나라의 연대가 확정된 후, 대부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구 결과도 중국학계에서 통설로 인정받을 경우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근대사 부분에서는 1840년부터 1949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1.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항쟁, 2. 근대화의 시작, 3. 신민주주의 혁명의 흥기, 4.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5. 인민해방전쟁의 승리, 6. 경제와 사회생활, 7. 과학기술과 사상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의 중국근·현대사 부분³¹⁾

중국근대사	중국현대사
1.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항쟁	1.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공고
2. 근대화의 시작	2. 사회주의 길의 탐색
3. 신민주주의 혁명의 흥기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4. 중화민족의 항일전쟁	4. 민족단결과 조국통일
5. 인민해방전쟁의 승리	5. 국방건설과 대외성취
6. 경제와 사회생활	6.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7. 과학기술과 사상문화	7. 사회생활

중국현대사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를 1.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공고, 2. 사회주의 길의 탐색,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4. 민족단결과 조국통일, 5. 국방건설과 대외성취, 6.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7. 사회생활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는 중국당대사의 경우 특별히 鄧小平理論과 江澤民的 ‘3개 대표론’을 강조하고 있다. 2002년 거

30) 王斯德, 2002년 6월 2판, 2005년 6월 8쇄, 『中國歷史 初中一年級(七學年)(上)』,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34쪽.

31)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11~20쪽.

행된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이론과 함께 ‘3개 대표론’을 공산당의 지도사상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³²⁾

〈표 4〉 2001년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의 세계사 부분³³⁾

세계고대사	세계근대사	세계현대사
1. 선사 시기의 인류	1. 서구 주요국가의 사회 변혁	1. 소련사회주의의 길의 탐색
2.上古 인류문명	2. 제1차 공업혁명	2. 베르사유-위싱턴체제 하의 서방세계
3. 中古아시아·유럽문명	3. 식민 확장과 식민지 인민의 항쟁	3. 제2차 세계대전
4. 문명의 충돌과 융합	4. 부르주아계급통치의 공고와 확대	4. 주요자본주의국가의 발전 변화
5. 과학기술과 사상문화	5. 국제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5.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과 변화
	6. 제2차 공업혁명	6. 아시아·아프리카국가의 독립과 진흥
	7. 제1차 세계대전	7. 전후 세계체제의 변화
	8. 과학과 사상문화	8. 과학기술과 문화

세계고대사에서는 1. 선사 시기의 인류, 2.上古 인류문명, 3. 中古아시아·유럽문명, 4. 문명의 충돌과 융합, 5. 과학기술과 사상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새 역사교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친 진시황, 한무제, 효문제, 당태종, 장건, 반초, 정화, 왕소군 등의 인물과 상앙과 왕안석과 같은 개혁가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자, 손

32) 中華書局中學歷史教材編委會, 2005,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年級 下冊』, 北京: 中華書局, 58~60쪽.

33)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20~32쪽.

자, 굴원, 이백, 두보, 이시진, 서광계 등 문화부문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의 새 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주요 내용을 정문(正文)에 서술하고 그 아래에 해서체(楷書)로 열독문자(閱讀文字)를 배열하여 학생들이 읽고 지식을 습득하며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두뇌활동(動腦筋)에서는 학생들이 역사문제를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과 탐구(活動與探究)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한 후에 소규모의 토론을 하거나 연극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여 역사와 현실생활의 밀접한 연계 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모든 과의 마지막에는 자유열독카드(自由閱讀□)를 배치하고 교과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시기의 관련된 문명과 사회생활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역사공부에 흥미를 느끼도록 배려하고 있다. 각 과의 본문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活動課’를 설정하고 있다. 활동과는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자료수집, 토론 등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교과서의 말미에는 역사연표와 추천도서, 역사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통하여 스스로 관심분야를 찾아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역사과정표준』과 역사교과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³⁴⁾ 2005년 10월 일부 언론에서 연변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9학년 상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과서는 2003년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9학년을 번역한 것으로 이미 2003년에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³⁵⁾ 원래 2000년 『구년의무교육

34) 중국의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교과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졸고, 2006b, 「현대중국 역사교과서의 역사 1949~2006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75집.

35) 2003년 6월에 출판된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9학년 상책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이미 삭제되었다.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3, 『世界歷史』 9年給 上册, 人民教育出版社, 26~29쪽. 중국의 중학교 실험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김지훈·정영순, 2005, 앞의 논문 참조.

전일제초급중학역사교과학대강(시용수정판)의 세계역사 30쪽에는 「아시아봉건국가」 항목에서 조선, 일본, 이슬람교의 흥기와 아랍제국, 오스만제국³⁶⁾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역사교과학대강』에 의거하여 편찬된 중국의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사 관련 내용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전일제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실험고)』의 세계고대사 부분 22쪽에서는 中古 아시아·유럽문명에서 “타이카개신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마호메트의 주요 활동을 서술하라”³⁷⁾고 하여 한국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인민교육출판사를 비롯하여 화동사범대학출판사, 악록서사, 사천교육출판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 중국지도출판사, 하북인민출판사 등 모든 중학교 역사실험교과서 9학년 상책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³⁸⁾

2006년 중국의 인민교육출판사는 한국 측의 시정요청을 수용하여 2006년 가을학기에 사용될 중학교 『세계역사』 9학년 上冊에 한국사 관련 내용을 한국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매우 간단하게 서술하였다.³⁹⁾ 이 교과서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실제로는 영조의 어진)’을 게재했고 漢城이 지금의 서울[首爾]이라는 각주를 달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에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했지만 본문이 아닌 ‘자유열독카드(自由閱讀□)’ 항목에 기술하였다. 역사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크게 수정할 경우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절

36)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0,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試用修訂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30쪽.

37)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1,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2쪽.

38) 인민교육출판사의 중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2001년 6월에 『중국역사』 7학년 상권이 출판되어 2001년 가을학기(1학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매 학기마다 1권씩 발행되었고 2003년 8월에 9학년용 『세계역사』 상권이 출판된 것이다. 그리고 이 교과서가 2005년 번역되어 가을학기부터 연변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9)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6년 3월 2판, 2006년 6월 5쇄,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世界歷史』 9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7쪽.

차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에 대해 '자유열독카드'라는 항목에 일본 사무라이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고 대신 한국사 관련 내용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라고 소개하면서 영조대 왕의 어진을 수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비록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역사』 교과서에 미흡하지만 한국사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중국의 중학교 『세계역사』에서 빠져버린 한국사 관련 내용을 본문에 기술하기 위해서는 중국 교육부의 『역사과정표준』을 개정해야 한다. 『역사과정표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교과서의 부분적인 수정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교과서 서술의 변화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과정표준』의 내용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학교 실험교과서는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7년 가을학기부터 기존의 교학대강교과서를 대체하였다.

2_ 중학교 역사와 사회 교과과정과 『역사와 사회』 실험교과서

새로운 과정표준에 의한 교과체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과와 재편과 통합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역사』와 『지리』교과를 통합한 『역사와 사회』라는 통합 교과목이 만들어졌다. 이 교과과정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 소양을 향상시키며 사회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과거의 사실이나 정태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생활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이후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은 1.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성장, 2. 우리 신변의 경제·정치와 문화, 3. 우리가 생활하는 구역과 환경, 4. 중국역사와 문화, 5. 세계역사와 문화, 6. 사회탐구기능과 방법 등 모두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 중국역사와 문화⁴⁰⁾

내용표준	
고사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는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조국의 역사에 친근감과 탐구의 願望을 증대시킴 • 고대인의 생산, 생활을 이해하고 고대문명의 기원을 인식 • 중화민족의 융합과 발전을 이해하고 각 민족 인민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만들어 공동으로 조국의 문화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식 • 중국고대생태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자연조건과 역사발전의 관계를 인식
고대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고대농업발전의 성취와 지역마다 고대 농업과 목축업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를 인식 • 고대 수공업과 상업발전을 이해하고 중농역상정책의 역할 인식 • 고대 황권정치의 변화와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 • 중국고대 관료제도의 변천과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 • 중국고대의 중요한 정치개혁 • 고대의 군사가와 전쟁을 알고 고대전쟁이 사회에 미친 영향분석 • 중국고대도시사회생활의 변화 • 중국고대 향촌사회구조와 농민起義의 원인 • 고대 여성의 생활과 여성의 지위가 하락한 원인해석 • 고대 중국과 외국의 교류를 이해하고 중화문명과 세계문명의 상호영향 인식 • 고대과학기술의 성취와 공헌, 한계성 • 고대의 사상가를 알고 고대사상문화의 변화를 설명 • 고대사학, 문학, 예술의 성취 이해
근대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편전쟁 전 세계체제의 변화, 중국이 낙후한 원인 • 열강의 중국 침략과 내외의 위기 • 태평천국과 의화단운동 • 양무운동과 유신변법 등의 의의 • 신해혁명 소개 • 오사신문화운동의 의의 • 중국공산당 건립의 의의 • 항일전쟁의 승리 • 신민주주의혁명 승리의 의의 • 근대민족자본주의경제의 발생, 발전의 특징 • 중국근대사회생활의 변화 • 근대 문학예술의 성취
현대결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초기의 민주개혁, 국민경제의 회복, 항미원조승리 • 1차 5개년 계획기간의 성과 사회주의개조의 역정 •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의 원인과 해악 • 11계 3중전회 이후 국가의 변화 개혁개방의 중요성 인식 • 양안관계이해, 홍콩·마카오 회귀의 상황 '1국양제' 정책의 의의 • 현대 중국과학기술, 문학예술의 성취 이해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에서는 4. 중국역사와 문화와 5. 세계역사와 문화에서 각각 중국사와 세계사를 다루고 있다.⁴⁰⁾ 중국역사와 문화는 고사(古史) 변천, 고대문명, 근대탐색, 현대격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사변천에서는 중국 고대 역사와 문화발전을 이해시키는 것을, 고대문명에서는 중국고대문명의 성취를 이해하고 역사문화유산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대탐색에서는 근대중국의 위기를 이해하고 중국인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탐색과 분투를, 현대격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 과정과 경험교훈을 알고 개혁개방 이래의 성취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6〉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 세계역사와 문화⁴²⁾

	내용표준
고대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기원의 비밀 • 농업혁명의 의미, 고대문명의 성취 •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와 문화 •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창립과 전파
근대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항로 개척의 원인과 중요성 • 르네상스, 과학혁명과 계몽운동의 대표적 인물과 성취 • 영국혁명, 미국독립전쟁, 프랑스혁명 등의 사건과 인물 • 2차래의 공업혁명이 가져온 변화 공업문명의 의미 • 미국 내전, 러시아 농노제 폐지, 일본의 메이지유신 • 근대 유럽의 노동운동 사건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 식민주의가 세계에 미친 영향, 침략당한 피압박민족의 반항투쟁
20세기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차례 세계대전의 원인과 영향 • 소련사회주의의 실천과 교훈 • 냉전시기의 국제충돌 • 제3세계 흥기와 개발도상국의 발전 방향 • 20세기 후반 자본주의국가의 인민들의 쟁취와 인권운동
기회와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과학기술혁명과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를 이해하고 중국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을 이해 • 현대 국제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중국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의미를 이해 • 중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국가주권과 국제협력 발전의 관계 이해

40) 『全日制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1)(實驗稿)』, 16~21쪽.

41) 『全日制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1)(實驗稿)』, 16~24쪽.

42) 『全日制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1)(實驗稿)』, 21~24쪽.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에서는 「5. 세계역사와 문화」에서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데 세계역사와 문화는 고대문명, 근대변천, 20세기의 세계, 기회와 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문명에서는 인류가 문명사회로 진입한 의의를 이해하고 세계고대문명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대변천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작용을 이해하고 근대 서구문명의 성취와 대가를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세기의 세계에서는 20세기에 인류가 취득한 위대한 진보를 인식하고 20세기 역사의 교훈을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회와 도전에서는 글로벌화 추세를 이해하고 중국의 발전과 세계 진보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와 사회과정표준(2)』는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에 비하여 논리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사회의 발전을 기본 축으로 현대사회의 기본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⁴³⁾ 『역사와 사회과정표준(2)』의 내용표준을 살펴보면 1. 우리들이 생활하는 세계, 2. 우리들이 전승한 문명, 3. 우리들이 당면한 기회와 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2. 우리들이 전승한 문명’ 부분에서 중국사와 세계사를 다루고 있다.⁴⁴⁾

이 두 개의 과정표준에 따라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에 의거하여 북경사범대학 국가기초교육과정표준실험교재 총편위원회에서 『역사와 사회』 교과서 6권을 편찬하여 상해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지질출판사에서 출판한 『역사와 사회』도 이 과정표준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 『역사와 사회과정표준(2)』에 의거한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의 과정교재연구소와 종합문과과정교재연구개발중심에서 『역사와 사회』 5권을 편찬하여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하상주단대공정’의 영향으로 상해교육출판사와 지질출판사의 『역사와 사회』교과서에서도 기원전 2070년에 중국 역사상 첫 번째 노예제국가인 하왕조가

43) 段作章, 2004, 『新課程理念下的中學學科教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27쪽.

44) 『全日制義務教育歷史與社會課程標準(2)(實驗稿)』, 15~22쪽.

건립되었고 기원전 1600년에 하왕조가 멸망하고 상왕조가 건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⁵⁾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와 사회』 교과서의 중국사연표에서는 약 기원전 2070년부터 약 기원전 1600년까지를 하왕조의 연대로 기술하고 있다.⁴⁶⁾

사회과의 종합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사회 과목은 역사 관련 내용이 크게 감소했다. 현재 중국의 새 교과과정에서는 역사과목이나 지리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역사와 사회라는 통합교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와 사회는 역사 관련 내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선 교사들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중국의 교육부에서는 예술, 과학, 역사와 사회 등 종합과정을 실험구에서 적어도 15%의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IV. 고등학교 역사교과과정과 실험교과서

1_ 중국의 보통 고등학교 과정방안의 내용과 특징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에 의하면, 중국의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중국공산당을 사랑하고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하여 민족

45) 韓震, 2004년 6월 3판, 2005년 6월 5쇄,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 八年級 上冊』, 上海: 上海教育出版社·上海世紀出版集團, 6~7쪽; 歷史與社會編寫組, 2002년 1판, 2005년 4쇄,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 八年級 下冊』, 北京: 地質出版社, 8~9쪽.

46) 課程教材研究所·綜合文科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與社會 八年級 上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23쪽.

47) 教育部基礎教育司, 「關於基礎教育課程實驗區教材選用的通知」(2003. 3. 11).

진흥과 사회진보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와 법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어 국가법률과 사회공공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하며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과학과 인문소양, 환경의식, 창조정신과 실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⁴⁸⁾

고등학교 과정의 학습 영역은 언어와 문학, 수학, 인문과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체육과 건강, 종합실천활동의 8개 학습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른 과목은 언어, 수학, 외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예술(음악, 미술), 체육과 건강, 기술 등 12~1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술과 예술은 새로 증설된 과목이다. 예술과 음악, 미술과목은 학교에서 선택하여 설치하고 조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외국어 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과정은 필수와 선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한 학년 52주 가운데 40주 동안 수업을 하고 사회실천을 1주 나머지 11주가 방학이다. 한 학기 20주는 두 개의 시기로 나뉘어 한 시기 10주 가운데 9주 동안 수업을 하고 1주는 복습시험을 본다. 한 과목은 매주 4시간씩 한 학기에 36시간을 수업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2학점을 받는다. 단 체육과 건강, 예술, 음악, 미술은 18시간을 수업하며 1학점을 받는다. 필수 학점은 11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은 언어와 문학 영역에서 어문 10학점, 외국어 10학점이고 수학은 10학점이다. 인문과 사회 영역의 사상정치 8학점, 역사가 6학점이고 지리도 6학점이다. 과학은 물리 6학점, 화학 6학점, 생물 6학점이다. 기술은 8학점이고 예술영역의 음악이나 미술과목은 6학점이다. 체육과 건강이 11학점이다. 이외에 종합실천활동으로 연구성 학습활동이 3년 동안 15학점이고, 지역봉사(社區服務)활동 2학점, 사회실천이 6학점으로 모두 116학점이다. 총점은 3년 동안 144학점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다.⁴⁹⁾

48)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1쪽.

49) 『普通高中課程方案(實驗)』, 2~5쪽.

〈표 7〉 중국 신규 고등학교 교과목 비교⁵⁰⁾

유형	과목	1996	2000	2003	비 고	
국가 규정 필수 과목	어문	8	12	10	어문과 영어과목은 2000년에 12시간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 10시간으로 감소했고 수학은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함	
	영어	7	12	10		
	수학	8	8	10		
	사상정치	6	6	8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사상정치·역사·지리과목은 모두 시간이 증가하여 사회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역사	3	4.5	6		
	지리	3	4	6		
	물리	4.5	4.5	6	물리·화학·생물과목은 2000년에 비하여 2003년에 모두 증가하여 이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화학	4	4	6		
	생물	3	3	6		
	체육 (체육과 건강)	6	6	6	변화 없음	
	예술	2	3	6	예술교육 강화로 예술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기술	정보기술	無	2	4	정보기술은 2003년 4시간 필수과목이 되어 정보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노동기술 (통용기술)	4 또는 2周	3周	4	노동기술은 2003년 통용기술로 이름을 바꾸었음
	종합실천활동	과학기술 예체반회 (연구성학습)	9	9	15	과학기술예체활동 등이 연구성학습으로 2003년부터 개설됨 사회실천은 6주에서 6시간으로 감소 2000년 이 3과목을 종합실천활동으로 부르고 있음
사회실천		6주	6주	6		
지역봉사 (社區봉사)		無	校外	2		
선택과정	백분율	69.2	71.7	61.4	2003년 필수과목은 116학점으로 61.4%를 점함	
	백분율	30.8	28.3	38.1	2003년 선택과목은 38.1%로 역사상 최고 수준임	
	선택 1(국가급)	13.5~21	9.3~17.2	29.1	2003년 선택과정이 크게 강화됨	
	선택 2 (지방과 학교급)	9.5~17	11~19	9.5	2003년 지방과정과 학교과정은 시간이 감소함	

50) 馮生堯, 2004, 앞의 책, 14~15쪽.

2_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

중국의 교육부가 제정한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역사과정은 역사유물주의의 관점에서 인류역사의 발전과정과 법칙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역사인식과 문화소양, 인문소양을 배양하고 제고하는 기초과정이라고 한다.⁵¹⁾

고등학교 역사과정에서는 인류사회발전의 기본적 맥락을 이해하고 역사의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며 우수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발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역사관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며 역사적 각도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고하여 중화민족 및 전 인류의 역사적 운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의 필수과목은 『역사(Ⅰ)』, 『역사(Ⅱ)』, 『역사(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25개의 중국사와 세계사 관계의 정치, 경제, 사상문화, 과학 기술 등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과 세계의 내재적 연계를 중시한다.

필수과정인 『역사(Ⅰ)』에서는 고대중국의 정치제도,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반항투쟁, 근대중국의 민주혁명 등 9개의 정치사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를 통합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현재 중국의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악록서사, 대상출판사 등 4종이 출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Ⅰ)』은 엄격하게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편찬되었기 때문에 각 단원이 모두 일치한다. 중국사는 모두 5개 단원을 두고 있는데 夏商周의 정치제도, 진 왕조의 중앙집권제도, 漢代부터 元代까지의 정치제도의 변화, 明清시대 군주전제의 강화, 아편전쟁, 태평천국, 8개국 연합군의 중국침략, 신해혁명, 신민

51)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1쪽.

〈표 8〉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 필수과정 내용표준⁵²⁾

『역사(Ⅰ)』: 정치	『역사(Ⅱ)』: 사회경제와 사회생활	『역사(Ⅲ)』: 사상문화와 과학기술
1. 고대중국의 정치제도	1. 고대중국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1. 중국전통문화 주류사상의 변화
2.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반항투쟁	2. 근대중국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의 굴곡적인 발전	2. 고대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3. 근대중국의 민주혁명	3.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의 길	3. 근대중국의 사상해방 조류
4. 현대중국의 정치건설과 조국통일	4. 중국근·현대 사회생활의 변천	4. 20세기 이래 중국 중대 사상이론의 성과
5. 현대중국의 대외관계	5. 신흥로의 개척, 식민확장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 발전	5. 현대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6.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제도	6. 식민지 확장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 발전	6. 서방인문정신의 기원 및 그 발전
7. 구미부르주아계급 대의제의 확립과 발전	7.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조절	7. 근대 이래 세계 과학기술의 역사적 족적
8. 과학적 사회주의이론에서 사회주의제도의 건립까지	8. 현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8. 19세기 이래의 세계문화 예술
9. 현재 세계정치체제의 다극화 추세		

주의혁명의 시작, 항일전쟁,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 신중국의 정치건설, 개혁 개방 이래의 중국외교 등을 다루고 있다.

세계사는 인류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그리스의 민주정치, 로마법, 영국 입헌군주제, 미국의 연방정부, 유럽대륙의 부르주아 대의제, 마르크스주의의 탄생, 러시아 10월 혁명, 중국의 사회주의제도, 양극세계의 형성, 세계의 다원화 추세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사의 주요 내용을 세계사와 연관시켜 대비시키고 있어 학생들이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⁵³⁾

52)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6~16쪽.

53)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4年 5月 1版,

그리고 매 단원에는 ‘학습소결’이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학습소결’은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개념해석’에서는 중법제, 군현제, 내각, 군기처 같은 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귀납과 총결’에서는 간단하게 단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셋째 ‘歷史感悟’의 ‘學史心得’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글로 표현하도록 하고 ‘學史存疑’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한 문제를 기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⁵⁴⁾

인민출판사의 『역사(Ⅰ)』은 『역사과정표준』에 나와 있는 주제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일부 제목을 다르게 달았다. 예를 들면 ‘2. 열강의 침략과 중국인민의 반항투쟁’은 ‘2. 근대 중국의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투쟁’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민출판사의 교과서는 개괄적인 지식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부록에서 중요 단어의 중·영문 대조표를 추가하였고, 마지막에 역사학자들의 역사서를 소개하고 있다.⁵⁵⁾

악록서사의 『역사(Ⅰ)』은 『역사과정표준』의 9개 주제를 고대중국의 중앙집권제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제도, 근대 서방자본주의 政體의 건립, 내외외환과 중화민족의 奮起, 마르크스주의의 탄생발전과 중국신민주주의혁명, 중국사회주의건설의 길, 복잡 다양한 당대세계 등 7개 단원으로 통합했다.⁵⁶⁾ 악록서사의 교과서는 『역사과정표준』의 배열과는 달리 중국사와 세계사를 앞뒤에 배열하여 1단원에서 중국고대의 중앙집권제도를 배우고 2단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제도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은 역사발전의 시간적 순서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고 중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을 비교하고

2004年 7月 1刷,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54) 姬秉新, 2005, 『理解與實踐高中歷史新課程-與 高中歷史教師的對話』,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86쪽.

55) 朱漢國, 2004년 8월 1판 1쇄,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 北京: 人民出版社.

56) 曹大爲·趙世瑜, 2005,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政治文明歷程』, 長沙: 岳麓書社.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대상출판사의 『역사(I)』의 구성은 『역사과정표준』과 비교할 때 제목에서 수식어를 첨가한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내용의 구성도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와 유사하다. 대상출판사의 교과서는 캐나다의 국제교류센터의 그림 도판 등을 제공받아 편찬된 점이 특이하다.⁵⁷⁾ 대상출판사는 이전에 역사교과서를 편찬해 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 내의 전문가를 편집자로 초빙하고 캐나다의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악록서사의 『역사(I)』은 ‘하상주단대공정’에서 설정한 연대에 따라 약 기원전 2070년에 하왕조가 건립되어 약 기원전 1600년에 상왕조가 건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⁵⁸⁾ 인민교육출판사와 대상출판사의 『역사(I)』도 약 기원전 2070년에 하왕조가 건립되었고 기원전 1046년에 주왕조가 건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⁵⁹⁾ 단 인민출판사의 『역사(I)』에서는 하상주왕조 부분에서 구체적인 연대를 언급하지 않았다.⁶⁰⁾ 4종의 고등학교의 역사실험교과서 가운데 3종이 ‘하상주단대공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대를 분명히 명시하였고, 1종만이 연대를 서술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중국 교육부의 검정에서 ‘하상주단대공정’의 연대를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¹⁾

57)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 2004,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鄭州: 大象出版社.

58) 曹大爲·趙世瑜, 2004년 8월 1판, 2005년 7월 2판,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I) 政治文化歷程』, 長沙: 岳麓書社, 2쪽.

59)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2004년 5월 1판, 2004년 7월 1刷,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歷史教科書 歷史 1 必修』,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4~5쪽; 高中歷史教材編寫組·DC加拿大國際交流中心·大象出版社, 2004년 6월 1판,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 必修 1』, 鄭州: 大象出版社, 3쪽.

60) 朱漢國, 2004년 8월 1판 1쇄,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 北京: 人民出版社, 5~7쪽.

61) 인민출판사는 2005년 『역사 필수 1』의 2판을 출판했는데 판형을 키우고 일부 내용을 줄였지만 ‘하상주단대공정’에 의거한 연대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朱漢國, 2005년 6월 2판, 2005년 7월 2쇄, 『普通高中課程標準實驗教科書 歷史必修 1』, 北京: 人民出版社, 5~7쪽.

『역사(Ⅱ)』에서는 고대중국경제의 기본구조와 특징, 근대중국경제구조의 변동과 자본주의의 곡절 발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의 길 등 8개의 경제사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Ⅲ)』에서는 중국전통문화 주류사상의 변화, 고대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근대중국의 사상해방 조류 등 8개의 사상문화, 과학기술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의 선택과목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적 시야를 확대하며 학생들의 개성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은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 '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4.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平說', '5. 역사의 신비 탐색', '6. 세계 문화유산모음' 등 6종이다.

이 역사 선택과목 6권은 41개의 주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9〉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 선택과정 내용표준(1)⁶²⁾

역사 선택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	역사 선택 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	역사 선택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1. 솔론의 개혁	1. 전제이론과 민주사상	1. 제1차 세계대전
2. 상앙의 변법	2. 영국국회와 국왕의 투쟁	2. 베르사유-워싱턴체제하의 평화
3. 북위 효문제의 개혁	3. 봉건 전제통치에 대한 선전포고	3. 제2차 세계대전
4. 왕안석의 변법	4. 부르주아계급 대의제 정치구조의 구축	4. 알타체제하의 냉전과 평화
5. 유럽의 종교개혁	5. 프랑스민주역량과 전제세력의 투쟁	5. 전화가 도처에 번지는 국지전쟁
6.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	6. 근대중국의 민주사상과 전제에 반대하는 투쟁	6. 평화와 발전-현재 세계의 시대적 주제
7. 1861년 러시아 농노제 개혁	7. 인민대중의 민주를 요구하는 투쟁	
8. 메이지유신		
9. 무술변법		

62)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16~23쪽.

역사 선택과목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에서는 솔론의 개혁, 상앙의 변법 등 중국과 세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9개의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교과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개혁의 복잡성 등을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역사 선택과목 2. 근대사회의 민주사상과 실천에서는 전제이론과 민주사상, 영국국회와 국왕의 투쟁 등 7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 3.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베르사이유-워싱턴체제하의 평화 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과목에서 한국전쟁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10〉 고등학교 실험역사교과서 선택과정 내용표준(2)⁶³⁾

역사 선택 4 :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설	역사 선택 5 : 역사의 신비 탐색	역사 선택 6 : 세계문화유산 모음
1. 고대 중국의 정치가	1. 역사와 역사의 재현	1. 세계문화유산의 유래
2. 동서방의 철학자	2. 인류기원의 수수께끼	2. 고대 이집트문명의 역사유산
3. 구미 부르주아계급혁명시대의 걸출한 인물	3. 삼성퇴 유적-古蜀문명의 수수께끼	3.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유적
4. “아시아 각성”의 선구	4. 마야 문명의 소실	4. 유럽문예부흥시기의 문화유산
5. 프롤레타리아계급 혁명가	5. 이리두문화의 탐색	5. 중국의 역사문화유산 대표
6. 걸출한 과학자	6. 미노스궁전 유적과 크레타문명	6. 경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
	7. 대집바브웨 유적과 아프리카문명의 탐색	

역사 선택과목 4.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평설에서는 고대중국의 정치가, 동서양의 철학자 등을 다루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 5. 역사의 신비 탐색에서는 역사이론과 인류의 기원,三星

63)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23~29쪽.

堆, 마야문명 등 세계사에서 중요한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 선택과목 6. 세계문화유산모음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의 유래, 고대 이집트문명의 역사 유산, 중국의 역사문화유산 등을 다루고 있다.

이 6종의 선택교과서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은 1. 역사상 중대 개혁 회고와 4. 중국과 외국의 역사인물 平說이라고 한다.⁶⁴⁾

역사 필수과목은 한 학기에 36시간 2학점씩 모두 108시간 6학점이고 역사 선택과목은 한 학기 36시간 2학점이다. 자신의 흥미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인문사회과학으로 공부할 학생들은 적어도 3과목을 선택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⁶⁵⁾

고등학교 역사과정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지만 기초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⁶⁶⁾ 2002년의 『고등학교 역사교과학대강』⁶⁷⁾에 의하면 필수과목은 『중국근·현대사』로 매주 3시간 모두 99시간을 가르쳤고 선택과목 1은 『세계근·현대사』로 매주 2시간 모두 65시간, 선택과목 2는 『중국고대사』로 매주 2.5시간으로 합계 60시간이었다.

2002년에 제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학대강』이 중국근·현대사를 필수로 했고 세계근·현대사와 중국고대사를 선택과목으로 했던 것에 비해 2003년의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에 의해 편찬된 고등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는 중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고 정치사, 경제사, 사상문화, 과학기술사 등 분류사의 방식을 취한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가르치는 형태는 1990년대 상해지역에서 사용되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시작되었다.⁶⁸⁾ 그런데 역사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은 중국의 고등학생에게 상당히 큰 학습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드러났

64) 인민교육출판사 역사편집실 편집자 李卿 박사와의 인터뷰(2006년 9월 20일).

65)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3쪽.

66) 劉軍, 2003, 앞의 책, 53쪽.

67) 『全日制普通高級中學歷史教學大綱』, 2~3쪽.

68) 상해지역의 역사교과서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유리, 2005b, 앞의 논문.

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수정되어 2007년 가을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

〈표 11〉 2006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 실험교과서⁶⁹⁾

지역	역사교육과정	저자	교과서명	출판사	출판권수	
중국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實驗)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歷史 1-3(必修)	人民教育出版社	3	
		曹大爲·趙世瑜		岳麓書社	3	
		高中歷史教材編寫組·大象出版社·DC加拿大國際交流中心		大象出版社	3	
		朱漢國		人民出版社	3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歷史 1-6(選修)	人民教育出版社	6
		曹大爲·趙世瑜		1: 歷史上重大改革回眸 2: 近代社會的民主思想與實踐 3: 20世紀的戰爭與和平	岳麓書社	6
		高中歷史教材編寫組·大象出版社·DC加拿大國際交流中心		4: 中外歷史人物評說	大象出版社	6
		朱漢國		5: 探索歷史的奧秘 6: 世界文化遺產薈萃	人民出版社	4
상해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征求意见稿)	上海師範大學	高級中學課本 歷史高中1年級 1-2학기, 3年級(試驗本)	上海教育出版社	4	

69) 이 표는 「2005年秋季普通高級中學教學用書目錄」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현재 고등학교 실험본 교과서는 2004년 전국 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의 초심을 통과한 인민교육출판사, 인민출판사, 악록서사, 대상출판사 등의 『역사』 4종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이는 교과서는 인민교육출판사와 악록서사의 교과서이다. 최근 중국의 교과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민출판사의 교과서는 판형을 크게 키웠고 악록서사는 교사교학용서의 내용을 대폭 보강한 수정판을 출판하였다. 중국의 교과서제도가 검인정이 되면서 여러 출판사들이 우수한 교과서 필진을 확보하고 인민교육출판사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연구자를 영입하여 이들 출판사의 교과서 수준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는 2004년 1학기(가을학기)부터 海南省, 廣東省, 寧夏回族自治區, 山東省 등 4개 성에서 실험을 실시하였고, 2006년 가을학기부터 天津市, 遼寧省, 江蘇省, 浙江省, 福建省, 安徽省, 山東省, 廣東省, 海南省, 寧夏回族自治區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⁷⁰⁾

한편 상해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문명사관이 전면적으로 채택되어 과거의 역사교과서 서술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해의 고등학교 기초형 과정은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인류 초기 문명, 인류생활, 인류문화 등 3개의 주제를 다루고⁷¹⁾ 2학기에는 문명의 융합과 충돌, 경제 글로벌화 시대의 문명, 문명의 현실과 미래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⁷²⁾ 고등학교의 척전형(拓展型) 과정 교재는 고대 3대문명의 형성과 변화, 주요선진국가의 현대화 과정, 18세기 이후의 중국,⁷³⁾ 전쟁과 문명, 세계유산과 인류문명, 과학기술의 발전역정 등⁷⁴⁾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70) 中國教育部, 2006년 3월 3일, 「教育部辦公廳關於做好2006年普通高中新課程實驗地區教材選用工作的通知」.

71)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 2003년 8월 1판, 2006년 6월 4쇄, 『高級中學課本歷史 高中一年級第一學期(試用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72)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 2004년 1월 1판, 2004년 11월 2쇄, 『高級中學課本歷史 高中一年級第二學期(試用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73)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 2005년 8월 1판, 2006년 7월 2쇄, 『高級中學課本歷史 高中三年級(試驗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74) 上海市中小學課程改革委員會, 2006년 1월 1판, 2006년 1월 1쇄, 『高級中學課本歷史(試驗本)』,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3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⁷⁵⁾ 그러나 이 교과서는 문명사를 위주로 역사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는 형태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⁷⁶⁾

개혁 개방 이후 다양해진 역사교과서의 역사서술은 중국의 혁명사관과 마찰을 일으키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상해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 등 외국 언론의 보도로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중국의 역사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내용을 수정한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를 2007년 가을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 상해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교육당국에서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단일교과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역사학계는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종래의 혁명사관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은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사 등 근·현대사 지식이 부족하고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혁명을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다. 중국정부는 2007년 봄학기부터 전국의 대학에서 『중국근·현대사강요(中國近現代史綱要)』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 중국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역사를 가르치기로 결정하였다.⁷⁷⁾

75) 上海市教育委員會, 2004, 『上海市中學歷史課程標準(試行稿)』,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64쪽.

76) 「상하이 새 표준교과서 ‘마오 퇴출, 게이즈 진입」, 『연합뉴스』(2006. 9. 1).

77) 「解放論壇: 爲近現代史成爲大學必修課叫好」, 『解放日報』(2007. 1. 20).

V. 맺음말

중국의 8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이 학과 과목을 강조하여 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실정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균형성, 종합성, 선택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과과정의 어렵고, 과다하고, 편중되고, 낡은 교과과정의 내용을 학생의 생활과 현대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하였다. 새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8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중학교의 국가과정 역사과정표준은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과정표준(1)』, 『전일제 의무교육 역사와 사회과정표준(2)』의 3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역사과정표준은 『보통고중 역사과정표준』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과정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다.

중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교과서 시장이 개방된 이후 10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교과서 집필의 지침인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편찬된 교과서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중학교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출판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2003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역사과정표준에 따라 2001년부터 중학교 실험 교과서가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고등학교 실험교과서도 실험을 시작하였다.

2006년 8월 현재 중국에서 출판되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중학교 교과서는 6종, 고등학교 교과서는 1종이다.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한 국가급 실험교과서는 중학교 13종(『중국역사』, 『세계역사』 10세

트, 『역사와 사회』 3세트), 고등학교 『역사』 4종 등 17종이다. 이외에도 北京과 上海에서는 독자적인 지방과정의 역사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역사과정표준』에 의거하여 교과서의 서술이 변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한 중학교 『세계역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되었다가 『역사과정표준』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되자 이에 의거한 실험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는 삭제된 중학교 『세계역사』에서 일부 한국사 관련 내용을 추가했지만 『역사과정표준』이 수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새 역사교과서는 ‘하상주단대공정’ 등 중국학계의 새로운 연구성과가 반영되고 있다. ‘하상주단대공정’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2000년 이후에 출판된 중국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하나라와 상나라의 연대를 확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구결과가 중국학계의 통설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교과서에 연구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역사학계에서는 종래의 혁명사관이 약화되고 문명사관과 포스트모더니즘, 아날학파 등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의 변화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역사교과서가 다양하게 출판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혁명사관의 약화는 중국공산당의 집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달가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영역에서도 개방이 필요하지만 개방의 결과 중국공산당의 정통성과 집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기존의 관변 역사관에 입각한 혁명사·근현대사 교육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방을 다시 되돌리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New Educational Curriculum and Experimental Textbooks of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in China

Kim, Ji-Hoon

The goal of the 8th educational curriculum is to encourage students to have a positive and active attitude about learning. The existing curriculum emphasizes individual courses which make students lack of a comprehensive ability. The new curriculum includes opening a comprehensive course to overcome this problem. It emphasizes that balanced, comprehensive, and elective course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according to regional conditions and students' academic level. The old curriculum is difficult to understand, exclusive, and carries too much content. To arouse students' interest in learning, the contents of the new curriculum has been improved by linking modern socie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to student life. Another goal of the new curriculum is to improve study habits so they can be actively involved in study, analysis, and problem solving.

When the 8th educational curriculum was started, thre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were used in the national mandatory middle schools: 1) Full-time Mandatory Education of History Curriculum Standard, 2) Full-time Mandatory Education of History and Society Curriculum Standard I and 3) Full-time Mandatory Education of History and Society Curriculum Standard II.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are used in the high schools. As different curriculum

standards are used in the national mandatory schools, several different History textbooks have been published. Content in the textbooks is changing according to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The World History textbook includes some contents related to Korea as it is described in the History Program. However, this content was removed from the experimental textbooks because it had been removed from the History Program. Since the text book market was opened, about 100 publishing companies have been competing for the middle or high school textbooks in China. All of the textbooks in use now were published according to the two guide books of textbook writing: The History Program and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Th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published in 2001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guide book, The History Program, were used at the same time as th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approved in 2003. Following the new guide book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the middle school experimental textbooks were published and have been in use since 2001. The high school experimental text book was published and has been in use since 2004. Since October 2005, the middle school textbooks published using the guidelines of The History Program are six while the high school textbook is only one. The experimental textbooks that meet the national standard described in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are fifteen: eleven middle school textbooks (eight including Chinese History and World History and three including History and Society) and four high school textbooks which include History. In addition, Shanghai City uses unique textbooks for their own local curriculums.

keywords

History textbooks, The History Program, The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Chinese History, World History, History and Society



高句麗尺 再論

- 高句麗尺과 高麗術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 우 태 | 서울시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의 고대 도량형사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고구려척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과거에는 단지 문헌 사료에 의거하여 그 실제 길이나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삼국시대의 실물자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二聖山城에서 발견된 ‘소위 高句麗尺’은 이러한 논쟁의 계기를 마련해 준 획기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에도 결정적인 사료의 발견은 그간의 모든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게 하는 위력을 갖는다. 특히 도량형사의 연구에서 실물자의 발견은 그 의미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실물자의 존재는 그 동안의 문헌이나 유적지의 실측치 등을 통한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결정적인 자료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의 실물자는 3개 정도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 그 중 둘은 二聖山城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하나는 부여의 雙北里에서

1) 지난 2002년 부여 관북리 연못터에서 출토된 대나무자에 대해 이를 25cm 정도의 남

출토되었다. 이중에서도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길이 36.5cm의 자는 매우 의미 깊은 것이다. 필자도 이미 이러한 유물들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발표한 바가 있지만,²⁾ 고구려척에 대한 단정은 보류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유물에 집착해 실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무리한 추측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의 고구려척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다음 최근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소위 고구려척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척의 실상과 그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펴려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고구려의 측량기술이 신라와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이는 고구려사의 귀속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高句麗尺에 관한 기왕의 연구

흔히 고려척이라고도 불리는 고구려척의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을 통해 이미 그 성과들이 검토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詳論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二聖山城의 실물자 발견 이전의 연구 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³⁾

高麗尺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令集解』에 그 이름이 보이는데, 먼저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又雜令云 度地以五尺爲步 又和銅六年二月十九日格 其度地以六尺爲步

조척(南朝尺)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문화일보』, 2005. 9. 27), 아직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 李宇泰, 2002, 「고대 度量衡制의 발달」, 『강좌 한국고대사』 6,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 李宇泰, 2002, 위의 논문.

者 未知令格之赴 并段積步改易之義 請具分釋 无使疑惑也 答 幡云令以五尺爲步者 是高麗法用爲度地令便 而尺作長大 以二百五十步爲段者 亦是高麗術云之 卽以高麗五尺 准今尺大六尺相當 故格云 以六尺爲步者 則是今五尺積步 改名六尺積步耳 其於地无所損益也 然則時人念令云五尺 格云六尺 卽依格文 可加一尺者 此不然 准令云五尺者 此今大六尺同覺爾耳 (『令集解』 卷12 田部)

위의 기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卽以高麗五尺 准今尺大六尺相當”, 즉 “高麗의 5尺은 지금 사용하는 大尺 6尺에 상당한다”는 부분이다. 여기서 大尺은 唐大尺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척 5尺은 唐大尺으로 6尺이 되니 고려척은 당척의 1.2배가 된다. 당대척의 길이 또한 시대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cm 내외로 본다면, 고려척은 약 36cm가 되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高麗란 고구려를 가리킨다. 따라서 후대의 고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高句麗尺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도 특별히 사료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구려척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위의 기록에 대해 최초로⁵⁾ 언급한 狩谷掖齋는 이를 東魏尺으로 파악하였는데,⁶⁾ 그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미쳐 동위척을 고구려척으로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關野貞⁷⁾과 米田美代治,⁸⁾ 藤島亥治郎⁹⁾ 등은 유적의 실측을 통해 삼국시대 건물의 영조

4) 唐大尺을 29.7cm로 볼 경우에는 35.64cm가 된다.

5) 지금 볼 수 있는 그의 저서는 1978년에 출판된 『本朝度量權衡考』이지만, 그의 생몰 연대(1775~1835)로 보아 19세기 초엽에 이미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그는 『隋書』 律曆志의 “東魏後尺 實比晉前尺 一尺五寸八毫”란 기록에 착안하여, 약 23.1cm인 晉前尺의 1.5008배가 되는 약 34.57cm를 東魏尺의 길이로 보고, 이것이 『令集解』 田部に 나오는 高句麗尺과 비슷한 길이인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唐大尺의 1尺2寸인 高句麗尺은 아마도 唐大尺의 1.175448尺을 대략 1尺2寸이라고 하였거나 …… 또는 고구려를 지나오는 동안에 잘못 길어져서 일본에 들어온 것”이라고 보았다. 狩谷掖齋, 1978, 『本朝度考』, 『本朝度量權衡考』, 35쪽.

7) 그는 平壤城 外城의 도시유적이 35.6cm의 東魏尺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日本의 法隆寺 등의 건축에도 사용되어 일본에서는 ‘高麗尺’이라고 불려졌다고 주장하였다. 關野貞, 1928, 『高句麗の平壤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39-1.

에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국 모두 高句麗尺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이르렀고, 그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에 東魏尺이 들어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고구려척과 혼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중국학자 馬衡에 의해 東魏尺이 前晉尺의 1.5008배라는 『隋書』 「律曆志」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고, 동위척이 전진척의 1.3008배라는 『宋史』 「律曆志」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¹⁰⁾ 이러한 馬衡의 동위척 고증은 이후의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¹¹⁾ 동위척의 실제 길이는 전진척(23.1cm)의 1.3008배인 30.05cm이며, 이는 唐大尺과 거의 같은 길이인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척의 기원을 동위척에서 찾는 고전적인 견해는 동위척의 실제 길이가 30cm 내외로 밝혀짐에 따라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 중에는 『隋書』 「律曆志」의 기록을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있지만,¹²⁾ 당시 사용되던 北魏後尺인 29.6cm보다 5cm 이상이나 긴 척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렇게 급격한 제

8) 그는 백제의 定林寺 五層石塔의 실측을 통하여 백제에서도 高句麗尺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고구려는 漢 특히 樂浪의 영향을 받아 漢尺을 사용하였고, 백제와 신라는 후기에 들어와 東魏尺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사원의 건축과 고분의 축조·도시계획 등에 사용되었는데, 일본 사료에 나타나는 이른바 '高麗尺'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米田美代治 著·申榮勳 譯, 1976, 『韓國上代建築의 研究』, 107~122쪽.

9) 그는 신라의 黃龍寺에서도 東魏尺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藤島亥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 1~5, 『建築雜誌』 44, 530·531·533·535·536쪽

10) 馬衡, 1932, 『隋書 律曆志 十五等尺』, 15쪽; 曾武秀, 1990, 「中國歷代尺度概說」, 『中國古代度量衡論文集』, 162쪽에서 재인용.

11) 吳洛, 1937, 『中國度量衡史』, 213쪽; 藪田嘉一郎, 1969, 「高麗尺と東魏後尺との關係」, 『中國古尺集說』, 東京: 綜芸舎; 小泉袈裟勝, 1977a, 「東洋尺度史の諸問題」, 『日本歴史』 351, 30~31쪽.

12) 물론 연구자들 중에는 『隋書』 律曆志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려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隋書』 律曆志는 역대 律曆志 가운데 가장 상세히 척도를 고증하여 기록한 책으로 잘못된 기록을 할 리가 없고, 東魏尺과 유사한 길이의 척도가 이미 唐代 山東地方에서 쓰이고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그와 비슷한 크기인 고구려척이 사용

도의 개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기존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보급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¹³⁾ 더욱이 東魏(534~550)는 北魏가 양분되는 와중에서 탄생하여 불과 16년 만에 없어진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척도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구려에 도입되었고, 더구나 삼국 모두에 일반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¹⁴⁾

이러한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新井宏은 高句麗尺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고구려척은 표준척이 남아 있지 않은뿐더러 분명한 유물과 유적도 없으며, 동양 척도가 시기적으로 조금씩 길어져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의 척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를 '환상의 古代尺'이라고 이름 붙였다.¹⁵⁾ 즉 고구려도 원래 중국의 6尺1步制를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일본에까지 전해졌지만, 5尺1步制의 唐승을 받아들인 大寶令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기존의 고구려척은 상상의 것이라 보고, 26.7cm의 척도가 後漢尺을 대신하여 隋·唐 이전까지 삼국과 일본에서 널리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古韓尺'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의 주장의 근거는 유적지의 실측치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기존의 고려척의 증거로 오랫동안 인용되었던 法隆寺, 四天王寺, 黃龍寺 및 定林寺 五層石塔 등에서 26.7cm의 척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중국 척도의 역사에서 高句麗尺과 같은 長尺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이에 반해 古韓尺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상황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분석 방법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¹⁶⁾ 또한 그가 제시한 유적의 실측치를 새로이 분석한 결과 고구려의 여러 건물지에 사용된 척

되었기 때문에 『隋書』律曆志의 고증이 옳다는 것이다. 尹張燮, 1975, 「韓國의 營造尺度」,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63; _____, 1983, 『韓國建築研究』, 259~262쪽.

13) 吳洛, 1937, 앞의 책, 213쪽.

14) 한인호, 1993, 「고구려 건축의 특성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3-2, 24쪽.

15) 新井宏, 1992, 『まぼろしの古代尺 - 高麗尺はなかった』, 吉川弘文館.

16) 西村淳, 1992, 「新井宏著『まぼろしの古代尺-高麗尺はなかった』について」, 『計量史研究』 14; 白崎昭一郎, 1993, 「新井宏氏の『古韓尺説』について」, 『計量史研究』 15.

도는 고구려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실제 길이는 35cm 내외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¹⁷⁾ 결론적으로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는 高句麗尺(高麗尺)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용된 예도 찾아볼 수 없는 古韓尺을 동아시아 도량형사의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고구려척의 기원을 『舊唐書』食貨志의 “度……十寸爲尺 又山東諸州以一尺二寸爲大尺 人間行用之”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山東地方의 量地尺이 들어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¹⁸⁾ 이 견해에 대해서는 산둥지방의 양지척이 고구려척의 기원이 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고구려의 유민들에 의해 산둥지방에 고구려척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있다.¹⁹⁾ 그러나 이보다는 食貨志의 ‘山東諸州以一尺二寸爲大尺’은 唐大尺보다 1.2배 큰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小尺의 1.2배인 큰 척을 말한 것으로, 唐大尺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山東諸州에서 唐大尺類의 척도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견해²⁰⁾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고구려척의 기원을 산둥지방의 자에서 구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17) 朴贊興, 1995, 「高句麗尺에 대한 研究」, 『史叢』 44, 21~32쪽.

18) 狩谷掖齋, 1978, 앞의 논문, 35쪽; 藪田嘉一郎, 1969, 앞의 논문, 92쪽; 小泉袈裟勝, 1977b, 『ものさし』, 法政大學出版局, 122~1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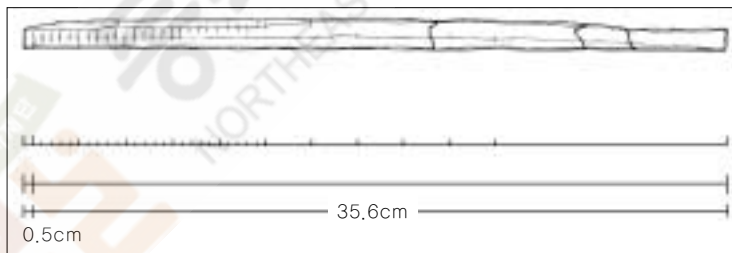
19) 朴贊興, 1995, 앞의 논문, 20쪽.

20) 尹善泰, 2002, 「韓國 古代의 尺度와 그 變化 - 高句麗尺의 誕生과 관련하여 -」, 『國史館論叢』 98, 30~32쪽.

Ⅲ. 二聖山城의 ‘所謂 高句麗尺’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고려 이전에 사용된 자의 실물이 발견된 예는 모두 3개가 있다. 하나는 二聖山城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자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곳에서 발견된 신라의 자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여 雙北里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자로 추정되는 것이다.²¹⁾ 이로써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자의 실물을 모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二聖山城은 경기도 하남시의 二聖山 정상과 그 남동쪽 골짜기를 둘러싼 包谷寺山城으로, 여기에서 발견된 ‘소위 高句麗尺’으로 보고된 자는 이성산성의 제8차 발굴조사 때에 C지구 제5층위에서 수습되었다. 보고서는 이 문화층을 고구려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 또한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하 이후에 쌓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²⁾ 그리고 이 자가 발견된 문화층의 연대는 대략 5~6세기로 보고 있다.



〈그림 1〉 二聖山城 C지구 제5층위에서 출토된 자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자는 밝은 황갈색의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발견 당시

21) 李康承, 2000, 「백제시대의 자에 대한 연구 - 부여 쌍북리유적 출토 자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43.

22) 漢陽大學校博物館, 2000, 『二聖山城-8次發掘調查報告書-』.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다. 尹善泰, 2002, 앞의 논문, 30~31쪽.

에 네 부분으로 부러진 형태였으나 좌측 모서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형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자의 전체 길이는 36.1cm이지만 눈금은 좌측의 끝에서 0.5cm 들어와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36.1cm에서 0.5cm를 뺀 35.6cm가 이 자의 실제 길이가 된다(그림 1).²³⁾ 이 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를 3등분하여 첫 구간은 5개의 마디로 나누고 각 마디는 다시 5등분하여 작은 눈금을 그렸다. 두 번째 구간은 첫 구간과 마찬가지로 5등분하고 있으나 작은 눈금은 없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아무런 표시가 없다.

8차 보고서에서는 이 자의 구조가 5개의 작은 눈금이 모여서 한 마디(寸)가 되고, 다섯 마디가 한 구간이 되며 세 구간을 합하여 한 자(尺)가 된다고 하여, 전체 35.6cm를 1척으로 하는 高句麗尺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으며, 이것으로 고구려척의 실제 길이가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척도 체계는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15촌을 1척으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²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있는 바와 같이²⁵⁾ 15개의寸이 1尺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 전통시대의 길이 단위인 分, 寸, 尺, 丈, 引의 五度는 십진법으로 昇降되어,²⁶⁾ 모두 10寸이 1尺이 되지 尺의 아래 단위인寸이 1尺의 15분의 1인 예는 찾아볼 수 없다.²⁷⁾ 그러므로 이 자는 35.6cm의 3분의 2인 23.7cm를 1척으로 하는 1.5척짜리 자라고 보는 것이 옳다. 요즈음의 자에도 20cm, 30cm, 50cm 등 길이가 다른 자가 존재하듯이 필요에 따라 1.5尺 또는 2尺이나 그 이상의 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며, 또 실제 그런 유물이 존재하고 있다.²⁸⁾

이성산성을 발굴한 보고자들은 이 자가 발견된 문화층을 고구려 문화층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일단 여기에서는 이 자를 고구려의 것으로 보아두고자 한

23) 『二聖山城-8次發掘調査報告書-』, 78쪽의 그림을 전제한 것이다.

24) 俞泰勇, 2001a, 「高句麗尺에 대한 文獻史料와 考古學的 遺物의 再檢討」, 『高句麗研究』 11, 105쪽; _____, 2001b, 『35.6의 고구려자』, 서문문화사.

25) 尹善泰, 2002, 앞의 논문, 32~33쪽.

26) 『漢書』 卷21 律曆上,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而五度審矣”.

27) 李宇泰, 1984, 「韓國古代的 尺度」, 『泰東古典研究』 1, 17쪽.

28) 尹善泰, 2002, 앞의 논문, 32~34쪽.

다.²⁹⁾ 그렇다면 이 자의 발견으로 알 수 있는 것은 5~6세기의 고구려에서 23.7cm 정도의 漢尺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삼국시대 초기에 낙랑군을 통하여 들어온 漢나라의 척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일찍이 제시되었고,³⁰⁾ 이를 보완하는 연구도 있다.³¹⁾ 그리고 사람의 키를 잴 때는 상당히 후기에도 漢尺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뒤에 살펴볼 「斷石山神仙寺造像記」와 「皇福寺舍利函銘」 등의 예로 보아 漢尺 계열의 척도는 8세기 초반까지도 佛像의 身長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다.³²⁾ 본 자가 발견되기 전에는 漢尺 관련 자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漢尺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견해도 있었으나,³³⁾ 적어도 이 자의 발견으로 삼국시대에 한척이 사용된 것은 확고부동한 사실이 되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고구려의 성벽이나 일반 건물의 營造에도 漢尺을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과거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의 건물지에서 漢尺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³⁴⁾ 이를 반박하는 견해도 있었기 때문이다.³⁵⁾ 유적지나 유구의 실측치만을 가지고 그 지역의 건물의 營造에 어떤 종류의 자가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高句麗尺은 漢尺의 약

29) 그러나 이 산성내의 건물지나 저수지 등의 유구에서 新羅의 유물만이 출토되었으므로, 이성산성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새롭게 쌓은 산성이라는 주장도 있다. 沈光注, 1988, 「二聖山城에 대한 研究」,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0) 米田美代治, 1944, 「文獻에 보이는 三國時代前期의 漢尺使用考」, 『韓國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米田美代治 著·申榮勳 譯, 1976, 앞의 책.

31) 金容雲·金容局, 1977, 『韓國數學史』, 悅話堂, 75~77쪽; 李宇泰, 1984, 앞의 논문.

32) 李宗峯,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40~42쪽.

33) 朴贊興, 1995, 앞의 논문, 9쪽.

34) 米田美代治는 高句麗의 유적을 실측하여 高句麗의 유적에서 사용된 척도를 복원하였는데, 그 길이는 助王里 69號 柁槨에서 0.73117曲尺, 貞栢里 200號 木槨에서 0.730166曲尺, 南井里 117號 柁槨에서는 0.75422曲尺, 平壤 淸岩里 建築群址에서는 0.74424曲尺이라고 한다. 이들 수치를 cm로 환산하면 약 22.1545cm, 22.124cm, 22.853cm, 22.553cm가 되며 그 평균은 약 22.44cm이다. 이는 漢尺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써는 이들의 營造에 漢尺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米田美代治 著·申榮勳 譯, 1976, 앞의 책, 166쪽.

35) 대표적으로 新井宏과 朴贊興의 반박이 있다. 新井宏, 1992, 앞의 책; 朴贊興, 1995, 앞의 논문.

1.5배가 되는데, 어떤 건물지에서 건물의 가로와 세로가 漢尺으로 30尺과 45尺이 된다면, 이는 고구려적으로는 각각 20척과 30척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만으로 이 건물의 營造에 과연 漢尺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高句麗尺이 사용되었는지는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二聖山城의 고구려 유물층에서 확실하게 漢尺이라고 볼 수 있는 자가 출토된 이상 고구려에서는 건물의 營造에 漢尺을 사용하였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

漢尺이 사용된 예는 다른 유물에서도 확인 된다. 斷石山 神仙寺 造像銘記에 의하면 조성된 마애상의 높이를 ‘高3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불상의 실제 높이는 약 6.72m라고 한다.³⁶⁾ 이를 3장, 즉 30尺으로 나누어보면 1척은 약 22.4cm가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二聖山城에서 발견된 漢尺 23.7cm에 상당히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불상의 높이가 약간 과장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漢尺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皇福寺 金銅舍利函記에는 그 부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全金彌陀像六寸一軀’라 하였는데,³⁷⁾ 실제 출토 유물로는 14cm의 금동여래입상과 12.2cm의 금동여래좌상이 각각 1구씩 출토되었다고 한다.³⁸⁾ 양 유물을 6寸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1척이 각각 23.3cm와 20.3cm가 된다. 이 중 전자는 漢尺과 매우 가까운 수치이다.

또 사람의 키에 대한 기록도 漢尺으로 측정되었다고 여겨진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13명의 왕과 1명의 왕비와 百濟人 黑齒常之의 키를 전하고 있는데, 眞平王의 11尺을 제외하면 대개 7~9尺의 범위에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7尺이 5명, 7.5尺이 3명, 8尺이 1명, 9尺이 5명, 11尺이 1명으로 전체 평균은 8.1尺이고 眞平王을 제외하면 7.9尺이 된다. 이러한 수치에 합당한 尺은 漢尺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인다.³⁹⁾ 따라서 삼국은 공히 키를 표시하는 데 모두 漢尺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불상의 높이를

36) 이종봉,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65~68쪽.

37) 『譯註 韓國古代金石文』3,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38) 李弘植, 1954, 「慶州南山東麓 三層石塔內發見品」, 『韓國古文化論考』.

39) 金容雲·金容局, 1977, 앞의 책, 75~77쪽; 李宇泰, 1984, 앞의 논문.

나타낼 때 漢尺을 사용한 것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삼국은 모두 불상이나 사람의 키는 漢尺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통일신라에까지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윤선태는 二聖山城에서 발견된 고구려척은 漢尺 1척5촌으로 그 길이가 35.6cm인데, 이것이 신라에서 사용된 당대척 29.7cm의 정확히 1.2배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자야말로 고구려척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이어 그는 고대 일본의 양전척과 고구려와 신라의 量田尺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고구려의 量田尺은 漢尺의 1.5척이 될 것이라는 과감한 추측을 하고 있다. 즉 1尺5寸은 1 에 해당하는 길이인데, 이것이 바로 步의 4분의 1로, 가 步를 측정하는 기초단위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성산성의 자는 步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1 의 자, 곧 1尺5寸의 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구려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⁴⁰⁾

윤선태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길이 35.6cm의 '소위 고구려척'은 바로 고구려의 量田尺이라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설임에 틀림없으나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윤선태씨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는 팔꿈치라는 뜻으로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통 1步의 4분의 1로 정해져 왔다.⁴¹⁾ 그러나 이는 실용적인 도량형의 체계 속에서 쓰여진 적은 없고,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불경이나 이에 관련된 기록에서만 찾을 수 있다.⁴²⁾ 즉 측량에서는 가 步의 보조단

40) 尹善泰, 2002, 앞의 논문, 35~36쪽.

41) 이러한 4배수의 도량형 체계는 漢代에 형성된 것으로, 한대의 대부분의 도량형 체계는 4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李宇泰, 1984, 앞의 논문). 따라서 는 步라는 일반적인 통용 단위의 아래에 그 4분의 1의 단위를 설정함으로써 漢代의 전통인 4배수의 체계를 흉내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42) 의 용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문헌으로는 『최문창후전집』 3에 수록된 「智證和尚碑銘」의 주석에 “百卜爲一結 方俗 以周百弓爲一結 四 爲弓 一尺八寸爲”라고 한 것이 유일한 용례이고, 불경에서는 여러 차례 보인다. 1 는 보통 1척 5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1척 8촌(위의 「智證和尚碑銘」)이나 2척(『韻會』에는 ‘一 二尺 一曰一尺五寸爲’라 하였고, 『度地論』에서는 ‘二尺爲一 四 爲一弓’이라 하였다)으로도 통용되었는데, 이는 가 법제적인 제도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위로 쓰인 예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자가 1步의 4분의 1인 一尺의 길이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한 量田尺은 당연히 漢尺으로 6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고구려척을 사용한 量田에서는 모두 고구려척 5척을 1보로 정하고 있으며, 漢尺 6척을 1보로 정한 사례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길이 35.6cm의 자는 그 길이가 과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추정된 고구려척의 길이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학자라면 참으로 버리기 어려운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 자의 눈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자는 漢尺의 1.5척에 해당하는 자일 뿐, 고구려척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만 그 길이가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고구려척의 길이와 우연히 일치할 뿐인 것이다.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35.6cm 길이의 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구려에서 이성산성을 축조할 당시까지 漢尺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과거 한반도에서의 漢尺 사용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이 자의 발견으로 우리나라에서 唐大尺의 사용 이전에 漢尺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다. 다만 漢尺의 사용 범위나 사용된 시기의 하한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정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IV. 한국 고대의 量田法과 量田技術

앞에서 지금까지의 고구려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이성산성에서 35.6cm 길이의 자가 발견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고구려 자의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존재 여부도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고구려척은 실재했던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볼 차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고구려척은 역사상 존재한 척도였지만, 이는 실물자의 형태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자가 아니라, 量田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된 量田用 임시척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_ 관련 사료의 검토

본 절에서는 우선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고구려척의 기원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척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료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A. 凡度十分爲寸……十寸爲尺 一尺二寸爲大尺 十尺爲丈……凡度地量銀銅穀者……皆用大 此外官私悉用小者 (『令集解』卷10, 雜令 第30)
- B. 又雜令云 度地以五尺爲步 又和銅六年二月十九日格 其度地以六尺爲步者 未知令格之赴 竝段積步改易之義 請具分畹 无使疑惑也 答幡云令以五尺爲步者 是高麗法用爲度地令便 而尺作長大 以二百五十步爲段者 亦是高麗術云之 𠄎以高麗五尺 准今尺大六尺相𠄎 故格格云 以六尺爲步者則是 今五𠄎尺積步 改名六尺積步耳 其於地无所損益也 然則時人念 令云五尺 格云六尺 𠄎依格文可加一尺者 此不然 准令云五尺者 此今大六尺同覺爾耳 (『令集解』卷12, 田部)
- C. (和銅)六年二月……壬子始制 度量調庸義倉等類五條事 語具別格……夏四月……戊申領下 新格竝權衡度量於天下諸國 (『續日本記』卷6, 元明天皇)
- D. 令前租法 熟田五十代 租稻一束五把 以大方六尺爲步 步𠄎得米一升 此大升也 二百五十爲步五十代 慶雲三年格云 准令以大方五尺爲步 步𠄎得米一升 此升稱減大升 三百六十步爲段者 今案 五十代令段步積一同 (『政事要略』卷53, 交替雜事 雜田事)
- E. 凡度量𠄎衡者 官私悉用大 但測晷景合湯藥則用小者 其度以六尺爲步 以外如令 (『延喜式』卷50, 雜式)

- F. 凡度以北方是黍中者 一黍之廣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一尺二寸爲大尺 十尺爲丈 (『唐六典』卷3, 金部郎中員外郎)
- G. 度……十寸爲尺 又山東諸州 以一尺二寸爲大尺 人間行用之 (『舊唐書』卷48 食貨志)
- H. 度者分寸尺丈引也 所以度長短也 本起于鐘之長 以子穀是黍中者 一黍之廣 度之九十分 一鐘之長 一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而五度審矣 (『漢書』卷21 上, 律曆志1 上)

위의 자료 들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B의 『令集解』의 기록이다. 이 기록은 우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 까닭은 이 기록 속에는 당시의 토지제도와 측량기술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측량기술이나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이 기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서 高麗尺이란 단순히 척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이용한 토지의 측량이 그 궁극적인 목적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이는 기록에서 고려척, 즉 高句麗尺이 ‘高麗術’이나 ‘高麗法’이란 용어나 ‘度地’ 또는 ‘度支’와 자주 어울려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명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지측량과 관련된 결부제의 기원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일본의 토지 측량기술의 발전과 우리나라 고유의 측량 기술인 고려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2_ 신라 結負制의 특징과 측량기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이전 시기의 토지 면적은 동일한 단위로 측량되었다고 보인다. 그 단위로는 중국의 頃畝와 우리 고유의 제도인 結負가 있었는데, 頃畝와 結負는 그 명칭은 다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⁴³⁾ 결부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

43) 李宇泰, 1989, 「新羅時代의 結負制」, 『泰東古典研究』 5 ; 李宇泰, 1992, 「新羅의 量

는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문헌 기록상으로 최초의 것은 加耶에서 結을 단위로 토지를 측량한 것이 확인된다.⁴⁴⁾ 그러나 結부제에 관한 기록은 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⁴⁵⁾ 또 新文王 7년(687)에는 “文武官僚田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때에 사용된 양전의 단위는 結負이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또 聖德王 21년(722)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⁴⁶⁾는 기록으로 보아 이 무렵에는 전국적인 양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新羅村落文書는 바로 이러한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때의 양전은 村落文書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結負뿐만 아니라 束까지 정밀하게 측량된 것이었다.

그런데 신라 結부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조선 시대의 結부제와 같이 田品에 따라 그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품에 관계없이 면적이 동일한 단일 면적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라의 結負는 田地의 면적을 나타내는 데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데에 두루 사용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신라 結부제의 특성인 동시에 후대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지는데, 고려 田柴科에서 田地의 면적뿐만 아니라 柴地의 면적도 結負로 나타낸 것은 바로 신라의 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結부제는 그 명목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용 방법에서도 신라와 거의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려시기의 양전 기술을 통해 거꾸로 신라 結부제의 측량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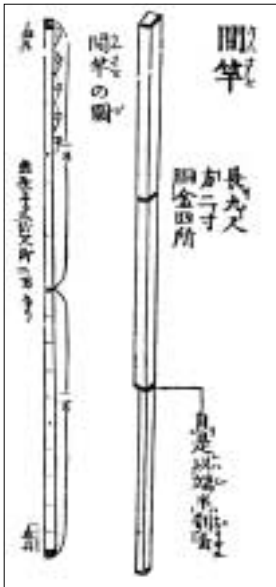
고려 초기의 量田式은 『高麗史』 食貨志에 전하는 바와 같이 ‘方三十三步爲一結’이었다.⁴⁷⁾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田一結方三十三步’라는 기록의 아래

田制 - 結負制의 成立과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37.

44)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에 “以元嘉二十九年壬辰 於元君與皇后合婚之地創寺 額曰 王后寺 遣使審量近側平田十結 以爲供億三寶之費”라 하여 元嘉 29년(452, 신라 訥祗王 36)에 結이 쓰이고 있다.

45) 『三國遺事』 卷4 圓光西學, “時有檀越尼 納田於占察寶 今東平郡之田一百結是也 古籍猶存”; 『三國史記』 卷42 列傳 金庾信, 663년, “賜庾信田五百結”.

46)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聖德王 21년, “始給百姓丁田”.



〈그림 2〉 村井昌弘의 『量地指南』(享保18년, 1733)과 秋田義一の 『算法地方大成』(天保8년, 1837)에 보이는 間竿의 모습. 1步(6尺)를 10등분한 分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松崎利雄, 1979, 『江戸時代の測量術』, 日本東京: 綜合科學出版, 32쪽에서 재인용)

에 있는 ‘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라는 細註의 부분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6寸=1分, 10分=1尺, 6尺=1步로 곧 1步=6尺=60分=360寸이 된다. 즉 1尺=60寸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귀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착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가운데 구절이 ‘十分爲六尺’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즉 10分=6尺으로 1분은 0.6尺, 즉 6寸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1分은 측량상의 편의를 위한 사용된 임시적인 단위로 量田을 위한 임시단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⁴⁵⁾

이와 유사한 예를 일본의 量田에서도 찾을 수 있다. 1837년(日本 天保 8년)에 나온 『算法地方大成』에는,

“間竿(量田用 자)은 6寸을 1分으로 하고, 10分을 1間(=步)으로 한다. 둘레 4寸 정도의 대나무를 2間 길이로 잘라 마디를 없애고 양쪽 끝을 구부리고 싸고, 가운데에 一間을 새겨 넣고 또 1分의 눈금을 새긴다.”(그림 2 참조)

고 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高麗史』 文宗23年條의 기록의 細註를 수정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⁴⁹⁾ 즉 1보를 10分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步와 尺

47) 『高麗史』 卷78 食貨志 田制 經理 文宗 23年 條, “(文宗)二十三年 定量田步數 田一結 方三十三步(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 二結 方四十七步 三結 方五十七步 三分 四結 方六十六步 五結 方七十三步八分 六結 方八十步八分 七結 方八十七步四分 八結 方九十步七分 九結 方九十九步 十結 方一百四步三分”.

48) 이에 대한 자세한 고증은 李宇泰, 1992, 앞의 논문, 58~61쪽 참조.

49) 李宇泰, 1989, 앞의 논문, 62쪽.

만을 사용할 때 야기되는 분수 계산의 불편함을 덜고 더 정확하게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方三十三步爲一結’의 量田式은 고려 文宗代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훨씬 전인 光宗代에 이미 이러한 양전식으로 양전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⁵⁰⁾ 그렇다면 文宗 23년의 量田步數에 대한 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미 이전부터 ‘方三十三步爲一結’의 제도가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문종 23년에 이러한 量田式이 다시 제정된 이유는 문종 23년의 量田式 제정의 목적이 ‘方三十三步爲一結’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細註 부분에 명기된 ‘十分爲一步’에 있는 것이다. 양전의 단위로 ‘步’ 아래에 ‘分’이라는 단위를 설정한 것이 중요한 변화인 것이고, 따라서 이를 명문화하여 공포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더 엄밀한 量田을 시행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고려 전기의 量田式이 ‘方三十三步爲一結’이었으며 1步는 6尺이었고, 실제 測量에는 1步를 10등분한 分이란 단위를 사용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통일신라 결부제의 내용도 고려 전기와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고려 전기의 이러한 量田式은 신라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¹⁾ 그렇다면 나아가 1步를 10등분한 分이란 단위를 사용한 것도 고려시기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신라에서 사용된 측량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의 원천이 바로 앞에서 인용한 『榷集解』에 등장하는 ‘高麗法’ 또는 ‘高麗術’이 아닌가 생각된다.

50)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46쪽, “寺之段 司倉上 導行審是白乎矣 七十六是去丙辰年 量田使前守倉部卿藝言·下典奉休·算士千達等 乙卯二月十五日 宋良卿矣結審是乎導行乙用良 顯德三年丙辰三月日 練立作良中 代 下田長陋七步 方陋步 北能召田 南東渠 西葛頸寺田 承孔伍百肆拾 結得 肆拾玖負肆 東 同寺位同土 犯南田 長拾玖步 東三步 三方渠 西文達代 承孔百四 結得玖負伍束”.

51) 李宇泰, 1989, 앞의 논문.

V. 高句麗尺의 실제 - 高句麗尺과 高麗術의 관계

고구려척과 고려술 내지는 고려법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 번거롭지만 앞서 인용한 『令集解』 권12, 田部の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又雜令云 度支以五尺爲步 又和銅六年二月十九日格 其度地以六尺爲步者 未知令格之赴 竝段積步改易之義 請具分상 无使疑惑也 答 幡云令以五尺爲步者 是高麗法用爲度地 令便而尺作長大 以二百五十爲步段者 亦是高麗術云之 躡以高麗五尺 准今尺大六尺相竝 故格云以六尺爲步者 則是 令五尺積步 改名六尺積步耳 其於地无所損益也 然則時人念 令云五尺 格云六尺 躡依格文可加一尺者 此不然 唯令云五尺者 此今大六尺 同覺爾耳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질문자는 ‘雜令’에서 측량을 할 때에 1보를 5척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즉 이 ‘잡령’의 규정이 和銅 6年 2月 19日의 格(=화동격)의 1보 6척의 규정과 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별을 해달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다. 이에 대한 답의 내용이 계속하여 나온다.

“(대보울)령에서 5척을 1보로 한 것은 고구려의 법(=高麗法)을 사용하여 量田한 것으로 (量田의) 편의를 위하여 1척의 길이를 늘린 것으로, 이 제도에서는 250步가 1段이 되는데 이 또한 고구려의 기술(=高麗術)이다. 따라서 고구려척으로 5尺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大尺(=唐大尺) 6尺과 같으므로 화동격에서 6尺이 1步가 된다고 한 것 또한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잡령에서는 5척 1보로 量田하고 화동격에서는 6척 1보로 量田한다고 하였지만 그 실상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이 잡령에서 5척이라 하였고 화동격에서는 6척이라 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과거의 5척에 1척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잡령의 5척과 화동격의 6척은 같은 것임을 명심하라.”

이상의 답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고구려척의 5척이 당시 사용되고 있던 大尺 6척과 같은 길이며, 둘째, 이러한 긴 길이의 자를 사용하여 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측량의 편의를 위해서이며, 셋째, 이러한 측량 방법을 고려술(高麗術) 또는 고려법(高麗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구려척은 당시에 통용된 당대척보다 20% 정도 伸長된 36cm 길이의 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量田, 즉 토지의 측량에만 사용된 특수한 용도의 것이었으므로, 당시 일본에서는 이를 고려술 또는 고려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통 사용된 자보다 20%가 긴 자가 측량용으로 사용된 이유는 5척 1보의 제도가 토지 측량에서 계산이 훨씬 간편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측량에서 1間의 길이를 10등분한 6寸 길이의 1分이 量田의 경우에 한하여 특수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특이한 제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는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한 고려의 기록에서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고려술 내지 고려법으로 불렀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원류로서 고구려의 양전기술을 상정한다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척이 고구려의 자(尺)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高麗術 또는 高麗法은 바로 ‘高句麗術’ 또는 ‘高句麗法’으로 고구려의 측량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양자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고구려척은 고구려에서 사용된 量田技術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고구려의 양전기술이 고구려의 자와 함께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구려척의 기원은 양전의 편의를 위해 1보의 길이를 10등분한 하부 단위의 2배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의문점은 1보 길이의 10분의 1인 1分(分)을 그대로 양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그 2배의 길이를 양전적으로 정했을까 하는 점이다. 이는 계산상으로는 당연히 步의 10분의 1을 양전척 1척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했을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5척을 1보로 하는 새로운 제도가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1보의 10분의 2를 양전척 1척으로 하여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5척=1보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상의 추측이 옳다면 고구려척의 기원과 그 길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금까지 고구려척의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될 수 있다. 고구려척은 양전용의 특수한 척으로 토지의 측량에만 사용된 임시적인 단위였다. 그런데 실제 토지의 측량에 사용된 자는 일반적으로 繩尺이라고 불리는 줄자였다.⁵²⁾ 이러한 양전용 줄자는 일반 노끈에 붉은 색의 형겼을 매달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양전용 자인 승척은 재료의 특성상 그 실물이 잘 남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신라와 일본에서는 당대척을 받아들이고 또 고구려의 1보 5척제를 畞田에 사용하면서도, 왜 1보 5척의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1보 6척제를 고수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 일본에서는 토지의 측량 단위로 단보(段步)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⁵³⁾ 그러나 신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는 전혀 다른 계통인 결부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라 결부제의 기원이 무엇이며 결부제와 단보제의 상관관계 등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로서는 신라에서 고구려의 측량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측량 단위를 고집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제도의 혼란이 주는 문제들을 백성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해해 두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命集解』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도량형제의 보급과 변용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도 커다란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상론하지 않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하겠다.

52)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지의 측량인 檢地를 ‘繩入れ’라고도 부른다.

53) 朴贊興, 2002, 「고구려의 段步制」, 『한국사학보』 12.

VI. 맺음말

고구려척에 관한 논의는 한국 도량형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며, 또 그 기원과 사용 범위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고구려척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二聖山城과 부여 쌍북리 등에서 삼국시대의 실물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삼국의 실물자는 모두 3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총 길이 36.5cm의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를 고구려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자의 눈금이 모두 15마디이므로 이는 35.6cm의 고구려자가 아니라 약 24.3cm의 漢尺 계통의 자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자가 1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인 1 尺의 길이를 재기 위한 것으로, 고구려척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은 매우 흥미로운 주장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또한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고구려척은 분명히 唐大尺의 1.2배로 계산된 것이지 漢尺의 1.5배라고 볼 아무런 근거 없기 때문이다.

고구려척의 기원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양전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양전의 편의를 위해 1보의 길이를 5등분한 하부 단위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는 고구려척을 高麗術 또는 高麗法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왜 신라와 일본에서는 당대척을 받아들이면서도 1보 5척의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1보 6척제를 고수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제도의 혼란이 주는 문제들을 백성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추리하였다. 일본의 '영집해'의 기록이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구려척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실물자의 발견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어쨌든 이는 고구려의 측량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발달된 고구려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구려의 기술이 신라와 일본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ABSTRACT]

Redisussion on the Koguryo-chuck(高句麗尺)
 - Especially on the Relation about the Koguryo-chuck with
 the Koryo-sul(高麗術)-

Lee, Woo-Tae

As opposed to argument about Koguryo-chuc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Korean historical metrology. There was confrontation of the view which denies the Koguryo-chuck and accept it.

But recently, the discussion about this Koguryo-chuck is newly regarded. The reason is rulers of this age are newly discovered. The rulers of three countries age which are discovered until now is all 3 things. Among them the most interest is the ruler which discovered in Yisung mountain fortress wall(二聖山城) has 36.5cm's length. There is an opinion that regards it as a Koguryo-chuck, but it will be the wrong thought. Because the all scale of this ruler is 15. Therefore I think it must be a sort of Han-chuck(漢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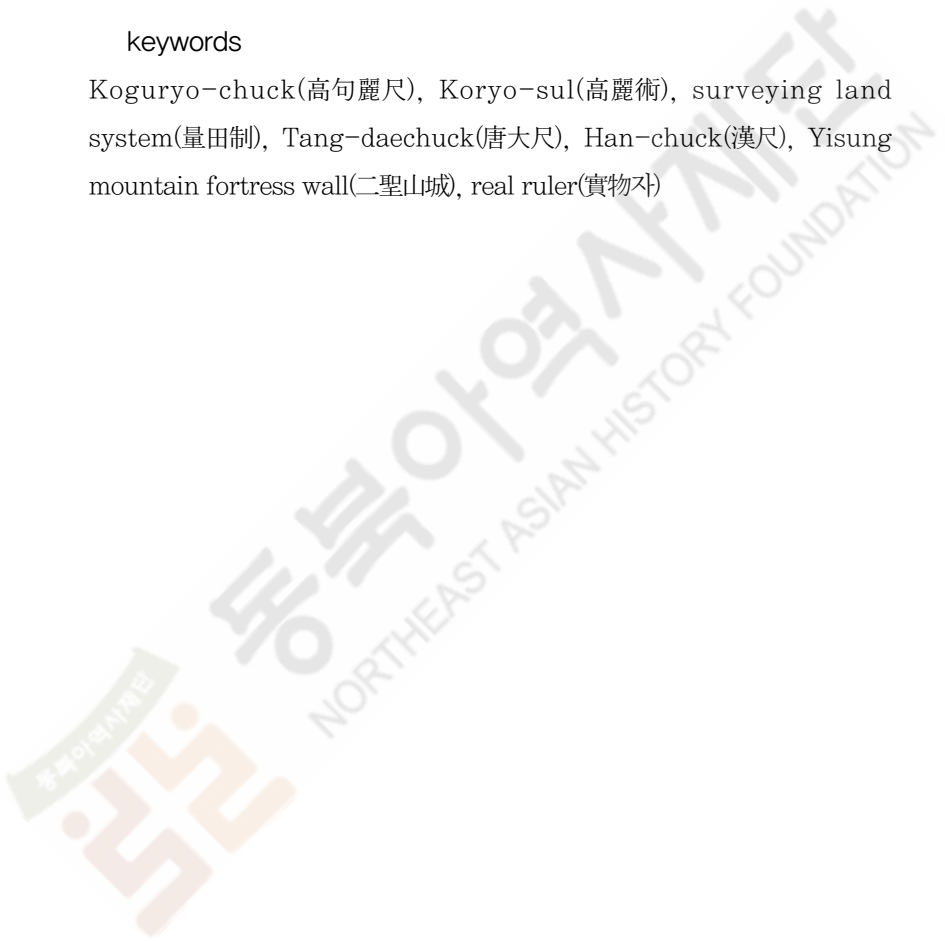
The origin of Koguryo-chuck has very close relations with surveying land system(量田制). I think Koguryo-chuck was made for the convenience of surveying land. Because record of "Ryung-jiphae(令集解)" is considered to reflect such a situation correctly. Through the fact that the Koguryo-chuck also calls as Koryo-sul or Koryo-bub(高麗法), we can know the fact.

The existence of Koguryo-chuck shows the degree of surveying

technical level in Koguryo. The research for Koguryo-chuck must be continued until the real Koguryo-chuck could be discovered.

keywords

Koguryo-chuck(高句麗尺), Koryo-sul(高麗術), surveying land system(量田制), Tang-daechuck(唐大尺), Han-chuck(漢尺), Yisung mountain fortress wall(二聖山城), real ruler(實物자)



陽原王代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김진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I. 머리말

6세기 중반 고구려 정치사는 베일에 가려 있다. 초기에 비해 고구려 자체 사료도 천재지변과 관련한 기사를 제외하면 거의 없어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외 관련 기록은 단편적이거나 남아 있어 이를 검토해 본다면 고구려 정치사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시기 연구는 대체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수 유역을 둘러싼 삼국 간 항쟁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¹⁾

1) 노태돈은 고구려가 한수 유역을 상실한 배경에 주목하여 이 시기 고구려 안팎의 관계에 대한 정치한 분석을 하였다. 노태돈,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13; 노태돈, _____, 1984, 「5~6世紀 東亞細亞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44. 이상은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수록. 이성제는 流人送還 문제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북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성제, 2001, 「高句麗와 北齊의 關係」, 『韓國古代史研究』23;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수록. 이밖에 전반적인 개관이나 부분적으로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공석구, 1998, 「5~6세기 高句麗의 對外關係」, 『高句麗 領域擴張史研究』, 서경문화사; 고구려연구회, 2002, 『高句麗國際關係』, 학연문화사. 최근에는 5~6세기 고구려 대외관계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고구려

주지하듯, 양원왕 대 고구려는 안으로 544년 말 왕위계승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밖으로 유연의 몰락과 돌궐의 등장, 東魏·北齊革命, 梁·陳革命 등 대륙정세가 크게 요동쳤다. 이와 연동하여 한반도 내 백제·신라 연합군은 고구려가 장악한 한수 유역을 공략하여 점령하였다.

학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변동에 따라 고구려가 귀족연립정권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본다.²⁾ 최근에는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를 귀족연립체제로 보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³⁾도 나왔다. 고구려 후기사 성격을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양원왕의 구실과 역량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양원왕이 왕위계승분쟁을 겪으면서 즉위하였고, 이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시각을 조금 달리하여 고구려 안팎의 상황에 양원왕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6세기 중반 고구려 정치사 이해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재단, 2006, 『北方史論叢』 11.

- 2) 안장왕 이후 고구려왕권의 약화와 귀족들의 발호에 대해 이홍직이 언급(이홍직, 1971a,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304~306쪽)한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다만 귀족연립정권 등 장시기에 대해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노태돈은 양원왕 대 이후로 보고 있다(노태돈, 1999, 위의 책, 434쪽). 임기환은 안장왕 대 이후로(임기환, 2004, 『6~7세기 정치세력의 동향과 귀족연립체제』,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83쪽), 김현숙은 안원왕 즉위과정에서 성립한 것(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317쪽)으로 보았다.
- 3) 민철희, 2002, 「高句麗 陽原王·平原王代の 政局變化」, 『史學志』 35, 55~57쪽.

II. 陽原王代の 政局動向

『日本書紀』欽明條 기록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추근과 세군 간 치열한 정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周書』高麗傳 및 『舊唐書』高麗傳에는 대대로 둘러싼 귀족 간 다툼을 전한다. 전자가 귀족연립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중시되었다면 후자는 귀족연립정권의 운영양상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주목 받았다. 여기서는 양원왕의 즉위를 둘러싼 분쟁과 대대로 선임기록을 통해 당시 고구려 내정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양원왕의 즉위는 평탄하지 않았다. 『三國史記』에는 왕위계승에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나와 있지만⁴⁾ 『日本書紀』에는 양원왕의 즉위와 관련해 대대적인 분쟁이 있었음을 전한다. 이 기록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⁵⁾를 피력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고구려 내정을 전하는 중요한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A-① 봄 삼월 왕이 돌아가니 號를 安原王으로 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7 安原王 15年)

② 왕의 諱는 平成이며 안원왕의 장자이다. 날 때부터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장성하면서는 雄豪하여 남들보다 뛰어났다. 안원왕 3년 태자가 되었다가 15년 안원왕이 돌아가자 즉위하였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7, 陽原王 卽位)

B-① 이 해(545) 고려에 大亂이 일어나 주살된 자가 많았다. 百濟本紀에 이르대, 12월 甲午에 고려의 細群과 汗群이 궁문에서 싸우는데 북을 치며 전투를 벌였다. 細群이 패하고 군사를 풀지 않은지 3일이 되자, 細群子孫 모두를 사로잡아 죽였다. 戊戌, 百濟의 香岡上王이 죽었다. (『日本書紀』 卷19, 欽明 6年)

4) 이홍직은 양원왕 이후 영양왕 사이 왕위를 둘러싼 정쟁기록이 말살 또는 정리되어 『三國史記』에 실리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홍직, 1971b, 「日本書紀所載高句麗關係記事考」,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58쪽.

5) 최재석, 1999, 「『日本書紀』에 나타난 高句麗記事에 대하여」, 『史學研究』 58 · 59, 185쪽.

- ② 이해 고려에 대란이 일어나 무릇 싸우다 죽은 자가 2000여 명이 었다. 百濟本記에 이르대, 高麗가 正月 丙午에 中夫人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 나이 여덟살이었다. 법王에게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正夫人은 아들이 없고 中夫人은 세자를 낳았다. 그 舅氏가 汙群이었다. 小夫人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舅氏가 細群이었다. 법王의 병이 심해지자 細群과 汙群이 각각 그 부인의 아들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細群의 죽은 자가 2000여 명이였다. (『日本書紀』卷19, 欽明 7年)

양원왕 즉위와 관련한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 『三國史記』에는 태자로서 무난히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日本書紀』에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심각한 내분이 일어났음을 전하고 있다. 둘째, 안원왕 사망일이 『三國史記』에는 545년 3월로, 『日本書紀』에는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셋째, 양원왕 즉위년⁶⁾도 『三國史記』는 545년, 『日本書紀』는 546년으로 기록하였다. 나이도 차이가 있다.

『日本書紀』가 인용한 『百濟本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제기한 『三國史記』와 대조를 통해 이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려에서 대란이 일어난 연월에 대한 문제이다. 『日本書紀』에는 545년 12월 대란이 일어나 546년 정월 양원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三國史記』는 안원왕이 545년 3월에 사망하고 이어 양원왕이 즉위한 것으로 나와 있다. 『三國遺事』도 545년 양원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대란의 발생시점은 544년 말이라고 판단된다.

양원왕의 즉위 시 나이에 대해 『日本書紀』는 8세라고 기록하였다. 하지만

6) 三品彰英은 중국 측 기록을 증시하여 『日本書紀』 소재 『百濟本記』의 백제 왕력은 실제 왕대보다 3년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陽原王之 즉위 연대도 3년을 인하여야 한다고 주장(三品彰英, 1966, 「高句麗王曆の一こま-百濟王曆の問題に連關して-」, 『朝鮮學報』 37·38)하였지만 무령왕 지석을 통해 백제·고구려 양국 기년 조정론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기동, 1991, 「武寧王陵出土 誌石과 百濟史研究의 新展開」, 『百濟文化』 21 ; 이기동, 1996a, 『百濟史研究』, 일조각(재수록), 257~259쪽.

안원왕 3년(533) 태자로 책봉하였고 545년 안원왕의 사망과 함께 즉위했다는 점, 양원왕 즉위조에 장성하면서 雄豪한 기질을 보인다는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 이미 양원왕은 청년기에 접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⁷⁾

그렇다면 왕위계승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원왕 대 고구려 내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531년 안장왕이 시해를 입자 동생이었던 보연이 제23대 안원왕으로 즉위하였다. 안원왕이 즉위하게 된 이유로 안장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음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적장자가 없다는 의미일 뿐 아들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즉 안장왕 계열은 왕위계승원칙에서 어긋날 만한 혈연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배제된 것 같다.

다음으로 안원왕은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여기서 안원왕에게 3명의 정실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원왕은 즉위과정에서 처가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귀족들의 합의에 따라 왕위를 계승한 안원왕은 즉위 3년째인 533년 태자책봉을 서둘러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훗날 小夫人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고구려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안원왕 치세 기간 중 잦은 天災로 국내 상황이 매우 어수선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흉수·가뭄·지진 등이 꼬리를 물며 이어져 민의 경제기반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심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안원왕은 서둘러 진휼에 나섰다.

이상과 같은 정국 불안요인은 안원왕 대 후반 왕위계승을 둘러싼 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 추군 측의 지지를 받아 양원왕은 즉위하였다. 하지만 외척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양원왕에게 이들은 즉위 이후에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양원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외척세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즉위상황과 함께 주목할 기록이 있다.

7) 노태돈은 『日本書紀』의 기록을 받아들여 양원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고 왕위계승분쟁을 수습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노태돈, 1999, 앞의 책, 440~441쪽.

- C-① 그 大對盧는 곧 강약으로 서로 겨루어 뺏어 차지하며 왕이 두어 임명하지 않는다. 『周書』卷49, 高麗傳)
- ② ①그 관직 중 높은 것은 大對盧이니 1품에 비견되며 國事를 총괄한다. 3년마다 바뀌는데, 적격한 자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 간혹 서로 불복하면 모두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하니 이긴 자가 자리를 차지한다. 왕은 다만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능히 제어하지 못한다. 『舊唐書』卷199上, 高麗傳)

대대로와 관련한 기록은 『周書』가 가장 이른다. 『隋書』에는 대대로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舊唐書』 高麗傳에 좀더 부연된 형태(㉠)로 서술되었다. 문제는 대대로의 선임을 둘러싼 정쟁이 특수한 경우의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대로 선임이 귀족 간 정치적 이해 및 역관계에 따라 합의·조정되는 것이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태돈은 C-②-①을 『周書』 고려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록으로 그간 변화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귀족층 내에서 대대로를 둘러싼 선임이 관례화되어 그에 관한 준칙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⁸⁾ 반면 대대로를 둘러싼 귀족상쟁은 정치혼란기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하고 정국이 안정된 경우에는 국왕이 대대로를 임명한 것으로 이해한 견해⁹⁾도 있다.

이 문제는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정치체제의 운영양상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먼저 『周書』에서 전하는 기록이 어느 시기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周書』는 唐 高祖 武德 年間에서 唐 太宗 貞觀 2年(618~628) 사이에 令狐德達 등이 奉勅撰하였다. 『周書』 이전에 周朝에 관한 史書로 隋의 牛弘이 지은 『周紀』 18編이 『周書』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된 것¹⁰⁾으로 보인다.

8) 노태돈, 1999, 앞의 책, 443쪽.

9) 민철희, 2002, 앞의 논문, 85~90쪽.

10) 국사편찬위원회,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602쪽. 『隋書』 卷49, 牛弘傳을 보면, 牛弘(545~610)은 開皇(581~600) 初부터 흠어져 있는 典籍의 편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필자는 이때 『周史』도 함께 편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隋書』(中華書局)卷33, 經籍2에는 牛弘이 『周史』 18권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고구려와 서위(뒤이은 북주)의 교류 사실은 546년(서위)과 577년(북주)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¹¹⁾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위로부터 답례사가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신의 왕래과정에서 서위가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을 법하다. 그럴 때, 대대로를 둘러싼 상쟁을 비교적 정국이 안정되었던 577년 평원왕 대 기사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544년 왕위계승분쟁을 치른 이후 대대로를 둘러싼 한바탕 분쟁이 있었고, 이 사실이 뒤에 전해진 것으로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¹²⁾

여기서 대대로가 3년에 한 번 교체되며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을 신라의 상대등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대등의 임명은 귀족회의 선거를 통해 추대를 받되 그 시기가 왕위 교체와 때를 같이했다.¹³⁾ 이럴 때, 고구려 귀족회의인 대로회의가 주목된다.¹⁴⁾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대대로의 선출은 귀족회의의 중요한 권한으로, 무엇보다 그 선출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앞서 상대등 임명이 왕위 교체와 때를 같이한다고 하였다. 왕위계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겪은 뒤, 고구려는 대대로 선출을 둘러싼 다툼에 다시 한번 휘말린 것 같다. 혜랑법사가 말한 “우리나라의 정사가 어지러워 멀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대목은 바로 이를 두고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¹⁵⁾

이렇듯 양원왕은 왕위계승과 대대로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수천 명이 희생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양원왕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반된 민심을 수습

11) 『周書』(中華書局) 卷49, 高麗傳, 885쪽.

12) 민철희도 대대로를 둘러싼 귀족상쟁은 안원왕 말년의 정란과 그 이후의 정치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민철희, 2002, 앞의 논문, 88~89쪽.

13) 이기백, 1962,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 이기동, 197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재수록), 97~98쪽.

14)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과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윤성용, 1997,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신서원.

15) 『新撰姓氏錄』 右京諸蕃下條에 언급된 고구려인의 왜투화 기록을 양원왕 대 정치적 관계에 따라 망명한 세력으로 추측한 견해(임기환, 2004, 앞의 책, 266쪽)가 있다.

하고 자신의 즉위를 도운 추군들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546년 2월 王都의 배나무가 서로 가지를 連하였다는 기록이나 548년 9월 丸都에서 嘉禾를 바쳤다는 사실은 양원왕 대 내정을 수습하고자 하는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양원왕은 즉위 후 약 3년 무렵인 548년 3월 梁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¹⁶⁾ 이 3년간의 시차는 양원왕 즉위 초 고구려 내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책봉을 통해 양원왕은 梁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대외적 입지를 넓히는 데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⁷⁾

특히 정국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 주목할 점은 양원왕의 품모에 대한 묘사이다. 雄豪한 기질을 가지며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史家の 평가는 양원왕이 정국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점은 양원왕 대 고구려 대외관계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高句麗 西北方の 動向과 對南方關係

안원왕 대 북조와 외교를 재개한 고구려는 양원왕 즉위 초까지 賀正使를 파견하는 등 對北朝外交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내분을 겪은 점을

16) 『梁書』(中華書局) 卷3, 武帝下 太清 2年, “三月甲辰 撫東將軍高麗王高延卒 以其息 爲寧東將軍高麗王樂浪公”, 93쪽.

17) 고구려와 梁의 교류는 책봉과 조공을포함해 10차례 이상 확인된다. 이 횟수는 주변 국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축에 든다. 梁의 입장에서 고구려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김종원의 지적처럼, 양무제 시기 잦은 사행과 책봉은 梁의 盛勢를 바탕으로 주변 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梁職貢圖는 바로 이를 보여준다. 김종완, 2001, 『梁職貢圖의 성립 배경』, 『魏晉隋唐史研究』 8, 41쪽.

고려할 때 고구려는 대륙정세에 더욱 민감하였다. 6세기 전반 국제관계는 東魏 · 西魏 · 梁 삼국이 정립하는 가운데 柔然과 吐谷渾이 개입하는 양상을 띠고

〈6世紀 中葉 主要國의 對北朝 遣使表〉

東魏/北齊					年度	西魏/北周				
梁/陳	突厥	柔然	吐谷渾	高句麗		梁/陳	突厥	柔然	吐谷渾	東魏/北齊
◀				←	535					◀
▶→←				←2	536					◀
→←		←		←	537				→▶	◀
2→←		◀		←	538				▶	◀
→←				←	539					
2→←2		←		←	540					
→←		→←		←	541					
2→←2		←	←	←	542					◀
→←		←	←	←	543				▶	◀
→←2		←	←	←	544					
2→←		←	←	←2	545		→			
→←		←		←	546		←			◀
→◀				←	547					
▶←2		←	←	←	548					
		←	←	←	549					◀
		←3	←	←	550	▶				▶
→←3		←2	←	←	551	◀	←			
▶←				→←	552	←				
←	▶		←		553	▶	←		▶←	
					554	▶→←		◀		
←	←	▶←		←	555	▶◀				
▶→◀					556				▶	
←					557					
					558		←			
					559			◀		

※ 1. 『魏書』, 『梁書』, 『北齊書』, 『南史』, 『北史』, 『周書』, 『陳書』, 『冊府元龜』를 중심으로 작성
 2. ▶: 東魏(北齊) 및 西魏(北周)의 공격 ◀: 상대국의 공격
 예) 536년 ▶: 東魏의 對梁 공격 536년 ◀: 東魏의 對西魏 공격
 3. →: 東魏(北齊) 및 西魏(北周)의 遣使 ←: 상대국의 遣使 숫자: 횟수
 예) 536년 ←2: 高句麗의 對東魏使 2회 파견

있었다.

위 표는 북위의 동서분열 이후, 주요 나라들 사이 관계를 정리해 본 것이다. 동위와 梁은 활발하게 교류하며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유연과 토욕혼, 고구려 등 주변 강국들도 동위에 사신을 자주 파견하였다. 반면 동위와 서위는 교류가 전무할 정도로 대립이 심각하였다. 당시 동위는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530년대 이후 줄곧 서위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서위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였다. 동위와 우호관계에 있던 토욕혼의 잦은 침입으로 서위는 고역을 치러야만 했다.¹⁸⁾ 이를 통해 종래에는 이 시기 동위를 중심으로 梁, 유연, 토욕혼 등이 연대하여 서위를 포위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최근 西魏에서 활약한 賀拔勝을 통해 對梁外交를 살핀 결과, 西魏·梁관계는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보는 연구¹⁹⁾가 나왔다.

실제 표에서도 보듯, 550년 이전까지 西魏와 梁의 이렇다 할 교전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梁이 동위와 연대하여 서위를 압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梁의 경우 동위와 서위가 분열되어 상쟁하는 것이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비록 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위와 지속적인 교류관계에 있었고 서위와는 교류가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소극적인 동조는 인정할 수 있다.

유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연은 서위와 동위의 분열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서위는 동위를 견제하고자 538년 3월 皇后 乙氏를 폐하고 유연의 郁久閭氏를 황후로 맞이하였다.²⁰⁾ 이에 유연은 동위와의 관계를 끊고 538년 2월 동위가 서위 변경을 공략한 틈을 타 幽州의 范陽을 지나 易水까지, 9월에는 肆州의 秀容을 치고 三推에 이르렀으며 동위에서 온 사자 원정을 죽여 버렸다. 하

18) 『周書』 卷50, 吐谷渾傳, “大統中 呂再遣使獻馬及羊牛等 然猶寇抄不止 緣邊多被其害”, 913쪽.

19) 前島佳孝, 2002, 「賀拔勝の經歷と活動-西魏前半期の對梁外交と關連して」, 『東方學』 103.

20) 『北史』(中華書局) 卷5, 魏本紀 大統 4年, 177쪽.

지만 동위가 유연의 사신을 돌려보냈고 마침 悼皇后 郁久闔氏가 해산 중에 사망하였다. 그러자 동위 승상 고훈은 우문태가 悼皇后를 죽였다고 유연에 알리면서 서위와 유연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한편 동위는 이 기회를 틈타 유연의 혼인제의를 수락하였으며 후하게 접대하였다.²¹⁾ 서위 문제는 사신을 보내어 유연에 다시 청혼하고 厚幣를 지급하는 등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다.²²⁾ 하지만 유연은 동위와 더욱 밀착하여 갔다. 당시 유연은 기세등등하게 北朝에 칭신하지 않았으며 국서에서도 抗禮하였다.²³⁾ 이렇듯 유연은 실리를 취하고 있을 뿐 동·서위 상쟁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 동위와 그 주변국 관계는利害로 맺어진 매우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 고구려도 동위와의 교섭에 주로 매달렸으며 별다른 마찰이나 갈등을 빚지 않았다. 즉 고구려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1차 변수로 대륙정세는 魏齊革命(550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양원왕은 고구려 내부를 추스르는 한편 백암성을 개축하고 신성을 수리하는 등 서북방 방비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對南方關係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아래 기사를 보자.

- D-① 정월, 濊兵 6000을 이끌고 백제의 독산성을 칠 새, 신라장군 주진이 와서 구원하므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7, 陽原王 4年)
- ② 봄 2월, 高句麗가 濊人과 더불어 百濟 獨山城을 공격하였다. 百濟가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장군 朱玲을 보내어 勁卒 3000을 거느리고 치게 하였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음이 많았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4, 眞興王 9年)
- ③ 정월, 高句麗王 平成이 濊와 공모하여 漢北獨山城을 공격하였다. 왕이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니, 신라왕이 장군 朱

21) 『北史』卷98, 遠遼傳, 3264~3265쪽.

22) 『周書』卷33, 楊龜傳, 571쪽.

23) 『北史』卷98, 遠遼傳, 3266쪽.

珍에게 甲卒 3000을 거느리고 출발토록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이동하여 獨山城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병과 일전을 벌여 크게 깨트렸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4, 聖王 26年)

- ④ 4월 壬戌 초하루 甲子, 백제가 中部 杆率 掠葉禮 등을 보내어 “德率 宣文 등이 칙을 받고 신의 나라에 이르러 ‘청하는 구원병을 때에 맞춰 보내겠다’는 말을 전하였다. 삼가 은혜로운 조칙을 받고 기쁘고 즐겁기 그지없다. 그러나 馬津城 전투에서 [정월 辛丑에 高麗가 군대를 이끌고 馬津城을 포위하였다.] 사로잡은 포로가 安羅國과 日本府가 불러들여 벌줄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정으로 미루어 진실로 서로 비슷하다 ……”. (『日本書紀』卷19, 欽明 9年)

백제의 고구려 우산성 공격 이후 8년 만에 고구려는 백제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548년 고구려의 독산성 공격은 양원왕이 濊와 공모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양원왕이 濊兵을 이끌고 공격한 獨山城은 어디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대다수 학자들은 사료 D-④를 근거로 독산성을 현재의 예산으로 비정하고 있다.²⁴⁾ 『三國史記』지리지의 馬津 기록을 찾아보면, 馬津縣은 본래 孤山이라고 쓰여 있다.²⁵⁾ 그리고 이 孤山은 지금의 예산현이라고 한다.²⁶⁾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D-③에는 독산성이 한수 이북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혹자는 문주왕 2년 한북민을 오늘날 아산지역으로 비정

24) 이흥직, 1971, 앞의 책, 162~163쪽 ; 이병도 역주, 1983, 『三國史記』下, 을유문화사, 65쪽 註 36. 그러나 독산성을 오늘날 예산으로 비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주보돈은 독산이 漢北에 위치한 것으로 표현된 점, 신라 장군 주령이 하루 걸려 독산성까지 달려가 싸운 점, 『高句麗本紀』에는 濊兵만이 싸움에 참전한 점, 『三國史記』에 獨山 혹은 獨山城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충남 예산 일대로 비정하기 어려운 곳이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비정은 미룬 채 신라 영역에 가까운 지역일 것(주보돈, 2006,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84~85쪽)이라고만 하였다.

25) 『三國史記』, 雜志6 地理4, “馬津縣 本孤山”.

26) 『三國史記』, 雜志5 地理3 任城郡條, “孤山縣 本百濟烏山縣 景德王改名 今禮山縣”.

되는 대두산성으로 옮겼다는 기록을 근거로 이때 漢北은 금강 이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⁷⁾ 이는 475년 한성 공략으로 한수 유역이 고구려 수중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명이 이동하였다²⁸⁾는 데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475년 한성 공략 이후 『三國史記』에 보이는 한산성이나 한성 관련 기록들은 백제가 한수 유역을 영유하고 있는 듯이 기록하고 있다.²⁹⁾ 따라서 한북 기록을 금강 이북으로 규정하는 견해는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독산성이라는 명칭은 비단 백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武王 37년 조나 義慈王 19년 조에는 신라 독산성이 보인다. 그리고 김정호의 『大東地志』 禮山條에 “本百濟孤山 一云烏山 唐改馬津”에 대해 이병도는 마진도 백제시대의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김정호의 기록대로 唐이 마진으로 고쳤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병도는 백제 독산성을 충주로 보는 등 인식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³⁰⁾ 아직까지 독산성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구려가 濊兵을 동원하였고 한수 이북에 독산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온달전」에 따르면 한수 상류 이북지역도 한북이라고 불렀던 점,³¹⁾ 신라의 군사동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

27) 이근우,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15쪽, 註 221.

28) 이기백, 1996,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74~178쪽.

29) 김진한, 2006, 「5世紀 末 高句麗의 對北魏外交와 漢城 攻略」, 『北方史論叢』 12, 321~324쪽.

30) 이병도 역주, 1983, 앞의 책, 341쪽.

31) 노중국은 “高句麗王 平成이 濊와 공모하여 漢北獨山城을 공격하였다”라는 기사에 보이는 독산성은 한성도읍기의 지명을 이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고구려가 529년 한수 유역을 차지하였고 551년 백제가 다시 찾았다는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529년 오곡전투에서 패했더라도 위 기록만 본다면 이미 백제는 한강 이북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그럴 경우 551년의 한강 유역 진출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종래 통설대로 고구려는 475년부터 551년까지 한강 유역을 영유하였다고 주장하였다(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16~24쪽). 하지만 온달전에 보듯이, 한북은 비단 한수 하류 이북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한수 상류 이북도 한북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때의 한북 독산성은 한수 상류 이북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좋

려한다면 충주 근처로 비정할 수 있다.

독산성은 540년 백제가 공략했던 고구려 우산성과도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산성이 삼국 간 국경이 접하고 고구려의 남방 거점인 국원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가 독산성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좀더 주의해 볼 만하다. 이는 신라가 백제와 군사협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고구려를 압박할 만한 근거리의 군사 거점을 마련하였음을 보여준다.

5세기 말 무렵 신라는 소백산맥 이남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나갔다. 이후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가 북진하였다는 사실은 단양신라적성비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신라가 한수 상류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기반은 적성경영을 통해 그 교두보를 확보하였기에 가능하였다.³²⁾ 현재 이 비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545년부터 550년 사이로 비정된다. 적성은 지정학적으로 한수 유역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할 뿐 아니라 고구려 남방경영의 거점인 국원성과 가깝다. 『三國史記』에는 신라의 적성경영과 관련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그 진출시기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E. 정월 연호를 開國으로 고쳤다. 3월, 왕이 순수하여 娘城에 이르러 于勒 및 그 弟子 尼文이 음악을 잘 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왕이 河臨宮에 머물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각기 세 노래를 지어 아뢰었다. ……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2年)

위 기록은 진흥왕이 순수 중에 우륵 및 그 제자를 불러 음악을 연주시키는 대목이다. 이는 551년 이전 국원성이 신라 지배 아래 편제되었으며 가야인

을 뜻하다. 즉 고구려와 백제의 한수 유역 경영과 관련해서는 한수 상류와 한수 하류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32) 단양신라적성비와 관련해 단국대학교에서 종합적인 검토(단국대학교사학회, 1978, 「丹陽新羅赤城碑特輯號」, 『史學志』12)를 하였다. 신라의 적성경영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武田幸男의 연구(1979, 「眞興王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가 가장 주목된다. 이외에 많은 연구가 있으나 생략한다.

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사민³³⁾된 것을 보여준다. 신라의 국원성 진출이 적성 영유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고구려는 소백산맥 이북에서도 점차 밀려나 국원성 주변에서 신라와 백제 연합군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548년 고구려가 먼저 공격을 하였던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고구려에 독산성은 남방 거점의 확보와 관련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독산성 전투 이후 고구려와 백제는 550년 道薩城과 金峴城을 둘러싸고 다투었다. 이때 신라는 양국 병사가 피로한 틈을 노려 두 성을 취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가야를 둘러싼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었지만 한수 유역 진출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서로 묵인하였다. 드디어 551년 백제와 신라 연합군은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였다.

F-① 居柒夫 …… 12년(551) 辛未에 왕이 거칠부와 仇珍 大角滄, 比台 角滄, 訖知 迺滄, 非西 迺滄, 奴夫 波珍滄, 西方夫 波珍滄, 比次夫 大阿滄, 未珍夫 阿滄 등 8장군을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백제인은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세를 타 竹嶺 以外 高峴 以內의 10군을 취하였다. (『三國史記』, 列傳 第4, 居柒夫)

② 이 해(551) 백제 성명왕이 친히 군사 및 두 나라의 병사를 거느리고(두 나라는 新羅, 任那이다) 高麗를 정벌하여 漢城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平壤을 토벌하였는데, 무릇 옛 땅 6군을 회복하였다. (『日本書紀』卷19, 欽明 12年)

한수 하류에서 백제는 한성을 공략하고 오늘날 양주지역인 평양³⁴⁾까지 진출하였으며, 신라는 한수 상류에 공세를 벌여 죽령 이외 고현 이내 10군을 취하였다. 이로써 한수 유역은 백제와 신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³⁵⁾

33) 『三國史記』, 雜志1 樂 加耶琴.

34) 『三國史記』, 雜志4 地理2, “漢陽郡 本高句麗北漢山郡 一云平壤 眞興王爲州置軍主 景德王改名 今楊州舊墟”.

35)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한수 유역을 상실한 배경으로 서북방의 압박을 들고 있다. 특

IV. 高句麗의 對北齊關係와 對新羅 連和

양원왕은 남방으로 향하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를 압박하였지만 백제·신라 연합군의 한수 유역 진출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더구나 동위와 서위의 대립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된 기조 위에 있던 국제관계도 유연이 551년 돌궐에 궤멸되면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제는 고구려에 매우 중요하였다. 양원왕은 魏齊革命을 통해 들어선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책봉을 받았다. 우호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듯하던 대북제관계는 流人送還³⁶⁾을 둘러싸고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 G. 天保 3년(552) 文宣帝가 薺州에 이르러 博陵 崔柳를 사신으로 삼아 高麗에 보내어 魏나라 末 流人들을 요구하였다. 柳에게 詔勅하며 이르기를 “만약 (고려가) 따르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하였다. (고려에) 이르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자 (崔)柳가 눈을 부릅뜨고 꾸짖으며 주먹으로 成(양원왕)을 내리쳐 용상 밑으로 떨어뜨렸다. 成의 左右는 숨을 죽이고 꿈쩍도 못한 채 용서를 빌었다. 柳는 5000호를 돌려받아 復命하였다. (『北史』 卷94, 高麗傳)

히 『三國史記』에 기재된 돌궐의 침입기사(『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7 陽原王 7年,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 將軍高紇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는 독자적인 내용으로 중시되고 있지만 그 침입시기는 의문시된다. 돌궐이 유연을 궤멸시키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가 553년 무렵이며, 요해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일러도 550년대 중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가 한수 유역을 상실한 배경으로 돌궐로 표현되는 세력의 침입을 드는 견해(노중국, 2006, 앞의 논문, 45쪽)나 돌궐이 아닌 다른 세력이 서부방어선을 위협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노태돈, 1999, 앞의 책, 404쪽)에 대해 필자는 의견을 달리한다. 앞서 보았듯이, 고구려가 대남방작전을 전개할 동안 서북방 정세는 고구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6) 일부 연구자는 유인송환을 위해 북제 문선제가 崔柳를 고구려에 파견한 시기에 대해 553년 영주에 들른 (『北齊書』(中華書局) 卷4 文宣 天保 4年 10月) 이후라고 주장한다(이기동, 1996b, 「高句麗史 發展의 劃期로서의 4世紀」, 『東國史學』 30, 14쪽; 이재성, 2005, 「6세기 후반 突厥의 南進과 高句麗와의 충돌」, 『北方史論叢』 5, 114쪽). 하지만 『北史』에 엄연히 552년이라고 기록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노태돈, 1999, 앞의 책, 404~405쪽; 이성제, 2005, 앞의 책, 145~146쪽) 552년 고막해 친정 이후, 영주에 들러 사절을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기록에 따르면, 552년 문선제는 영주에 들러 최유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流人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 기록에서 북제 사신 최유가 벌인 행동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유인송환을 둘러싼 승강이는 양국 간 마찰을 잘 보여준다. 유인송환 문제가 고구려와 북제 사이에서 일어난 것³⁷⁾은 국제정세의 변동 및 문선제의 내부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遼海諸國의 對北朝遣使表〉³⁸⁾

年月 國名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勿吉		6	6													
契丹						5,12								6(2)		4
庫莫奚					9	5,12		4						6(2)		
地豆于						5,12										
室韋																
年月 國名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勿吉	12						6	●		●	●	●	●			
契丹	3														●	1
庫莫奚					● ³⁹⁾											12
地豆于										1	●	●			●	1
室韋										4	●	●		●	●	
年月 國名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靺鞨													●	●	●	●
契丹		2		5		10							●		●	
庫莫奚			1		12	9	8						●			
地豆于				5												
室韋	4	4														

※1. 『魏書』, 『北齊書』, 『周書』, 『北史』, 『冊府元龜』를 중심으로 작성

2. ● : 파견은 했지만 구체적인 月은 모름 숫자 : 사신을 파견한 달
예를 들어, 6(2)는 6월에 2번 사신 파견

37) 이성제는 북위 말 내란으로 인한 영주 일대의 정세변동 속에서 고구려는 이 지역에 군사적 진출 및 유인확보책을 실시함으로써 세력권을 확대·유지하여 북중국(東魏-北齊)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북제는 고구려의 영주 일대 세력우위 관계를 바꾸고자 유인송환을 요구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이

먼저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해 살펴보자. 위 표는 요해제국의 대북조견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530년대 이후 교류가 뜸하던 거란과 고막해 등이 549년부터 557년까지 북제에 잦은 견사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요해제국은 북위 대부터 잠재적인 위협이 되어 왔다. 북위 말 육진의 반란은 요해제국과 경계를 접한 안주와 영주는 물론 평주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

특히 이 지역은 요해제국이 화룡(조양)을 중심으로 북위의 감독 아래 활발한 교역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였다.⁴⁰⁾ 한때, 반란군에 영주가 함락되었으며 天平(534~537) 初에 이르러서야 다시 주를 설치할 수 있었다.⁴¹⁾ 따라서 이 지역은 여전히 치안불안상태로 요해제국의 위협이 상존하였다. 그 결과 545년 고훈은 奚와 柔然的 침입을 우려하여 유주·안주·정주 등 국경을 접한 세 지역에 城戍구축을 건의하였다.⁴²⁾

그런 가운데 거란과 고막해가 북제와 교역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들 나라의 교역욕구뿐만 아니라 북제의 관심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북제 문선제는 552년 정월 고막해 공격을 시작으로 553년 거란을 친정하였다.⁴³⁾ 이는 국제정세에서 또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던 유연을 대신하여 돌궐이 등장하면서 서위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서위를 둘러싼 채 동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연대가 이루어졌었지만 이제는 서위와 돌궐이 손을 잡고 동위를 압박하는 형태로 세력구도가 바뀌게 되었다.

성제, 2005, 앞의 책, 140~168쪽.

38) 여기서 말하는 遼海란 요하를 기준으로 동서를 포함, 북으로는 눈강 유역까지를 일컫는다. 따라서 遼海諸國이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란·실위·해·지두우 등을 말하며, 그와 인접한 물길과 말갈도 편의상 모두 포함시켰다. 요해가 가리키는 범주와 관련해서는 이재성의 정리(이재성, 2005, 앞의 논문, 104쪽 각주 81)가 참고된다. 요해제국은 533년까지 北魏, 534년부터 549년까지 東魏, 550년부터 575년까지 北齊, 580년 이후 隋에 遣使하였다.

39) 西魏에 遣使.

40) 『魏書』(中華書局) 卷100, 庫莫奚傳, 2223쪽.

41)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494쪽.

42) 『北齊書』 卷2, 神武下 武定 3年 10月, 22쪽.

43) 이성제는 돌궐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제가 동북방 경영을 추진한 것으로 보았다(이성제, 2005, 앞의 책, 162쪽).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실제로 동위(북제)와 梁은 547년 후경의 투항⁴⁴⁾으로 잠시 관계가 서먹해졌지만 후경의 난이 진압된 이후 교섭을 재개하였다. 특히 554년 양원제는 서위에 견사하여 강역을 정하면서도 북제와 연결을 도모하였으며⁴⁵⁾ 서위사와 북제사의 접대에서도 서위사에게 소홀하게 대하는⁴⁶⁾ 등 북제와의 관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욕혼 역시 서위가 아닌 북제와 교류를 지속하였다. 이는 다음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日, 魏廢帝 2년(553), 太祖(우문태)가 大兵을 거느리고 姑臧에 이르니
 ▲呂가 두려워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이 해, ▲呂는 또 齊氏
 (북제)에 사신을 보내었다. 光州刺史 史寧이 그 돌아오는 것을 기다
 러 輕騎兵을 거느리고 州 서쪽 赤泉에서 습격하였다. 북야 乞伏觸
 毘과 장군 翟潘密, 商胡 240인, 낙타와 노새 600두, 비단·실·명
 주 1만여 채를 노획하였다. (『周書』卷50, 吐谷渾傳)

위 기록에서 보듯, 일행 중 商胡가 240인에 이르며 1만을 헤아릴 정도의 絹이 운반되고 있었다는 점은 동서교역에서 토욕혼의 구실을 잘 대변해준다. 즉 토욕혼은 통상사절을 파견함과 동시에 西域商賈를 보호하고 안내하여 이익을 얻고 있었다.⁴⁷⁾ 당시 토욕혼은 유연의 길을 빌려 동위와 교류하였으며 양국은 혼인을 맺을 만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였다.⁴⁸⁾ 서위로서는 유연을 거쳐 동위(북제)로 들어가는 토욕혼의 사행이 눈엣가시와 같아 팔짱 끼고 볼 수만도 없었다. 그 결과 556년에는 돌궐과 함께 토욕혼을 대대적으로 정벌하였다.⁴⁹⁾ 이밖에 서위는 554년 梁을 정벌하고 後梁을 세웠다.

이로써 서위를 둘러싼 北齊·吐谷渾·梁·柔然의 느슨한 연대도 梁, 柔然이 궤멸하고, 후량이 서는 변화를 겪으면서 서위가 북제를 누르는 형국으로 변

44) 서위는 양에 투항한 후경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었다.

45) 『周書』卷2, 文帝下, 35쪽.

46) 『南史』(中華書局)卷8, 承聖3年9月, 241쪽.

47) 松田壽男, 1937, 「吐谷渾遣使考」(下), 『史學雜誌』48-11·12, 1478~1480쪽.

48) 『北史』卷96, 吐谷渾傳, 3186쪽.

49) 『周書』卷28, 史寧傳, 467~468쪽.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변수가 바로 돌궐의 등장이었다.

다음으로 북제 내부 문제에 주목해 보자. 이는 대외정책이 외적 변수에만 기인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변수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제 문선제가 요해원정을 하게 된 내부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양형식을 빌린 문선제의 위제혁명 단행과 정통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⁵⁰⁾

북제의 성립에는 勳貴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고훈이 패권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이들은 지배집단으로 대두하였다. 고훈이 죽은 후 고징이 뒤를 이었으나 양나라 항인에게 암살되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이었다. 고양(문선제)은 즉시 涿陽으로 나아가 庶政을 총괄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당시 진양은 동위의 군국정무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곳이었다.⁵¹⁾ 고양은 550년 정월 승상 도독중외제군사에 오르면서 위제혁명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선양 작업은 쉽지 않았다. 태후를 비롯한 勳貴들의 반발에 직면하였다.⁵²⁾ 고양은 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인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선양 형식을 밟고 제위에 올라 북제 문선제가 되었다.⁵³⁾ 제위에 오른 문선제가 정치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고훈 이래 등장해 온 훈귀들에 대한 처리문제와 위제혁명에 걸맞은 명분과 정통성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 두 과제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선제가 즉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막해를 시작으로 거란·돌궐·유연에 이르기까지 친정을 단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문선제는 자신의 역량을 대외정벌을 통해 발휘하고 이반된 마음을 다잡고자 하였다.

50) 북제를 건국한 문선제의 정통성 문제를 대외정책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 시각은 수·당의 대외전쟁과 황제의 정통성 확보 문제를 관련지어 다룬 박한제의 글(박한제, 1993, 「七世紀 隋唐 兩朝의 韓半島進出經緯에 대한 一考」, 『東洋史學研究』43)에서 시사받았다.

51) 霸府로서 진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한규, 1997, 『古代東亞細亞幕府體制研究』, 일조각, 95~118쪽 참조.

52) 『北齊書』卷30, 高德政傳, 407~408쪽.

53) 谷川道雄, 1971, 『隋唐帝國形成史論』, 筑摩書房, 271~272쪽.

문선제는 훈귀 제거에도 노력하였다. 이들을 장악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이상 황제권력의 강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에 문선제는 한인귀족들을 등용함으로써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즉위에 반대했던 훈귀들에 대한 주살이 이어졌다. 이러한 견제 노력은 다른 방면에서도 진행되었다.

『魏書』 편찬을 둘러싼 훈귀와 한인귀족과의 대립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훈귀와 대립되는 한족인사인 魏收를 발탁하고 효문제의 한화정책을 지향하는 등 그는 북위를 이었다는 정통성을 갖추려 하였으며 그러한 일면이 『魏書』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⁵⁴⁾

결국 문선제는 요해지역 경략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옥죄던 훈귀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북위 말 고구려로 넘어간 유인송환 문제를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하고 외교적 압력을 가한 점 역시 이런 과정 중에 빚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구려에도 유인송환 문제는 북제와 갈등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⁵⁵⁾ 더구나 유인 문제가 발생한 552년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수 유역에서 백제·신라 연합군에 밀려 쫓겨난 시점이었다. 고구려는 유인송환 문제로 시간을 지체하여 북제와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었다. 양원왕은 5000호의 유인을 송환함으로써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555년 고구려가 북제에 遣使한 것을 제외하고 양원왕 말기까지 양국 간 교섭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북제 문선제가 대외경략을 마무리 지은 후 스스로 자부하며 음란과 난폭함을 일삼았다는 史家の 평가⁵⁶⁾와 주변국과 對北齊

54) 佐川英治, 2005, 「東魏北齊革命と『魏書』の編纂」, 『東洋史研究』 64-1.

55) 북제는 고구려에 대해 친정은 단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인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었고 양국관계가 서먹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성제는 유인송환 문제를 통해 고구려가 향후 예상되는 돌궐의 위협에 북제와 연결을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하였다고 보았다(이성제, 2005, 앞의 책, 166~167쪽). 그러나 앞서 표에서도 확인되듯, 양국은 555년 한 해를 제외하고 문선제가 죽는 559년까지 공식적인 교섭이 없었다. 그리고 돌궐에 대해 북제와 어떻게 연결을 피하여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한 논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인송환 문제를 통해 양국이 우호관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56) 『北齊書』 卷4, 文宣, “既征伐四克 威振戎夏 六七年後 以功業自矜 遂留連耽□肆行

교섭 기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북제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도 바로 북제 내부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점은 대륙으로부터 오는 압박에서 고구려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고구려의 對梁外交는 548년 책봉 이후 공식적인 교섭이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가 안고 있던 안팎의 문제와 더불어 梁도 548년 후경의 난에 휘말려 558년 陳으로 교체되기까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양국 간 교섭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⁵⁷⁾

유인송환 문제와 맞물려 백제와 신라 연합군에 한수 유역을 상실한 고구려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연회를 모색하였다. 당시 고구려가 염두에 둔 사실은 백제와 신라가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야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어 언제든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었다. 고구려는 양국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신라로 접근을 모색하였다. 『日本書紀』에는 552년 고구려와 신라가 내통하여 백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I-① 13년(552) 5월 戊辰 초하루 乙亥, 百濟·加羅·安羅가 中部 德率 木 今敦·河內部 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高麗가 新羅와 회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任那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해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은 천황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日本書紀』卷19, 欽明 13年)

② 제24대 진흥왕 즉위 시 나이는 15세로 태후가 섭정하였다. 태후는 법흥왕의 딸이며 임종갈문왕의 비이다. (진흥왕은) 임종할 무렵 머리 깎고 법의를 입고 돌아갔다. 승성 3년(554) 9월 백제가 군사를 이끌고 珍城에 침입하여 남녀 3만 9000명, 말 8000필을

淫暴……”, 67쪽.

57) 548년 이후 고구려와 梁의 교류가 전무한 이유는 양국의 혼란 때문이라고 김종완이 지적한 바 있다. 김종완, 2002, 「南朝와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359~360쪽.

빼앗아 돌아갔다. 이에 앞서 백제는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高麗를 치고자 모의하였다. 진흥왕이 이르기를 '나라의 흥망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만일 하늘이 고려를 아직 싫어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는가' 하고 이 말을 고려에 전하였다. 고려가 그 말에 감복하여 신라와 通好하니 백제는 이를 원망하여 침입해 왔던 것이다. (『三國遺事』, 紀異 第一, 眞興王)

고구려와 신라의 通好 사실은 『三國遺事』에도 보인다. 552년 백제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고구려는 한수 유역을 상실한 이후 신라에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⁵⁸⁾ 고구려와 신라가 通好하게 된 까닭은 기존 연구에서 밝혔듯이, 신라의 경우 한수 하류유역 확보를 원했고 고구려는 귀족 간 내분의 여파와 서북 방면으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남부 국경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⁵⁹⁾

고구려는 548년 독산성전투에서 백제·신라 연합군에 막혀 남방 거점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551년 백제·신라 연합군의 한수 유역진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백제와 신라 양국의 군사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남방의 안정은 요원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신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점에서 고구려의 물밑외교는 성공적이었다. 고구려는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58) 노태돈은 553년 7월 신라가 한강 하류의 백제영역을 공략한 것을 고려하여 552년 이나 553년 초로 보고 있다(노태돈, 1999, 앞의 책, 429~434쪽). 노중국은 『日本書紀』 卷19 欽明 13年條에 주목하여 552년 5월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이미 화호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노중국, 2006, 앞의 논문, 50쪽). 주보돈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551년 3월 이후부터 처음으로 기록상에 드러나는 552년 5월 이전에 맺어졌을 것으로 보았다(주보돈, 2006, 앞의 논문, 97쪽).

59) 노태돈, 1999, 앞의 책, 433쪽. 이흥직은 백제를 지원하는 왜에 대비하기 위해 신라와 통호하였을 것으로 보았다(이흥직, 1971, 앞의 책, 172쪽). 이인철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신라는 백제의 군사력을 분산시켜 가야를 점령하기 위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유역을 점령하도록 용인하였으며 대신 고구려는 신라의 한강 상류지역 점령을 인정하여 서로 손을 잡았다고 보았다(이인철, 1997,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過程에 대한 考察」, 『鄉土』 서울, 57, 23~24쪽). 노중국은 백제와 신라 양국의 사이를 떼어놓아 남방전선의 근심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노중국, 2006, 앞의 논문, 50쪽). 주보돈 역시 백제와 신라 양국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자르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고 보았다(주보돈, 2006, 앞의 논문, 104쪽).

마련하였으며 백제를 고립상태로 몰고 갔다. 한편 신라 역시 한수 유역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와 공동작전을 수행하면서 고구려와도 화친하는 이중외교를 전개하였다.

J-① 가을 7월, 백제 東北지방을 취하여 新州를 두었다.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겨울 10월, 백제왕녀를 소비로 맞았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4年)

② 가을 7월, 신라가 동북경을 취하여 新州를 두었다. 겨울 10월, 왕녀를 신라에 보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4, 聖王 31年)

고구려와 화친을 맺은 신라는 한수 하류유역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위 기록을 따르면 신라는 백제의 東北境을 취하여 新州를 두었다. 뒤이어 성왕이 왕녀를 신라에 시집보냈다고 한다. 동북경을 빼앗은 신라에 대해 공격을 단행하지 않고 오히려 왕녀를 보낸 성왕의 행동은 일견 의아한 생각을 품게 한다. 그런데 『日本書紀』는 이러한 성왕의 외교방침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K. 겨울 10월 庚寅 초하루 己酉 백제의 왕자 餘昌(明王의 아들 威德王이다.) 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내어 고려국을 향했는데 百舌의 들판에 보루를 쌓고 군사들 속에서 함께 먹고 잤다.…… 드디어 표를 세우고 싸우기 시작하였다. 이때 백제는 고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머리를 창끝에 찔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고려군 장수들의 분노가 더욱 심하였다. 이때 백제군이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찢어질 듯하였다. 다시 그 靑將이 복을 치며 달려 나아가 고려왕을 동성산 위에까지 쫓아가 물리쳤다. (『日本書紀』卷19, 欽明 14年)

위 기록은 성왕의 아들 여창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들이쳐 크게 이긴 내용을 전한다. 이는 두 전투를 동시에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성왕이 고육지책으로 낸 외교 전략이었다.⁶⁰⁾ 그런데 553년 백제의 대고구려 공격에 맞서

전투를 이끈 이가 양원왕이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왕의 존재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사의 사기를 북돋울 뿐 아니라 통합의 구심점이 된다. 이 기사는 양원왕이 그저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음을 보여준다.

554년 10월에는 고구려가 백제 웅천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554년 7월 신라는 관산성전투에서 백제에 대승을 거두었다. 처음 신라군은 열세를 면치 못하다가 新州군주 무력이 州兵을 거느리고 참전하고서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대패하여 성왕뿐 아니라 수많은 군사를 잃었다.⁶¹⁾ 이러한 백제의 상황을 염두에 둔 양원왕은 大兵을 보내어 웅천성을 공략하였지만 패퇴하였다. 이 전투가 고구려와 신라 연합작전의 일환이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⁶²⁾ 다만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0) 노중국은 백제의 신라 공격을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였다. 먼저 고구려와 百舍野塞전투를 벌여 後顧를 덜고 이어 554년 본격적으로 관산성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노중국, 1988,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77쪽.

6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5年.

62) 후보돈은 고구려의 웅천성 공격을 백합야 싸움에 대한 보복성격이 짙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전투가 百濟本紀에서는 威德王 원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신라와의 연합작전 결과로 보지는 않았다. 단 결론론적으로 고구려·신라 양국의 군사동맹처럼 백제에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주보돈, 2006, 앞의 논문, 103~104쪽). 한편 김태식은 『日本書紀』 기사를 근거로 백제 성왕의 사망은 554년 12월 9일 이후 어느 때로 보고, 성왕이 죽기 이전인 10월 고구려가 신라의 협조를 받아 웅천성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김태식, 2006, 「5~6세기 高句麗와 加耶의 관계」, 『北方史論叢』 11, 165~166쪽).

V. 맺음말

지금까지 안원왕 말년에 일어난 왕위계승분쟁을 분석하면서 차기 왕위계승자인 태자 平成(양원왕)의 구실과 역량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었다. 하지만 왕위계승분쟁을 외척세력 간 권력다툼이라는 걸모습에서 한 발짝 벗어나 본다면, 당시 정국운영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양원왕이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외척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파악한다면 왕위계승분쟁과 뒤이은 대대로 선임 문제는 추군과 세군이라는 날 선 균형의 한 축을 잘라 버리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정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원왕은 그를 지지하는 외척세력인 추군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반발세력인 세군을 누르고 즉위하였다.

양원왕의 왕권강화 노력은 재위 내내 계속되었다. 왕위계승분쟁 및 대대로의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겪은 점을 감안할 때 즉위 이듬해인 546년 2월 王都의 배나무가 서로 가지를 連하였다라는 기록이나 548년 9월 丸都에서 嘉禾를 바쳤다는 사실은 정국을 수습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정국 혼란을 수습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 주목할 점은 양원왕의 품모에 대한 묘사이다. 雄豪한 기질을 가지며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史家の 평가는 양원왕의 정국운영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다. 물론 추군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는 점에서 초기 정국흐름에서 추군의 제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양원왕은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방 거점의 확보와 관련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백제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대륙은 서위를 둘러싼 채 동위와 주변국이 느슨한 형태로 연대하고 있었다. 고구려도 동위와의 교섭에 주로 매달렸으며 별다른 마찰이나 갈등은 빚지 않았다. 즉 고구려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1차 변수로 국제정세는 魏齊革命(550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양원왕은 對南方關係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백제·신라 연합군의 한수 유역 진출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더구나 동위와 서위의 대립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된 기조 위에 있던 국제관계도 유연이 551년 돌궐에 궤멸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선제는 돌궐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해원정을 단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구려와 유인송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서북방과 남방정세가 불안하자 고구려는 난국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럴 때, 왕은 상징적 권위와 내부결속을 위한 통합의 구심점으로 떠오른다. 밖의 위기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했던 셈이다. 고구려는 유인을 송환함으로써 북제와의 갈등을 봉합하였으며 신라와 물밑접촉을 통해 連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552년 장안성 축조를 시작함으로써 국내 방비체제를 강화⁶³⁾ 해 나갔다. 특히 移都를 염두에 둔 장안성 축조는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이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557년 양원왕은 陽成을 태자로 삼은 뒤 내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런데 태자로 책봉된 陽成을 史家は “담력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한다”⁶⁴⁾ 라고 평하였다. 여기서 양성 스스로의 역량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들을 길러내고 태자로 삼으려 한 양원왕의 안목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즉 무인적 자질을 갖추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을 통해 양원왕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해 10월 환도성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진압되었다. 이 반란을 통해 왕권에 도전했던 귀족세력이 제거되었다.⁶⁵⁾ 뒤이은 평원왕 대 내정의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양원왕 대 외척세력의 입김을 상당부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양원왕은 고구려 안의 위기를 밖의 위기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63) 이성시는 장안성 축조를 신라와의 군사적 항쟁에 따른 국내 방비체제의 강화로 보았다(李成市, 1998, 「高句麗と日隋外交」, 『古代東アジ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292~293쪽). 김희선은 자신의 즉위를 도운 추군계를 중심으로 중앙귀족세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장안성 천도를 도모했을 것으로 보았다. 김희선, 2005, 「高句麗 長安城의 築城過程과 遷都의 背景」, 『역사문화연구』 22, 11쪽.

6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7, 平原王 卽位年, “諱陽成 陽原王長子 有膽力善騎射”.

65) 민철희, 2002, 앞의 논문, 75쪽. 민철희는 반란 진압 이후 정국운영은 양원왕과 반란을 진압한 귀족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of Koguryo
during the reign of king Yangwon(陽原王)

Kim, Jin-Han

Around the 540s Koguryo fell into inner conflict resulting from the matter of succession to the throne and the election of DaeDaero(大對盧). In addition, there was a sudden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For example, Rouran(柔然) collapsed and the Turk(突厥) newly emerged, and there was a change of dynasty in China from the Yang(梁) to the Jin(陳). Silla(新羅) made an alliance with Baekjae(百濟) after which they attacked Koguryo in 551 and occupied the Han river(漢水) area. At the same time Koguryo and Peich'i(北齊) were in sharp conflict of opinion over the repatriation of drifting people. King Yangwon was faced with providing a solution to thi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risis.

King Yangwon began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during his reign. In the evaluation of historians, he is cast in a heroic mold and has a great figure, suggest that he had proven himself in his power struggle with the nobility and may well signal some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 As a matter of fact, King Peongwon(平原王) who succeeded to the throne after his father, created a stable political situation, because King Yangwon had removed the influence of his in-laws and paved the way for significant progress in the royal authority. It seems that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d an effect on

the domestic political landscape. Namely, Koguryo coped with the rapid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ith king as the center.

keywords

King Yangwon, Domestic politics, Foreign Relations



丙子胡亂 무렵 朝鮮의 對日政策과 認識

한 명 기 |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임진왜란을 겪은 뒤 조선의 對日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조선 신료들은 일본을 가리켜 ‘만세토록 잊지 못할 不共戴天之 원수’, ‘만세토록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라고 극언했다.¹⁾ 심지어 조선 정부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조차 ‘萬世不共之讐’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²⁾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중국 대륙에서 明清交替의 흐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선이 언제까지나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

- 1) 『宣祖實錄』 권139 선조 34년 7월 己亥, “臣鄭崑壽議 倭奴之於我國 爲不共戴天 萬世不可忘之讐 更無他議 …… 具思孟議 我國之於倭奴 有萬世必報之讐 明大義而絕之 固是正論 而時勢有所不可 則勉爲權宜之舉, 亦或一道”.
- 2) 조선 조정은 1607년(선조 40) 쓰시마의 간청과 공작에 의해 回答兼刷還使를 파견했는데 당시 그들이 지참했던 國書의 내용 가운데는 일본의 침략을 질타하면서 “의리상 일본과 하늘을 함께 일 수 없다(義不與貴國共戴一天)”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えられた國書 - 徳川・朝鮮外交の舞臺裏-』(中公新書 694), 32쪽.

할 수는 없었다. 특히 선조 말년부터 광해군 즉위 초반에 걸쳐 조선은 누르하치의 建州女眞이 두만강 연안의 홀온忽溫 부족을 제압하는 상황 등을 직접 목도하게 되면서 건주여진을 조선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로서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³⁾ 건주여진의 세력 확대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초미의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조선의 대일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유화적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北虜南倭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실제 조선은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만세불공의 원수’인 일본과 국교와 무역을 재개하고, 왜관을 다시 열어 일본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했다.⁴⁾

1623년 조선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1627년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켰던 것을 계기로 조선의 대일정책은 더욱 유화적인 기조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다. 반정 성공 직후인 1624년 ‘이괄의 난’을 겪었던 인조 정권은 내정을 추스르기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1627년 정묘호란을 맞게 되자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조선은 결국 후금과의 강화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면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⁵⁾

실제 일본은 정묘호란 이후 조선이 처한 대외적 근경을 계기로 무기와 병력의 원조를 표방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조선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3) 稻葉岩吉, 1933,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京城:大阪屋號書店, 51~59쪽.

4) 中村榮孝, 1969, 『江戸時代の日鮮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 下』所收, 東京:吉川弘文館;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東京大學出版會; 田代和生, 1981, 『日朝關係の再開と對馬』,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東京:創文社; 三宅英利著·손승철譯, 1991,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서울:이론과 실천; 山本博文, 2002, 『對馬藩江戸家老-近世日朝外交をささえた人びと-』, 東京:講談社學術文庫 1551; Ronald P. Toby, 1991,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 Asia in the Development of the Tokugawa Bakufu-”, Stanford University Press; 孫承喆, 1994, 『임진왜란 이후 중화적 교린체제의 부활』,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서울:지성의 샘; James B. Lewis, 2003, “Frontier Contact Between Choson Korea and Tokugawa Japan”, London: Routledge Curzon 등 참조.

5) 한명기, 2006a, 「丁卯胡亂 무렵, 조선의 對日政策」, 『大東文化研究』 52, 성균관대학

을 얻어내려고 시도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629년(인조 7) 겐포[玄方] 일행을 國王使란 명목으로 조선에 파견했던 것이었다. 겐포 일행은 당시 조선 조정에 強請하여 - 임진왜란 이후 엄격히 금지되었던 - 倭差의 上京을 관철시켰음은 물론 광해군 정권이 쓰시마 측에 지급하지 않았던 이른바 미수분 公木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⁶⁾

이처럼 생존을 위해 북변과 남변으로부터의 위협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불안정한 대외적 조건은 1636년(인조 15) 병자호란을 맞아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정묘호란 당시와는 달리 조선은 병자호란 때는 청에 완전히 굴복했다. 이제 청은 명을 대신하여 조선의 중주국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이후 조선에서 병력을 징발하여 對明 공략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정세는 또 다른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병자호란 무렵, 조·일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필자는 본고에서 병자호란 무렵 다시 변화되고 있었던 조·일관계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하려고 한다. 먼저 병자호란 직후, 일본의 바쿠후[幕府]와 쓰시마[對馬島]가 취했던 조선 정책의 내용을 살핀다. 이어 호란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이 일본에 대해 취했던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대일인식을 언급한다. 나아가 병자호란 직후 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오랑캐 국가' 사이에 놓이게 된 조선이 취한 대외정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 대동문화연구원 참조.

6) 田代和生, 1980·1981·1982, 「寬永六年(仁祖七, 1629), 對馬使節の朝鮮國, 『御上京之時毎日記』とその背景(一)(二)(三)」, 『朝鮮學報』 96·98·101 참조.

II. 임진왜란~병자호란 이전 日本의 태도와 朝鮮의 대응

1. 國交 再開 이후 倭差의 上京 요구

임진왜란 직후 조선이 갖고 있었던 대일인식은 양면적인 것이었다. 하나는 문화적 우월의식과 맞물린 일본에 대한 극심한 적개심이었다.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조선이 중국(-明)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여러 제후국 가운데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예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⁷⁾ 그에 비해 일본은 한갓 ‘군더더기(遡贅)’에 불과한 나라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끼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고, 이웃의 조선이 없이는 중화의 문물을 접할 수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⁸⁾ 이처럼 문화적 우월의식이 높았던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은 뒤 ‘만세불공지수’ 운운할 정도로 대일 적개심을 품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목도한 뒤에 갖게 된 두려움과 경계의식이었다. 조선은 왜란 이후 일본이 위협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지적처럼 - 원나라 전성기의 위력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한 - 일본의 군사력은 17세기에 들어와 과거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⁹⁾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조

7) 한 예로 黃廷彧(1532~1607)은 왜란 직후 다음과 같이 ‘禮義之邦’으로서 조선의 자부심을 피력한 바 있었다. 黃廷彧, 『芝川集』 권3, 「與日本關伯書」, “朝鮮國光國功臣長溪府院君黃某 謹白日本國關白閣下 …… 弊邦以中國外諸侯之首 萬邦朝會之列 無有居弊邦之先者 以禮義之所自出也 故不敢卑夷之 冠帶之賜先及焉 貴國一從禮義 悉效弊邦之爲 則天朝亦必許款塞內附之誠矣 不亦善乎”.

8) 黃廷彧, 『芝川集』 권3, 「檄日本國關伯書」, “貴國邈在海中 天地間一遡贅之域 自三代以來 未嘗紀土貢而采國俗 絕不許齒錄於侯服 幸而弊邦與之爲隣 禮義文物 概擬中華 貴國舍弊邦 則一步無可往之地 耳無所聞 目無所見 不過井底蛙耳”.

9) 安邦俊, 『隱峰全書』 권2, 「言事疏」, “倭國莫強於天下 以元世祖混一之威 常欲致討 而終不得志 此華夷之所共知也 邇來治兵 視古愈勤 器械之精 劍戟之利 糧餉之足 倍□於前 ……”.

선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한편에서 일본의 재침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배경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대일정책의 요체는 일본 사정을 주밀하게 탐사하여 그들의 조선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왜관에 恒居하는 일본인들을 다독 거러 사달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조선 사정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일본이 재침할 경우에 대비하여 영남 諸屯의 방어 태세와 수군을 정비하는 것 등으로 집약되었다.¹⁰⁾

한편 일본의 쓰시마는 임진왜란 직후까지만 해도 - 자신들에게 극심한 원한을 품고 있는 - 조선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犯陵賊 박송(縛送)과 피로인 송환을 통해 성의를 표시하는 등 조선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이고, 다소는 '저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는 데 성공한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자세는 점차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인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왜차들의 상경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16세기 중반까지 일본인들의 상경을 허용했던 것이 결국 일본인들에게 -부산의 왜관에서 서울로 이르는 - 조선의 산천 형세와 도로 사정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전진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인식한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들의 상경을 엄격히 금지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인들은 -양국 사이의 각종 현안을 서울에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경을 시도했다. 그리고 조선은 그에 맞서 그들의 강청을 차단하려고 부심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대개 명 측의 위세를 가차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요구를 차단하려고 했다. 즉 일본이 침략을 자행한 것에 대한 명의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 그나마 일본과 수호하겠다는 조선의 간청을 받아들여 왜관에서 개시하는 것만 허락했다는 것, 왜란 이후 조선의 대일정책은

10) 浦廉一, 1934, 「明末清初の滿鮮關係上に於ける日本の地位(一)」, 『史林』 제19권 제2호, 260~261쪽.

전적으로 명의 지휘에 따르고 있으므로 조선이 함부로 처결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일본 측의 상경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 측이 내세운 명분이었다.¹¹⁾ “명군 장수나 관인들이 아직 조선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상경을 막기 위해 조선이 일본 측에 제시했던 주된 명분이었다.¹²⁾ 한 예로 1621년(광해군 13) 왜차가 상경하겠다고 고집하자 조선 조정은 “명의 將官이 서울에 주차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것을 저지하려 했다.¹³⁾

조선은 때로 서북방 여진족들의 준동 때문에 왜차의 상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이 내세우는 ‘명군 주차’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 당시 쓰시마 출신 일본인들이 파악한 조선의 사정은 정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쓰시마 출신의 일본인들이 때로는 조선 측에 스스로 자신들의 상경을 막을 수 있는 명분까지 ‘훈수’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¹⁴⁾

조선 측이 일본의 상경 요구를 언제까지나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안으로 내정을 추스르고 밖으로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부터 조선 조정의 대일 자세는 현저히 유화적인 기조를 띠게 되었다. 더욱이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을 맞아 곤경에 처하게 되자 유화적인 대일 기조는 확실히 굳어졌다. 그것은 결국 1629년 왜차 겐포 일행의 상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¹⁵⁾

당시 최명길(崔鳴吉)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히데요시의 후손을 멸망시켰

11) 李廷龜, 『月沙集』 권59, 「禮曹堂上答義智書」, “上京一事 前書已盡 而今復脅迫至此 耶 自日本稱亂 逆之後 天朝之赫怒 至今未解 頃者我國奏聞天朝 欲修舊好 則天朝只許到館開市 而不許上京 經理楊御史g)出論文 張掛於釜山館門 足下若取見其文 則可知之矣 今日我國之事 悉遵天朝指揮 毫敢擅越”.

12) 한명기, 2006a, 앞의 논문.

13)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日錄抄冊』 辛酉 2월, “倭使請上京 依廟堂分付 以天朝將官駐札王京等語 防塞”.

14)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抄冊』 丙寅 2월, “都缸主倭密招訓導言 貴國不許俺等上京 勿以西賊作耗爲言 但托以上體未寧 措辭答書爲可云”.

15) 田代和生, 1980·1981·1982, 앞의 논문 참조.

으므로 사실상 조선을 위해 복수했다는 것, 도쿠가와 정권의 화친 요구를 선조가 자존심을 굽혀 수용함으로써 남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교린의 도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겐포 일행의 상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¹⁶⁾ 그것은 인조반정 이후 조선의 主敵으로 등장한 후금의 침략을 맞아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나타난 교육지책이자, 후금에게 취했던 유화책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다.

실제 겐포 등은 일본이 군사를 동원하여 후금이 차지한 요동을 수복하고 명에 조공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겐포 일행이 이른바 ‘平遼通貢’을 내세웠던 것은 당시 바쿠후가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단절시켰던 상황에서 명과의 감합 무역을 부활시키려 모색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다.¹⁷⁾ 이같은 상황에서 이귀(李貴)와 이정구(李廷龜)를 비롯한 조선의 신료들은 왜차의 상경을 허용하여 일본과의 유대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후금을 견제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다.¹⁸⁾ 겐포 일행의 상경은 이 같은 배경에서 허용되었던 것이다.

2. ‘柳川一件’에 대한 조선의 대응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그리고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17세기 초반 조선의 대외적 관심은 주로 후금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형제관계에 입각한 강화를 체결하여 양국 관계가 미봉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16) 崔鳴吉, 『暹川集』 권9, 「請追給日本欠幣劄」, “伏以壬辰之變 乃秀吉所爲 而源氏代居其位 盡滅秀吉子孫 事事與秀吉相反 則本國所讐 在於秀吉 而源氏乃爲我復讐者也 自源氏用事之後 款塞求好 休民息兵 至今三十餘年 南邊晏然無事者 固是宣祖屈意許和 圖安宗社之至計 而源氏輸款本國之誠 亦有不可誣者矣 …… 臣愚竊以爲憂 設令動兵之權 不在島主 而國使則宜必請來 來則勢將上京 道路供億 弊已不貲 設令國使不來 恐喝之言 將無日不至 不得請則其勢不止 與其不得已而強許 曷若我先快許 以收恩於彼”.

17) 紙屋敦之, 1987, 「幕藩制國家の成立と東アシア」, 『歴史學研究』 573, 東京: 青木書店, 90쪽.

18) 한명기, 2006a, 앞의 논문.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 당시 후금은 조선이 자신들에게 주는 세폐가 당초의 약속에 비해 적다는 것, 조선이 명과의 교역에는 열중하면서 자신들과의 교역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등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후금은 조선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병력을 원조하거나, 큰 전함 300척을 제공하여 靉島 공략에 협조하고, 자신들의 도망민을 송환하라고 촉구했다.¹⁹⁾ 후금이 전함과 수군까지 갖출 경우 해로를 통해 명을 공격할 것을 우려한 조선은 당연히 후금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²⁰⁾

전함 제공을 거부한 조선에 대한 후금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던 1633년(인조 11) 2월, 향후 양국관계의 파탄을 예고하는 사건이 빚어졌다. 그것은 바로 모문룡(毛文龍)의 부하였던 공유덕(孔有德) 등이 산둥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수군과 전함, 그리고 紅夷砲를 가지고 후금으로 귀순한 사건이었다. 수군과 전함, 홍이포를 확보하여 군사력에서 자신감이 커진 후금은 조선에 대해 무역이나 물자 공급과 관련한 요구 수준을 더욱 높였다. 그에 대한 반감으로 조선에서는 후금과의 결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었다. 나아가 조선이 후금에 흑시라도 전함을 제공할까 우려하는 명 측의 조선에 대한 견제도 더욱 집요해지고 있었다.²¹⁾

병자호란 직전 이렇게 명과 후금의 대결 구도 속에 끼여 양국과의 현안을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조선의 대일정책은 자연히 현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오씨(宗氏)의 쓰시마를 매개로 유지되고 있던 기존의 바쿠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그같은 태도는 1633년부터 1635년까지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야나가

19) 『清太宗實錄』 권11 天聰 7년 1월 丁未.

20)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北方史論叢』 8, 서울: 고구려재단, 262~263쪽.

21) 『仁祖實錄』 권28 인조 11년 11월 甲午, “接伴使辛啓榮馳啓曰 程副總到坡州 要臣相見 引入寢房 屏去左右 出示兵部箭符 以手指點 拒絕奴逆 一款曰 此乃俺所管之大者也 箭辭中有 鮮國逼奴威恟滋甚 而猶不背我者 是不忘皇朝固存之恩也 伊賊借船借糧 而該國半推半應 今者旅順失守 官軍見挫 安知其不爲苟合求全 悉起餘艖, 付孔耿 向登津等語”.

와 잇켄[柳川一件]에 대한 대응 자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유천일건’은 대마도주 소오씨의 家老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1633년(인조 11) 소오씨가 조선에 보내는 국서를 變改했다고 막부에 폭로하면서 비롯되었다.²²⁾ 같은 해 5월 5일, 소오 요시나리[宗義成]가 막부의 가로에게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고, 1634년(인조 12) 10월에는 요시나리와 시게오키 모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윽고 1635년 3월 11일 에도 城에서 양자에 대한 대질심문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오씨의 국서 변개 행위 뿐 아니라 쓰시마가 정묘호란 당시 조선에 무기를 몰래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요시나리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같은 행위에 시게오키도 적극 동참했음을 강조하여 시게오키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한다.²³⁾ 바쿠후는 이튿날 판결을 내려 시게오키를 유배에 처하고, 국서 변개의 실무를 맡았던 자들을 처형했다. 소오씨 휘하에서 조선에 보내는 국서 찬진을 담당했던 겐포도 유배되고, 야스나리는 에도에 억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바쿠후가 요시나리의 과실을 인지했음에도 시게오키를 처벌한 것은 - 당시 朱印船 무역을 단절시키려 했던 - 막부의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무역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만일 요시나리를 처벌할 경우 그를 매개로 왜란 이후 유지되어 왔던 조선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²⁴⁾

1635년 ‘유천일건’은 소오씨의 승리로 끝났지만 조선은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물고 올지도 모르는 파장 때문에 긴장했다. 청과의 긴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던 와중에도 일부 신료들은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과 대비책을 제기했다. 1635년 10월 영남어사 윤계(尹槩)는 왜관의 일본인들이 조선 수군의 허실을 전부 알고 있다는 것,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일본인들이 많아 조선 사정이 전

22) ‘柳川一件’에 대해서는 田中建夫, 1975, 앞의 책; 山本博文, 1989, 『寛永時代』, 東京: 吉川弘文館; 三宅英利, 1991, 앞의 책 등 참조.

23) 金世濂, 『海槎錄』下, 『聞見雜錄』, “關白遂詰義成 義成服罪曰 調興言皆是也 但此事皆調興所爲 非我獨擅 兵器則以丁卯言之 我送只鳥銃十柄 長槍五十柄 調興則鳥銃五十柄 長槍百柄 壬戌送使亦出於調興 調興語塞”.

24) 山本博文, 1989, 앞의 논문, 37~39쪽.

부 유출되는 등 변방 방어태세의 허술함이 극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사사로이 교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자고 강조했다.²⁵⁾

같은 해 11월에는 조정에서도 ‘유천일건’ 이후 일본의 동향을 주목하고 그들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일 열린 인견에서 인조와 신료들은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과 ‘유천일건’이 조선에 미칠 영향 등 당시의 일본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은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 지니고 있던 일본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잘 보여준다.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보자.

인조는 신료들에게 일본 정세가 우려된다고 말할 뒤 의견을 물었다. 영의정 윤방(尹昉)은 인조의 의견에 동의한 뒤 천재지변이 연달아 있어난 것, 세건선이 오지 않는 것,倭使가 오지 않는 것 등을 우려할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산성과 수군을 정비하자고 주장했다. 인조는 국력이 부족한 조선의 현실을 들어 방비를 위한 조치는 적이 과연 군대를 움직일 것인지를 여부를 제대로 살핀 이후에야, 민폐를 고려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²⁶⁾

인조의 발언 이후 신료들의 논의는 자연히 일본의 動兵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옮겨졌다. 우의정 오윤겸(吳允謙)은 일본인들의 성정 자체가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지적한 뒤, 일본 측에서 조선이 일본보다 후금을 우대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오윤겸은 시게오

25) 尹榮, 『三節遺稿』 권7, 「嶺南御史復命書啓」, “東萊倭館 在於釜山鎮下 我國舟師虛失 無不洞知 且於物貨交易之際 紀綱不嚴 防禁解弛 倭人與我人出入無常 倭人之能爲我國語者 甚多 我國之事 無論大小 盡爲探聽 自有國家以來 邊圉之不固 防禁之不密 未有如此時者也 …… 大槩設館接倭 實出於羈縻之策 到今雖難變更 而此後嚴立科條 使彼我之人不敢私相交通 以嚴防禁 恐或宜當”.

26) 『承政院日記』 50책, 인조 13년 11월 7일, “尹昉曰 倭情可憂 人無不知之 但不見其形故未及防備 而春缺如或動兵 不可說也 向者天災時變 不一而足 歲遣船尙不來 倭使亦不來 此甚可憂也 …… 爲今之計 莫如申飭山城舟缺而恐不得豫備數字缺兵使處亦以此意曾二行缺知彼此事情數字缺 調興勢盛 義成勢數字缺矣 上曰 目今國力不足 凡干防備之事 必見賊有動兵之形 然後不顧民弊而爲之 可也 如不得的知 何可豫爲之動也”.

키가 요시나리 때문에 일본이 굴욕을 겪었다고 참소하여 관백이 '조선이 일본을 박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윤겸은 또한 요시나리는 용렬한 데 비해 시게오키는 사납고 영리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게오키가 비록 패했지만 죽지 않은 데다 그가 관백의 측근들과 가까운 데 비해 요시나리는 용렬하고 잔폐하여 의지할 만한 측근이 없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오윤겸은 그러나 상하 관계가 엄연한 데다 명분이 지엄한 현실에서 시게오키가 요시나리를 참소함으로써 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요시나리가 관백에게 신뢰를 얻거나 관백이 별도의 신뢰할 만한 인물을 도주(島主)로 임명하게 된다면 조선에는 별다른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²⁷⁾

평성부원군 신경진(申景禎)은 당시 도쿠가와 바쿠후가 각 번 왜장들의 인질을 확보하는 등 내부 단속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뒤, 그같은 조건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여유가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또 당시 세견선이 오지 않는 것은 쓰시마에 도주가 없기 때문이고, 시게오키가 패하기는 했지만 그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세견선 파견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²⁸⁾

예조판서 홍서봉(洪瑞鳳)은 당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할 때 히데요시가 생령들을 함부로 죽이고 이웃 국가를 침략한 것을 타도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 이에야스·히데타다[秀忠]·이에미쓰[家光] 등 도쿠가와 삼대가 승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비하기에도 겨를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²⁹⁾ 인조 또한 관백이 전쟁에 싫증을 내어 총포 쏘는 것을 금지했고, 내란을

27)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吳允謙曰 …… 蓋倭情 好勝不惜 如以瀋陽入送幣物 有加於渠國 則必愧其不如不無缺之患矣 但調興 以義成爲辱國 僭於關伯 而我國缺優待胡人 薄待日本之事 關伯知五六字缺矣 頃者義成調興年皆十二三歲時 臣以數字缺 義成庸劣而調興則傑點之兒也 …… 但調興今雖被謫而未死 自前親昵於關伯左右 義成庸殘 無足可恃 他日之憂大矣 大概義成調興 上下之分截然 而日本名分至嚴 故調興譖義成而見貶矣 如義成爲可恃之人 或關伯送別人守馬島 而其人亦可恃 則於我國有何可憂”.

28)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29)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우려하여 여러 장수들의 처자를 인질로 구금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추정했다.³⁰⁾

신료들은 사람을 보내 일본의 동향을 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조는 일본의 법이 매우 엄한 데다 사람들이 자국 사정을 다른 이들에게 누설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것을 들어 그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계속된 논의 속에서 대체적인 결론은 일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침략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인조와 신료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군의 점검 등 방어 태세를 신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³¹⁾

이처럼 ‘유천일건’의 결말 이후 조선은 일본의 동병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한편 오윤겸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대응 기조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던- 요시나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맞췄다. 당시 바꾸려는 자신들이 손을 들어준 요시나리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했다. 그와 더불어 일본은 조선에 대해 마상재(馬上才) 파견을 요구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최명길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지금의 관백은 연소하고 경망스러우며 조부의 부강함을 믿고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는 데다 시게오키의 참소 때문에 의심이 누적되어 있으니, 麟西堂이 나온 데서 도주가 위태로운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주가 죄를 입고 시게오키가 다시 등용되면 화가 양국에 전가될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그렇다면 도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변경을 편안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³²⁾

최명길의 발언처럼 당시 조선은 대마도주 요시나리를 매개로 유지되어 왔

30) 『仁祖實錄』 권31 인조 13년 11월 癸丑.

31)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蓋國曰 待變而不來則善矣 不爲待變而萬一來犯則不可防矣 且舟師等事 雖可申飭 而賊若來犯則未及數字缺之前 雖舟師之在釜山者 亦恐不數字缺所禦之乎 又陸地無可禦之處 亦何以數字缺 上曰 廟堂之上 凡干防備之事 預爲可也”.

32)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7월 乙丑.

던 조·일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요시나리를 옹호하는 조선의 태도는 비변사가 ‘유천일건’을 ‘調興生事’라고 지칭했던 것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1636년 7월, 비변사는 ‘유천일건’ 때문에 도주를 둘러싼 상황이 변해 버렸다는 것, 막부에서 승려를 쓰시마에 보내(조선과의) 외교문서를 專管하도록 한 다음부터 요시나리는 손조차 놀릴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한 뒤, 예단을 넉넉히 주어 요시나리를 위로하자고 건의했다.³³⁾ 또한 통신사 임광(任統) 일행은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올린 계사에서, 관백을 만났을 때 ‘유천일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비변사의 지휘를 요청했다.³⁴⁾ 통신사가 출발하기 직전이었던 1636년 9월, 예조는 요시나리가 조·일 양국의 평화 유지에 공이 있음에도 시게오키는 요시나리가 ‘조선에 정성을 다한 것’을 참소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 요시나리가 조선에 물품을 요구한 것은 관백에게 민음을 얻어 자신을 보전하기 위한 계책이라는 것을 강조한 뒤 요시나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조선의 변경을 안정시키는 방책이므로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⁵⁾

조선이 ‘유천일건’ 이후 이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한 태도를 보였던 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이고 시급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으로부터의 무기 수입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조선은 청의 위협에 대비하여 일본산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유천일건’ 이후 바쿠후는 무기류의 조선 수출을 금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요시나리를 달래는 한편 일본 측의 요구를 가능하면 수용하여 무기 금수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절실했던 것이다.³⁶⁾

33) 『承政院日記』 52책 인조 14년 7월 15일.

34) 『承政院日記』 52책 인조 14년 7월 11일.

35) 『承政院日記』 53책 인조 14년 9월 3일, “崔惠吉 以禮曹言啓曰 …… 竊思義成 自前致誠於我國 於兩國通和之事 不爲無功 而調興_母陷義成 專以致誠於我國爲罪 如使調興之讒得售 則義成必不得保 而我國之憂 有不可測 幸而調興以此缺而義成得保 此誠我國之深幸也 然聞倭缺事貴 將多調興之黨 而義成之勢 猶甚孤危 義成之有此懇請 只欲取信於關伯 而爲自保計也 然則今日事勢 惟義成安而後 我國邊境安 義成自前效忠缺我其危急 自當救援 以酬其誠”.

36)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群議皆以爲 近來日本 切禁戎器 不許出送 必是疑外我

한편 ‘유천일건’ 이후 어쨌든 위기에 처한 요시나리에게 1636년 조선통신사의 내일 교섭은 시게오키를 대신하여 자신의 대조선 외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그는 결국 임광을 정사로 하는 조선통신사 일행을 초치하는 데 성공했고, 쇼군 이에미쓰의 소원대로 통신사 일행의 닛코[日光] 참관까지 이루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것은 그의 외교적 실패를 빌미로 그를 실각시키려던 막부 내의 반대파, 즉 시게오키 옹호자들에게 타격을 주었다.³⁷⁾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이 가능하게 되었던 데는 조선 측의 협조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III. 병자호란 시기 일본의 동향과 조선의 대응

1_ 조선과 淸 정세의 파악 시도와 공세적인 請求

그렇다면 일본은 조선이 병자호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쿠후나 쓰시마의 입장에서 조선의 ‘곤경’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쓰시마는 일찍이 1627년 정모호란 당시에도 무기와 화약 등의 원조를 내세우면서 조선에 접근했었다. 당시 쓰시마는 자신들과 조선 사이의 舊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당시 바쿠후가 무기의 私賣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조총 100정, 염초 50근, 유황 50근 등을 제공한 바 있었다.³⁸⁾

일본의 태도는 병자호란 직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쓰시마 측은 조선이

國之意 則在我固當示以無外待夷之道 不當重逆其意 不以致島主之缺望 關白之慊然 云 此言亦似有理 鞍具馬二疋 依前啓請給送宜當 且禮單各種 似爲薄略 就其別幅中所請段糶 亦爲參酌許給”.

37) 姜在彦 著·이규수 역, 2005, 『조선통신사의 일본건문록』, 서울: 한길사, 191쪽.

38) 『江雲隨筆』 密送烏銃鹽硝等於朝鮮契(『古事類苑』 外交部 권11, 1934, 東京: 内外書

청군의 침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기민하게 대처했다. 당시 쓰시마는 조선과 교섭하면서-정묘호란 당시 쓰시마와 바쿠후가 그랬던 것처럼-“병력을 동원하여 원조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흘리면서 조선의 태도를 떠보고 있었다. 이에 조선은 “곧 청군을 격퇴할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일본 측의 제의를 거부했다.³⁹⁾

조선이 청에 항복한 이후에도 일본 측이 계속 전쟁상황을 묻고, ‘월병 파견’을 운운하자 병자호란 직후 조선은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이에 “조선이 청군을 물리쳤다”거나 “청군이 화의를 요청하면서 물러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만하려고 시도했다.⁴⁰⁾

조선은 청에 항복한 사실을 일본 측에 숨기려 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청 태종은 1637년 1월 28일, 조선 조정이 농성 중인 남한산성에 보낸 최후 통첩에서 항복의 조건을 논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을 계속하고, 조선이 일본 사자를 淸廷으로 인도해 오고, 청 또한 일본에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천명하여 조선을 곤혹스럽게 했다.⁴¹⁾

조선 측이 호란의 실상을 일본에 숨기려고 시도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쓰시마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637년 12월, 쓰시마는 우치노[內野權兵衛=平成連]에게 서계를 지참시켜 동래에 파견했다. 그리고 우치노는 이전의倭差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 측에 대해 상경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조선 측은 당연히 거절했다.⁴²⁾ 조선 조정은 우치노의 상경을 거부하는 입장을 정했지만

籍株式會社, 743~744쪽), “承來有命 願送兵器 以助西警之備 然而國禁至嚴 勢難容私 何得發賣於釜館之間哉 唯以陋島之於貴國也 恩重數世 義同一家 故府庫所儲將鳥銃一百挺 緣具并鹽硝五十斤 硫黃三十斤 遣平智次密送 與於崔使 何其有足副請 是可謂函谷泥封者也 徐冀昭亮 呵呵”.

39)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抄冊』 丁丑 2월, “倭聞賊勢 飛報島中 稱欲發兵赴援云 諭以我當不日討平 不必送援云”.

40)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抄冊』 丁丑 3월, “倭人問賊退與否 答以我兵四集 累次敗之 賊乞和而退云云 …… 倭差宴享時 復問賊事 答以乞和退去 又云漢將孔有德耿仲明投降于 子 兵將襲 島登來旅順之路 不無阻絕云云”.

41) 『同文彙考』 冊二, 1488頁, 別編 권2.

42)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12월 庚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았다. 승정원은 당시 왜인들에 대한 조선의 태도가 너무 소홀하다고 문제 삼고, 역관 홍희남(洪喜男)에게 선처토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비변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에 항복함으로써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강공으로만 갈 수 없었던 조선의 상황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상경을 거부당한 우치노는 왜관에 머물면서 다음과 같은 7개 조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⁴³⁾

- 가) 교역하는 물품이 옛날 같지 않으니 중국과 교통이 단절되어 그런가? 호란 때문인가?
- 나) 倭使가 조선에 와서 모래밭에서 肅拜하게 하는 것을 고칠 것
- 다) 해마다 米豆를 주는 것을 하사라 하지 말 것
- 라) 封進價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마) 대마도 대신 貴州라고 불러 줄 것
- 바) 왜선 정박처에 풍파를 막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아 줄 것
- 사) 돌을 쌓는 것이 어려우면 관사를 개축해 줄 것

위의 조항들 속에는 호란으로 곤경에 처한 조선의 실상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회로 조선을 압박하여 자신들을 下視해 온 조선의 태도를 바꾸어 보겠다는 쓰시마 측의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다. ‘숙배’ 장소와 관련된 문제 제기, ‘하사’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표출, 쓰시마를 ‘귀주’라고 불러 달라고 운운하는 대목에서 특히 그러하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물품이 옛날 같지 않으니 중국과 교통이 단절되어 그런가? 호란 때문인가?’라는 대목이다. 조선이 병자호란을 겪어 위기에 처하고, 궁극에는 항복으로 귀결되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하는 태도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43)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1월 丙戌, “差倭平成連來 以七條事言之 一曰 交易物貨不如舊 唐路不通而然耶 因北狄之難耶 二曰 朝鮮使价入日本 則拜於上壇之間 日本送使 則拜於沙中 未知禮樣如何 三曰 歲賜米太 勿書賜字 四曰 封進價三字 亦不可書 五曰 書翰中 對馬島 稱以貴州 六曰 使船來泊處 以石築之 俾免風波 七曰 石築未易 則改築館宇云”.

상경을 거부당한 우치노는 이후에도 2년 이상 귀국하지 않고 왜관에 머물다가 1639년 시마오 곤노스케[鳴雄權之介 = 平智連]로 교체되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 우치노의 활동을 통해 왜관 안에서 이른바 館守의 제도가 마련되고, 그의 활동으로 왜관의 성격이 변화되어 갔다는 점이다.⁴⁴⁾ 관수는 과거 왜관에 체재하던 代官(무역 담당), 裁判(특별교섭 업무 담당), 東向寺僧(공문서 담당) 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관수는 조선과 중국 대륙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범죄자의 처리, 왜관 시설과 관련된 조선과의 교섭 등 실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관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왜관은 과거처럼 일본인을 위한 客館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재외 공관이자 정보 수집소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병자호란 무렵, 일본이 ‘월병 파견’을 운운하면서까지 조선과 청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까? 일본이 후금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8월, 함경도 회령까지 북상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압록강을 건너 여진족 부락을 공격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가토가 여진을 공격했던 원인으로는 ‘일본군의武威 과시’ ‘또 다른 征明路의 탐색’ 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궁극에는 일본인들이 16세기 후반 만주 동단에서 여진족에 의해 시작된 명청교체의 흐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일본은 왜란 이후 명에 대한 貢路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주요 루트인 요동로가 여진족(- 후금-청)에 의해 단절되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같은 위기의식이 1627년 정묘호란 당시뿐 아니라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에 ‘월병 파견’을 제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⁴⁶⁾

실제 일본은 이후에도 조선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선을 통해 청의 정보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1645년(인조 23) 쓰시마의 등지승

44) 中村榮孝, 1978, 「清太宗の南漢山詔諭に見える日本關係の條件」, 『朝鮮學報』 47, 43~44쪽.

45) 田代和生, 2002,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東京:文春新書 281, 45~46쪽.

46) 紙屋敦之, 1987, 앞의 논문, 83~87쪽.

(藤智繩)은 조선의 항구와 도서들 사이의 거리를 측량하려고 시도하여 조선을 긴장시킨 바 있다.⁴⁷⁾ 등지승은 1648년(인조 26) 2월에도 조선에 와서 청국의 사정을 파악하려고 했다.⁴⁸⁾ 당시 南明政權과 강남 지역의 해상세력들은 反淸復明을 위해 일본에 원병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1645년(인조 23·順治 2) 겨울, 남명의 용무 정권은 최지(崔芝)를 통해 일본에 3000명의 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고, 1646년(인조 24·順治 3) 정지룡(鄭芝龍)은 황징명(黃徵明)을 보내 일본 측에 원병을 요청했다. 당시 황징명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해상에서 청군에게 체포되었지만 그가 휴대했던 국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나가사키로 전달되었다.⁴⁹⁾ 이렇게 명의 잔여 세력들이 항청을 위해 일본에 군대를 요청하는 상황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던 현실 속에서 바쿠후나 쓰시마는 대륙 정세의 탐색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 탐색을 위한 통로로서 조선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같은 ‘정보 탐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상경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공로 확보와 관련된 ‘원병 파견’, 대륙 정세 정탐을 위한 ‘상경 허용’ 등의 제의는 조선이 거부하여 무위로 돌아갔지만, 조선이 호란 때문에 곤경에 처했던 것은 쓰시마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특히 ‘유천일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된 데다 이후 관백의 신임을 얻기 위해 회퇴, 증여 등의 필요성이 커졌던 쓰시마 도주 소오씨의 처지에서는 필요한 물화를 조달하기 위해 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그같은 상황에서 병자호란 직후 왜관에서는 쓰시마 도주의 權利 행위가 심해졌고,⁵¹⁾ 조선에 대해 각종 물화를 요구하는 청구 행위가

47) 『承政院日記』 90책, 인조 23년 3월 15일.

48)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戊子 2월, “藤智繩請引給公木六千同 復云奉行將出來 探問淸國事情云”.

49) 石原道博, 1945, 『明末淸初日本乞師研究』, 東京: 富山房, 31~32쪽.

50)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戊子 3월, “三月 差倭不成春不言所幹之某事 必欲上京 防斥”.

51) 『倭人求請謄錄』 丁丑(1637) 11월 6일, “一自島主被誣之後 貸用行賂之費 至於銀子

빈번해졌다.

하지만 병자호란 직후, 조선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먼저 호란이 일어나자 왜관을 출입하던 조선 상인들의 수가 격감했다.⁵²⁾ 병자호란은 임진왜란 이후 성행했던 조선-명-왜관으로 이어지던 중개무역에 차질을 가져왔다. 병자호란 종료 직후 조청연합군이 가도를 점령하여 동강진이 붕괴되자 가도-조선-왜관으로 이어지는 무역 루트는 일단 폐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도는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과 명·후금 상인들이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는 핵심적인 상업 거점이었다.⁵³⁾

가도가 폐쇄되자 자연히 조선 상인들의 대일무역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실제 1637년 11월, 왜관의 일본인들은 唐貨가 끊기고 조선 상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관 밖으로 擲出을 시도하고, 저지하던 조선 군관을 구타하고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바 있었다.⁵⁴⁾

더욱이 1639년 바쿠후가 포르투갈인들을 추방하고 이른바 쇄국정책을 통해 남만 무역을 중단시키자 조선과의 교역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1640년(인조 18) 5월, 일본 측이 남만 무역의 중단 이후 조선으로부터의 약재 수입 요구를 더욱 높였던 것은 그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⁵⁵⁾ 자연히 쓰시마 측의 조선에 대한 청구는 갈수록 많아졌다. 1639년 8월, 쓰시마의 일본인들은 약재 20종의 종자와 구근[根植]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남긴 手書筆跡, 官位次第之書, 허리띠[帶鉤] 등도 요구

十萬餘兩是如 留館商倭一切禁防 代官倭等獨專其利其矣 物貨之價 日漸刀證 昨日得一分之利 則今日又增一分之利 價日滋月長 …… 以此商賈失利 雖有若干物貨之資持者 莫肯來賣”.

52)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抄冊』 丙子 12월, “賊兵逼京 行商絕跡 倭人疑訝 極爲難處云云”.

53) 鄭陔喆, 2005,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明清史研究』 23, 159~165쪽.

54) 『倭人求請謄錄』 丁丑(1637) 11월 6일.

55) 『典客司日記』 庚辰 5월 19일, “十五日藤智繩徐首座等來言 島主今番下來之日 大君言曰 朝鮮所產藥材 優數質得 連續入送亦云云故 再三修書懇請矣 何不趁即許賣乎 非尋常 大君處處新創藥局 以爲活民之道 而在前段 南蠻之船 各樣藥材 優數持來矣 自上年大禁南商 他無繼用之處 而曾知貴國藥材之品好 是如下教 某條優數許賣 則彼此幸甚”.

했다.⁵⁶⁾

쓰시마의 청구 행위는 도주가 관백을 알현하기 위해 에도로 들어갈 즈음에 특히 심해졌다. 1638년 5월 4일의 경우 쓰시마는 도주가 관백에게 헌납한다는 명목으로 매, 말, 금선(錦線), 선단(緞段), 홍전(紅氈), 인삼, 魚皮, 잣, 호두, 황앵(黃鶯) 등을 요구했다. 그 가운데 금선, 선단, 홍전 등은 조선도 조달하기 곤란한 중국산 물화였다.⁵⁷⁾

더욱 주목되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 쓰시마가 조선에 제기한 각종 요구의 수준이 조선이 용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청에서 보낸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는 시점이 되면- 왜차들의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다는 점이다.

이들 무리가 종전에 왕래할 때는 비록 이욕과 관련된 말이 있어도 드러내 놓고 패악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시다. 하지만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른 이후 저들이 우리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 매번 청나라 사신들이 올 즈음에는 으레 기세가 배나 살아나니 참으로 놀랍고 분합니다.⁵⁸⁾

위의 언급에 보이듯이 병자호란 이후 쓰시마는 -청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처한 위기 상황에 편승하여- 조선에 대해 겉으로나마 순종적이었던 종전의 태도를 벗어 던지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2. 조선의 대응과 그 성격

병자호란 직후 일본 측이 '월병 파견'을 운운하고, 우치노 등이 이른바 7개 조조건을 내세워 상경을 요구하고, 이후 쓰시마의 공세적인 청구가 계속되자 조선은 그들 요구의 수용 여부를 놓고 부심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일본에

56)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日錄抄冊』 己卯.

57) 『倭人求請謄錄』 戊寅(1638) 5월 4일.

58) 『倭人求請謄錄』 庚辰(1640) 12월 14일, “此輩從前往來 雖有利慾之言 不至顯發惡言 而國事到此之後 渠亦有輕我之心 每當灣上客使來此之際 則例爲一倍生氣 尤極駭憤 是白在果”.

대한 경계의식이 높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청에 의해 유린된 조선의 처지에서 실제적인 대일 자세는 유화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1) 對日 警戒論의 대두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은 호란의 발생과 조선의 항복 사실을 일본인들에게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이 ‘원병 파견’을 운운하고 우치노 등이 ‘7개 조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조선을 압박해 오자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항복 직후인 1637년(인조 15) 3월, 통신사행에서 막 돌아온 김세렴(金世濂)이 인조에게 倭情을 보고했는데, 그는 ‘유천일건’ 이후에도 막 부 내부에 남아 있는 아나가와 시게오키 지지 세력들의 동향을 전하면서 일본의 정세가 불안하다고 보고했다.⁵⁹⁾ 이같은 상황에서 우치노 일행까지 들이닥치자 조선은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우치노가 부산에 들어온 직후인 1637년 12월 22일, 인조가 신료들을 인견했던 자리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는 위기의식과 그를 해소하기 위해 왜인들을 회유해야 한다는 유화론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국왕 인조는 일본의 도발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는 않았지만 신료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병자호란을 겪은 뒤 나타난 위기의식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신경진은 당시 왜관의 왜인들에게 지급하는 예단의 품질이 저열하여 그들로부터 원한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이후로는 품질이 좋은 것을 지급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을 촉구했다. 심열(沈悅)은 “적국과의 혼단(罅端)은 항상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 뒤, 왜인들에게 저열한 품질의 예단을 지급하는 자를 처벌하자고 촉구했다.⁶⁰⁾ 다

59)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3월 己未.

60) 『承政院日記』 62책, 인조 15년 12월 22일, “上曰 倭情以顯顯者觀之 別無必來之勢矣 至若我國土賊之起 不可預度 而祖宗遺澤 尙存不淺 寧有不幸之事乎 但無變怪疊出 至於如此 以此言之 倭情之竊發 不可保其必無 大臣 其可忽陰雨之戒乎 景禎曰 近來館中接待之禮 漸不如初 禮單所給木品甚麤 尺數至短 宜乎生彼之怒也 …… 自今禮

음날인 12월 23일, 예조는 당시 왜인들에게 증급하는 물품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형편없다고 지적하고, 우치노가 상경하려는 목적이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대로 된 물품을 지급하여 그들의 환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⁶¹⁾ 호란을 겪어 위기에 처한 조선의 처지로서는 일본과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병자호란 직후 조선이 보인 유화적인 대일 자세는 ‘7개 조 요구’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638년(인조 16) 1월 24일, 비변사는 ‘7개 조 요구’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간경 때문에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규정을 바꾸는 것이 비록 극히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미 믿을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 비록 따르기 힘든 요청이 있더라도 그것을 거절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지금 예절이나 문자의 옳고 그름으로써 저들을 질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힘써 닦는 것을 고수하다가 그들의 환심을 잃는 것도 난처할 듯하니 어쩔 수 없이 참작하여 변통함으로써 저들의 요청을 막아야 합니다.⁶²⁾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어려운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쓰시마 측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 나아가 조선의 대일정책이 유화적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짙게 묻어나는 대목이다.

1638년(인조 16) 1월 26일에 열린 인조와 비변사 신료들의 회의 자리에서는 일본의 동향과 관련된 위기의식이 좀더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인조는 왜인들이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전쟁을 즐긴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중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오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임진왜란 당시

單所給之木 不可無變通 擇好備給 何如 上曰 依爲之 悅曰 彼有竊發之心 則不係木之好否 然自古敵國開釁 必因小事 木之上中下三品 令東萊府使 上送于京 尤其蠶短者 則其邑守令 查覈治罪 何如 上曰 依爲之”.

61) 『承政院日記』 62책, 인조 15년 12월 23일, “金尙 以禮曹言啓曰 …… 平成連之恐嚇 上京 欲爲矯正者 必是此等事也 自今以後 各樣禮單之物 令戶曹除其蠶劣 各別擇好下送 俾無倭人之致駭”.

62) 『承政院日記』 63책, 인조 16년 1월 24일.

일본이 ‘假道入明’을 표방하면서 침략해 왔던 전철을 상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백(李時白)은 조선이 청에 항복한 사실을 왜인들에게 알려주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조선이 청에 당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냐?”고 힐문할 경우, 답변이 군색하다고 우려했다. 인조는 이에 대해 “일본이 우리의 상국도 아닌데 알려줄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인조는 나아가 항복 사실을 알려줄 경우 일본인들이 “우리에게도 황상이 있으니 조선이 마땅히 臣服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나 않을까 우려했다. 이경석(李景奭)은 쓰시마가 항상 조선을 비호해 왔다고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조선 사정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들을 시켜 관백에게 선처토록 하자고 주장했다.⁶³⁾ 결국 ‘조선이 청에 항복했던 사실’을 일본에 알려주는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인조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라도의 수군을 일본의 침입로와 가까운 統營에 添防시키고, 충청도 수군을 전라도 지역에 침방시키라고 지시했다.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예방 조치였던 셈이다.

같은 날 비변사는 ‘7개 조 요구’ 가운데 항복 사실을 알려주는 문제를 빼고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당상에서 숙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평소 자주 왕래하는 왜차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직책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숙배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것, ‘下賜’를 ‘送’으로 고치고, 대마도를 ‘貴州’라고 해 줄 것, 농한기를 기다려 풍파를 막을 수 있는 담장을 쌓아 주는 것 등 대부분의 주장을 수용하자고 건의했고 인조는 그것을 승인했다.⁶⁴⁾

조선이 ‘7개 조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음에도 우치노는 쓰시마로

63) 『承政院日記』 63책, 인조 16년 1월 26일, “上曰 …… 倭本輕生好戰 我國既臣服於清國 若以開中國路爲言 則可以爲之 風和迫近 前頭事 極可慮也 李顯英曰 我國雖平時亦無可恃之事 而今此蕩敗之餘 又有此事 極可慮也 李時白曰 …… 小臣以爲 此事不係於彼之動兵不動兵 而東殿既入瀋陽 彼若以何不早言責之 則缺以爲之 …… 上曰 然則日本以我爲誠乎 時白曰 然 上曰 彼非上國 何必陳達事情 …… 彼以爲爾國 臣服於清國 則我國亦有上皇 亦當臣服言之 則何以爲之 李景奭曰 對馬則常護庇我國 宜以我國實情 詳細言之 使彼以有酬酢關白之地 可也”.

64)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1월 庚寅.

귀환하지 않고 왜관에 장기간 체류했다. 조선 조정은 그의 장기 체류를 의구심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1639년(인조 17) 3월, 인조는 통제사 유림(柳琳)을 인견한 자리에서, 우치노가 장기간 체류하고 있음에도 비변사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이 잘 훈련된 병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뜻밖의 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유림 또한 우치노의 동태에 우려를 제기하고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인조의 의견에 동조했다.⁶⁵⁾ 유림은 이어 일본인들이 조선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우치노가 장기 체류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이 통영에 부임하면 병기를 정제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조선 사람들이 정탐에 능하지 못한 사실, 부정기적으로 보내는 통신사행박에는 일본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⁶⁶⁾

관외들이 조선에 상주하는 데다 상인들의 빈번한 왕래를 통해 조선 사정을 일상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 극히 취약한 조선의 일본 정보 탐지 능력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불의에 당한 병자호란 때문에 이미 놀란 상황에서—우치노의 속내를 알 수 없는 체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조선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의식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유화적인 對日認識과 政策

병자호란 직후 일본에 대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에서는 일본 측에 조선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들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는 주장도

(65) 『承政院日記』 68책 인조 17년 3월 21일.

(66)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柳琳曰 平成連留此已久 凡事探知 卽在可也 而久留至此 此不可知也 …… 日本買賣之徒 無歲不到我境 我國事情 不難知矣 而久留之意 實未可知也 臣赴任後 分付東萊釜山 密探啓聞計料 而但我國之人 不閑偵探, 是可慮也 …… 不知彼間事情 似甚鬱悶 臣爲此任之後 言于領相曰 送人日本探問 未知如何 領相曰 送使自有年限 送使不便云 小臣赴任 當整齊兵器 朝夕待變 若知彼間事情 從容應變 則宜當 而無計詳探 至鬱悶矣 豈徒日本乎 淸國亦然 丙子之亂 事出不意 未及應變 可勝歎哉”.

나타나고 있었다. 한 예로 전 좌의정 홍서봉(洪瑞鳳)은 상소를 통해 호란의 발생과 항복 사실을 왜인들에게 솔직히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왜서의 일곱 가지 일 중에 하나인 ‘물화가 예전만 같지 못하니 중국과 교통이 되지 않아 그런가?’라는 이 첫째 구절은 범상하게 답하여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노들은 본래 교활하고 사특하여 간첩을 잘 보냅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은 은밀하여 밝히기가 어려운 거조가 아닙니다.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이 비록 스스로 입을 다물고는 있지만, 기밀이 자주 누설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저들이 어찌 전혀 껍껍하게 듣지 못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질문을 던져 우리 조정의 글을 받아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 모든 일은 사실대로 곧바로 말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계책이 없는 듯하더라도 뒤에는 이로움이 없지 않습니다. 저들이 만약 다시 문서를 보내면서 모두 말한다면 그때의 균색함은 반드시 오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강화를 허락하고 가도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六路가 어육이 되고 물력이 탕진된 실상을 명백하게 개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혹 우리의 진실한 말에 감동하여 독기를 부릴 계책을 억제할지도 모릅니다.⁶⁷⁾

위에서 보이듯이 홍서봉은 일본 측에 병자호란과 관련된 사항을 숨기려 했던 조정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일본인들이 어차피 간첩 활동을 통해 정보 수집을 잘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을 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럴 바에야 조선이 청과 강화한 사실, 가도가 청군에게 함락된 사실 등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일본인들이 조선의 진심에 감동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사정을 일본에 사실대로 알려주자는 홍서봉의 주장은 달리 말하면 일본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 국가적 자존심을 굽히자는 것이었다. ‘일본이 우리의

67) 洪瑞鳳, 『鶴谷集』 권7, 「以南邊事上疏」;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1월 庚寅.

상국도 아닌데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조의 생각⁶⁸⁾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입장이었다. 나아가 청에 의해 유린되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대일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현실론이기도 하다.

홍서봉의 주장은 집의 조경(趙綱, 1586~1669)에 의해 좀더 진전되었다. 조경은 아예 일본을 ‘(조선의) 우방’이자 ‘신이가 있는 나라(信義之國)’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그들과 誠信으로 교제하되 조선의 실상을 알려주고 필요할 때 힘을 빌리자고 했다.

지금 우리의 이웃나라는 오히려 일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고, 또한 정성과 신의도 없었으니 장차 위급할 때 무엇으로써 그들의 힘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허실 사이에 들으니 천조가 일본과 통하고 군대를 징발하려는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웃함에도 그 힘을 빌리지 못하고 도리어 천조가 기선을 잡는다면 장차 화란을 더욱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문사 한 사람을 일본에 특별히 보내 交隣誠信의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실상을 이야기하여, 위급할 때 서로 구하는 의리로써 잘 유지한다면 저들 또한 신의의 나라인지라 다른 날 (우리가) 낭패할 시기에 아마도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⁶⁹⁾

조경의 주장은 일본을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할수 없는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경의 주장은 많은 비판에 직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조경의 주장과 대일 인식의 핵심은 그의 문집에 실린 『辭司諫疏』라는 글을 통해 좀더 상세히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지닌 일본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컸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부연 설명했다. 조경은 먼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의 원수’가 분명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침략에 가담하지 않고 히데요시를 멸망시켰으니 우리의 원수가 아닌

(68) 각주 63 참조.

(69) 『承政院日記』 64책, 인조 16년 5월 13일.

것이 명백하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미 조선과 강화한 일본의 聲勢를 빌려 ‘원수’ 청나라를 견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⁷⁰⁾ 조경은 또한 청이 조선에 일본과 계속 통신하라고 허용한 것을 적절히 이용하자고 주장했다. 즉 일본에 몰래 유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청에 국서를 보내 ‘조선과의 우호를 해치지 말라’고 경고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청은 조선과 일본이 통신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조선과 일본의 깊은 결합을 우려하여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⁷¹⁾

조경의 주장은 비록 현실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달리 말하면 일본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자는 일종의 以夷制夷論이었다. 그것은 일찍이 1629년 조선 조정의 왜사 겐포 일행의 상경을 허용할 때 염두에 두었던 對淸 견제 시도⁷²⁾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었다. 여하튼 일본을 ‘우방’으로 지칭하고, 그들과 ‘성신으로 교린’하여 힘을 빌리자는 조경의 주장은—왜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이 일본을 ‘만세불공지수’로 여기고 있던 당시의 분위기와 비교할 때—파격적인 것이었다. 나아가 조선의 대일 정책과 인식의 추이가 중국 대륙의 정세 변동과 조·중관계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은 또한 병자호란 직후 부쩍 늘어난 일본 측의 각종 경제적 청구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했다. 그것은 당화의 획득을 열망하는 일본인들에게 인삼을 수출하자는 논의로 구체화되었다.⁷³⁾

70) 趙綱, 『龍洲集』 권6, 「辭司諫疏」, “議者曰 日本亦我陵寢之讐 言則然矣 當宣廟甲辰年間 家康不曰 壬辰我在關東 全不預知兵事云乎 秀吉是我之讐 而源也滅平 則非我敵怨明矣 議者又曰 日本非親信之國 此虜獨可親信乎 出於不得已也 均出於不得已 則無寧藉既和之勢 以制敵怨之虜哉 況臣之計 唯欲借助聲勢而已 非即日請兵同我前驅也”.

71) 趙綱, 『龍洲集』, 위와 같은 조, “彼虜亦許我日本通信 而使臣入瀋 則常問倭來否 且曰 我亦送使至彼 蓋實憚彼也 誠將如此情實密諭日本 使之飛一書於虜中 以責侵我隣好 則彼雖始怒我之使之 而疑我與倭深合 終不能輕易加兵於我 此真所謂落其機牙者也”.

72) 한명기, 2006a, 앞의 논문 참조.

73) 병자호란 직후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해 人蔘 무역을 허용하고 課稅하는 방향으로

唐貨가 오지 않은 뒤부터 왜관의 매매인들도 끊어져 일본인들이 체를 잃고 낙담함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리 나는 것이 없이 다만 인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禁物이 되어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니 商賈들이 혹은 몰래 서로 매매합니다. (그러나) 제 값을 받지 못하여 이 때문에 인삼을 死貨로 여겨 관가에서도 세금을 거두지 못하니 당초 법을 세워 금단했던 의도를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되 科條를 엄하게 정하여 그 세금을 거둔다면 일본인들에게는 개시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니 우리나라의 산물이 폐장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⁷⁴⁾

위의 기사는 1638년 1월, 동부승지 이성신(李省身)이 건의한 내용인데 인조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성신의 주장은 일본인들의 당화 획득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칫 '사화'가 될 위기에 처한 조선 인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제시된 절묘한 계책이었다.

1638년 2월 18일, 인조를 면대한 자리에서 심열(沈悅) 또한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병자호란으로 명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조선 인삼의 판로가 막혔다는 것, 왜인들 역시 당화가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해 있다는 것을 들어 당화의 대체 상품으로 인삼을 판매토록 하자고 촉구했다.⁷⁵⁾ 원래 병자호란 이전까지 조선 인삼의 주요한 고객은 명나라 상인들이었고 주요 수출 시장은 가도였다. 조선 상인들이 워낙 많이 가도로 몰려들어 오히려 가도의 인삼 값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⁷⁶⁾

요컨대 조선은 인삼의 교역을 통해 병자호란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무역상

정책의 기초를 잡았다는 사실은 中村榮孝, 1978, 앞의 논문, 43쪽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74) 『備邊司謄錄』 5책, 인조 16년 1월 29일.

75) 『承政院日記』 63책, 인조 16년 2월 18일, “悅曰 缺與天朝相絕 然後更無用蔘之路 今聞倭缺以物貨落莫云 若啓釜山用蔘之路 則似好矣”.

76) 『承政院日記』 4책, 인조 3년 2월 9일, “又以戶曹言啓曰 一自天使의 報出來之後 人蔘之價 便即踊貴 深藏不售 以索高價 此無他 椴島蔘商 不能禁斷 京外採蔘買蔘者 樂與唐人買賣故也 近聞先來譯官之言 椴島登州等處 人蔘甚賤云 國綱解弛也 不能令行禁止 乃如此 何事不爲”.

손실을 보전해 주고 그를 통해 조일관계를 안정시키려고 시도하는 한편, 역시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한 인삼의 대외교역로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조선의 對日政策과 淸의 존재

병자호란 이후 일본의 동향에 대해 위협을 느꼈던 조선은 일본의 동향을 청에 알리는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성하지맹’ 체결 당시 청이 일본과의 교역을 계속하라고 요구한 데다 1637년 11월 20일 청이 龍骨大를 보내 인조를 새삼 책봉함으로써 ‘청의 책봉국’이 되었던 상황은⁷⁷⁾ 조선이 향후 대일관계를 펼쳐감에 있어 청이라는 새로운 감독자가 생긴 것을 의미했다.

조선은 병자호란 직후 ‘왜정의 통보’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에 앞서 ‘일본과 통신하겠다’는 청의 언급 때문에 긴장했다. 1637년 3월, 청에 사은사를 파견하는 자리에서 최명길은 청이 일본과 교섭하는 와중에 조선이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⁷⁸⁾ 청의 요구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을 계속하라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사자를 청 조정으로 데려오라는 것은⁷⁹⁾ 조선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7개 조 요구’ 처리 문제로 고민하던 조선은 1637년 1월 26일, 인조가 신료들을 인견했던 자리에서 청에 왜정을 통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인조가 당시 상황을 청에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문자 이홍주(李弘胄)는 청과 일본이 通貨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고, 여이징(呂爾徵)은 청에 왜정을 알려주었다가 청군이 조선에 대한 원조를 빌미로 수만의 군사를 남방에 주둔시키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무(李袞) 또한

77) 中村榮孝, 1978, 앞의 논문, 41쪽.

78)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3월 己未.

79) 『淸太宗實錄』 崇德 2년 1월 戊辰, “是日 勅諭朝鮮國王李祹曰 …… 則當去明國之年號 絕明國之交往 獻納明國所與之誥命冊印 …… 日本貿易 聽爾如舊 當導其使者來朝 朕亦將遣使與彼往來也”.

청군의 조선 진입을 우려하고, 조선 스스로 병력을 길러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고 ‘자강론’을 천명했다.⁸⁰⁾

한편 1638년 3월, 일본에서 ‘시마바라[島原]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역관 홍희남(洪喜男)을 통해 왜관에서 일본 사정을 탐문한 뒤, 그 내용을 담은 咨文을 청에 보냈다. 조선이 청에 최초로 보낸 왜정 관련 자문이었다. 그 내용 속에는 우치노 일행이 ‘7개 조 요구’를 내걸고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과, 호란 이후 쓰시마 측이 조선에 대해 무리한 求請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나아가 조선이 일본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강 이남 각 지역의 城池를 수축하고 있다는 것도 첨가되었다.⁸¹⁾

조선이 왜정과 관련된 자문을 보낸 이후 청은 일본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나타냈다. 1638년(인조 16) 5월, 청의 용골대는 정명수(鄭命壽)를 시켜 조선이 자문을 보낸 이후 일본 관련 소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힐문했다.⁸²⁾ 이어 1641년(인조 19)에는 용골대와 범문정(范文程) 등이 소현세자가 인질로 잡혀 있던 심관에 나타나 일본의 각 지역의 지명과 관백·천황 등의 역할을 묻고, 쓰시마 사정, 조선과 일본의 무역관계, 일본에 왕래하는 商販漢人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한 바 있다. 특히 그들은 조선이 보낸 왜정 자문의 번역문을 읽고 서로 논란을 벌였는데, 명의 상인들이 일본과 서로 통하는 대목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⁸³⁾

그렇다면 병자호란 이후 청이 조선을 통해 일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쓰고,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당시 청의 입장

80) 『承政院日記』 63책, 인조 16년 1월 26일. 한편 호란 직후 일본의 ‘7개 조 요구’ 내용을 청에 통보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언급은 中村榮孝, 1978, 앞의 논문, 44~45쪽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81) 張存武·葉泉宏 編, 2000,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 1619~1643』, 臺北: 三民書局, 276~278쪽.

82) 『瀋陽狀啓』 戊寅(1638) 5월 18일.

83) 『瀋陽狀啓』 辛巳(1641) 4월 2일. 范文程(1596~1666)은 漢族 출신의 貳臣으로 당시 淸太宗의 자장 가까이에서 對內外 政策을 立案하고 자문했던 策士였다(淸史編委會 編, 1984, 『清代人物傳稿』, 北京: 中華書局, 96~97쪽). 그런 범문정이 조선을 통해 일본 사정을 파악하는데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 연결되는 것, 나아가 명과 연결되어 자신들을 협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상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는 1633년의 공유덕의 귀순 이후 청이 입수했던 명의 조선에 대한 유시문(諭示文)의 내용이다. 공유덕은 함선과 수군은 물론 홍이포까지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은 그의 귀순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 수군까지 끌어들여 추격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⁸⁴⁾ 수군과 홍이포를 확보하게 된 청의 군사력은 더 증강되었고, 자연히 명과 조선에 대한 위협 역시 더 커지게 되었다.

유시문에는 공유덕의 귀순 때문에 곤경에 처한 명의 당혹감과 그와 맞물린 조선에 대한 압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명은 우선 조선이 후금(-청)에 물자를 공급하고 화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명은 올라(烏刺)와 하다(哈達) 등 여진족의 부족들이 후금과 강화를 맺었지만 궁극에는 이들조차 후금에 의해 정벌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조선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명이 조선에게 -후금에 대항하기 위해-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병력을 빌릴 것을 권유하고 있는 점이다.⁸⁵⁾ 후금은 조선이 명의 유시문의 권유대로 일본에서 병력을 빌리고, 나아가 명과 연결되어 자신들을 협공하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미 조선을 굴복시킨 1637년 이후에도 조선과 일본이 연결되거나, 명과 일본이 연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선을 통한 일본 정세 파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선은 대일관계를, 청의 존재와 그들의 견제를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치노가 와서 7개 조항을 요구하

84) 한명기, 2005, 앞의 논문, 260~267쪽.

85) 『清太宗實錄』 권14 天聰 7년 6월 戊寅, “參將英俄爾岱備禦代松阿 自朝鮮遣人奏言 據瀋陽通事辛達里 偵知明兵退住獐子島 以船十一隻 載孔有德部下餘衆 送入內地 又明國遣人諭朝鮮王云 爾何故與滿洲財物 可以不受爲詞 卽與之絕 爾如借兵倭國 我亦相助 滿洲於同類之國 如烏喇哈達葉赫輝發 先曾講和 後竟伐之 爾若與之講和 終蹈覆轍 朝鮮信其言 因借兵倭國 倭國助以兵四萬 彼亦屯聚土馬 移文義州官 言 滿洲若納我禮物 遣官與我使臣偕來 卽將現在明境兵六百船九艘撤回 又遣二萬人於義州南嶺右山岡上 築城蓋房 工竣而去”.

고 장기간 체류하면서부터 남방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고, 방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⁸⁶⁾ 당시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남한산성을 다시 수축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성하지맹’ 체결 당시 청에 축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이었다. 1638년 1월 16일, 대일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료들은 청의 견제를 의식하여 축성 사실과 군정 전반을 청에 통보하자고 주장했다. 소현세자 등이 심양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청인들이 축성을 문제 삼지나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또 양국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조선 사정이 전부 유출되는 상황에서 청에 축성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⁸⁷⁾

1638년 2월 심양에서 돌아온 최명길은 좀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남방의 정보를 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정의 위급’을 이유로 수군을 증원하고, 축성하여 포루를 증설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고 전제한 뒤, 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에 인조도 “일본이 쳐들어오면 청도 위태로울 것이니 반드시 구원할 것”을 운운하며 최명길의 입장에 동조했다.⁸⁸⁾

이후 조선은 ‘일본 정세가 우려된다(倭情可慮)’는 명분을 내세워 축성 등을 시도했지만⁸⁹⁾ 병자호란 직후 청의 감시와 견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선은 당시 ‘왜정가려’를 청의 감시를 피해 군사력을 온존하는 명분으로, 궁극에는 청을 견제하는 방도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본과의 관계를 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

86) 『承政院日記』 63책, 인조 16년 1월 16일, “申(景禎)曰 臣亦憂之 清人則雖無更舉之患 而倭人則其可慮也 須用權道而待之 毋啓戎心 可也 都監軍士 亦可收拾而聚之也 李(時白)曰 臣聞人心 以倭之故 近來洶洶 若不保朝夕 是則可慮也”.

87) 『承政院日記』, 위와 같은 조, “李曰 築城之事 已在約條 不可不通於彼也 且東殿出來 臣民亦日望之 清國若或以某事 執言生梗 則甚可慮也 築城軍雖在夏間 尙可爲之 臣意則以爲先通之而後 始役可也 上曰 以築城事 傳通于清國之說 未知如何 承旨曰 雖在約條 以敵靑區測 朝夕待變 不可不築城之意 通之之說 大小軍情 皆然矣 李曰 我國之人 往來彼地者無常 我之事情 彼必知之 南漢之役 不可不通矣”.

88) 『仁祖實錄』 권36 인조 16년 2월 甲辰, 丁巳.

89) 孝宗代 北伐을 피하면서 주로 시도되었다(한명기, 2006b,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질서」,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서울: 일조각, 253~254쪽).

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청에 통보해야만 했던 현실은-임진왜란 직후 조선이 일본 사정을 명에 보고했던 사실 등을 염두에 둘 때-조선이 '일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청의 '보호국'으로 순치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IV. 맺음말

북로남왜에 항상 위협받고 있던 조선의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병자호란은 필연적으로 대일관계나 조선의 대일정책에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에 대한 줄기찬 교섭을 통해 국교와 무역을 재개했고, 마침내 1629년에는 - 1627년 정묘호란 이후 수세에 처했던 조선의 곤경을 활용하여 - 쟁포 일행의 상경을 관찰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묘호란은 결국 임진왜란으로 '수세'에 처한 기미를 보였던 일본의 대조선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는 시발점이 되었던 셈이다. 1623년 인조반정 성공 이후 1627년 정묘호란을 겪을 때까지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명칭교체'가 진행되고 있던 대륙으로부터의 외압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던 조선은 일본에 대해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현상을 유지·관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쓰시마의 소오씨를 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1635년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이 결말을 맺는 전후에 조선이 소오씨를 시종일관 扶護하는 방향의 대일정책을 펼쳤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병자호란의 발생은 대일관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조선이 처한 '심각한 곤경'을 인지한 쓰시마는 사절을 파견하여 무기와 화약 등의 원조론을 흘리면서 조선과 청의 동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조선은 병자호란의 발생 사실과 항복 사실을 일본 측에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1637년 쓰시마가 보낸 우치노 일행은 조선에 와서 한편으로 상경을 요구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7개 조의 사항을 요구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조선의 수세를 이용하여 조·일 교섭 과정에서 쓰시마의 격을 높이고, 무역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조선은 그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왜관에서는 관수 제도가 정착되고 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왜관으로 몰려들게 되고, 더 많은 조선 정보가 일본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우치노가 와서 상경과 '7개 조의 요구'를 내밀고 왜관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자 통제사 유림이 '일본은 조선 사정을 항상적으로 획득해 가는데 조선은 일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통탄했던 것은 수궁이 가는 대목이다.

쓰시마는 한편으로 조선과 대륙 정세 탐색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병자호란 이후 나타난 당화 무역의 단절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대일 경계의식이 높아 가면서 일본에 대한 유향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조선은 우치노가 제시한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어야 했다. 조선은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막혀 버린 인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엄격히 금지했던 인삼의 대일무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홍서봉이나 조경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조경은 일본을 '우방'으로 지칭하고, 그들과 '성신으로 교린'하여 힘을 빌리자고 파격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것은 일본을 이용하여 청을 견제하자는 일종의 이이제이론이기도 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조경의 주장에서는 병자호란 이후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청·일 양국 사이에서 활로를 모색하려고 고민하던 조선 위정자들의 고뇌가 느껴진다. 나아가 병자호란이야말로-임진왜란 이후 적대적으로 고착되어 왔던 경직된-대일인식을 우호적이고 유향적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대일정책은 청을 의식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청에 '신속'을 다짐한 상태에서 조선의 대일정책은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일본의 정세가 우려된다(倭情可慮)'는 명분을 내세워 축성 등을 피하면서도 청의 견제를 우려하여 그 사실을 통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단적인 예이다.

요컨대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은 중화(明)로부터 완전히 격절되었고 남북

양쪽에서 모두 이적(淸, 日本)과 마주하게 되는 전혀 새로운 외교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청·일 양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게 되었다.



[ABSTRACT]

Choseon Korea's diplomatic policy toward Tokugawa
Japan around the Manchu's Invasion in 1636 and its
historical meaning

Han, Myung-Gi

Jurchen Manchu's invasion of Korea in 1636 inevitably had important influences on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as well as the Sino-Korean relations. Since 1598, Tokugawa Bakufu and Tsusima had made much efforts to resume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between Choseon Korea, but it was very difficult for Japan to cajole Choseon Korea to pass over her hostile sentiment toward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to reopen amicable relations.

On hearing the news that Jurchen Manchu invaded Korea in 1627, Tokugawa Bakufu and Tsusima tried to approach Korea, proposing that they send reinforcements and weapons to attack Manchus. At last they succeeded to have Injo government allow Tsusima's envoys led by a monk *Genpo* to go up to Seoul in 1629. In short, Jeongmyohoran, the Manchu's invasion in 1627 led Choseon Korea unavoidably to be reconciled with Japan.

In reality, after Jeongmyohoran Choseon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ploy a amicable policies toward Tsusima and she maintained *status quo* for long time. In 1635, the Tsusima governor So Yoshinari and his steward Yanagawa Shigeoki competed severely with one another for winning favor from Tokugawa Bakufu and which led each

sides to be at law. Though So Yoshinari won the lawsuit, he also took a severe damage to his domestic power and diplomatic leadership. On seeing So Yoshinari be in great straits, Choseon Korea tried to help him get out of difficulties.

When Byongjahoran, the Manchu's invasion in 1636 occurred, Tokugawa Bakufu and Tsusima also tried to take advantage of it. They proposed that they would send reinforcements and weapons to attack Manchus and tried to search out much affairs related to Choseon Korea and Manchus. Choseon Korea tried to cover up the fact that the war broke out and she surrendered, but only to in vain. Tsusima had a good grasp of Choseon's unfavorable situations.

In 1637, Tsusima dispatched envoys led by Uchino to Korea. The Tsusima's envoys forced Choseon government to allow them to go up the capital of Seoul and to comply with their 7 requests. Under these circumstances, many Korean subjects insisted on keeping strict watch against the possibilities of Japanese invasion. But the unsettled domestic situations around the time of the Byongjahoran led Choseon government to adopt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Tsusima and Tokugawa Bakufu. Choseon government complied with almost all the requests from Tsusima. In addition, Choseon government lifted a ban on export of ginseng to Japan.

After Byongjahoran, some subjects insisted that Choseon Korea should win Japan over to Choseon's side to check Ching's threats. Jo Gyong's idea was typical. He insisted that Choseon Korea should form a friendly connection with Japan and the connection would be of great help to avoid Ching's threats. In short, his idea to utilize Japan's existence was a sort of leverage to restrain one 'barbarian' with the other 'barbarian'.

After undergoing Byongjahoran, Choseon Korea and Ming Chia separated completely, and Choseon had to be faced with two 'barbarian's treats from the northwest and southeast. In this unparalleled circumstances, Choseon Korea had to explore some ways toward her existence.

keywords

Manchu's invasion of Korea in 1636, Korean-Japanese relations, So Yoshinari, Yanagawa Shigeoki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Tsusima and Tokugawa Japan, the envoys led by Uchino, Tsusima's 7 requests, the export of ginseng to Japan, Jo Gyong, to restrain one 'barbarian' with the other 'barbarian'

■ 편집자 부기

『동북아역사논총』 16호에 게재된 정병준 선생님의 「營州의 大祚榮 集團과 渤海國의 性格」 중 아래의 사항을 바로 잡습니다.

- 18쪽의 주29: 앞의 글 → 「平盧節度使 候希逸 -安東都護府의 將軍에서 平盧淄青節度使 로-, 『중국사연구』 39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제 1·2·3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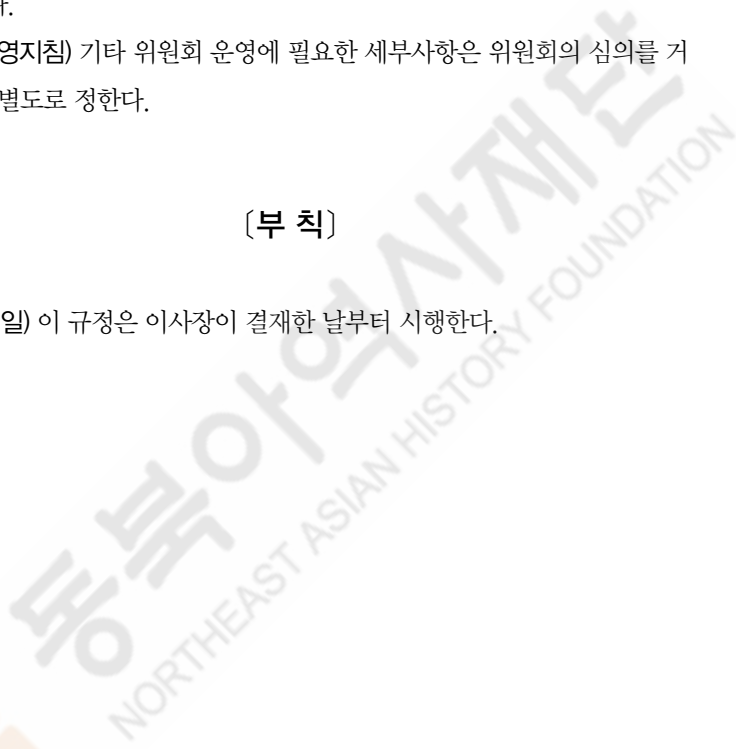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1) > 1) > 1) >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집필자 (집필순)

이영식(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손승철(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명철(경기고등학교 교사)
김인덕(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최영호(영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지훈(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이우태(서울시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진한(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명기(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이 훈(동북아역사재단 실장)
위 원 :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손승철(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덕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이현혜(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유용태(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김병렬(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성환(계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홍성근(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윤재운(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17호(2007. 9)

초판 1쇄 인쇄 2007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07년 9월 30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75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